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234-01

# 2009



##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UPR)에 대한 북한의 Universal Periodic Review 국가인권보고서 및 우리정부, NGO, INGO 관련 자료집







## 발 간 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외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연구의 기초역량을 구축하고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2009년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자료집을 출판합니다.

유엔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은 2007년 UN인권이사회가 출범하면서 새로이 설치된 유엔인권메커니즘으로 2008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정례인권검토(UPR)는 매 4년마다 모든 UN회원국들의 인권상황 전반에 대해 심의하는 한편, 그 결과를 당사국의 인권개선을 위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9년 12월 5일-9일까지 제6차 UPR실무그룹회의에서 인권상황에 대해 심의를 받았고, 제12차 UN인권이사회는 2009년 12월 9일 북한 UPR 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은 2010년 3월 18일 답변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은 2009년 북한 국가인권보고서(UPR)' 관련 자료, 즉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제6차 회기에 논의된 북한 UPR 보고서 및 심의 자료와 국내NGO, INGO 보고서, 개별국가의 북한 UPR에 대한 권고, 그리고 북한의 답변 자료를 영문과 국문으로 자료집으로 엮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북한인권의 개선과 관련하여, 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그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의 정책적 활동을 수행하고, 국제인권기구 및 국내외 NGO 등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북한내 인권 상황, 재외 탈북자의 인권 실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의 인권 문제, 새터민의 인권 증진 등에 관한 실태조사 또는 정책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앞으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2010.3.2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 목 차

##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제6차 회기

1. 인권이사회 결의 5/1의 부속서 제15(A)항에 의거, 제출된 국가보고서 ..... 3
2. 인권이사회 결의 5/1의 부속서 제15(B)항에 의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준비한 취합보고서 ..... 29
3. 인권이사회 결의 5/1의 부속서 제15(C)항에 의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준비한 요약문 ..... 51

##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 대한 NGO 보고서

4. 북한인권시민연합/대한변호사협회 ..... 75
5. 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네트워크/인권운동사랑방 ..... 87
6. 국제 엠네스티 ..... 99
7. 휴먼라이츠워치 ..... 109
8. 세계크리스찬연대 ..... 115
9. 아시아인권센터 ..... 122

## 보편적정례검토 실무그룹의 보고서 초안

10. 보편적정례검토 실무그룹의 보고서 초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129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Sixth session

1.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A)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 161
2. COMPILATION PREPARED BY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B)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 181
3. SUMMARY PREPARED BY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C)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 198

## NGO UPR Submissions

4.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NKHR) / Korean Bar Association (KBA) ..... 217
5.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Peace Network,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 231
6. Amnesty International ..... 245
7. Human Rights Watch ..... 255
8.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 268
9. Asian Centre for Human Rights ..... 289

## DRAFT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10. DRAFT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296
11. Opening Statement by H.E. Mr. Tcheul Ambassador and Permanent Representative At the 13th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Consideration of the UPR Outcome Report 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329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제6차 회기







총 회

배포  
일반

A/HRC/WG.6/6/PRK/1  
2009년 8월 27일

원본: 영어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제6차 회기  
제네바, 2009년 11월 30일 - 12월 11일

인권이사회 결의 5/1의 부속서 제15(A)항에 의거,  
제출된 국가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본 문서는 유엔 번역부서로 넘겨지기 전에 별도의 편집을 거치지 않았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인권 존중을 증진시키고 장려함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을 달성하고자 하는 유엔현장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제도의 수립에 관한 2006년 3월 15일 유엔총회 결의 60/251의 목적 및 원칙들에 경의를 표하며, 문서 A/HRC/6/L.24에서 제시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하의 정보 준비를 위한 일반지침에 따라 준비된 이 보고서를 제출한다.

## I. 보고서의 준비

### 1. 조직적 준비와 방법론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이하 공화국 정부)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 관련된 위원회들과 내각의 성들을 대상으로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일정과 정보 준비를 위한 일반지침에 대한 정보를 간략히 알렸고, 각자의 직무에 관계하여 구체화된 요점들과 사실들, 수치들을 준비하도록 요청하였다.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 외무성 등 20개 기관들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특별전문위원회를 조직하여 관계된 기관별로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초안을 만들고 이 보고서를 완성하였다(부속문서 1 참고).
4. 이 보고서는 인권 부문에서의 국가적 노력들과 경험들, 도전들과 전망들뿐만 아니라 인권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칙적 입장,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구조와 정책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논점의 본질을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현장에서의 전형적이거나 일반적인 정보로써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 2. 시민사회와의 협의

5. 특별전문위원회는 인권 부문에서 일하는 사회단체들과 비정부기구들, 법조계와 학계를 포함하여 광범한 부문의 대중적 인사들과 스물네 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열었다(부속문서 2 참고).
6. 매 협의회마다 특정 단체들에서 내어온 전문가들과 개별적 인사들은 자신들이 관계

4\_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보고서 및 우리정부, NGO, INGO 관련 자료집



된 보고서의 해당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필요하다고 간주한 정보는 보충하였다.

## II. 배경

### 1. 국가 개요

7. 조선은 아시아 대륙의 북동부에 위치해 있다. 총 22만2,200 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 조선반도와 그 주위의 4,198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은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군사적 강점으로부터의 해방 직후 북위 38도선에서, 조선전쟁(1950년 6월 -1953년 7월) 이후에는 휴전협정에서 경계로 설정된 군사분계선에서 북과 남으로 분열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은 12만2,760 평방킬로미터이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단일민족국가이다. 2008년 현재 공화국 인구는 2천405만 1,000명이다.
9. 조선은 기원전 30세기 전에 국가로 형성되었고, 고유의 문화를 창조하며 발전하였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국력이 약해짐에 따라 강대국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침략당하고 멸시받다가 결국에는 20세기 초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점되었다.
10. 조선인민들은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 수령님의 영도 아래,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대하여 20여 년간 항일혁명투쟁을 벌였고, 그리하여 1945년 8월 15일 민족 해방을 달성하였다.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함으로써 조선인민들은 국가 역사에서 처음으로 자주적이고 참된 인민의 정부를 가지게 되었다.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 이래로 인민의 힘과 사회주의 제도를 불굴의 의지로 강화시켜 나갔다. 오늘날 조선인민들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현명하신 영도 아래,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굳건히 하고, 번영하는 강성 대국을 건설하며,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 2. 인권에 대한 기본적 견해와 입장

12.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서는 인권이란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라고 말씀하셨다. 사람을 모든 고려사항들의 중심에 내세우고 자연과 사회의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해 복무하도록 만드는 주체사상의 근본적 요구와 국가의 특수한 현실과 실제 경험들에 기초하여, 공화국 정부는 주체지향적인 이념과 인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의 실현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인권이란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부여되고, 완전히 존중된 존엄성을 가지고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권리라고 여긴다. 즉, 인권은 국가에 의해 인정되고 보장되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권리고, 인간이 인간 존엄성에 맞게 평등한 삶을 향유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견해는 다음과 같이 인간이 가지는 모든 종류의 권리들과 구별되는 인권의 네 가지 고유한 특성들에 기초한다.
- (a) **보편성과 평등성:** 인권이란 모든 인간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은 보편적이고 평등하다.
  - (b) **개별성:** 인권은 각 개인에 속한다. 사람은 개별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공동체 내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진 사회적 존재이다. 그 주체가 집단적인 민족자결권과 관련하여, 국적 또는 인종에 기초한 차별은 그 집단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침해의 피해자들은 결국 집단구성원 개개인일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국가에서의 인권의 향유자들은 특정 국가의 개별적 인민들이다.
  - (c) **존엄성:** 인권은 본질상 한 사람의 존엄성과 관련된 권리이다. 인권의 특성들은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존엄성에 대해 인식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장하는 권리라는 데 있다.
  - (d) **불가분성:** 인권은 그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사람이 소유권과 같은 일부 권리들은 스스로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도 있지만, 사람으로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인권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14. 위에서 언급한 인권에 대한 견해에 기초하여, 공화국 정부는 진정한 인권은 자주권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권리는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연과 사회의 모든 제약을 극복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자유롭게

게 수행하고, 자주적 요구와 이익에 맞게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다. 인권은 사람이 자연, 사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주권이 될 때, 비로소 인간의 참다운 권리일 수 있다. 인권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체지향적 이념의 새로운 관점들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담겨 있다. 게다가, 인권은 양도할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타고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국가의 보장 아래서만 실현된다. 그것이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인권을 “국가 및 사회와 무관한 자유”가 아닌 “국가 및 사회에 의해 보장된 자유”에 대한 권리로 승인하는 이유이다.

15. 공화국 정부는 인권 및 국제인권문서들에 관해서는 유엔현장의 원칙들을 존중하고, 다른 국가와 민족들의 정치·경제제도와 발전단계, 독자성, 역사적·문화적 전통의 다양성을 응당히 고려하는 한편으로 인권의 보편성도 인정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공화국 정부는 국제적 인권 사안들을 다루는 데 있어 주권과 평등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한 대화와 협력은 환영하고 장려하지만, 이중기준의 적용을 거부하며, 공평성 원칙과 객관성, 비선택성을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한다. 인권은 주권국가에 의해 보장되기 때문에, 공화국 정부는 인권문제를 구실로 다른 주권국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정부를 전복시키고 제도를 변화시키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권이 곧 국가주권을 뜻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Ⅲ.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의 법적·제도적 구조

#### 1. 헌법 및 인권관련 법적 제도

##### A. 헌법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하 헌법)은 사회활동의 모든 영역에서의 인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그 실현 원칙들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영역에서의 국가 운영 원칙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헌법은 1972년에 채택되었고, 세 차례에 걸쳐 개정 및 수정보충되었다(1992, 1998, 2009년). 헌법에서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한 조항은 인민들이 높은 수준의 인권을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할 것이라는 공약을 명시한 것이다. 헌법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 언론·출판·집회·시위 및 결사의 자유, 신소청원·노동 및 휴식·무상치료·교육 및 사회보장권, 과학 및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 거주 및 여행의 자유 등 국가와 공적활동의 모든 영역에서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헌법은 또한 이러한 모든 권리와 자유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실질적으로 제공되며, 사회주의 제도의 강화발전과 함께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 B. 부문별 법률들

17.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이래로 인권에 관련된 수백 개의 법률과 규정들이 제정되었고, 이로써 인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확고한 법적 보장이 제공되었다(부속문서 3 참고). 각 부문별 법률들은 시행을 위한 규칙과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

## 2. 국가기관들의 구조와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체계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체제는 사회주의적 민주공화제이다.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텔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각급 지방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19. 국가주권기관은 최고인민회의,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지방인민회의로 구성된다.
20. 행정기관은 내각, 위원회들과 성들, 각급 지방인민회의를 포함한다.
21. 검찰기관은 중앙검찰소, 도(또는 직할시)·시(또는 구역)·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로 구성된다. 이들의 기능은 법을 지키는가를 감시하고 범죄와 투쟁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의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
22. 재판기관은 중앙재판소, 도(또는 직할시)·시(또는 구역)·군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로 구성된다. 이들의 기능은 사법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의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

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각급 인민위원회는 인권을 보장하는 데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검찰·재판·인민보안기관들 또한 인권 보호에 대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을 위한 민족조정위원회,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유엔인구기금(UNCFPA) 민족조정위원회, 유네스코 민족위원회 등 부처간 기구들과 조선여성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조선변호사회, 교원동맹, 조선적십자회,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교육후원기금, 조선가족계획 및 모성유아건강협회, 조선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등 사회단체와 비정부기구들이 각자의 임무와 활동계획들에 맞게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다.
24. 권리를 침해당한 인민들은 응분의 보상을 받는다. 보상제도는 민법, 손해배상법, 신청원법과 기타 관계된 법률들에 의해 보장된다.

### 3. 인권교육과 대중적 인식

25. 헌법과 법률들에 대한 교육과 학습 및 보급은 인민들이 자기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완전히 알게 하여 권리를 완전히 행사하고 의무를 충실히 완수하게 한다는 관점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수행된다. 인권에 관련된 법률들에 대한 교육은 두 개의 경로로 제공되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정규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교육이다. 한때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으로 한정되었던 인권 관련 법률교육이 정규교육제도, 즉 인민학교와 중학교뿐만 아니라 종합대학과 전문대학에서도 교육대상의 수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주어지고 있다. 인민대학습당(수도 평양에 있는 최대의 도서관), 도서관들, 기타 사회교육시설, 대중매체, 언론은 인권에 관한 법적 지식과 상식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있다. 인민정권기관 일꾼, 판사, 변호사, 검사, 인민보안 일꾼, 기타 법집행 일꾼, 조선여성동맹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및 기타 시민사회의 사회 봉사일꾼들을 위하여 학회, 토론회, 강좌들이 정기적으로 조직되고 있다.
26. 인권에 대한 일반 대중의 지식과 인식은 높은 단계에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지식과 관심은 한때 전문가, 인민정권기관 일꾼, 사회 봉사일꾼들에만 국한된 관심사였지만, 이제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광범한 인민대중의 일반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곧 인간을 무시하는 것을 뜻한다는 확고하고 광범한 관점이 사회 내에 확산되었다.

####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문서들, 그에 따른 공약과 의무의 이행

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 권리 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과 몇몇 기타 국제인권문서들에 가입하였다.
28. 국제인권문서들에 제시된 권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헌법, 부문별 법률들과 규정들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국제인권문서들의 요구사항들은 국내 법과 규정들 속에 일체화되거나, 국제인권문서들의 조항들을 근거로 직접 청원하는 방법을 통하여 효력을 갖는다.
29. 2009년 1년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의 이행에 관한 네 개의 정기보고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ESCR)의 이행에 관한 두 개의 정기보고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이행에 관한 두 개의 정기보고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관련된 조약기구들에 의해 검토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러한 조약기구들이 제시한 견해와 권고사항들을 중대하게 고려하고, 수용하였으며, 실현하기 위해 그것들을 이행하여왔다.

### IV.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과 경험들

#### 1. 시민적·정치적 권리

##### A. 존엄성에 대한 권리

30.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은 헌법에 명시된 요건이고, “인간이 바로 하늘(인내천)이라고 믿는” 국가통치이념에 의해서도 요구되는 것처럼 고수되어야 할 기본원칙이다. 존엄성에 대한 모욕과 비방은 형법상 형사적 범죄로 규정되고, 가해자들에게는 손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책임을 지운다.
31. 개인적 자유와 자질의 완전한 발전은 개개인의 행복 증진과 전체로서의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 사회와 집단의 건전한 지속과 발전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개인적 자유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관점이다. 헌법과 기타 많은 법률들이 개인적 자유와 자질의 발전에 관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법을 무시하는 “방종”의 자유가 아닌 건전한 인격의 자유를 의미한다.

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평등은 사람들 간의 단결과 협력에 기초하여 완전히 보장된다. 어떠한 인민도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교육, 직업 및 지위, 재산에 기초하여 차별당하지 않고, 모든 인민이 국가와 대중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권리를 행사한다.

## B. 생명권

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생명권을 인간의 생존을 보장하는 필수적 요구사항으로 간주하고, 생명권과 생존을 효과적으로 보장한다.
34.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어떠한 사람도 헌법과 형법에 따라 체포·수감되거나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사형은 오로지 다섯 가지 범주의 극도로 중대한 형사적 범죄들에 한하여 부과되고, 18살에 이르지 못한 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 수 없으며, 임신여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35. 육체의 모든 부분에 대한 불가침은 법에 의해 보장된다. 육체의 내부 장기들을 떼어내 그것을 팔고 사거나 육체의 어떠한 부분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간주되어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 C. 고문과 그 밖의 비인도적인 처우의 금지

36. 형사소송법은 고문이나 구타와 같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범죄사실을 시인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백이나 고백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고문을 통해 강압적인 심문을 하거나 사건을 과장 또는 날조하고, 부당한 판결 또는 판정을 하는 것은 형법상 범죄로 규정된다. 앞에서 언급한 고문과 기타 강압적 심문방법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응당하게 보상받는다.
37. 법집행 일꾼들을 양성하는 기관들에서는 고문과 기타 강압적인 심문방법의 비법성

과 해로운 영향들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형사사건을 취급함에 있어서 과학적 정확성, 객관성, 신중성을 완전히 보장하고, 증거에 일차적 중요성을 부여하는 원칙을 엄격히 고수하도록 하는 식으로 학생들을 교양한다. 법집행 기관들은 강압적 심문과 진술 유도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들이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검찰기관들은 고문과 기타 비인도적인 처우와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검사는 수사·예심·재판기관들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를 실시하고, 어떠한 인권 침해가 발견되거나 피심자와 변호인,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해 불만이 제기될 경우에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

#### D.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3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정한 재판제도를 수립하여 왔고, 벗어남 없이 그것을 적용하는 데 큰 중요성을 부여하여왔다. 공정한 재판의 원칙, 절차, 방법들은 헌법, 재판소구성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과 기타 관련된 법률들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엄격한 준수가 보장된다.
39. 재판은 오로지 상응하는 인민회의에서 선출된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에 의해서만 집행된다. 재판소는 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어떠한 방해나 영향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재판절차를 수행한다.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철저히 검토확인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문제된 사건의 진실이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 유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내린다. 피소자의 재판 참가는 의무적이고, 피소자 스스로 또는 자신이 선정한 법적 방조를 통해 자신을 변호한다. 피소자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피소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자백을 하도록 강요되지 않는다. 재판소의 판결이 못마땅할 경우, 피소자와 변호인은 판결이 나온 후 10일 안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상소할 수 있다.

#### E. 사회적·정치적 생활에의 참여권

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기본적인 사회적·정치적 권리로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 표현·집회·결사·신앙의 자유를 법적으로 공인하였고, 실제로 보장하고 있다.



41.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 지식정도, 당별, 정견이나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42. 모든 공민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480종의 신문들이 발행되어 전국적·지방적 차원에서 공장·기업소와 대학들에 배포되고, 수백 가지 종류의 잡지들이 수십 개의 출판사들에 의해 간행되고 있다. 모든 공민은 텔레비전과 출판물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관점과 의견들을 표현할 수 있다. 그들은 헌법과 관련된 법률들에 의해 문학 및 창작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그들은 신소청원법 아래, 기관, 기업소, 단체, 인민정권 기관 일꾼들의 비법적 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불만을 제기하며, 뜯어고치도록 할 권리를 가진다.
43. 공민은 헌법 아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나 시위를 조직하는 사람들은 행사의 목적과 날짜, 시간, 장소, 조직하는 사람과 범위가 구체화된 통지서를 3일 전에 지역인민위원회나 인민보안기관들에 보내도록 요구된다. 인민보안기관은 집회나 시위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여 주고, 사회질서와 안전이 유지되도록 보장한다.
44. 공민은 헌법에 의해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적 정당과 사회단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민주적 사회단체가 조직될 경우, 단체의 목적, 성원의 수, 조직구조, 창단날짜, 책임일꾼의 이름을 구체화하는 신청서를 정관의 사본과 함께 30일 전에 내각에 보내야 한다. 오늘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조선로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조선천도교청우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연맹, 조선민주여성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을 포함한 다양한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45. 공민은 헌법 아래, 저마다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종교를 실행하고, 종교건물과 시설을 지을 수 있으며, 공개적·비공개적·개인적으로나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종교의식을 열 수 있고, 종교교육을 줄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주교인협회, 조선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 조선종교인협의회와 같은 종교단체들이 있다. 최근에는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와 장충성당, 개성에 있는 영통사가 복원증축되었고 금강산에 있는 신계사와 룡악산에 있는 법운사는 본래의 상태로 복원되었다. 2008년 8월에는 러시아 정교회가 평양에 세워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머무는 러시아 종교인들이 종교의식을 열고 있다. 종교단체들의 출판물은 “천도교경전”, “천도교”, “구약성경”, “찬

송가”, “선택과 실천”, “천주교를 알자”, “신앙생활의 걸음”, “천주교 기도문”을 포함한다. 국가는 종교로부터 분리되고,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 종교단체들은 자기의 고유한 교육기관을 운영한다.

##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A. 노동권

46. 국민은 헌법과 노동 관련법들과 규정들 아래,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그들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4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실업자란 없다. 기관, 기업소와 단체들은 근로인민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진다. 여성들에게 일자리는 주는 데에는 특별한 관심과 격려가 주어진다.
48. 모든 근로인민은 성별, 연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노동에 대하여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 여성들은 같은 노동에 대해 남성들과 같은 보수를 받고, 특히 3명 또는 그 이상의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6시간 노동에 8시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다.
49. 국가는 노동생활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경제적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사업작품도 예방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들을 채택하였다. 관련된 법률들은 법에 의해 금지된 부문들에서는 여성들에게 일을 시켜서는 안 되고, 노동보호용구와 안전장비들이 충분히 주어져야 하며,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보수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고, 예를 들어, 시간과 노동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 알맞은 사람에게 알맞은 일거리를 할당하지 않아 제기된 불만과 신소는 공정하고 즉각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원칙에 반하는 행동에 책임을 지니고 있는 관리자들에게 법적 처벌이 가해진다.

### B.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50. 휴식과 여가에 대한 근로인민의 권리는 헌법과 기타 노동 관련 법률들과 규정들에 의해 주어진다. 이러한 권리는 노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51. 하루노동시간은 8시간이며 시간외 노동은 엄격히 금지된다. 연속적인 생산과정과 재해구제작업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쉬는 날에 노동을 한 경우에는 한주일 안으로 하루를 쉴 수 있다. 그들은 매년 2주의 완전한 보수를 받는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서 7일 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는다. 여성근로자들은 정기 및 보충휴가 외에 산전 60일, 산후 9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받는다.

### C. 사회보장권

52. 모든 국민은 국가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의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53. 노동자와 사무원들이 병, 부상, 아픈 가족에 대한 간호, 해산이나 기타 이유들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받는다. 여성들은 산전산후휴가 기간에 월 보수의 100%에 해당하는 산전산후보조금을 받는다. 또한, 사회보장제 하에 있고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사회보장연금, 장애인들과 심하게 부상당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에게는 간호보조금, 사회보장제 하에 있고 그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장례 보조금, 현역군인의 부양가족에게는 보조금, 약자에게는 생활보조금이 주어진다.
54. 국가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의 경비는 근로인민이 1%씩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국가예산으로부터 분배된다.

### D. 적정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55. 공화국 정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고, 좋은 음식과 옷과 집을 갖는 풍족한 생활에 대한 인민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56. 국가는 모든 인민대중에 대한 식량공급을 책임지는 정책을 추구한다. 국가는 양정법, 노동법, 식량분배규정에 따라 노동자, 사무원 및 그 부양가족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제때에 공평한 식량공급을 주어왔다. 1990년대 중반 이래로 국가를 계속적으로 타격한 심각한 자연재해들로 인해 알곡생산량이 상당히 감소하였고, 이는 전반적으로 인민들의 생활에, 특히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공화국

정부는 국제적 인도지원에 대한 호소를 통하여 확보된 많은 양의 식량으로 긴급한 요구에 맞추는 한편, 우리식으로 농업생산을 증대시킴으로써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왔다.

57. 주택은 국가로부터 무상 공급되고, 헌법과 기타 관련법률들에 따라 주택에 대한 이용권과 불가침권이 보장된다. 주택임대료는 전체 생계지출의 0.3% 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20년 동안 수십만 개의 현대식 다층아파트들이 수도인 평양에 지어졌고, 많은 새로운 주택들이 지어졌으며, 도시와 농촌지역들의 낡은 주택들은 전국적으로 보수되었다. 불충분한 조건에서 살고 있는 몇몇 인민들은 있지만, 각급 인민위원회들이 인민들의 생활을 집주인들처럼 책임적으로 돌보기 때문에 주택이 없는 채로 남겨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 E. 교육권

58. 공화국 정부는 교육을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하여 왔고, 창건 이래로 교육의 발전에 큰 관심을 쏟아왔다. 1945년 8월 일제의 군사강점으로 부터 해방되었을 당시 인민대중의 77%가 문맹이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주요한 노력의 결과로 1949년 3월 문맹은 완전히 근절되었다.
59. 공화국 정부는 누구든지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선진적인 교육제도를 확립하고 발전시켜왔다. 1956년 8월부터는 전반적초등의무교육이, 1958년 11월부터는 전반적중등 교육이 각각 실시되었다. 각급 교육기관들에서 수업료가 완전히 폐지되었고, 이는 전반 적중등무상의무교육제를 실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1972년 이래로 전반적 11년제 무상의무교육제가 시행되어왔다.
60. 공화국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래로 지속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1년제 무상의무교육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교육성, 관계된 성들, 연구기관들과의 포괄적 토론 후에,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모두를 위한 교육에 대한 다카르 행동계획에 부응하여 2001년 모두를 위한 교육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시행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에 대한 지출이 체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동안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채택되었다. 교육지출은 2002년 7.4%에서 2006년 8%로 증가하였다. 현재 164만4,000명의 학생들이 4,904개의 소학교에서, 241만5,000명의

학생들이 4,801개의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

61. 공화국 정부는 정규고등교육과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을 적절하게 결합시킴으로써 사회구성원 전체가 고등교육수준에서 기능과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양성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하였다. 국가의 첫 번째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이 1946년에 설립된 이래로 302개의 종합대학들과 460개의 전문대학들이 세워져왔다. 1951, 1981, 1993년에 각각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이 설립됨으로써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가 완성되었고, 비로소 온 사회를 인텔리화하는 정부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 F. 건강권

62. 공화국 정부는 설립 초기 이래로 대중적 인민보건제도를 확립하고 강화하여왔다. 노동자, 사무원 및 그 부양가족들에게 국가사회보험제 하에 무상치료를 제공하기로 하는 결정은 1947년 1월 27일 선포되었고, 그 시행을 위한 관련된 방안들이 채택되었다. 이것이 조선 역사에서 최초의 국가지원 무상치료제였다. 공화국 정부는 조선전쟁(1950-1953)의 어려운 시기였던 1953년 1월 1일부터 국가의 전 지역에 보편적무상치료제를 도입하였다.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는 1960년 2월부터 제공되어 왔고, 이후에 헌법과 인민보건법에 의해 공인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누구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하고 실제적이면서도 무상으로 의료봉사를 받는다.
63. 인민보건제도는 공화국 정부의 인민보건정책 덕분에 더욱 강화되어왔다. 인민의 평균기대수명은 해방 전 38.4세(남성 37.3세, 여성 39.5세)에서 현재 67.6세(남성 63.5세, 여성 71.4세)로 1.7배 증가하였다. 1945년(일제의 군사강점으로부터 해방된 해)에는 병원이 9개뿐이었지만, 현재 1,986개의 병원과 6,105개의 진료소가 있다. 인구 1만 명당 의사의 수는 1949년 1.1명에서 현재 32명으로 증가하였다.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와 세계보건기구(WHO)의 모두를 위한 보건에 대한 전략의 관련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공화국 정부는 전 인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고, 면역력을 높여 전염병을 예방하며, 1차보건의료봉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채택하여왔다. 의사 호(戶)담당제는 1차보건의료제도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약 7천개의 종합진료소와 리(理)인민병원 및 진료소들에는 4만4,760명의 의사들이 의사 한 명당 평균 134가구의 비율로 인민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고 있다.

## G. 문화적 생활에 대한 권리

64. 공민은 헌법 아래,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 안자에게 배려를 돌리고,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65. 공화국 정부는 인민들이 문학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왔고, 다양한 종류의 문화시설과 설비들을 갖추어 문화적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조성하여왔다. 평양, 각 도와 군(郡)들에 있는 수천 개의 극장, 영화관, 문화회관들은 근로인민의 문화적 생활과 편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66. 모든 공민은 자신의 발명과 그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도덕적·경제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들은 저작권법, 발명법, 공업도안법, 상표법과 그 시행규정들에 의해 보장된다.

## 3. 특정한 집단의 권리

### A. 여성권

67. 공화국 정부는 구세기적 봉건적 예속들로부터 여성들을 해방하기 위해 1946년 7월 30일에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였고, 이는 여성들이 정치적 생활, 노동, 교육, 가정생활, 재산소유 등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구체화하였다. 법령의 내용은 후에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헌법에 포함되었다. 국가는 국적법, 선거법, 지방주권기관법, 민법, 민사소송법, 가족법, 교육법, 노동법, 인민보건법의 채택을 통하여 여성들의 정치적 지위와 그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더욱 구체화하였다.
68. 오늘날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 참여하고 있다. 여성들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의원의 15.6%를 차지한다. 그들은 노동력의 49%를 책임진다. 수천 명의 준의사와 의사, 46만3,000명의 기사, 기술자와 전문가들이 여성들이다.
69. 여성의 건강증진과 보호 및 임신보건 전략에 특별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공화국 정부의 인민보건정책 아래, 모든 여성들은 건강 증진을 꾸준히 도와줄 호(戶)담당 의사, 산부인과 의사들의 책임 있는 보살핌을 받는다. 98%가 넘는 임신여성들이 출산

함에 있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 산모사망률은 2006년에 10만명 출생 당 96.3명이었다.

## B. 아동권

70. 국가는 창건 초기 이래로 어린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이자, 나라의 “왕”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여왔다. 국가는 헌법, 교육법, 인민보건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안전법, 장애인보호법, 가족법 등의 채택을 통하여 어린이들을 미래의 책임일꾼들로 키워주고, 최대한 가능한 범위까지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공화국 정부는 어린이들의 권리를 한층 더 보호하기 위해 1992년에 아동복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1992-2000)을 수립하였고, 그 시행단계를 단계적으로 검토하였다. 후속조치와 새로운 목표들을 포함한 2001-2010년을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다.
71. 모든 어린이들은 전반적 11년제 무상의무교육제 아래, 6살 또는 7살 때부터 시작하고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완전한 기회가 주어지는 무상의무교육을 받는다. 소학교 입학률은 100%이고, 진학률은 99.7%, 졸업률은 100%이다.
72. 부모 없는 어린이들은 고아원에서 보살펴지고,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면 고아원의 소학교와 중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한다. 고아들을 위한 14개의 탁아소들과 12개의 유치원들, 17개의 소학교 및 중학교들이 있다.
73. 1945년(일제의 군사강점으로부터 해방된 해) 전의 아동사망률은 1,000명 출생 당 204명이었으나, 1980년대에 11.4명으로 감소되었다. 연속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1990년대 중반 일시적으로 악화되었던 어린이들의 건강이 개선되어 5세 미만 사망률이 1998년의 1,000명 당 50명에서 2005년에는 40명으로 감소되었다. 어린이들의 영양상태 또한 개선되어 저출산율이 2002년 6.7%에서 2006년에는 6.3%로 감소하였다. 6개월 이하의 영아의 모유수유율은 98.7%이다. 어린이 예방접종률은 3종 혼합(mixed DPT-3: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82.2%, 홍역 96.9%, 소아마비 99.8%, 결핵 99.8%로 높은 예방접종 수준에 있다.

## C. 장애자의 권리

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장애자들의 권리가 만족스럽게 보호되도록 하기 위해

2003년에 장애인보호법을 채택하였다. 그들은 교육과 치료를 받고,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문화생활을 향유한다. 2005년에 수행된 선별조사에 따르면, 3,639명의 어린이들이 기동성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 중 2,176명은 소년들이고, 1,463명은 소녀들이었다. 맹인어린이와 농아어린이들은 특수학교들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고, 그 밖의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은 보통학급에 포함된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영예군인공장들과 복지편의봉사소들이 세워졌고, 그들에게는 강장제와 보행 보조기구들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유급휴가와 수당이 지급된다.

75. 장애자의 날인 6월 18일에는 매년 다채로운 행사들이 조직되는데, 이는 장애인들의 사회 내 통합을 돕고, 일반대중이 장애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행사이다. 이에 있어서는 2005년 7월에 활동을 시작한 조선장애인보호연맹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화국 정부의 대중정책과,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미풍양속이 꽃피우는 우호적 사회분위기 덕분에 장애인들은 자기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받는다.

#### 4. 인권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

7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권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응당히 고려하고, 국제 인권기구들과의 참된 건설적 대화와 협력을 중요시한다. 이에 따라, 국제사면위원회, 국제고문반대협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각 대표단들과 유엔인권위원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 일행을 초청하였고, 그들은 희망했던 것처럼 지방의 법집행 일꾼들과 대화하고 교화 및 구금시설과 수감자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그럼으로써 그들은 공화국의 인권상황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77.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럽연합(EU)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후, 인권에 관해 유럽연합으로부터 제기된 모든 질문들에 대해 성실하게 응답하였고, 광범한 대화와 협력을 하였다. 유럽연합 측의 질문들에 대한 설명과 해명을 제공하기 위해 공화국의 인권전문가들은 공화국과 유럽연합 간의 정치적 대화들에도 참가하였다. 게다가, 2001년 10월에는 심지어 거의 내정간섭에 가까운 유럽연합 측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공화국은 포용력 있게 답변하였다. 공화국의 인권전문가들과 유럽연합 회원



국들을 대표하여 공화국에 와있던 대사들 사이에는 정기적인 접촉이 있었는데, 국제 인권문서들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들의 제출 상황을 포함하여 인권에 관한 공화국의 입장과 활동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었다. 2001년 9월에는 프랑스 국회 대표단이 공화국 방문 기간 동안 한 교화소를 방문하고, 지방 일꾼들을 만나보기도 하였다. 독일 외무성 동아시아 담당국장은 2002년 5월 공화국을 방문한 기간에 그가 희망했던 것처럼 석방된 전과자 한 명을 만났다. 위에 언급된 활동들은 공화국과 유럽연합 간에 인권대화가 시작된 이래로 단 2년 내에 이루어졌다.

78. 위에 언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협력과 성실한 노력을 철저히 무시한 채, 유럽연합은 놀랍게도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 제59차 회기에서 반(反)공화국 “결의안”을 상정시켰다. 그때 이래로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총회에서 유럽연합에 의해 계속 채택된 반(反)공화국 “결의들”은 오로지 공화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인권대화와 협력이 끝장나도록 하는 데 작용하였을 뿐이다.

## V.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서의 장애물과 도전들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적 정책

7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초기 이래로 미국은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끊임없이 추구하여왔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그 밖의 전 부문을 포괄하는 이러한 정책은 조선인민들이 참된 인권을 향유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80. 미국은 “인권보호”라는 구실 아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공화국의 제도를 바꾸어보겠다는 공공연한 시도를 하고 있다. 2004년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전형적인 본보기이다. 그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법”의 이름 자체부터 미국의 도발적이고 간섭주의적인 본질을 보여준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법”은 공화국 내에 “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증진시킨다는 구실 아래, 공민들 사이에 공화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부추기고,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제도를 바꾸고 정부를 전복시키도록 유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법”은 공화국을 향해 하루 12시간 동안 조선어로 하는 라디오 방송, 그 방송에 주파수가 맞춰진 소형 라디오의 대량유입, 미국으로의 “탈출”·“이주”·“망명” 프로그램들에 대한

재정적·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국민들을 부추기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미국 행정부는 이 “법”을 위해 2,400만 달러를 승인하였다). 수많은 비정부인권단체들은 이 “법”의 실행을 위한 미국 행정부의 재정지원 아래, 반(反)공화국 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81. 어떠한 종류의 정치적·경제적 제도를 자신들이 선택하고 싶은 것으로 결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세워진 사회적·정치적 제도는 조선인민의 선택에 의한 사회주의 제도이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은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 내정간섭이다. “인권보호”라는 구실 아래, 공화국 국민들을 자기의 정부로부터 분열시키는 데 목적을 둔 어떠한 움직임도 공화국을 전복시키고 자결권을 침해하려는 공공연한 시도이다.
82. 미국은 역사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수많은 제재를 가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조선인민이 인권을 향유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하여왔다.
83. 미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위에서 “키 리졸브(Key Resolve)”나 “을지 프리덤 가디언(Ulji Freedom Guardian)”과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표적으로 매년 다른 전쟁연습을 벌이면서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침략과 민간인에 대한 대량학살은 국가주권을 지키는 데 실패할 경우, 인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무능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중대한 교훈을 남겼다. 공화국은 주권과 존엄성, 공화국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방어대책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 2. 유엔의 “인권결의” 채택을 포함한 반(反)공화국 책동

84.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유럽연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적대적인 일본과 그 밖의 세력들과 결탁하여 2003년 이래로 매년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총회에서 반(反)공화국 “인권결의”를 채택하여왔다.
85. 이러한 “결의들”의 목표는 인권의 참된 보호와 증진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그것을 통하여 조선인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지켜온 이념과 제도를 없애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결의”의 주창자들은 그들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협력”과 “협동”을 증진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터무니없이 주장한다. 하지만, 그러한 “결의들”이 불신과 대립의 근원이고, 국제적 협력에 있어서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현실은 그 자체로 말하여 주고 있다.

8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권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중요시한다. 하지만, 공화국 정부가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혀왔듯이, 이러한 협력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인 바로 그것이 위에서 언급한 철저하게 정치화되고 선별적인 “결의들”이다. 선별적인 공격과 협력은 양립할 수 없다.

### 3.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 연속적인 자연재해와 그 결과들

87. 1990년대 초반의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와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경제적 손실과 물질 자원의 고갈은 나라의 경제적 발전에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왔다.
88. 가장 중대한 어려움은 식량공급 조건의 악화였다. 1996년 한 해에만 318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였고, 식량공급량의 급격한 감소가 그로부터 비롯되었다. 그 결과, 인민들의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 영아 및 아동 사망률과 영양실조율은 높아졌고, 영아들의 설사, 호흡기성 감염, 결핵과 같은 질병들이 발생하였다.
89. 국가경제의 기반이 파괴되고 수많은 공장, 기업소, 탄광, 광산, 저수지와 댐들이 심각하게 파손되면서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특히 겨울철에는 학교에 충분한 난방을 공급하고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90. 공화국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자연재해들의 후과를 없애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채택하여왔다. 농업생산량의 증대를 위해 토지개간과 구획변경을 통한 경지확대, 종자개량, 이모작 및 감자농사를 통한 곡식생산의 증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전력생산, 광업, 금속공업, 철도운송, 기타 경제주요부문에 대한 집중적 노력을 통하여 경제 전반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적 조치들도 취해 졌다.
91. 공화국 정부가 취한 긍정적인 조치들과 인민의 애국적 노력으로 최근 몇 년간 국내 총생산과 국가예산이 증대되고, 전반적으로 인민의 생활이 향상되었다. 오늘날 모든 조선인민들은 모든 것이 흥하고 모두가 세상에 부러운 것 없이 사는 강성대국을 건

설하기 위해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슬로건 하에 자신감과 낙천주의로 충만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

## VI. 결론

9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금까지의 활동들에서 얻은 경험들을 검토하고 세계의 인권상황을 관찰하면서, 인권을 광범하게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이 필수적이고, 어떻게 그것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하였다. 참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 (i) 외국의 간섭에 대항하여 나라를 지키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여야 한다;
  - (ii) 착취와 압제의 근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제도를 건설하여야 한다;
  - (iii) 인민들 사이의 대립과 불신이 아닌 단결과 협력이 사회에 퍼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iv) 첨단과학과 기술에 기초한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건전한 문화를 증진시켜야 한다.
93. 인권의 보호와 증진, 인민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활동을 최고원칙으로 삼는 공화국 정부는 군(軍)과 인민의 일치단결된 노력을 통하여 2012년까지 경제력을 일떠세우기 위한 목표들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인민의 생활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당면주요과제로 내세웠다.
9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식 사회주의 인권 이론과 정책, 충분히 명백해진 정당성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계속 지킬 것이다. 동시에 유용한 권고와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조선인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 부속문서 1

###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를 위한 국가보고서 준비에 참가한 대표적인 국가기관

- (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2) 내각 사무국
- (3) 중앙재판소
- (4) 중앙검찰소
- (5) 국가계획위원회
- (6) 외무성
- (7) 인민보안성
- (8) 재정성
- (9) 교육성
- (10) 보건성
- (11) 농업성
- (12) 수매량정성
- (13) 노동성
- (14) 문화성
- (15) 국토환경보호성
- (16) 건설성
- (17) 도시경영성
- (18) 국가품질감독국
- (19) 발명국
- (20) 중앙통계국

## 부속문서 2

###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를 위한 국가보고서 준비 협의에 참가한 사회단체, 연구기관, 비정부기구

- (1) 조선인권연구협회
- (2) 조선중앙변호사협회
- (3) 조선민주법률가협회
- (4)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 (5)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 (6)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 (7)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 (9) 조선종교인협의회
- (10)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 (11)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
- (12)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
- (13) 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원회
- (14)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 (15) 조선의학협회
- (16)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 (17) 조선가족계획 및 모성유아건강협회
- (18) 인구연구소
- (19) 조선교육후원기금
- (20)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 (21) 조선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 (22) 인민경제대학

## 부속문서 3

### 인권 관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별 법률 부문(Typical Sector-Specific Laws)

- (1) 국적법
- (2)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 (3) 지방주권기관구성법
- (4) 사회주의로동법
- (5) 량정법
- (6) 교육법
- (7) 인민보건법
- (8) 어린이보육교양법
- (9) 장애인보호법
- (10) 연로자보호법
- (11) 사회안전법
- (12) 의료법
- (13) 전염병예방법
- (14) 식료품위생법
- (15) 공중위생법
- (16) 체육법
- (17) 환경보호법
- (18) 민법
- (19) 민사소송법
- (20) 형법
- (21) 형사소송법
- (22) 신소청원법
- (23) 가족법
- (24) 상속법
- (25) 손해보상법

- (26) 재판소구성법
- (27) 변호사법
- (28) 공증법
- (29) 공민등록법
- (30) 도시경영법
- (31) 거주법 또는 주택법 (Law on Dwellings) \* 미확인 법률 - 역자주
- (32) 저작권법
- (33) 발명법
- (34) 공업도안법
- (35) 상표법





총 회

배포  
일반

A/HRC/WG.6/6/PRK/2  
2009년 9월 18일

원본: 영어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제6차 회기  
제네바, 2009년 11월 30일 -12월 11일

인권이사회 결의 5/1의 부속서 제15(B)항에 의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준비한 취합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보고서는 관계당사국의 견해와 논평을 포함한 조약기구들과 특별절차들로부터의 보고서들과 그 밖에 관련된 유엔의 공식문서들에 담긴 정보를 취합한 편집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의해 간행된 공식 보고서들 이외에는 본 사무소 측의 어떠한 견해나 관점 또는 권고사항도 담고 있지 않다. 이 보고서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일반 지침에 제시된 구조를 따르고 있다. 여기에 포함된 정보의 출처는 미주(尾註)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의 첫 번째 순환주기가 4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되었다. 최신 정보가 없는 경우,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만 아니라면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보고서들과 문서들이 고려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의 공식문서들에 담긴 정보를 취합하고 있기만 할 뿐이므로, 특정 사안들에서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초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해당국의 조약 미 비준 혹은 국제인권기구들과의 낮은 상호작용 또는 협력의 수준 때문일 수 있다.

# I. 배경 및 구조

## A. 국제적 의무의 범위<sup>1)</sup>

핵심적인 보편적 인권조약들 <sup>2)</sup>	비준 가입 또는 계승일자	선언 / 유보	조약기구의 특정 권능에 대한 인정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1981년 9월 14일		없음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81년 9월 14일	탈퇴 통지 <sup>3)</sup>	국가간 통보제도(제41조): 불인정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2001년 2월 27일	있음(제2조 f항, 제9조 2항, 제29조 1항 <sup>4)</sup> )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	2000년 2월 23일	없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당사국이 아닌 주요조약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OP-ICESCR) <sup>5)</sup>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CERD),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선택의정서(ICCPR-OP 1),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ICCPR-OP 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CEDAW),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CAT),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CRC-AC),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OP-CRC-SC),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CRM),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CRPD-OP),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CED)			
그 밖의 주요 관련 국제 문서들		비준 가입 또는 계승	
대량 학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있음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없음	
팔레르모 의정서 <sup>6)</sup>		없음	
난민 및 무국적자들 <sup>7)</sup>		없음	
1949년 8월 12일 제네바 제협약과 그에 대한 추가의정서들 <sup>8)</sup>		있음(단, 제2추가의정서와 제3추가의정서는 제외)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 협약들 <sup>9)</sup>		없음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교육상의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없음	

- 1) 달리 표시되지 않았다면, 이 표에 열거된 국제문서들에 대한 비준현황은 2006년 12월 31일 유엔사무총장으로부터 기탁된 다자간 조약들(ST/LEG/SER.E.25)에서 찾아볼 수 있고, 유엔사무국 법률실(OLA) 공식 웹사이트(<http://treaties.un.org>)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 2) 다음의 약어들이 이 문서에 사용되었다:  
**ICERD**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CESCR**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OP-ICESCR** (Optional Protocol to ICESCR)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30\_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보고서 및 우리정부, NGO, INGO 관련 자료집

규약

**ICCPR-OP 1** (Optional Protocol to ICCPR)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선택의정서

**ICCPR-OP 2** (Second Optional Protocol to ICCPR,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사형제폐지를 목적으로 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OP-CEDAW** (Optional Protocol to CEDAW)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CAT**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OP-CAT** (Optional Protocol to CAT)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OP-CRC-AC** (Optional Protocol to CRC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아동의 무력 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OP-CRC-SC** (Optional Protocol to CRC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ICRMW**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OP-CRPD** (Optional Protocol to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CED**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 3) 1997년 8월 27일, 유엔사무총장은 북한으로부터 협약 탈퇴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동 협약은 탈퇴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997년 9월 23일 유엔사무국은 그러한 통지로부터 비롯된 법적 지위에 대한 의견을 담은 비망록을 북한 정부에 보냈다. 동 비망록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듯이 유엔사무총장은 모든 협약 당사국들이 그러한 탈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협약으로부터의 탈퇴는 불가능하다는 견해이다. 상기의 탈퇴통지와 비망록은 1997년 11월 12일 C.N.467.1997.TREATIES-10 (<http://treaties.un.org>)이라는 문서번호 하에 모든 당사국들에 적절히 회람되었다.
- 4)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은 제2조 (f)항과 제9조 2항에 관련된 유보조항들에 반대하였다.
- 5) 2008년 12월 10일 총회 결의안 63/117로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총회는 2009년에 서명식을 개최할 것을 권고하였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의 제17조 1항은 “이 의정서에 대한 서명은 협약에 서명하였거나 비준하였거나 가입한 모든 나라들에게 개방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 6) 국제조직범죄방지에 관한 유엔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
- 7)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1954년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 1961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 8) 전시에 있는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제1협약); 해상에 있는 군대의 부상자·병자·난선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제2협약); 전쟁 포로의 처우에 관한 협약(제3협약); 전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제4협약); 1949년 8월 12일 국제적 무력 충돌의 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의 추가의정서(의정서I); 1949년 8월 12일 비국제적 무력 충돌의 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의 추가의정서(의정서II); 1949년 8월 12일 적십자 표장 추가에 관한 제네바 협약의 추가 의정서

1. 아동권리위원회(CRC)는 2009년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05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에 대하여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과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권하였다.<sup>10)</sup>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CESCR, 이하 사회권규약위원회)가 2003년에 권하였던 것처럼<sup>11)</sup>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또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권하였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도 비준할 것을 권하였다.<sup>12)</sup>
2.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북한에 권하였다.<sup>13)</sup>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권하였다.<sup>14)</sup>
3. 아동권리위원회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2003년에 권하였던 것처럼,<sup>15)</sup>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 대한 협약(ILO 협약 제182호)과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ILO 협약 제138호)<sup>16)</sup>의 비준을 염두에 두고 국제노동기구(ILO)에의 가입을 고려할 것과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유엔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북한에 권하였다.<sup>17)</sup>

---

(의정서III). 공식적인 비준 상태는 스위스 연방 외무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eda.admin.ch/eda/fr/home/topics/intla/intrea/chdep/warvic.html](http://www.eda.admin.ch/eda/fr/home/topics/intla/intrea/chdep/warvic.html)).

- 9) 강제노동이나 의무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협약 제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제105호; 단체·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87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대한 협약 제98호;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여성과 남성 노동자의 평등한 급료에 대한 협약 제100호; 고용과 직업에 관한 차별에 대한 협약 제111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제138호;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 대한 즉각적 조치와 금지에 대한 협약 제182호.
- 10)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CRC/C/PRK/CO/4, para. 32 (f);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총회 제6차 회기의 공식기록, 부록 38번* (A/60/38), para. 74.
- 11) 사회권규약위원회,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공식기록(2004), 부록 2번, (E/2004/22), 최종견해, para. 540.
- 12) A/60/38, para. 74.
- 13) CRC/C/PRK/CO/4, para. 75.
- 14) A/60/38, para. 71.
- 15) E/2004/22, para. 541.
- 16) CRC/C/PRK/CO/4, para. 61 (d).
- 17) Ibid., para. 69.

## B. 헌법 및 입법상의 구조

4.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은 국가적 안보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일부 법률 개정들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였다.<sup>18)</sup> 2008년 유엔총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유엔사무총장은 조약상 의무사항들을 이행하고 국제적 기준들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내법 개정의 가시적인 조짐들을 보여줄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하였다.<sup>19)</sup>
5. 2006년도 유엔아동기금(UNICEF) 보고서는 북한이 공공장소, 대중교통, 공공서비스에의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3년에 장애인보호법을 채택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sup>20)</sup>

## C. 제도적 및 인권의 하부 구조

6. 2009년 7월 10일 현재, 북한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가인권기구를 두지 않았다.<sup>21)</sup>
7.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의 관련 국가기구가 여성의 진출과 성 평등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충분한 가시성, 정책결정력 또는 재정적 및 인적 자원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였다.<sup>22)</sup>

## D. 정책적 대책

8. 특별보고관은 인권의 보호에 있어서 특히 국제적 기준들에 기반한 법률, 정책, 프로그램들이 요구된다고 언급하였다.<sup>23)</sup> 그는 국제적 의무들을 준수할 것, 군비 지출을 인간발전 부문으로 전환할 것, 국가자원들을 인권과 인간안보의 보호에 할당할 것을 북한에 권고하였다.<sup>24)</sup>

---

18) A/HRC/10/18, para 18. See also A/HRC/4/15, paras. 2 and 11; A/60/306, para. 7.

19) A/63/332, para. 57.

20) 유엔아동기금, 북한의 아동과 여성의 상황에 대한 분석, 2006년, p. 44, <http://www.unicef.org/publications/files> 에서 열람 가능.

21)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인정한 국가인권기구의 목록은 A/HRC/10/55, annex I. 참조.

22) A/60/38, para. 47.

23) A/HRC/10/18, para. 53.

24) A/62/264, para. 58.

9. 아동권리위원회는 보건과 교육 부문들에 대한 예산배정을 늘였다는 북한 측의 정보에 주목하는 한편, 이러한 예산들이 아동의 건강과 교육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MDG)를 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sup>25)</sup>
10.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 평등을 증진시키고 모든 수준들에서의 성 주류화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조율된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sup>26)</sup>
11. 북한은 2005년에 국가적 차원의 학교체계에 초점을 둔 세계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2005-2009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sup>27)</sup>

## II. 현장에서의 인권 증진과 보호

### A. 인권기구들과의 협력

#### 1. 조약기구들과의 협력

조약기구 <sup>28)</sup>	제출 및 검토된 최근보고서	최근의 최종견해	후속 답변	보고 상황
사회권규약위원회 (CESCR)	2002	2003년 11월 28일	-	3차 보고서 2008년 이래 기한 초과
자유권규약위원회 (HR Committee)	2000	2001년 7월 26일	2002년 7월 30일	3차 보고서 2004년 이래 기한 초과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2002	2005년 7월 18일	-	2차 보고서 2006년 이래 기한 초과
아동권리위원회 (CRC)	2007	2009년 1월 29일	-	5차 보고서 2012년 기한

12. 특별보고관은 북한에 대하여, 모든 인권문서들에 가입하고 이행할 것, 그 이행을 보

25) CRC/C/PRK/CO/4, para. 15.

26) A/60/38, para. 50.

27) 총회 결의안 59/113 B와 인권이사회 결의안 6/24 참조. 2006년 1월 9일과 2007년 12월 10일자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서 보낸 서한 참조. <http://www2.ohchr.org/english/issues/education/training/Summary-national-initiatives2005-2009.htm>. 참조.

28) 다음의 약어들이 이 문건에 사용되었다.

**CESCR**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CCPR** (Human Rights Committee)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CEDAW**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RC**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권리위원회

34\_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보고서 및 우리정부, NGO, INGO 관련 자료집

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자원들을 투여할 것에 덧붙여 북한이 당사국인 인권조약들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sup>29)</sup> 그는 나아가 4개 조약들 하의 다양한 인권감시기구들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할 것을 권고하였다.<sup>30)</sup>

## 2. 특별절차들과의 협력

발행된 상시 초대장	없음
최근의 방문 또는 사절단의 보고	-
원칙에 의거하여 허용된 방문	-
방문허가를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04, 2005, 2006, 2007, 2009년에 방문허용을 요청하였다. 식량권특별보고관은 2003, 2009년에 방문을 요청하였다.
사절단 방문 기간 동안의 편의제공 및 협조	-
방문에 따른 후속 조치	-
피해 주장들에 관한 통보 및 긴급호소에 대한 답변	검토기간 동안 특정 그룹들과 한 여성에 관련된 11건의 통보들이 북한에 발송되었다. 북한은 받은 통보들 중 36%에 해당 하는 4건에 대해 답변하였다.
주제별 이슈들에 관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 <sup>31)</sup>	북한은 최종기한 내의 검토기간 동안 특별절차들의 수입 자료에 의해 발송된 15건의 질의서들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않았다. <sup>32)</sup>

29) E/CN.4/2006/35, para. 81 (a).

30) Ibid., para. 81 (j).

31) 이 절에 포함된 질의서들은 특별절차 수입자의 공식적 보고를 반영한 것이다.

32) (a) 유엔교육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4/29), 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한 2006년 질의서; (b) 유엔이주민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4/24), 이주민에 관한 특정 법과 행정적조치의 영향에 대한 2006년 질의서; (c)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4/23), 강제결혼과 인신매매 문제와 관련된 2006년 질의서; (d) 인권옹호자의 상황에 대한 사무총장 특별대사의 보고서(E/CN.4/2006/95 and Add.5), 보편적으로 승인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사회의 개인, 집단 및 기관들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에 대한 2005년 6월 질의서; (e) 토착민의 인권상황과 기본 자유에 대한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A/HRC/6/15), 토착민의 인권에 대한 2007년 8월 질의서; (f)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의 보고서(E/CN.4/2006/62)와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래피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E/CN.4/2006/67), 인신매매와 상업적 성적 착취의 수요의 상관관계에 대한 2005년 7월 공동질의서; (g) 교육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E/CN.4/2006/45), 여자 아동의 교육권에 대한 2005년 질의서; (h) 용병이용에 관한 실무그룹의 보고서(A/61/341), 그들의 의무와 활동에 대한 2005년 11월 질의서; (i)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4/31), 아동 장기 매매에 대한 2006년 7월 질의서; (j)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래피에 대한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A/HRC/7/8), 성착취 피해 아동들을 위한 보조프로그램과 갱생프로그램에 대한 2007년 7월 질의서; (k) 인권과 다국적기업과 다른 기업들의 문제에 대한 사무총장 특별대사의 보고서(A/HRC/4/35/Add.3), 인권정책과 실행 관리에 대한 질의서; (l) 교육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8/10), 긴급상황에서의 교육권에 대한 2007년 질의서; (m) 교육권특별보고관의 2009년 7월 보고서(A/HRC/11/8), 수감시설에서의 교육권에 대한 질의서; (n) 인권위원회의 제11차 회기에서의 독립적 전문가들의 인권과 극빈에 대한 질문에 대한 2009년 6월 보고서(A/HRC/11/9), 현금이전프로그램

13. 인권이사회는 2009년에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1년 연장하였다.<sup>33)</sup> 북한은 현재까지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sup>34)</sup> 유엔사무총장은 북한 정부에 대하여 인권이사회와의 협조의 일환으로서 특별보고관과 그 밖의 다른 특별절차들로 하여금 인권상황을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다.<sup>35)</sup>

### 3.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협력

14.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을 해당국 내 인권상황에 관한 실질적 대화에 끌어내는 데 성공하지 못하여 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모든 북한 국민들을 위한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른 유엔기구들과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다.<sup>36)</sup> 북한 정부는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제안한 기술적 지원의 제공을 거절하였다.<sup>37)</sup>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독립적 역할을 강조하였고, 기술적 지원 제공의 수용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을 북한에 호소하였다.<sup>38)</sup>

## B.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을 고려한 국제적 인권보호 의무의 이행

### 1. 평등과 비차별

15. 특별보고관은 비록 과거에 비해서는 덜 뚜렷하지만,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3개의 부류들, 즉 엘리트 그룹에 속한 사람들, 중간층, 당국에 적대적인 사람들로 구분하였다고 언급하였다.<sup>39)</sup> 그는 북한의 엘리트층이 식량과 그 밖의 생필품들에 접근하는 것과 나머지 일반주민들이 생계수단에 접근하는 것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격차는 식량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다.<sup>40)</sup> 엘리트층에 속하지 않는 여성들은 식량과 그 밖의 생필품들에 접근함에 있어서 종종 불이익을

---

람에 대한 2008년 10월 질의서: (o)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의 2009년 6월보고서(A/HRC/11/6), 여성폭력과 정치경제에 대한 질의서.

33) A/HRC/10/16.

34) A/63/332, para. 11.

35) Ibid., para. 59. A/HRC/WG.6/6/PRK/2 Page 15.

36) Ibid., para. 58.

37) Ibid., para. 2.

38) Ibid., summary.

39) A/HRC/10/18, para. 21.

40) A/HRC/7/20, para. 15.



당하고, 정권의 적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박해와 사회적 소외에 처해지고 있다.<sup>41)</sup>

16.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특히 교육과 취업 부분에서 여성에게 차별적인 여성/남성의 역할과 책임들에 관한 고정된 억측과 태도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하였다.<sup>42)</sup> 사회권규약위원회도 2003년에 유사한 견해를 표명하였다.<sup>43)</sup>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조항들에 부합하도록 모든 법률들에 대한 포괄적 검토와 개혁에 착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였다.<sup>44)</sup>
17.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가정폭력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과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이 없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sup>45)</sup> 사회권규약위원회도 2003년에 유사한 우려를 표명하였다.<sup>46)</sup> 특별보고관은 폭력, 방치, 학대 및 착취 문제가 가정 안팎, 국내, 국경들을 넘어서까지 여성들에 대한 계속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동 중인 여성들이 종종 학대와 착취를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정에서의 성 폭력 문제는 적절히 다루어지지 않아왔다.<sup>47)</sup>
18. 아동권리위원회는 장애아동, 시설 내 아동, 법적 분쟁 중인 아동들과 관련하여, 비차별 원칙이 사실상 충분히 존중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동 위원회는 아동들이 그것이 자신들의 것이든 부모의 것이든 정치적 견해, 사회적 출신 또는 그 밖의 다른 지위에 근거한 차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한층 더 우려하였다.<sup>48)</sup> 특별보고관도 유사한 견해를 표명하였다.<sup>49)</sup> 아동권리위원회는 비차별 원칙을 약속하고 있는 현행 법률들의 이행을 감시·보장할 것을 북한에 권고하였다.<sup>50)</sup>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장애아동들이 정규 학교 체계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현행 장애아동 교육 체계를 변화시킬 것을 북한에 권고하였다.<sup>51)</sup>

---

41) A/63/322, para. 46.

42) A/60/38, para. 53.

43) E/2004/22, para. 522.

44) A/60/38, paras. 41-42.

45) Ibid., para. 55.

46) E/2004/22, paras. 528, 548.

47) A/HRC/10/18, para. 42. See also E/CN.4/2006/35, para. 24; A/60/306, paras. 39-40.

48) CRC/C/PRK/CO/4, para. 19.

49) E/CN.4/2006/35, para. 29.

50) CRC/C/PRK/CO/4, para. 20.

51) E/2004/22, paras. 534, 555.

## 2. 생명권, 자유권, 인신의 안전권

19. 특별보고관은 정치범수용소들에서의 공개처형 및 비밀처형,<sup>52)</sup> 2004년과 2005의 다양한 법률개정들<sup>53)</sup>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겁을 주기 위해 계속 이용되고 있는 공개 처형들에 대한 보고들을 언급하였다. 2001년에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CCPR, 이하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사형이 집행되는 형사적 범죄의 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환영하는 한편, 인정되고 보고된 공개처형 사례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모든 공개처형들을 자제하고 사형제의 폐지를 향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sup>54)</sup>
20. 2008년 3월, 비사법적, 즉결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한 인접국으로 국경을 넘을 것을 계획한 혐의로 기소된 13명의 여성들과 2명의 남성들이 공개처형 되었다고 하는 입수된 정보와 관련하여, 식량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문제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함께 북한에 합동서한을 발송하였다. 주장된 바로는 이러한 공개처형이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것을 단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북한 정부는 이 통보서한에 답변하지 않았다.<sup>55)</sup>
21.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반에 의해 제출된 9명의 실종된 외국인들에 대한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sup>56)</sup> 특별보고관은 납치/강제실종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보상할 것을 북한에 권고하였다.<sup>57)</sup>
22.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생명권, 생존권 및 발달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였다. 동 위원회는 특히 심각한 영양실조로 인한 아동들의 성장발육 부진, 체력 저하 및 사망에 대해 우려하였고, 모든 아동들의 생명권과 발달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북한에 권고하였다.<sup>58)</sup>
23. 특별보고관은 입법상의 개선들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 금지된 고문 등 국가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박해, 기준 이하의 수감 환경에 관한 보고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북한에는 교화소와 강제노동수용소

---

52) A/HRC/10/18, para. 23. See also A/63/332, para. 5.

53) A/HRC/7/20, para. 26.

54) A/56/2001, para. 86 (4), (13).

55) A/HRC/10/5/Add.1, paras. 46-47

56) E/CN.4/2006/56, para. 188.

57) A/62/264, para. 58.

58) CRC/C/PRK/CO/4, paras. 23-24.

뿐만 아니라 정치적 반대자들에서 범죄자들에 이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매우 다양한 구금 시설들이 있다.<sup>59)</sup> 끔찍한 수감 환경에 의해 무수한 권리 침해와 박탈이 야기되고 있다.<sup>60)</sup> 특별보고관은 사람들에게 집단적 처벌들이 가해지고, 가족의 한 구성원이 당국의 법규를 위반할 경우 가족 전체가 박해를 받고 구금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보가 있다고 거듭 언급하였다.<sup>61)</sup> 유엔사무총장은 탈북자들의 가족들에 대한 처벌이 탈북을 막기 위한 억제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sup>62)</sup>

24.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들이 인륜과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이 존중되는 처우를 받고, 모든 수감자들이 충분한 음식과 시의적절한 의학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북한에 권고하였다.<sup>63)</sup> 이에 대한 후속답변에서 북한 정부는 특히 구류 및 구금 상태에서의 고문 및 비인간적인 처우와 처벌은 법에 의해 금지되고 통제된다고 답변하였다. 북한 정부는 검찰소가 매일 엄격한 법적 감독과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sup>64)</sup>
25.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에 대하여, 아동이 고문에 처해지는 것을 금지하고 고문 가해자들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가하는 조항을 국내법에 포함시킬 것; 아동에 대한 고문 및 부당 처우의 모든 사례들을 수사하고 기소할 것을 권고하였다.<sup>65)</sup> 동 위원회는 또한 대체양육시설들에서 처벌이 가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였다.<sup>66)</sup>
26. 2005년 12월 20일, 판사와 법률가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북한여성들이 외국으로 인신매매되고 있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문제에 관한 특별보고관,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에 관한 특별보고관, 여성에 대한 폭력과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함께 북한에 합동서한을 발송하였다. 보고된 바로는, 공식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날 경우 형사

---

59) A/HRC/4/15, para. 13.

60) A/HRC/10/18, para. 24.

61) A/HRC/10/18, para. 21. See also A/60/306, para. 19.

62) A/63/332, para. 5.

63) A/56/2001, para. 86 (16).

6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답변, CCPR/CO/72/PRK/Add.1 (2002), paras. 1-3.

65) CRC/C/PRK/CO/4, paras. 31, 32 (a)-(c).

66) Ibid., para. 36.

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어 최대 3년까지 노동단련대나 구금시설에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된 여성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이들의 상황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에 의해 더욱 악화된다.<sup>67)</sup> 관련 보고서들은 상당수의 북한주민들이 은밀하게 국경들을 넘고, 한 외국으로부터 송환될 경우에는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sup>68)</sup> 보고된 바로는, 심문 이후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재판 또는 어떠한 형태의 사법적 절차도 없이 노동단련대나 지방의 구금시설로 보내진다.<sup>69)</sup>

27.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여성들과 그 밖의 다른 그룹들이 북한을 떠나고자 하는 가운데 만연한 인신매매와 인신매매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일부는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전락하고, 끝내는 강제노동, 성 매매, 강제결혼을 당하였다.<sup>70)</sup>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에 특별히 인신매매 문제에 대응하는 법률이 전무하다는 점을 우려하였다.<sup>71)</sup>
28. 유엔사무총장은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의 정보와 특히 여성에 대한 성 매매 혹은 강제결혼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와 인신매매 위협의 증가;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시의 가혹한 처벌에 대한 보고서들;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태어난 아동들의 체류 정식화에 대한 제한된 가능성; 제3국들에 정착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안중에 있어서 가혹한 영향을 끼치는 연장된 출국절차를 비롯한 우려사항들에 주목하였다. 그러한 문제들은 동반자 없는 여성들과 아동들에게 특히 영향을 끼친다.<sup>72)</sup>
29. 아동권리위원회는 인신매매 피해아동들이 결국 북한으로 돌아오게 되거나 송환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동 위원회는 인신매매된 아동들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간주·보호하고, 적절한 회복과 사회적 통합 서비스 및 프로그램들의 제공을 보장할 것을 북한에 권고하였다.<sup>73)</sup>

67) E/CN.4/2006/52/Add.1, paras. 62-63.

68) Ibid., paras. 62-63.

69) A/HRC/4/33/Add.1, p. 78; E/CN.4/2006/52/Add.1, para. 63.

70) A/HRC/10/18, para. 42. See also E/CN.4/2006/35, para. 24; A/60/306, paras 39-40.

71) CRC/C/PRK/CO/4, paras. 67-68.

7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2008), A/63/332, para. 53.

73) CRC/C/PRK/CO/4, paras. 67-68.

### 3. 형사책임의 면제와 법치를 포함한 사법행정

30. 특별보고관에 따르면, 북한의 사법체계는 독립적인 사법부, 진정으로 피고인들을 위해 활동하는 변호사, 판사들이 부족하다. 설령 세 요소들이 모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국가에 복종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법치의 개념을 지지하지 않는다. 실제로 판사들은 최고인민회의의 지시 하에 일한다.<sup>74)</sup> 2004년에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손상시키거나 떨어트리는 헌법 및 입법상의 조항들을 즉각 검토할 것을 북한에 권고하였다.<sup>75)</sup>
31.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국가요원들이 자행하는 모든 부당 처우와 고문, 그 밖의 다른 학대 행위 사례들이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 즉각 인지·조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모든 구금 및 구류 장소들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 제도를 구축할 것을 북한에 권고하였다.<sup>76)</sup> 특별보고관은 최고위층 및 이들과 연계된 관리들이 누려온 면책특권의 타당성과 책임성은 북한의 응답이 요구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라고 언급하였다.<sup>77)</sup>
32.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이 아동권리협약과 그 밖의 관련된 유엔의 기준들에 부합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만한 청소년사법체계를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데 유감을 표명하였다.<sup>78)</sup> 특별보고관은 보편적 성격의 청소년사법기준들을 염두에 두고 아동들에게 적용되는 형사사법체계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sup>79)</sup>

### 4. 사생활·결혼·가정생활에 대한 권리

33. 특별보고관은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국가기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웃이라는 그룹들도 사회통제 및 감시, 공포와 불신 체제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sup>80)</sup>
34. 특별보고관은 어떠한 위협이나 그 밖의 다른 형태의 강압도 출신국이나 다른 국가

---

74) A/HRC/10/18, para. 25. See also A/63/332, para. 4.

75) E/2004/22, paras. 518, 537.

76) A/56/2001, para. 86 (15).

77) A/HRC/10/18, para. 53.

78) CRC/C/PRK/CO/4, paras. 70-71, 73.

79) A/HRC/7/20, para. 40.

80) A/HRC/10/18, para. 32.

들에 남아 있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가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와 병행하여 가족재결합을 위한 대책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sup>81)</sup> 그는 또한 실종자 문제와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재결합 문제처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이 1950-1953년 한국전쟁의 결과로 남아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sup>82)</sup>

35.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보호시설의 많은 아동들이 실제로는 고아가 아니며, 이들 중 상당수가 그러한 시설들에 관례적으로 보내지고 있어 위급하다는 알림을 받았다. 동 위원회는 또한 부모가 수감 중인 아동들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였다. 동 위원회는 양육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존하는 기관들에 대한 명확한 질적 기준들을 설정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였다.<sup>83)</sup> 사회권규약위원회는 북한 정부에 대하여, 고아들에게 대체가정 보호를 제공하고, 고아들에 대한 교육을 정규학교 체계 내로 포함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sup>84)</sup>

## 5. 이동의 자유

36. 유엔사무총장은 다른 곳에서 보호받거나 혹은 정착하기 위해 해당국을 계속 떠나는 북한국민들의 지속적 흐름에 대해 유엔난민기구(UNHCR)가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보고된 바로는, 국가를 떠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이동의 자유권이 심각하게 박탈되어 왔다.<sup>85)</sup> 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에 의해 박해받은 사람들이 여행허가서 없이 은밀하게 북한을 탈출하는 흐름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다고 언급하였다.<sup>86)</sup> 2001년에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일반적 원칙으로서의 행정적 허가과 출국비자에 대한 요건을 폐지할 것을 북한 정부에 권고하였다.<sup>87)</sup>

## 6. 종교 또는 신앙·표현·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공적·정치적 생활에서의 참여권

37. 유엔사무총장은 북한주민들이 종교·의견·표현, 평화적 집회·결사, 이동, 정보 접근의 자유를 거부당해 왔다는 보고들에 주목하였다.<sup>88)</sup> 특별보고관은 일부 종교의식들

---

81) A/HRC/7/20, para. 42.

82) A/HRC/4/15, para. 59.

83) CRC/C/PRK/CO/4, paras. 34-35, 37 (f).

84) E/2004/22, paras. 529, 550.

85) A/63/332, para. 53.

86) A/HRC/10/18, para. 35. See also E/CN.4/2006/35, para. 13; A/61/349, para. 21.

87) A/56/2001, para. 86 (20).

은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종교를 실천하는 행위는 박해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들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sup>88)</sup>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종교자유의 행사에 관련된 북한의 관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요건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우려하였다.<sup>89)</sup> 이에 대한 후속답변에서 북한 정부는 종교인들이 가정 예배소와 그 밖의 다른 시설들에서 저마다 자신의 종교적 규율들에 따라 자유롭게 종교생활과 의식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sup>91)</sup>

38.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폐쇄성과 정보의 흐름 및 언론매체에 대한 엄격한 국가적 통제에 의해 표현·결사·정보접근의 자유가 저해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sup>92)</sup> 한 인접국으로부터 온 도서들을 읽는 것은 간첩죄로 처벌될 수 있다. 광범위한 전화 도청이 이루어진다.<sup>93)</sup>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외국신문들과 출판물이 대중적으로 쉽게 이용될 수 없고,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해외로 여행할 수도 없듯이 “국가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개념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sup>94)</sup> 이에 대한 후속 답변에서 북한은 특히 표현의 자유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요건에 따라서만 제한될 뿐이라며,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제한의 근거로 언급하였다.<sup>95)</sup>

39.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집회를 통제하는 법률적 요건들을 남용할 가능성을 포함하여, 대중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였다.<sup>96)</sup> 이에 대한 후속답변에서 북한은 특히 국가안전과 공공질서를 방해하는 집회는 사회안전단속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sup>97)</sup>

40. 유엔 해당국가팀(UNCT)은 북한여성들이 최고인민회의 의석들 중 약 20%, 지방인민회의 의석들 중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의 정치·사법·공공서비스 부문

---

88) A/63/332, para. 4.

89) A/HRC/10/18, para. 33. See also A/HRC/4/15, para. 16; E/CN.4/2006/35, para. 19; A/60/306, para. 36; A/61/349, para. 30.

90) A/56/2001, para. 86 (22).

91) CCPR/CO/72/PRK/Add.1 (2002), paras. 4-6.

92) A/HRC/4/15, para. 14.

93) A/HRC/10/18, para. 29.

94) A/56/2001, para. 86 (23).

95) CCPR/CO/72/PRK/Add.1 (2002), paras. 7-10.

96) A/56/2001, para. 86 (24).

97) CCPR/CO/72/PRK/Add.1 (2002), para. 11.

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여성들이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우려하였음에 주목하였다.<sup>98)</sup> 특별보고관도 유사한 견해를 표명하였다.<sup>99)</sup>

41. 특별보고관은 반체제자로 간주된 사람들이 소외, 차별, 박해를 당하듯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민의 참여는 전무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sup>100)</sup>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정당 설립 및 등록을 관리하는 규정이나 법률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사실은 자신들이 자유롭게 선출한 대표자들을 통해 공무수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5조의 항목들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고찰하였다.<sup>101)</sup>
42.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에 현존하는 비정부기구들이 관변기구들로부터 구별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였다.<sup>102)</sup>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북한 내 인권기구들의 수가 제한적이고, 외국에서 온 인권기구들에게 허용되는 접근성도 제한적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하였다.<sup>103)</sup>

## 7. 노동권,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환경권

43. 사회권규약위원회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직업을 배정하는 현행 제도에서는 노동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당사국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과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하였다.<sup>104)</sup> 유엔 해당국가팀은 남성들이 더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지위를 차지하는 성별 위계구조가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남녀 간 동일 임금의 달성에 주목하였다.<sup>105)</sup>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특정한 관리직책들에 있어 여성들의 수를 늘리는 임시특별조치를 활용할 것을 북한 정부에 권하였다.<sup>106)</sup>

---

9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해당국가팀이 UPR에 제출한 보고서, p. 3. 또한 유엔통계처의 데이터와 분석은 <http://mdgs.un.org/unsd/mdg> 참조.

99) A/HRC/10/18, para. 40. See also, A/HRC/7/20, para. 36; E/CN.4/2006/35, para. 22; A/60/306, para. 37; A/61/349, para. 33.

100) A/HRC/7/20, para. 8.

101) A/56/2001, para. 86 (25).

102) CRC/C/PRK/CO/4, para. 13.

103) A/56/2001, para. 86 (11).

104) E/2004/22, paras. 523, 543.

1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해당국가팀이 UPR에 제출한 보고서, p. 3.



44. 근로자 및 이주노동자들과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적정임금, 단체교섭, 결사의 자유, 인도적인 노동환경 등 노동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sup>107)</sup> 그는 일정 연령 미만의 여성들에 대한 장사 금지조치와 시장 폐쇄조치 등 경제적 영역에서의 국가에 의한 주민통제에 여성들이 특히 영향을 받아왔다는 데 주목하였다.<sup>108)</sup>
45.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의 노동 관련 법률들이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노동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였고, 착취 형태의 아동 노동에 대해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sup>109)</sup> 유엔 해당국가팀은 민법상 아동을 17세 이하인 자들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sup>110)</sup>

## 8. 사회보장권과 적정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46. 아동권리위원회는 만연한 빈곤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와 식량·안전한 식수·위생에 대한 접근 및 이용가능성과 관련하여 특히 매우 열악한 상황에 머물러 있는 아동들의 생활수준에 대해 깊이 우려하였다. 동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sup>111)</sup> 유엔 해당국가팀은 안전한 식수에 대한 100%의 접근성을 확보했다고 북한이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이 현장관찰에 의해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sup>112)</sup>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들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쪽으로의 상황 개선에 목표를 둔 구체적인 빈곤완화대책을 도입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하였다.<sup>113)</sup>
47. 유엔사무총장은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식량상황의 심각성과 주민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특별히 우려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sup>114)</sup> 유엔 해당국가팀은 세계식량기구(WFP)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2008년도 평가를 인용하여 식량부족의 영향이 불공평하게 나뉘어 미쳐오고 있고, 어린 아동들과

106) A/60/38, p. 32.

107) A/HRC/7/20, para. 35.

108) A/HRC/10/18, para. 41. See also A/HRC/7/20, para. 13.

109) CRC/C/PRK/CO/4, paras. 60-61.

1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해당국가팀이 UPR에 제출한 보고서, p. 2.

111) CRC/C/PRK/CO/4, paras. 50-51.

1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해당국가팀이 UPR에 제출한 보고서, p. 5.

113) A/60/38, p. 60.

114) A/63/332, para. 6.

임산부, 수유중인 여성들과 노인들이 취약인구에 포함된다고 언급하였다.<sup>115)</sup> 사회권 규약위원회는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이 겪은 만연한 기근의 결과들과 특히 여성, 아동, 노인들과 같은 특정그룹들이 그 밖의 다른 그룹들보다 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왔다는 데 대해 우려하였다.<sup>116)</sup>

48. 특별보고관은 북한 정부에 대해, 주민들에게 식량 및 그 밖의 기초 생필품들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고 주민들이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즉각 보장할 것, 유엔기구 및 그 밖의 인도주의적 행위자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 식량 및 그 밖의 기초 생필품들에 접근함에 있어서의 불균형들을 점진적으로 극복할 것,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을 통해 식량 안보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다.<sup>117)</sup> 그는 또한 노인들이 식량부족과 사회보장 및 의료의 쇠퇴로부터 영향을 받아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sup>118)</sup>

49. 2006년 5월 17일, 식량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북한 정부가 국제기구들로부터의 긴급식량지원을 제한하고, 사적인 곡물 판매를 것을 금지하며, 전적으로 이전의 공공배급체계(PDS)로 되돌리겠다고 결정하였다는 보고들과 관련하여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함께 북한 정부에 서한을 발송하였다. 1990년대의 식량난 기간 동안, 공공배급체계가 붕괴되자 이에 의존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사망하였고, 많은 이들이 심각한 영양실조와 굶주림으로 고통 받았다. 이에 대해 북한 정부는 그러한 통보서한이 조작된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는 구실을 대면서 대화를 거절하였다.<sup>119)</sup>

50.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산모사망률의 심상치 않은 증가에 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북한 정부에 대해 만성영양실조로 고통 받는 아동들에게 적절한 영양이 제공되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 태아의 건강을 위한 서비스와 출산 시 의료지원을 포함하여 산모관리 여건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sup>120)</sup> 유엔 해당국가팀은 북한이 신생아사망 건수를 축소 보고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sup>121)</sup> 유엔통계처(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의 2008년도 자료는 다소 또는 심각하게 저체중인 5세 미만 아동의 비율이 2004년에 23.4%에 달하였음을 지적하였다.<sup>122)</sup> 유엔사무총

---

1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해당국가팀이 UPR에 제출한 보고서, p. 2.

116) E/2004/22, paras. 527 and 530.

117) A/63/322, para. 62.

118) E/CN.4/2006/35, para. 31.

119) A/HRC/4/30/Add.1, paras. 20-21

120) E/2004/22, paras. 532, 552-553.

1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해당국가팀이 UPR에 제출한 보고서, p. 3.

장은 국가경제의 붕괴뿐만 아니라 여성의 영양상태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던 계속된 자연재해들로 인해 산모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시사하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정보에 주목하였다.<sup>123)</sup>

## 9. 교육권, 공동체의 문화적 생활에의 참여권

51. 사회권규약위원회<sup>124)</sup>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72년 이래 시행되어 온 전반적 11년제 무상의무교육제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하였고, 직업을 가진 어머니들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 환영하였다.<sup>125)</sup> 유엔 해당국가팀은 현장 관찰에 근거하여 특히 초등학교 순(純)등록률에 관한 새천년개발목표는 아마도 충분히 달성되었을 것이라고 시사하였다.<sup>126)</sup> 특별보고관은 문제가 학교시설들의 낙후로 인해 더욱 제한되는 교육의 질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교육은 또한 주민들을 세뇌시키는 핵심적 수단이 된다.<sup>127)</sup> 14세에서 16세 사이의 아동들은 이데올로기 학습과 결합된 군사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다.<sup>128)</sup>
52.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에 대하여 특히 교육 부문에 예산 배정을 늘릴 것, 제공되는 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개선에 초점을 둘 것, 농장지원을 포함한 교과 외의 활동에 배정된 시간이 아동의 학습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학교에 다니는 데 드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없애는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sup>129)</sup>

## 10. 이주민, 난민, 비호신청자들

53.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일자리나 더 나은 생활여건을 찾기 위해 국외로 다녀온 사람들에게 대한 처벌들을 없애기 위해 국가 법률을 검토할 것을 북한에 권고하였다.<sup>130)</sup>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 정부에 대해 적법한 여행 허가 없이 경제적 이유로 국외

---

122) 유엔통계처의 데이터와 분석, <http://mdgs.un.org/unsd/mdg> 에서 열람 가능.

123) A/63/332, para. 51.

124) E/2004/22, para. 516.

125) A/60/38, paras. 31-32.

1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해당국가팀이 UPR에 제출한 보고서, p. 2.

127) A/HRC/4/15, para. 33.

128) A/HRC/10/18, para. 46.

129) CRC/C/PRK/CO/4, paras. 52, 54 (a)-(d).

130) E/2004/22, paras. 524, 544.

로 다녀 온 여성 귀환자들이 자신들의 가족들과 사회로 재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든 형태의 권리 침해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였다.<sup>131)</sup>

54. 특별보고관은 벌금을 부과하였던 이전의 조치와 달리 현재는 징역형이 적용되고 있듯이 출국에 더 많은 제한과 더욱 가혹한 제재가 가해져 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sup>132)</sup> 그는 또한 여성들이 비호신청자들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한층 더 주목하였다. 그러한 여성들은 때때로 아동들을 동반하기도 하고, 많은 이들이 최종 비호국에서 배우자 및 가족들과 재결합하기 위해 애를 쓴다.<sup>133)</sup>
55. 아동권리위원회는 인접국들로 국경을 넘은 아동들이 귀환하거나 송환될 경우에 가혹한 처우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데 대해 우려하였다. 동 위원회는 18세 미만의 누구도 적법한 승인 없이 영토를 떠났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북한에 권고하였다.<sup>134)</sup>

### III. 성취, 모범사례, 과제 및 제약사항들

56.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이 생식보건증진전략(2006-2010), 2002-2007 에이즈 예방 전략, 2008-2012 1차보건의료전략 및 의학전략과 기타 분야에 관한 구체적 전략들을 채택하였음을 긍정적 조치로 인정하였다.<sup>135)</sup>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새천년개발목표의 일부를 반영하여 아동복리를 위한 2001-2010 국가행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sup>136)</sup> 유엔 해당국가팀은 최근 몇 년간의 점진적 개선들에도 불구하고 만연한 식량부족, 쇠퇴하는 보건체계, 안전한 식수 또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결여가 북한주민의 인권 구현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sup>137)</sup>
57. 유엔 해당국가팀은 북한법상 보건의료가 완전무상으로 제공된다고 언급하였다. 동

---

131) A/60/38, para. 60.

132) A/HRC/10/18, para. 38. See also A/HRC/7/20, para. 29; A/HRC/4/15, para. 22.

133) A/HRC/10/18, para. 43. See also A/HRC/7/20, para. 29; A/HRC/4/15, paras. 24-27; A/60/306, paras. 26-31; A/61/349, para. 20.

134) CRC/C/PRK/CO/4, paras. 56-57.

135) Ibid., paras. 3 (a)-(c), 44-45.

136) A/HRC/7/20, para. 39.

1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해당국가팀이 UPR에 제출한 보고서, p. 1.

팀은 또한 보건의료기관들의 연계망이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주요한 성취이자 장점이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북한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들로 인해 특히 의약품과 그 밖의 물품들이 부족해지면서 이 체계는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sup>138)</sup>

58.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두를 위한 교육에 관한 국가행동계획(2003-2015), 취학 전(前) 의무교육, 학교들의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지원기금을 긍정적 조치로 인정하였다.<sup>139)</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유엔아동기금 사이의 2004-2006년 종합운영계획서는 경제적 어려움들이 교과서, 학교물품, 동계 난방연료의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데 주목하였다.<sup>140)</sup>
59. 사회권규약위원회는 1990년대 중반의 자연재해들로 인해 식량안보, 파괴된 사회 기반의 재건에 드는 높은 비용, 학교 출석률 감소를 포함하여 많은 단계들과 다양한 분야들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sup>141)</sup>
60. 특별보고관은 구(舊)시대적 제도와 이전의 장애인 감금 조치를 개선하는 법률을 2003년에 채택하였음을 환영하였다. 그는 나아가 비인도적 환경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받고 사회로 완전히 재통합될 수 있도록 과거 국가의 조치들로 인한 피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sup>142)</sup>

#### IV. 국가적 핵심우선과제, 주도적 추진사항, 공약사항들

해당사항 없음.

---

138) Ibid., p. 4. 또한 유엔아동기금, 북한의 아동과 여성의 상황에 대한 분석, 2006년, p. 40 참조, <http://www.unicef.org/publications/files> 에서 열람 가능.

139) CRC/C/PRK/CO/4, paras. 53, 55 (a)-(d).

1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유엔아동기금의 종합운영계획서, 국가운영프로그램(2004-2006), p. 4.

141) E/2004/22, paras. 517, 533.

142) A/HRC/10/18, para. 48.

## V. 역량강화 및 기술적 지원

61. 유엔사무총장은 유엔기구 및 그 밖의 인도주의적 행위자들이 그들의 수임사항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충분한 접근을 허용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하였다. 그는 이전보다 개선된 협력과 대화를 통해 유엔이 북한 내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도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sup>143)</sup>
62.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에 대하여, (a)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포괄적인 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엔아동기금으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구할 것,<sup>144)</sup> (b) 아동폭력에 관한 유엔의 연구보고서<sup>145)</sup>상의 권고사항들을 이행하고, 이를 실천의 도구로서 활용하기 위해<sup>146)</sup> 비정부기구 협력자들뿐만 아니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와 그 밖의 관련 기구들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구할 것, (c) 거리의 아동들과 관련하여 특히 유엔아동기금으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구할 것,<sup>147)</sup> (d) 청소년사법 정의 부문에 있어서는 유엔아동기금과 청소년사법정의에 관한 유엔 기구간 패널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구할 것<sup>148)</sup>을 권고하였다.
63. 사회권규약위원회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하의 제반 권리 이행에 목표를 둔 노력으로 국제적 지원을 계속 구하고, 국제적 협력에 스스로 참여하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비롯한 국제적·지역적 기구들에 의한 지역적 활동들에 동참할 것을 북한에 권고하였다.<sup>149)</sup>

---

143) A/62/318, para. 44.

144) CRC/C/PRK/CO/4, para. 18.

145) A/61/299.

146) CRC/C/PRK/CO/4, para. 33.

147) Ibid., para. 65.

148) Ibid., para. 74.

149) E/2004/22, para. 536.



총 회

배포  
일반

A/HRC/WG.6/6/PRK/3  
2009년 8월 28일

원본: 영어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제6차 회기  
제네바, 2009년 11월 30일 - 12월 11일

인권이사회 결의 5/1의 부속서 제15(C)항에 의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준비한 요약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보고서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앞두고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한 12개 문서들<sup>2)</sup>의 요약문이다. 동 요약문은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일반 지침에 제시된 구조를 따르고 있다. 동 요약문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측의 어떠한 견해나 관점 또는 권고사항은 물론, 특정 주장들에 관한 어떠한 판단이나 결정도 담고 있지 않다. 여기에 포함된 정보의 출처는 미주(尾註)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제출된 문서들의 원문은 가급적 수정하지 않았다. 특정 사안들에서 정보가 부족하거나 초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관련 문서들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접수된 모든 문서들의 전문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 보고서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의 첫 번째 순환주기가 4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되었다.

\* 본 문서는 유엔 번역부서로 넘겨지기 전에 별도의 편집을 거치지 않았다.

## I. 배경 및 구조

### A. 국제적 의무의 범위

1.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북한)이 4개의 주요 국제인권조약, 즉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의 당사국이라는 점을 알려왔다.<sup>3)</sup> 세계크리스천연대(CSW)는 당사국으로서 준수 의무가 있는 국제조약들이 국가 정책과 실제에 반영되고 있음을 명확히 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였다.<sup>4)</sup>

### B. 헌법 및 입법상의 구조

2. 세계크리스천연대에 따르면, 북한의 헌법은 유엔 및 국제체제에 의해 실체가 판별되는 인권을 기초적인 형식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에 대한 해석은

---

2) 이하에 나열된 이해관계자들이 동 요약문을 위한 정보제공에 기여하였고, 제출된 모든 원본의 전문은 [www.ohchr.org](http://www.ohchr.org)에서 이용할 수 있다. (별표\*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지위에 있는 NGO를 나타낸다.)  
*시민사회*

아동체벌근절을위한글로벌이니셔티브(GIEACPC)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London, United Kingdom

휴먼라이츠워치(HRW) Human Rights Watch\*, Geneva, Switzerland

세계크리스천연대(CSW)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New Maldon, United Kingdom

북조선난민구호기금(LFNKR)/국경없는인권(HRWF) Life Funds for North Korean Refugees, Tokyo, Japan; 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Brussels, Belgium

법과정의를위한유럽센터(ECLJ) European Centre for Law and Justice, Strasbourg, France

북한인권시민연합(NKHR)/대한변호사협회(KBA)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eoul, Republic of Korea; Korean Bar Association, Seoul, Republic of Korea

아시아인권센터(ACHR) Asia Centre for Human Rights, Seoul, Republic of Korea

국제사면위원회(AI) Amnesty International\*, London, United Kingdom

오픈도어선교회(ODI) Open Doors International, AA Harderwijk, The Netherlands

경북대인권과평화센터(CHRP)/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KWARI) Centre for Human Rights and Peace, Daegu, Republic of Korea; Korean War Abductees Research Institute, Seoul, Republic of Korea

주빌리캠페인(JC) Jubilee Campaign, Fairfax, VA, United States of America

천주교인권위원회(CHRC)/평화네트워크(PN)/인권운동사랑방(SARANGBANG)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Peace Network/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eoul, Republic of Korea.

3) 휴먼라이츠워치, p. 1.

4) 세계크리스천연대, p. 1, para. 5.



국제적으로 인식되는 기준과 다르다. 북한 정부는 개발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우선하고, 더욱이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그 자체로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배려에 의해 수여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5)</sup> 세계크리스천연대는 북한의 헌법은 더욱 근대화되어야 하고, 인권은 평등하고, 천부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서 보호되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였다.<sup>6)</sup>

3. 국제사면위원회(AI)는 세계인권선언과 북한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들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와 자유들이 국내법에 의해 거의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sup>7)</sup> 북한인권시민연합(NKHR)과 대한변호사협회(KBA)는 북한에서 제도적(또는 법적) 규정들과 실제 사이에는 여전히 상당한 불일치점들이 존재하고, 차별적인 사회계급정책들과 사회정치적 통제가 기본적 권리를 계속 침해하고 있다고 특별히 언급하였다.<sup>8)</sup>
4. 국제사면위원회는 적절한 인권법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임을 약속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급한 문제로서 유엔의 인권조약 기구들과 헌장에 근거한 기구들로부터의 권고사항들을 이행할 것; 고문 및 그 밖의 잔인한,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강제실종자보호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에 반영하며, 정책과 실제에 있어서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sup>9)</sup>
5. 휴먼라이츠워치는 노동 관련법들을 포함한 북한의 법률들이 해당국의 국가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노동당의 정책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알려졌다. 고(故) 김일성 주석이 남긴 지도원칙들이나 명령들은 헌법이나 법률들을 대신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sup>10)</sup>

---

5) 세계크리스천연대, p. 1, para. 6.

6) 세계크리스천연대, p. 1, para. 7.

7) 국제사면위원회, p. 3, para. 2.

8) 북한인권시민연합/대한변호사협회, p. 10.

9) 국제사면위원회, p. 6.

10) 휴먼라이츠워치, p. 3

## C. 제도적 및 인권의 하부 구조

6. 북조선난민구호기금(LFNKR)과 국경없는인권(HRWF)은 북한 내에는 국가적 차원의 인권침해 구제장치가 전혀 없다고 알려졌다. 그들은 북한 내에 시민사회와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sup>11)</sup>
7. 천주교인권위원회(CHRC), 평화네트워크(PN), 인권운동사랑방(SARANGBANG)은 북한에 대하여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조정위원회와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조정위원회를 포함한 북한의 국내적 인권레짐들의 활동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나아가 이러한 기구들에 인권보호기능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고, 북한이 국제규범에 따라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 인권이사회,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와의 인권이슈들에 관한 의견 교환에 참여하고, 국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하였다.<sup>12)</sup>

## D. 정책적 대책

8.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대한변호사협회는 북한 내 인권교육의 g이행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sup>13)</sup>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은 북한 정부가 자국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sup>14)</sup>

# II. 현장에서의 인권 증진과 보호

## A. 인권기구들과의 협력

9.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 정부가 독립적 인권 감시기구들의 접근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sup>15)</sup> 특히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경우와 같이 방북 허용을 요청해

---

11) 북조선난민구호기금/국경없는인권, p. 2

12) 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네트워크/인권운동사랑방, p. 10.

13) 북한인권시민연합/대한변호사협회, p. 10.

14) 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네트워크/인권운동사랑, pp. 5-6.

15) 국제사면위원회, p. 3, para. 3.

온 유엔의 모든 특별절차들과 독립적 감시기구들에 대하여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다.<sup>16)</sup> 유사한 내용은 휴먼라이츠워치,<sup>17)</sup> 북조선난민구호기금 및 국경없는인권,<sup>18)</sup> 오픈도어선교회(ODI),<sup>19)</sup> 주빌리캠페인(JC),<sup>20)</sup> 그리고 세계크리스천연대<sup>21)</sup>에 의해서도 보고되었다.

10.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제3·4차 통합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선 수년 동안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 정부가 지속적으로 동 협약 및 기타 조약기구들에 의해 제시된 권고사항들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상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밝히기도 하였다.<sup>22)</sup>

## B.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을 고려한 국제적 인권보호 의무의 이행

### 1. 평등과 비차별

11. 세계크리스천연대는 “성분”(출생시부터 부여되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제도는 과거보다는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비차별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하였다.<sup>23)</sup> 아시아인권센터(ACHR)는 가족배경 및 사회적 출신에 대한 감시에 기초한 차별이 1960년대에 다른 국가들에서의 카스트 제도와 유사한 법제로 제도화되었다고 지적하였다.<sup>24)</sup>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정부가 정권에 대한 정치적 충성도에 입각하여 주민들을 “핵심”, “동요”, “적대”라는 각기 다른 범주들로 분류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sup>25)</sup>

12. 아시아인권센터는 ‘좋은’ 인민과 ‘나쁜’ 인민이라는 용어 하에 이러한 계급제도가 궁

---

16) 국제사면위원회, p. 6.

17) 휴먼라이츠워치, p. 1

18) 북조선난민구호기금/국경없는인권, p. 5.

19) 오픈도어선교회, p. 4

20) 주빌리캠페인, p. 6, para. 25.

21) 세계크리스천연대, p. 2, paras. 8-9.

22) 국제사면위원회, p. 3, para. 1.

23) 세계크리스천연대, p. 2, para. 10.

24) 아시아인권센터, p. 2.

25) 휴먼라이츠워치, p. 1.

극적으로 식량, 보건, 대학교육 또는 직업에의 접근기회에 있어서 사회 내 격차를 낳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sup>26)</sup>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그 어떤 주민분류제도의 존재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탈북난민들은 이러한 제도의 존재와 유지 상황 모두에 대해 거듭 증언하여 왔다.<sup>27)</sup> 아시아인권센터는 북한이 이러한 카스트 제도의 적용과 관련된 모든 법적 비밀문서와 규정들을 유엔에 공개하고 이 제도를 완전한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sup>28)</sup> 세계크리스천연대도 유사한 권고를 하였다.<sup>29)</sup>

13.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은 북한이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그러나 북한이 아동양육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과 남성과 여성의 법적 결혼연령상 차이를 여성에 대한 차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은 여성에 대해 차별적 성역할을 강요하는 전통과 국가적 관습들이 이러한 점들에 의해 묵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sup>30)</sup>
14.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은 자의와 무관하게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사회적 압력이 일종의 차별이라고 언급하고, 북한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sup>31)</sup>

## 2. 생명권, 자유권, 인신의 안전권

15.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에서 사형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처형은 전형적으로 총살이나 교수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공개처형과 적법절차에 의거하지 않은 사형집행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다. 북한 자체의 형법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한 공개처형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종의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26) 아시아인권센터, p. 2.

27) 북한인권시민연합/대한변호사협회, p. 10.

28) 아시아인권센터, p. 5.

29) 세계크리스천연대, p. 2, para. 11.

30) 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네트워크/인권운동사랑방, pp. 8-9.

31) 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네트워크/인권운동사랑방, p. 9.

되기도 하고, 사형에 처해지는 죄목의 수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5개 중 4개의 사형 죄목들은 본질적으로 넓은 의미의 용어들로 정의된 정치적 범죄들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성이 있다.<sup>32)</sup>

16.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은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에 1999년 제출하였던 제2차 정기보고서를 통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형법상 사형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던 북한의 의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집행 건수와 사형 죄목들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들이 실제상황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공개처형들이 집행되었고, 사형이 형사소송법과 같은 법적 절차가 아닌 포고문이나 명령들에 의거하여 부과되었다는 여러 보고서들과 관련해서는 북한측의 해명이 필요하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은 사형을 공포에 기반하여 주민들을 혼혹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것에 반대하며, 북한이 사형건수, 죄목들, 사형방법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sup>33)</sup>

17. 세계크리스천연대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구금 및 수감시설 안팎 모두에서 이루어지는 사형집행 사례들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이러한 시설들 내에서는 이리저리 식량을 찾아다니거나 흠치는 행위, 탈출·폭동간수들에 대한 공격 시도, 신앙을 버리기를 거부하는 경우, 조국을 비판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사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남한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과 접촉하다가 한 인접국으로부터 송환된 북한 사람들에게에도 사형이 처벌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수감시설들 밖에서는 식량 확보 등 단순행위들도 종종 사형에 처해진다.<sup>34)</sup>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 정부가 공개처형과 적법절차에 의거하지 않은 사형집행을 즉각 종식시키고, 사형제의 폐지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계로 공식적 사형집행유예제도를 정식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sup>35)</sup>

18. 세계크리스천연대는 수감시설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임신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관련 증언들은 북한 당국에 의한 유도낙태가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갓 출생한 영아들이 살해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 인접국으로 국경을 넘어갔다는 이유로

---

32) 국제사면위원회, p. 4, para. 6.

33) 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네트워크/인권운동사랑방, p. 7.

34) 세계크리스천연대, p. 3, para. 14.

35) 국제사면위원회, p. 7.

수감된 여성들은 이와 유사한 처우로 인해 고통 받아 왔다. 몇몇 이야기들은 심지어 갓 태어난 자신들의 아이를 스스로 죽이도록 강요되는 수감자들의 상황도 기술하고 있다.<sup>36)</sup> 경북대인권과평화센터(CHRP)와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KWARDI),<sup>37)</sup> 북조선난민구호기금과 국경없는인권<sup>38)</sup> 역시 한 인접국으로 월경(越境)하였던 북한 여성들이 임신한 채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될 경우, 흔히 강제낙태를 당하게 된다<sup>39)</sup>고 지적하는 유사한 정보를 보고하였다.

19.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에 의한 정책적 납치 및 강제실종은 한국전쟁(1950-53) 이래로 계속되어 오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국민들은 물론,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도 북한당국에 의해 납치되어 왔다. 반(反)체제 혐의자들의 북한인 가족들이 실종되거나 “연좌제” 원칙 아래 처벌되어 왔다. 대부분의 사례들에서 북한 당국은 이러한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들의 생사나 행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여 왔다.<sup>40)</sup> 이에 대해서는 경북대인권과평화센터와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도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였다.<sup>41)</sup>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 정부에 대하여, 모든 납치 및 강제실종 문제들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이를 즉각 종식시킬 것; 과거와 현재의 납치 및 강제실종 사건들을 철저히 공정하게 조사할 것; 납치 및 강제실종된 모든 사람들의 생사와 행방에 관한 공식적이고, 정확하며, 최종적인 정보를 공개할 것; 그리고 인정될만한 형사 범죄로 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면 납치 및 강제실종된 모든 사람들이 국제법에 의거하여 자유롭게 북한을 떠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sup>42)</sup>
20. 주빌리캠페인은 북한의 형법 상 검사의 승인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구금, 수감 또는 독방감금 조치에 있어서 북한 정부 권한이 무제한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사람들은 정당한 재판 없이도 종종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다.<sup>43)</sup> 휴먼라이츠워치는 자의적 체포와 구금, 적법 절차의 부재, 고문과 그 밖의 학대가 여전히 심각한

---

36) 세계크리스천연대, p. 3, para. 13.

37) 경북대인권과평화센터/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p. 6.

38) 북조선난민구호기금/국경없는인권, p. 2.

39) 북조선난민구호기금/국경없는인권, p. 4.

40) 국제사면위원회, pp. 5-6, paras. 13-16.

41) 경북대인권과평화센터/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pp. 7-10.

42) 국제사면위원회, p. 7.

43) 주빌리캠페인, p. 2, para. 5.

우려사항들로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sup>44)</sup>

21.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대한변호사협회는 6개의 대규모 정치범수용소들과 1990년대 기근으로 인해 늘어난 집 없는 사람들과 부랑자들을 구금하기 위한 시설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구금시설들이 북한에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들은 정치범수용소, 보다 더 정확하게는 정치적형벌-노동집단수용소들에서 일어나고 있다. 공식적 명칭은 “관리소”이다.<sup>45)</sup>
22.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대한변호사협회는 북한의 정치범들에 대해서는 2개 유형의 구류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첫 번째는 예심을 위한 곳이고, 두 번째는 수용소 내에 위치한 구류장이다. 두 시설 모두에서 수감자들은 가혹한 육체적·정신적 고문을 당하며, 수용소 내 구류장으로 보내진 수감자들의 대부분은 살아남지 못한다.<sup>46)</sup> 국제사면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수감자들이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을 종종 휴일도 없이 매일 10시간 또는 다음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하도록 강요당한다고 보고하였다.<sup>47)</sup> 세계크리스천연대<sup>48)</sup>와 북한인권시민연합 및 대한변호사협회<sup>49)</sup>도 유사한 정보를 보고하였다.
23. 국제사면위원회는 수감자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빨리 일하지 않거나,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한 노래들의 가사를 잊은 것으로 의심받을 경우, 처벌된다고 언급하였다. 동 단체는 강제 중노동, 부족한 음식, 구타, 치료 부족, 비위생적 생활환경이 복합적 원인이 되어 많은 수감자들이 병들고, 어떤 이들은 수감 중에 사망하거나 석방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여 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sup>50)</sup> 세계크리스천연대도 유사한 정보를 보고하였다.<sup>51)</sup>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 정부에 대하여,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 및 그 밖의 부당한 처우와 수용소 내 강제노동을 중단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수감자들을 처우함에 있어서 국제적 기준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그리고 최소한의 국제적 기준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수용소와 구금시설들 내 환

---

44) 휴먼라이츠워치, p. 1.

45) 북한인권시민연합/대한변호사협회, p. 4.

46) 북한인권시민연합/대한변호사협회, p. 9.

47) 국제사면위원회, p. 3, 4, para. 4.

48) 세계크리스천연대, pp. 2-3, para. 12.

49) 북한인권시민연합/대한변호사협회, p. 8.

50) 국제사면위원회, p. 3, 4, para. 4.

51) 세계크리스천연대, p. 3, para. 12.

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sup>52)</sup>

24.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은 북한 정부가 구금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북한 정부가 독립적인 국가인권시스템을 통해 구금시설들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을 기대하였다.<sup>53)</sup>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대한변호사협회는 북한 정부가 어떠한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도 부인하고 있으므로 제14호 개천 관리소, 제15호 요덕 관리소, 제16호 화성 관리소, 제18호 북창 관리소, 제22호 회령 관리소, 제25호 청진 관리소에 유엔의 대표들과 국제적 비정부기구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들은 모든 정치범수용소들이 해체되고, 수감자들이 즉각 석방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sup>54)</sup>
25.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정치범들에 대한 체포 및 수감 절차들이 ‘죄형법주의’에 위배되고 있다. 군복무 기간 중 실수를 저질러도 확정되지 않은 기간 동안 비공개된 노동시설에 구금될 수 있다. 또한, 반(反)정부적인 군 간부들만 수감되는 비공개 구금시설도 있다. 이러한 구금시설들에서는 수감자들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sup>55)</sup>
26.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체포 및 구금절차들이 북한의 국내 법들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위배되고 있다. 직계가족들에게 적용되는 연좌제와 재산몰수 및 공민증 회수 제도는 세계인권선언을 위반하고 있다.<sup>56)</sup> 세계크리스천연대는 북한 정부가 수감자들에 대하여 연좌제 원칙과 사회적 분류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피고인과 관계가 있는 삼대(조부모, 부모, 자녀)에 이르기까지 법적 근거 없이 투옥될 수 있다.<sup>57)</sup>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아동들이 부모 또는 가족 구성원들의 지위, 활동, 의견 또는 신념들에 근거하여 차별과 처벌을 당하고 있고, 정치적 위반행위들에 대해서는 집단적 처벌이 흔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sup>58)</sup>

---

52) 국제사면위원회, p. 7.

53) 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네트워크/인권운동사랑방, p. 8.

54) 북한인권시민연합/대한변호사협회, p. 10.

55) 북한인권시민연합/대한변호사협회, p. 7.

56) 북한인권시민연합/대한변호사협회, p. 7.

57) 세계크리스천연대, pp. 3-4, para. 16.

58) 아시아인권센터, p. 5.



27. 휴먼라이츠워치는 특히 국경 인근에서 북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한 인접국으로의 인신매매가 지속되고 있고, 이들은 종종 납치되거나 사기에 의한 결혼, 성매매 또는 성적(性的) 노예화의 피해자들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sup>59)</sup> 주빌리캠페인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일반적으로 인신매매 문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와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유들로 인한 불법 도강행위 간의 차이를 구별하지도 않고 있다. 북한 정부는 성착취 및 노동력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이행하고자하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sup>60)</sup> 유사한 정보<sup>61)</sup>는 탈북여성들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전락하였을 때 겪게 되는 정신적·육체적 학대들이 이들에 대한 더욱 심각한 폭력사태들이라는 점에 주목한 경북대인권과평화센터와 한국전쟁남북 사건자료원에 의해 보고되었다.<sup>62)</sup> 주빌리캠페인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원확인 제도를 이행하고, NGO들이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북한 내 체류를 허용할 것을 북한 정부에 권고하였다.<sup>63)</sup>
28. 아시아인권센터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제출한 보고서들은 국가조사기관들에 의해서나 다양한 구금시설들 내에서 아동들에게 가해지는 고문 또는 학대에 관한 보고를 회피하고 있다.<sup>64)</sup> 아시아인권센터는 사형선고가 아동들에게 내려진 사례들과 북한 당국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 하에 아동들을 강제로 참석시켜 공개 처형 장면들을 목격하게 하고 있다는 점, 전선 절취 혐의로 강제노동수용소에 보내진 11세 아동들의 사례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로부터 강제적으로 분리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시설들은 보호시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구금시설에 가깝고, 이러한 시설들에 있는 아동들은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며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sup>65)</sup>
29. 아시아인권센터는 북한의 법적 최소노동연령이 16세로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이 중학생 연령인 12세 때부터 농업노동에 동원되는 것이 흔히 용인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빈곤에 허덕이는 북부지방들에서는 8~9세 정도로 어린 아동들까지

59) 휴먼라이츠워치, pp. 2-3.

60) 주빌리캠페인, p. 6, para. 18.

61) 경북대인권과평화센터/한국전쟁남북사건자료원, pp. 5-6.

62) 경북대인권과평화센터/한국전쟁남북사건자료원, p. 5.

63) 주빌리캠페인, p. 6, para. 26.

64) 아시아인권센터, p. 4.

65) 아시아인권센터, p. 5.

동원되고 있다. 아동들은 또한 토끼 사육 등 여타의 “과제들”을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홍수 피해 복구, 철도 유지보수, 도로포장 등의 중노동에도 동원되고 있다.<sup>66)</sup>

30. 아동체벌근절을위한글로벌이니셔티브(GIEACPC)에 따르면, 북한에는 가정 내 체벌이 합법화되어 있고, 가족법과 형법, 그리고 어린이보육교양법이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않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 하에서는 아동들이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받는 데 한계가 있다.<sup>67)</sup> 정부 정책은 학교에서 체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명시적인 법적 금지규정은 전혀 없다.<sup>68)</sup> 형행 제도상 18세 미만인 어린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체벌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사항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형법 제 49조에 의거하여 15~16세 아동들에게 부과될 수 있는 “사회적 교양” 처분의 한 구성요건은 아니라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행형시설들 내에서 훈육 방법으로서 체벌을 가하는 것은 위법사항인 것으로 보인다는 미확인 정보도 있었다.<sup>69)</sup> 아동체벌근절을위한글로벌이니셔티브는 또한 대체양육시설들 내에서의 체벌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다고 언급하고,<sup>70)</sup> 모든 시설들에서 아동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법률을 도입할 것을 북한 정부에 권고하였다.<sup>71)</sup>

31. 경북대인권과평화센터와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은 북한에서 가정폭력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은 생활고와 일천한 인식 때문일 수 있고, 경제성장과 이 문제에 대한 대중적 인식 제고 노력이 선행된 이후에야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sup>72)</sup>

### 3. 형사책임의 면제와 법치를 포함한 사법행정

32. 세계크리스천연대는 모든 판사임용이 행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사법부는 입법에 대한 사법적 심사에 개입하지 않으며, 사법부의 기능이 최고인민위원회의 관할 하에 행사되듯이 미약한 권력분립으로 인해 북한의 사법부가 독립된 정부부처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sup>73)</sup> 동 단체는 형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이 일

---

66) 아시아인권센터, p. 3.

67) 아동체벌근절을위한글로벌이니셔티브, p. 2, para. 1.1.

68) 아동체벌근절을위한글로벌이니셔티브, p. 2, para. 1.2.

69) 아동체벌근절을위한글로벌이니셔티브, p. 2, para. 1.3.

70) 아동체벌근절을위한글로벌이니셔티브, p. 2, para. 1.4.

71) 아동체벌근절을위한글로벌이니셔티브, p. 1.

72) 경북대인권과평화센터/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p. 6.

73) 세계크리스천연대, p. 4, para. 19.

반적으로는 공식적 사법절차를 따르게 되는 한편, 정치범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공식적 사법절차에 전혀 의존할 수 없고, 국가안전부에 의해 이송되어 대체로 고문당하며 조사받고 사건들에 대한 결론이 내려진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북한에는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나 구금의 적법성 여부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sup>74)</sup> 북조선난민구호기금과 국경없는인권은 북한주민들이 공정한 판사에 의해 재판을 받고 당국 측의 잘못을 주장하는 변론에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사법제도가 전혀 없다고 언급하였다.<sup>75)</sup>

33. 세계크리스천연대는 “권한이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사법부를 보장하기 위해 북한의 정치, 입법, 사법 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사법제도에 관계된 모든 전문직 종사자들로 하여금 국제적 기준들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sup>76)</sup>

#### 4. 사생활·결혼·가정생활에 대한 권리

34. 아시아인권센터는 가족배경 및 사회적 출신에 대한 감시에 기초한 차별이 1990년대 이후부터는 탈북하였거나 한 인접국으로 월경(越境)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남아 있는 가족과 자녀들에 대한 감시활동과 병행되어 왔다고 보고하였다. 일부 아동들은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집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일부 아동들은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탈북이나 소위 ‘반(反)사회적’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온 가족이 먼 산간오지들로 추방되어 고통을 겪기도 했다고 증언하였다.<sup>77)</sup>

#### 5. 이동의 자유

35. 휴먼라이츠워치는 1990년대 중반 이래로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한 인접국으로 탈북하였고, 정치적·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 떠난 사람들과 식량부족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유들로 인하여 탈북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국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것은 반역행위로 간주되고, 장기간의 수감형과 심지어 사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허가 없이 국경을 넘은 일부 아동들도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수감되어 가혹하고 부당한 처우를 당하여 왔다. 북

---

74) 세계크리스천연대, p. 4, para. 20.

75) 북조선난민구호기금/국경없는인권, p. 3.

76) 세계크리스천연대, p. 4, para. 21.

77) 아시아인권센터, p. 4.

조선난민구호기금 및 국경없는인권<sup>78)</sup>, 국제사면위원회<sup>79)</sup>, 주빌리캠페인<sup>80)</sup>, 세계크리스천연대<sup>81)</sup>도 유사한 정보를 보고하였다.

36.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정부에 대하여, 모든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입·출국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송환된 북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할 것; 이주 및 인신매매되었던 아동들을 범죄자들이 아닌 피해자들로서 처우하고, 북한 사회에 다시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상담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sup>82)</sup> 세계크리스천연대는 피해자들을 처벌하기보다는 난민들의 곤경 이면의 근원적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을 권고하였다.<sup>83)</sup>

## 6. 종교 또는 신앙표현·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공적·정치적 생활에서의 참여권

37.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고,<sup>84)</sup> 북한 정부는 종교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흔히 “적대분자(敵對分子)들“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박해하여 왔다고 언급하였다.<sup>85)</sup> 세계크리스천연대는 북한의 헌법에 언급되어 있는 종교적 자유에 대한 존중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탄압이 이루어져 왔고,<sup>86)</sup> 엄격한 제한사항들에 도 불구하고 북한정부가 최근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몇몇 종교단체들을 설립하고, 종교활동을 위한 소수의 장소들을 용인함으로써 종교적 자유를 더욱 크게 허용하고 있음을 선전하기 위한 시도를 공공연히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sup>87)</sup>
38. 오픈도어선교회는 북한에서 성경이나 그 밖의 종교적인 서적을 소지하는 것이 불법이고, 자신의 종교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전도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덧붙였다.<sup>88)</sup> 주빌리캠페인도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였다.<sup>89)</sup> 법과정의를위한유럽

---

78) 북조선난민구호기금/국경없는인권, p. 4.

79) 국제사면위원회, p. 5. paras. 11-12.

80) 주빌리캠페인, p. 3. paras. 7-8.

81) 세계크리스천연대, p. 5, para. 25.

82) 휴먼라이츠워치, p. 5.

83) 세계크리스천연대, p. 5, para. 26.

84) 휴먼라이츠워치, p. 1.

85) 휴먼라이츠워치, p. 3.

86) 세계크리스천연대, p. 5, para. 22.

87) 세계크리스천연대, p. 5, para. 23.

88) 오픈도어선교회, p. 3.

89) 주빌리캠페인, p. 5, para. 20.

센터(ECLJ)는 유일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관점들과 예배를 저버리거나,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sup>90)</sup> 오픈도어 선교회는 북한에 대하여 모든 양심수들을 즉시 석방하고 노동수용소를 해체시킬 것,<sup>91)</sup> 종교그룹들과 단체들에 관련된 법들을 검토할 것,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하의 의무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다.<sup>92)</sup> 세계크리스천연대는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북한 정부에 권고하였다.<sup>93)</sup>

39.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에 조직화된 정치적 야당, 독립적인 노동조합들, 자유로운 언론 또는 시민 사회가 전혀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sup>94)</sup> 주빌리캠페인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언론·집회·청원·결사의 자유가 존중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sup>95)</sup> 국제사면위원회는 2008년에 식량부족 소식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장거리 전화들이 차단되었던 것으로 보고되었고, 지방 당국들은 한 인접국을 통해 들어온 영상물을 시청하였거나 허가되지 않은 휴대전화기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을 체포하였다는 보고들도 있었다고 언급하였다.<sup>96)</sup>
40. 북조선난민구호기금과 국경없는인권에 따르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도자에 대한 비판은 가혹하게 처벌된다.<sup>97)</sup>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은 북한의 출판법 제4조에서 제시된 “출판 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와 “유일적 지도”의 실현이라는 것이 비판적 견해를 억압하고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sup>98)</sup>
41. 북조선난민구호기금과 국경없는인권에 따르면, 노동당이 골라낸 사람들로 구성되어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의회에 의해 지도자가 승인되듯 선거들은 자유롭게 치러지지 않는다. 주민들의 삶의 모든 측면들을 통제하는 오직 하나의 정당만이 존재하기 때문

---

90) 법과정의를위한유럽센터, p. 2.

91) 오픈도어선교회, p. 4.

92) 오픈도어선교회, p. 4.

93) 세계크리스천연대, p. 5. para. 24.

94) 휴먼라이츠워치, p. 1.

95) 주빌리캠페인, p. 2, para. 3.

96) 국제사면위원회, p. 6, para. 17.

97) 북조선난민구호기금/국경없는인권, p. 3.

98) 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네트워크/인권운동사랑방, p. 7.

에, 이의제기는 불가능하다. 공공집회의 자유가 결여되어 있고 오직 당의 통제를 받는 언론매체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달리하는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가혹하게 처벌되고,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공적 생활”이나 “정치적 생활”이란 것은 전혀 없다.<sup>99)</sup> 북조선난민구호기금과 국경없는인권은 언론매체와 그 밖에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정보의 다양성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다.<sup>100)</sup>

## 7. 노동권,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환경권

42.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국가가 노동단체들을 포함하여 노동시장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다. 노동자들이 노동당 통제 하의 국가 노동행정기관에 의해 직업을 배정받기 때문에, 북한법 하에는 고용계약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다. 국가가 식량, 보건, 교육, 주거 등 기초적 서비스의 공급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보수로 소액의 급료나 부식, 의류, 가구 등의 물품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매권을 받는다.<sup>101)</sup> 북조선난민구호기금과 국경없는인권도 유사한 정보를 보고하였고<sup>102)</sup>, 민간기업의 발전을 장려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하였다.<sup>103)</sup>
43. 휴먼라이츠워치는 개성공단(KIC) 내 노동환경을 관장하는 법률이 국제적 기준들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보고하고,<sup>104)</sup> 북한 정부에 대하여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권과 단체교섭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성차별과 성희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위협하거나 유해한 일들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동 단체는 또한 현행 노동법 조항들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고용주들로부터 임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북한 정부에 권고하였다.<sup>105)</sup>
44.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사람들이 이주노동자로 파견되고 있는 몇몇 국가들에서는 북한 정부가 노동자들의 이동·표현·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감시자들”을 상주시켜

99) 북조선난민구호기금/국경없는인권, p. 3.

100) 북조선난민구호기금/국경없는인권, p. 6.

101) 휴먼라이츠워치, p. 4.

102) 북조선난민구호기금/국경없는인권, p. 3.

103) 북조선난민구호기금/국경없는인권, p. 6.

104) 휴먼라이츠워치, p. 4.

105) 휴먼라이츠워치, p. 5.

두고 있으며, 노동자 임금의 상당한 부분이 중개인들 또는 북한 정부에 의해 공제 조치되는 임금간접지급 문제를 포함하여 북한 노동자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언급하였다.<sup>106)</sup> 동 단체는 북한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고 그 핵심조약들에 조인할 것, 국제노동기구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증진에 관해 논의할 것, 해외 북한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를 허용할 것을 권고하였다.<sup>107)</sup>

## 8. 사회보장권과 적정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45.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1990년 중반의 기근으로부터는 상당히 회복되었지만, 심각한 식량부족이 지속되고 어린 아동들과 임산부, 장애인, 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였다.<sup>108)</sup> 배급제도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사회 내 엘리트계층이 아닌 사람들은 식량과 그 밖의 생필품들에 접근함에 있어서 거의 전적으로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그들은 1년에 몇 번, 대체로 주요 국경일에 배급을 받고 있고 대부분 노동당과 보위 및 정보부대들의 고위계급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정기적인 배급을 계속 받고 있다.<sup>109)</sup>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대한변호사협회도 유사한 정보를 보고하였고,<sup>110)</sup> 식량 가격 폭등이 북한 정부와 주민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으로 힘있는 그룹들이 식량배급을 받고, 해외 원조의 횡령을 통해 부를 축재하고 있다.<sup>111)</sup>
46. 휴먼라이츠워치는 1990년대 중반 이래로 북한이 매년 상당한 양의 해외원조를 받아 왔지만, 지원물자의 북한 내 분배를 감독하고자 하는 국제인도지원 관계자들의 현장 접근을 지속적으로 제한하여 왔다고 보고하였다.<sup>112)</sup>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정부에 대하여, (1)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비롯한 국제인도지원 기구들이 필요한 식량공급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당국 내 전역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불시방문 및 무작위 인터뷰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표준적

---

106) 휴먼라이츠워치, p. 4.

107) 휴먼라이츠워치, p. 5.

108) 휴먼라이츠워치, p. 1.

109) 휴먼라이츠워치, p. 2.

110) 북한인권시민연합/대한변호사협회, pp. 3-4.

111) 북한인권시민연합/대한변호사협회, p. 2.

112) 휴먼라이츠워치, p. 2.

국제외정서들에 의거하여 지원물자를 적절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sup>113)</sup> (2) 배급제도가 공정하고 알맞게 마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거나, 시장 및 지원물자에 대한 접근권을 비롯하여 식량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들을 주민들에게 허용할 것; (3) 노동당 고위관료들과 군대, 정보기관 및 경찰 간부들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지는 정부 식량배급 상의 차별을 중단할 것; (4) 식량지원의 우선 수혜자들로서 어린 아동들, 임산부, 장애인, 노인들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였다.<sup>114)</sup>

47.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북한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물자 배급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군대에 두어져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sup>115)</sup>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 정부가 자국민 전체를 위한 식량 최소필요량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구하는 데 실패하여 왔다고 언급하였다.<sup>116)</sup>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은 북한 정부가 조건 없이 수용하고 우선순위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해야 할 인도적 지원을 국제공동체와 북한에 인접한 한 국가가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17)</sup>

48. 북조선난민구호기금과 국경없는인권은 병원과 진료소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의 의학적 치료는 이용불가능하며, 이는 북한 아동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sup>118)</sup> 두 단체들은 북한 정부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기구들과 유능한 의료진들을 갖춘 양질의 의료시설들을 모든 북한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공동체와 협력하고, 필요한 외부의 전문적 기술 자문을 구하고자 함을 공약할 것을 촉구하였다.<sup>119)</sup>

## 9. 교육권, 공동체의 문화적 생활에의 참여권

49. 아시아인권센터는 차별적인 북한판 카스트 제도가 하위계급들에 속한 대부분의 학생들로 하여금 흔히 (고등)중학교 진학을 포기하도록 하고, 설령 진학한다고 하더라도

---

113) 휴먼라이츠워치, p. 4.

114) 휴먼라이츠워치, p. 5.

115) 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네트워크/인권운동사랑방, p. 7.

116) 국제사면위원회, p. 4, para. 9.

117) 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네트워크/인권운동사랑방, p. 7.

118) 북조선난민구호기금/국경없는인권, p. 4.

119) 북조선난민구호기금/국경없는인권, p. 6.



도 대학 입학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sup>120)</sup> 특권계급에 속한 아동들은 일류 학교들에 다니고,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잡부금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제공도 요구받지 않는다.<sup>121)</sup> 휴먼라이츠워치도 유사한 정보를 보고하였다.<sup>122)</sup> 아시아인권센터는 다른 모든 지역들에서는 과도한 잡부금, 국영농장에서와 교사 및 학교 당국의 사적 수입원으로 이용되는 노동력 착취 등 다양한 요인들이 학교 출석을 저하에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sup>123)</sup> 북조선난민구호기금과 국경없는인권도 유사한 설명을 하였다.<sup>124)</sup> 아시아인권센터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평양과 그 밖에 소수 지역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북한 청소년들의 문해율과 전반적 학업성취도가 저하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sup>125)</sup> 북조선난민구호기금과 국경없는인권은 북한 정부에 대하여, 교육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모든 북한 아동들이 다른 국가들에 견주어 최소한 적절한 무료의 무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공동체와 협력하고, 필요한 외부의 전문적 기술 자문을 구하고자 함을 공약할 것을 촉구하였다.<sup>126)</sup>

50. 휴먼라이츠워치는 “선군(military first)” 정책을 강조하는 이념적 교육이 일반교과 교육보다 우선된다고 언급하였다. 어린 시기부터 아동들이 매주 수 시간의 의무적 군사훈련과 정치적 세뇌교육을 자신들의 학교에서 받게 된다.<sup>127)</sup> 동 단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어떠한 차별도 없이 존중하고 보장할 것과 학교들에서의 아동들에 대한 조기(早期) 군사화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sup>128)</sup>

## 10. 이주민, 난민, 비호신청자들

51. 휴먼라이츠워치는 본국 귀환 시에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심지어 단순한 경제적 이유들로 탈북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외의 모든 북한사람들은 현장난민(refugees' sur place)에 해당된다고 간주했다.<sup>129)</sup> 아시아

120) 아시아인권센터, p. 2.

121) 아시아인권센터, p. 3.

122) 휴먼라이츠워치, p. 3.

123) 아시아인권센터, p. 3.

124) 북조선난민구호기금/국경없는인권, p. 4.

125) 아시아인권센터, p. 3.

126) 북조선난민구호기금/국경없는인권, p. 6.

127) 휴먼라이츠워치, p. 3.

128) 휴먼라이츠워치, p. 5.

인권센터는 특수한 직업전문학교들에의 입학 허가 여부가 부모의 직업과 가족배경에 따라 좌우되고, 최종적으로는 관련당국이 이를 결정한다는 것이 탈북난민아동들에 의해 확인되었음을 지적하였다.<sup>130)</sup>

### Ⅲ. 성취, 모범사례, 과제 및 제약사항들

52. 국제사면위원회는 장애인을 위한 2008-2010 행동계획 초안 작성과 2005년 7월의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설립을 포함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북한의 개선조치들을 환영하였다.<sup>131)</sup>
53.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하여 북한을 칭찬하였다. 동 단체들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무상치료·무상교육제도와 같은 다양한 사회보장정책들이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왔다고 강조해오고 있다. 여성권을 강조하기 위하여 ‘남녀평등법’이 1946년에 발효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식량부족, 경제적 위기, 국제공동체의 군사적 위협과 경제제재는 인권상황이 나빠지는 데 크게 영향을 끼쳤다.<sup>132)</sup>
54.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은 북한 내에 군사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또한 여성, 장애인, 성적(性的) 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을 우려하였다. 지난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제기되어온 식량권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문제들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은 자신들은 인권의 정치화에 반대하며, 북한 내 인권은 인도적인 과정을 통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sup>133)</sup>

---

129) 휴먼라이츠워치, pp. 2-3.

130) 아시아인권센터, p. 3.

131) 국제사면위원회, p. 6.

132) 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네트워크/인권운동사랑방, p. 4.

133) 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네트워크/인권운동사랑방, p. 4.

#### IV. 국가적 핵심우선과제, 주도적 추진사항, 공약사항들

해당사항 없음.

#### V. 역량강화 및 기술적 지원

해당사항 없음.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 대한  
NGO 보고서





##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검토(UPR) 제6차 회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NGO 보고서

2009년 11/ 12월

- \*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대한변호사협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하여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검토(UPR)에 공동 제출
- \* 작성자: 허만호, 김태훈, 이재원, 송현욱

### 〈요약문〉

인민을 3대 계층과 이 계층을 세분화한 51개 부류로 나누는 북한의 주민분류정책은 불평등의 제도화를 초래하고 있다. 북한에서 '성분'이라고 불리는 이 분류정책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북한인민들이 시민적·사회적·경제적 권리를 향유하는 데에 지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인권침해는 '막대하고 명백하며 지속적인 인권침해의 관행'에 속한다. 따라서 북한 정부는 '성분'이라 불리는 신분제도의 결과를 수정하는 사회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모든 정치범 수용소는 해체되어야 하며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주요단어〉 식량권, 식량획득권, 식량 분배, 만성적 식량 부족, 성분(사회배경), 보위부(비밀경찰), 정치범 수용소, 자의적 구금, 고문, 영아 살해, 성적 학대, 강제 노동

북한 내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기는 매우 어렵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오직 북한 탈출에 성공하여 제 3국에 정착한 탈북난민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06년과 2008년 2차례에 걸쳐 100명의 북한이탈주민과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 보고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인터뷰와 다른 문헌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인권 침해 중, 계급차별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식량권에 대한 조직적인 침해와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두 문제는 탈북자 및 북한난민 발생과 이후 상황에 관한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 I. 식량권

## II. 정치범 수용소

### I. 식량권

식량권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충분한 영양을 갖추고 문화적으로도 수용할 수 있도록 식량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1996년 로마에서 열린 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 ‘안전하고 영양이 있는 식량에 대해 접근하는 권리, 충분한 양의 식량을 확보하는 권리, 모든 사람이 기아에서 해방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재확인하였다.

10여 년에 걸친 북한의 만성화된 식량난은 언제 해소가 될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식량 사정이 호전되었다는 현재도 식량획득권(food entitlement)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근본적으로 심각하며 악화되어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은 당국에 의하여 완전히 통제되어 있고, 스스로의 생존 능력이 부족한 600여만 여명에 달하는 취약 계층들은 최악의 환경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식량 가격의 폭등은 단속을 통해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북한 정부와 생존권의 막다른 길까지 내몰린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배급을 정상적으로 공급받는 기득권층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외화벌이와 외부 원조 착복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다.

북한의 기근은 자연재해나 외부 식량공급의 차질만으로 빚어진 일시적 재앙이나 사건이 아니다. 장기간에 걸친 하나의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로 이해하여야 한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정치적 권리 박탈



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1. 계층별 배급 차이

대한변호사협회가 2008년에 실시한 100명의 탈북자 인터뷰 조사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일반 주민들의 식량 공급량의 차이가 있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노동당, 검찰, 보위부, 간부, 지배인, 군수품 생산 단위 등 권력 기관들과 이 밖에 양정 사업소, 외화별이 등 기관들은 식량 공급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이 받는 식량은 입쌀이 위주였고, 일반 주민들이 받는 식량은 옥수수가 위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 주민들의 대한 식량 배급은 횟수와 공급량이 일정하지 않았다. 전혀 배급이 없을 때도 있었으며, 공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1개월에 평균적으로 2~7일분의 식량을 배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ID023(탈북자의 사생활과 안전상의 이유로 실명 대신 ID 숫자로 표기)은 아버지가 보위부에 다니므로 대량아사 시기에도 가족이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 분량의 식량배급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ID011은 한 해에 총 4~5회의 배급을 받았는데, 그때 공급받은 식량으로는 먹고 살기엔 너무나 부족했다고 증언했다.

ID019는 다니던 제약공장이 그나마 운영되어 한 달에 10일 분량의 감자와 옥수수를 받았다고 증언한다. 식량배급을 주는 경우 외국에서 지원한 식량만을 적게는 2~3일분을, 많게는 7일분을 배급하고, 북한 내에서 생산된 식량은 거의 배급으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 (2008년 5월 10일 ID019와의 인터뷰)

북한에서의 식량접근권은 권력의 위계질서에 따라 결정된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10년 이상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지원 프로그램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신분제도로 인한 배급제가 한 원인으로 되고 있다. 현재 총성계층인 기득권 세력은 식량배분의 결정권을 거머쥐고 있으며, 식량을 독점적으로, 안정적으로 배급을 받고 있다. 정치적 지위 신분에 따른 북한의 식량 분배는 일반 주민들이 아닌 기득권자들에게 집중되는 제도가 되었다. 노동당, 군부, 행정 간부들은 별도의 분배채널을 통해 더 많은 양의 식량을 정상적으로 공급받는다. 노동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일반 배급체계는 사실상 거의 마비됐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 후에도 북한의 노동당, 국가보위부, 인민무력부, 인민보안성 등

중앙의 핵심권력기관들과 간부들, 전략적으로 중요한 군수공장 등은 자체의 식량배급 체계를 갖추고 일반 주민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이들 지배층은 유일지배체제 유지를 위해 인구의 80% 이상에 달하는 노동자, 농민 등 일반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당·정·군 등 핵심지배계층에 대한 혜택만 늘려주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북한 체제 유지의 절대 필요 구성원은 배급체계 1~3 순위에 포함되는 650만 명으로 추산할 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은 1인 하루 500g으로 잡을 때 최소 120만 톤, 700g으로 잡아도 170만 톤이다. 이는 아무리 북한에서 흉년이 들어도 능히 생산이 가능한 수치로서, 외부의 지원 유무와 관계없이 북한 내부에서 생산된 식량으로도 체제유지 인력의 식량은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사실들을 비추어 볼 때, 북한 당국은 핵심계층만 잘 관리하면 북한 사회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고 일반 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 2. 식량 배급의 지역 불균형

10년이 넘는 만성적인 식량난에도 ‘혁명의 수도’ 평양은 지방과는 차별되게 식량배급을 받는 특혜지역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평양과 지방의 식량공급의 차이에 관하여 실시한 탈북자 면접 조사에서도 응답한 60명 중 20명은 지방에서는 식량배급이 제공되지 않았지만 평양에서는 배급을 받고 있었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40명은 평양의 친지로부터 식량배급에 대해 들었거나, 평양이 중심이니 당연히 배급을 주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ID023은 북한 내 지역별 배분 순위는 먼저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인민군대이고, 그 다음으로 평양시와 그 주변 군들이며, 마지막으로 지방이라고 증언했다. 때문에 인민부대에 공급하고, 평양 등 그밖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공급하고 남았을 때만 지방에 공급된다고 한다.

평양은 지방과 상대적으로 식량사정이 가장 나은 곳으로서 북한 전체 식량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곡창지대인 평안도, 황해도와 인접하다. 2003~2006년 사이에 남포항으로

만 총 지원량의 43.5% (홍남 13.5%, 청진 9.5%, 원산 9.5%)의 쌀이 수송되었다. 또 비료지원의 경우, 남포항 (50%)으로 가장 많이 수송되었고, 두 번째는 해주항(20%)으로, 나머지 홍남항, 청진항, 원산항은 각각 10% 미만으로 서로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한국 통일부가 2005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북지원 쌀을 선적한 배의 16.92%가 평양시가 인접한 남포항으로 입항한 반면 식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양강도 (4.57%)와 강원도(5.76%)에는 더 적게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강원도, 양강도 등 동쪽 지역의 식량난으로 사망자가 속출한 것으로 볼 때 단순한 지역편중 지원이라기보다 북한 당국의 뿌리 깊은 성분별, 계층별에 따른 정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II. 정치범 수용소

북한에는 1990년대 후반 식량사정 악화로 급격히 늘어난 유랑·걸식인들을 수용하는 시설 외에 집단 수용소로 6개의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와 서방세계의 감옥에 해당하는 노동교양소와 교화소가 있으며, 임시 구치를 위한 집결소와 3~4개월 정도의 단기 ‘육체노동을 통한 계도’ 명분의 처벌을 위한 노동단련대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가장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는 곳은 정치범 수용소(더 정확한 용어로는 관리소)이다. 이를 북한 당국은 ‘OO호 관리소’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고, 주민들은 ‘특별독재대상구역’, ‘정치범 집단수용소’, ‘유배소’, ‘종파굴’, ‘이주구역’ 등으로 부르고 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1950년대 이후 몇 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요덕 수용소 (15호 관리소)의 수감자였던 탈북자 강철환 씨에 의하면, 함경남도 요덕군에는 1959년 이전에 이미 강제수용소의 일부분이 건설되고 있었던 것 같다. 타지에서 추방당해 온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1959년부터 1964년까지 요덕군 원주민들에 대한 강제 이주가 있었다. 이런 조치는 1958년 연말에 시작되어 2년간 계속된 ‘중앙당 집중지도사업’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전 주민의 성분과 사상을 조사하여 3계층 51개 부류로 나눈 뒤에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강제수용소에 가두었는데 요덕수용소는 이런 맥락에서 탄생된 것으로 추측된다.

김일성이 1968년에 “관리소 안에서 계급의 원수들이 폭동을 번번이 일으킨다면 군대를 배치해서 다시는 폭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교시를 내렸던 것으로 봐서 1968년경에 각 경비소에 군대(경비대)가 배치되어 오늘날의 수용소 형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함경남도의 요덕, 단천, 덕성군, 함경북도의 온성에 2곳, 회령, 화성, 부령군, 평안남도의 개천, 북창군, 평안북도의 천마군, 자강도의 동신군. 이 집단수용소들에는 ‘완전통제구역’ (특별독재대상구역)과 일부 수용소에 한하여 ‘혁명화구역’(혁명화대상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신 수감되는 완전통제구역의 수감자는 그들의 공민권을 박탈당하는 반면, 혁명화 대상자는 공민권을 유지한 채 수용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석방된다.

정상국가에서 너무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들인 시민적·정치적 권리, 종교 및 신앙의 자유, 의견 및 표현의 자유 등을 북한주민들이 향유하고자 하면 북한당국은 이를 정권안보와 체제유지를 위해 일탈(逸脫)시 한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혐의자들 즉, 정권 혹은 체제 비판자, 종교인, 탈북·도강자, 중국에서 체포되어 돌아온 탈북자에 대해서도 체포, 예심 및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하는 과정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고문을 가하고 각종 비인격적 처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 자의적 구금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06년에 실시한 100명의 탈북자 인터뷰 조사에서 ‘수사기관이 체포할 때 법적절차를 준수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0%가 아니라고 답했으며, ‘구금 시설 수용 시 법적절차를 준수하는가?’라는 질문에 71.1%의 응답자는 “영장발부 없이 2개월 이상 수사를 계속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적용되었어야 할 북한의 1999년 형사소송법 제11조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사람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48시간 안으로 그의 가족 또는 소속단체에 체포 날짜, 이유 같은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검사는 비법으로 체포·구류되어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체포·구속될 때 어떤 절차에 의해 구속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구금과정에서 여전히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법적 절차를 거

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ID001] 특별한 절차는 없고 담당 주재원이 진술서를 쓰라고 하고 비서에게 넘깁니다.
- [ID009] 절차라는 것은 모르겠지만, 국가 보위부에서 왔다 가고, 도 보위부에서도 찾아오고, 시 보위부에서 오라고 해서 가기도 했습니다.
- [ID035] 보위부 지도원이 집안에 계신 아버지를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체포해 갔어요.
- [ID040] 그냥 와서 어머니를 붙잡아갔습니다.
- [ID049] 몇 시까지 보위부로 오라고 통보를 받아서 갔었어요.
- [ID051] 중국에서 복송된 뒤 바로 보위부, 해산 집결소로 끌려갔습니다.
- [ID054] 공안들에 의해 잡혀서 회령으로 넘겨졌어요.
- [ID076] 절차 같은 건 없었다. 새벽에 밖에 바람 쏘이러 산책을 나갔는데 그 때 차가 두 대 내 앞에 서더라. 보위부원과 스파이가 같이 왔는데 스파이는 족쇄를 같이 차고 왔고, 보위부원이 나를 끌고 차에 태워갔어요.
- [ID084] 중국 내몽고 만주리에서 몽골로 가려다가 중국 변방군대에게 붙잡혀서 10일 만에 온성 보위부로 넘겨져 바로 보위부 구류장에 구금되었습니다.

2004년 이후에 체포된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 탈북자들이 충분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이 2차례 개정된 이후에 구금절차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1999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었을 탈북자들에 대해 “체포할 때 체포사실을 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등 법절차를 지키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제대로 알려준 경우도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영장 제시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대답했다. 2006년 인터뷰 조사의 경우, 100명의 답변자 가운데 4명만이 ‘본인 확인을 하고 체포사실을 구두로 설명한 뒤에 수갑을 채우고 잡아간다’고 진술했고, 나머지는 모두 설명조차 없었다고 답했다. 대부분 본인 확인 후 간단히 물어볼 것이 있으니 잠깐 가자고 하며 수갑이나 새끼줄, 신발 끈, 흰색 밧줄(포승줄) 등으로 묶어서 데리고 가며, 심지어 족쇄를 채워서 데려가는 경우도 있다고 4명이 진술했다.

그런데 2008년 인터뷰 조사에서 “체포 후 재판받기 전까지 구속되어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짧게는 2~3일에서 “재판 없이 2년 11개월 동안 보위부 감옥에서 구금생활을 했다”는 답변(ID076)까지 있었다. 이들이 경험한 시점이 제시되지 않아 변화의 추세를 가늠하기는 힘들으나 과거에 비해 구속기간이 수 일 내지 수 주로 짧았다는 답변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 다소간의 변화는 감지된다.

재판과 수감절차에 대해 1998년 9월에 북한을 떠나 한국에 귀순한 전 국가안전보위부원 윤대일 씨는 변호인이나 방청객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요식절차는 거친다고 주장하고,

신정에 씨의 두 아들과 질녀는 재판을 거쳐 각 10년과 5년의 교화형을 언도받았다. 그러나 신정에 씨 자신은 재판절차 없이 1년간 요덕수용소 혁명화구역에 수감되었고, 대한변협의 2006년 인터뷰 조사에 응답한 고문피해 사례 3의 경우도 재판 없이 요덕수용소에 3년 수감되었던 것으로 보아 ‘죄’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04년과 2005년의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을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윤대일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위부는 모든 사건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김 부자 가계의 추문에 대한 언급이나 소문을 퍼뜨린 ‘8,9번사건(10호실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어서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김 부자의 권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판명되면 재판도 없이 비밀리에 처형한다는 것이다. 비록 형사소송법이 그 후에 개정되었어도 관련조항이 여전히 없고, 이런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는 아무런 작용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북한에서 정치범을 수감·체포하는 과정은 ‘죄형법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가족연좌제와 같이 전 근대적이고 비인도적인 형사제도를 아직 운영하고 있다. 이미 알려져 있는 여섯 곳의 정치범 관리소 외에 군대의 특수 수용시설들이 있다. 즉, 군대생활에서 과오가 있으면 체포·수감되어 영원히 못나오는 비공개 지하 노동시설들이 있고, ‘뚝섬’이라고 부르는 군대 내의 반정부 군관(군 장교)들만 수용하는 비공개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들은 법외의 구금시설들이라 피수용인들이 체포·구금되는 과정에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두 차례에 걸친 대한변협의 조사로 밝혀진 북한의 체포·구금 과정은 북한의 형법, 형사소송법 등 국내법에도 저촉되고, 북한이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위반이다. 아울러 현재는 이혼이라는 방법을 통해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직계가족에게 여전히 해당되는 연좌제나, ‘재산몰수형’과 ‘공민증 회수’ 등은 세계인권선언의 각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 2. 수용소 내에서의 인권유린 실태

북한 정부당국이 북한의 민간인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하는 목적이나, 수감하는 절차, 수감 후의 처우 등은 예외 없이 로마규정 제7조 상의 제 조항들에 해당된다.

## 1) 관리소의 10대 법과 규정

신동혁 씨가 기억하는 ‘관리소의 10대 법과 규정’은 2005년 1월에 탈출할 때까지 14호 개천 정치범 관리소에서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국제 인권규범들을 적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이 ‘관리소의 10대 법과 규정’에 따르면 경미한 규정위반들에 대해서도 총살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다.

제1조 1항 “도주시 즉시 총살한다,” 2항 “도주 기도시 목격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자는 즉시 총살한다.” 제2조 1항 “담당 보위원 선생님의 승인 없이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할 경우 즉시 총살한다,” 2항 “보위원 마을로 승인 없이 무단 침입하거나 시설물을 파괴한 자는 즉시 총살한다.” 제3조 1항 “무기류를 도둑질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자는 즉시 총살한다,” 2항 “무기류를 도둑질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모한 자는 즉시 총살한다,” 3항 “관리소내의 모든 식량을 도둑질하거나 감추는 자는 즉시 총살한다,” 4항 “관리소내의 모든 기자재를 고의적으로 파손하거나 도둑질한 자는 총살한다.” 제4조 1항 “담당 보위원 선생님에게 불만을 품거나 구타하였을 경우 즉시 총살한다,” 2항 “담당 보위원 선생님의 지시에 불성실한 자, 불복종한 자는 즉시 총살한다.” 제5조 1항 “외부인을 감추어두거나 보호한 자는 즉시 총살한다,” 2항 “외부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감추어둔 자, 공모한 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즉시 총살한다.” 제7조 1항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에 태만하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총살한다.” 제8조 1항 “승인 없이 남녀 간에 신체접촉이 있을 경우 즉시 총살한다.” 제9조 1항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죄에 대하여 불복종하거나 의견을 갖는 자는 즉시 총살한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피수감자들을 철저히 외부로부터 고립시켜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하고, 최소한의 신체적 자유도 박탈하여 노예노동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로마규정 제7조 상의 ‘살해’, ‘절멸’, ‘노예화’에 해당된다.

## 2) 과도한 노동과 영양부족

수용소에서의 하루 일과는 수용소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고, 각 수용소에서도 시기와 업무에 따라 다소간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큰 틀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새벽 5시에 기상(요덕 15호 관리소에서는 4시에 기상) 하여 6시까지 아침식사를 하고, 6시 30분에 대열점검을 한 뒤에 7시에 작업장에 간다고 한다. 작업장에 도착하

면 갯에 들여보내기 전에 몸수색을 하여 폭약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한다. 그래서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작업을 하고,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점심식사를 한 뒤에 곧바로 20시까지 오후작업을 하게 되는데, 요덕 15호 관리소에서는 오후에 휴식시간이 한 번 있는데 비해 14호 관리소에서는 없다고 한다.

김용 씨의 증언으로는, 14호 관리소에서는 토·일요일 휴무(休務)가 없고, 1월 1일 하루만 휴무하는데, 관리소 규정에는 김일성, 김정일 생일이 휴무일로 되어 있으나 이날도 노동을 했다는 것이다. 신동혁 씨는 매달 1일이 휴일인데, 이 날도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며 작업반 정리나 산에 화목(火木) 채취하러 가는 등 상대적으로 덜 힘든 일을 하게 된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김용 씨의 경험으로는, 14호 관리소의 경우 수감자들의 생산성이 워낙 낮아 생산계획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18호 관리소에서는 생산계획이 있어 작업 계획에 따른 작업량이 달성되지 않으면 하루 평균 15시간 노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김용 씨의 증언에 따르면, 14호 관리소 수감자의 한 끼 양식은 통강냉이 20~30알과 배춧잎이 동등 뜯 소금국이 전부라고 한다. 그 결과 수감자들이 갯도에서 100미터 이동하는데 15분 이상이 걸리고, 삽질 한 번 하는 것도 현기증이 난다는 것이다. 수감자 대부분이 펠라그라(pellagra)라는 단백질 결핍증에 걸려 있으며, 영양 결핍에서 오는 각종 전염병과, 심지어 정신병까지 앓게 된다고 한다.

수감자들은 이런 극도의 허기를 면하기 위해 돼지사료도 훔쳐 먹고, 심지어 생선저장탱크 씻은 물에 밥을 말아먹는 일도 있으며, 쥐와 벌레도 잡아먹고, 나무껍질도 벗겨 먹고, 풀도 뜯어먹는다고 한다. 그나마 이런 일도 허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지도원에게 들키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가혹한 징벌을 받는다고 한다.

### 3) 수용소 내에서의 처벌

북한의 정치범들에게는 두 종류의 구류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용소에 최종적으로 수감되기 전에 예심을 받으면서 수감되는 ‘마람초대소’와 같은 구류장과 수용소 내의 구류장이 있다. 두 구류장 모두 수감자들에게 가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데, 수용소 내의 구류장의 경우 수감자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수용소 내의 구류장의 경우 수감자가 일단 끌려가게 되면 남녀를 구분하고 모두 매를 때려 초죽음을 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질질 끌고 가서 두 무릎 사이에 4각 각자를 끼우고 24시간 동안 꿰어앉히고 혈액 순환을 막는데,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불손하게 행동



하면 사정없이 구타한다는 것이다. 식량 또한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움직이면 처벌로 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수감자들은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아 살이 썩어 들어가도 참는다고 한다. 그 결과 5개월 후에는 병사한다고 한다. 그래서 구류장에 들어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김용 씨는 14호 관리소에서 2년 동안 15건의 즉결처분을 목격했고, 18호 관리소로 이송된 뒤에는 3년 동안 30회 정도의 공개처형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14호 관리소에서는 공개처형 대신에 주로 비밀처형을 했는데, 너무 자주 공개처형을 해서 일벌백계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11, 13, 22호 관리소에서 경비대 운전병을 지냈던 안명철 씨의 증언에 따르면, 경비대는 도주자를 잡으면 크게 표창한다는 말에 수감자들을 사살하는 일이 빈발하였다고 한다.

영아살해에 대한 증언은 여러 맥락에서 있어 왔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종파분자와 계급의 원수는 그가 누구이건 3대에 걸쳐서 씨를 없애야 한다”는 김일성의 교사가 철저하게 지켜진 결과는 ‘영아살해’라고 볼 수 있다. 수용소에 가족단위로 수감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의 임신과 출산은 중죄를 짓는 것이고 본인들은 죽음에 이르는 처벌을 받게 되면, 아기는 곧바로 살해된다.

## 결론적 제안

북한이 1981년 9월 14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이래로 북한 주민들이 모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도적(법적) 규정과 그 이행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하며, 계급차별정책과 사회·경제 통제가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그 어떤 계급차별제도의 존재도 부정하지만 탈북자들은 이에 대한 존재와 지속적인 이용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정부는 “성분”이라 불리는 신분제도의 결과를 수정하는 사회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북한 정부는 어떠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도 부인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수용소에 유엔기구와 국제 NGO가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14호 개천 관리소(39.579 N, 126.068 E), 15호 요덕 관리소 (39.727 N, 126.845 E),

16호 화성 관리소 (41.3 N, 129.2 E), 18호 북창 관리소 (39.554 N, 126.065 E), 22호 회령 관리소 (42.536 N, 129.935 E), 25호 청진 관리소 (41.9 N, 129.7 E).

북한의 모든 정치범수용소는 해체되어야 하며, 수감자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 사회 내에서의 인권인식의 부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인권교육의 이행과 확산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실행될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개발되지 않았으며, 한국에서 개발된 인권 교과서가 공유될 계획도 전혀 없다. 그러므로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 및 NGO의 도움을 얻어 이 문제에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 대한 NGO 보고서

2009. 4. 20.

### I. 서론

1.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실무그룹 6번째 세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등 대한민국(남한)의 평화-인권단체들은 진보적인 인권의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 우리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를 통해 북한인민의 인권이 발전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한 북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 요약

2. 이 보고서는 북한과 남한이 공존하고 있는 한반도의 역사적 상황과, 그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인권적인 원칙, 그리고 북한의 현실에 대한 남한의 진보적인 평화-인권단체들의 우려들을 포함한다.
  - (a) 북한의 인권문제는 남한의 인권문제와 역사적, 정치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한반도인권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 (b) 국제사회와 남한정부 및 남한의 북한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에 접근할 때, 북한인민이 스스로의 인권개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연대의 자세를 분명하게 가져

아하며, 만인권적인 과정을 통해 인권을 개선한다는 모순된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 (c) 집회의 자유 보장,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사형제도의 폐지, 구금시설의 인권현실 개선, 여성에 대한 전통적 억압 철폐, 독립적인 인권보장체제 구축 등 북한 인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정부가 노력할 수 있는 우선적인 내용을 제안한다.

### 역사적 배경 및 한반도 평화와 인권

3. 세계적인 냉전의 결과인 한국전쟁(1950)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대부분의 산업 시설들이 파괴되었다. 이러한 전쟁의 영향은 지금까지 남아서 북한과 남한의 적대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다. 휴전상태에 머물러 있는 북한과 남한은 체제유지와 경쟁을 위해 적대적인 상황을 유지하며, 이를 빌미로 하여 각국의 인민들에게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 민주화를 억압하는 법률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국가보안법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처럼, 북한과 남한의 인권문제는 각각의 개별적인 현상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냉전과 분단, 한국전쟁, 이념갈등에 대한 이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북한 또는 남한 각각의 분리된 문제가 아닌,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인권의 문제로 이해하고 접근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개선도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에 기초하여 북한과 남한의 인권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려는 ‘한반도인권’의 개념이다.
4. 한반도인권의 관점에서는 소위 ‘북한인권’만을 주요 활동주제로 삼고 있는 남한 내 북한인권단체들의 활동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북한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북한 현실을 왜곡시키는 점, 인권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으로 북한인권활동을 감행하려는 점, 북한문제에만 치중하고 있어 다양한 인권영역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 북한인권활동이 남한의 인권침해상황을 정당화 또는 은폐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된다는 점 등이 그 이유이다.
5. 이와 함께, 우리는 그동안의 북한인권과 관련한 여러 증언과 보고서들이 반공·반북이테올로기와 대결주의에 의해 과장되거나 제한된 정보를 유통시키는 경우에 대한 우려를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참여하는 국제사회에 전달한다. 몇 개의 제한된 증언들이 여러 북한 관련 보고서와 백서 등에 반복되어 인용되면서 사실로 확정되는 경향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북한 정부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남한 정부 역

시 북한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의 질이 세심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접근이 제한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과 남한 모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II.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의 접근 원칙

### 인권 개선의 일차적 주체는 해당 사회의 인민

6.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조 1항이 자결권의 내용이듯이, 우리는 북한 사회에서 인권을 개선할 우선적 주체는 북한 인민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인민들이 스스로의 인권을 개선시키는 과정에서 북한 인민들과 연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북한 인민들의 권리를 대리해서 개선해줄 수는 없다. 우리는 이라크 인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이라크를 공격했다고 밝힌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 2003년 이래 9만 명 이상의 민간인 사망자(<http://www.iraqbodycount.org>)가 발생한 반인권적인 행위였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국제사회와 남한은 북한 인민들을 북한인권 개선의 가장 우선적인 주체로 존중하는 가운데 북한 인민들과 연대해 함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인권의 보편적 실현

7. 인권의 보편성은 인권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권의 보편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형식은 획일적일 수 없음을 지적한다. 역사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회에 획일적인 인권제도를 강요할 때 오히려 인권 상황을 후퇴시킬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대회의 선언문 5조에서 “국가와 지역적 특성의 중요성, 그리고 역사적·문화적·종교적 배경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인권결의안 제도나 국가별 특별보고관 제도 등의 유엔인권레짐은 정치적 압박의 수단이 되거나 인권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한계를 보여왔다. 북한 역시 이러한 이유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거부해왔다. 유엔이 획일적인 인권레짐을 강요할 때,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

회를 놓칠 수 있음이 우려된다. 정치적 압박을 통해서도 인권을 개선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사회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사회주의 정치체제라는 북한의 역사적·문화적·정치적 배경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확인한다.

## 북한 인권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

8. 우리는 북한의 인권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북한 사회에 대한 내재적인 관점에서 출발한다. 북한의 사회 원리를 통해 인권 현실을 해석하고 인권 침해를 설명할 수 있을 때, 북한 정부와 인민들도 이에 공감하고 인권개선에 나서게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북한 정부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무상의료·무상교육의 실시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는 그동안 북한 정부가 꾸준히 강조해온 인권보장 정책이다. 1946년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남녀평등권법)’ 제정 등을 통해 여성의 권리를 강조해온 역사 역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최근의 식량난과 경제난을 통해 인권현실은 후퇴하였고,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군사적 위협과 경제 제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북한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우리는 북한의 인권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 <로동신문>에서 ‘선군(先軍)’, ‘총대중시, 군사중시’ 등으로 빈번하게 표현되는 군사적 자주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북한 사회의 군사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또한 여성 영향을 끼사회하다 수자에 대한 차별도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식량권과 난과 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북한 사회의 원리를 통해 해석하더라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 북한 정부가 우려되는 현실을 되는 군사적 자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 ‘북한인권’이 아니라 한반도인권으로

9. 우리는 ‘북한인권’이라는 말이 정치적으로 북한을 ‘비난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인권침해는 모든 국가에 존재하며, 특정 국가만을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것으로는 인권을 개선할 수 없다. 북한은 남한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비난’에 반발해왔고, ‘북한인권’을 둘러싼 북한과 남한 및 국제사회의 대립은 군사적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전체의 평화까지 위협하고 있다.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군

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최근의 상황에서 남한 정부와 일부 북한인권단체들의 ‘북한 인권 비난’은 남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남한 정부는 북한인권법 제정과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상황 비난 등을 추진해왔고, 남한의 일부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을 향해 정치선전물(빠라)을 풍선에 담아 날리는 등 북한과의 대결을 부추겨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남한의 인민들은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인민들의 권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적 생존권의 당사자로서 남북 대결을 조장하고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북한인권’의 정치적 공세를 반대한다. 북한의 인권 현실은 인권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

10. 북한의 인권 현실은 남한의 인권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분단 상황은 인권 현실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두 사회 모두 반인권적인 제도를 통해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범과 양심수들을 양산해왔다. 군사 대치 상황에서 비롯한 군비 경쟁은 양쪽 정부의 재정 구조를 왜곡했고, 두 사회 모두에서 군사주의가 강화되어 인권 현실의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북한과 남한의 인권 현실을 연관해서 파악하고 북한과 남한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서로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한반도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남한 내 ‘북한인권’ 담론에 대한 분석과 우려

11. 북한의 인권 현실은 더욱 개선되어야 하며, 개선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남한 내 많은 북한인권 관련 운동은 인권의 개념을 축소, 왜곡하며 북한 인권문제에 접근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러한 북한인권 관련 운동은 첫째, 1990년대 초까지 남한 군사독재정권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반공·반북이데올로기 관련 성찰 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북한의 현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둘째,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하면서도 남한의 인권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반인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남한의 여러 북한인권단체들이 남한 사회의 인권 가해 집단과 인적·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남한 사회의 인권침해에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셋째, 인권의 보편성, 인권세대구분론 등 역사적으로 인권을 둘러싸고 진행되어온 고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협소하게 인권을 규정하면서 인권의 개념을 왜곡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남한의 북한인권 관련 운동은 남북 대결

을 부추겨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북한은 물론 남한의 인권 현실까지 후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북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우려

12. 자유권규약 제19조는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남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남한의 국가보안법은 지금도 북한 정보에 대해 자유로운 접근을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남한에서는 남한 정부를 거친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북한 정보만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북한 정부가 불필요할 정도로 국내 정보의 공개를 꺼리는 상황 역시 인권개선을 위한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출처가 불확실한 정보와 소문들이 큰 가치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북한 정부는 인권침해에 대한 의혹이 합리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존재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이 보고서 5항의 내용을 반복하여 확인하며, 북한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

## 북한은 ‘인권문제’를 솔직하게 성찰하길

13. 우리는 이 지구상에 인권문제가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모든 국가의 인권상황은 언제나 더 개선될 여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남한이나 북한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는 <로동신문> 2008년 11월 18일자에서 보도된 “거듭 명백히 천명한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과 자주적 권리를 가장 귀중히 여기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에서 인권문제는 애당초 제기조차 될 수 없다”는 북한 정부의 인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인권문제를 성찰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통해 북한 정부가 인민대중중심의 제도 실현에 더 가까워질 것을 기대한다.



### Ⅲ. 북한의 현실에 대한 우리의 우려

14. 우리는 북한의 정치체제가 북한 인민의 인권을 보다 잘 보장하고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 인권에 대한 제한된 정보 속에서도, 우리는 북한 인민이 인권개선의 주체임을 인정하며, 정치적 비난이 아닌 인권적인 과정을 통해, 권을 인권의 맥락에서, 함께 인권의 발전을 모색하는 입장으로 북한의 현실에 대한 우리의 우려와 제안을 전달한다.

#### 사상과 양심의 자유

15. 정치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비사회주의의 그루빠검열에 대한 <로동신문> 기사를 보거나, 형법 제61조 반국가선전, 선동죄나 같은 법 제67조 민족반역죄 등 정치적인 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규정을 보았을 때, 단지 사상과 양심의 차이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려된다. 우리는 사상·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국가가 인민을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확인하며, 이를 아래의 단락들에서 확인할 것이다.

#### 집회의 자유

16. 북한은 2008년 11월 5일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촛불 시위를 탄압하는 남한정부를 비판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자유권규약 이행보고서(1999)<sup>1)</sup> 125항 및 126항,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권규약) 이행보고서(2002)<sup>2)</sup> 31항에 보고된 내용을 통해 북한정부 역시 남한정부와 유사한 방식으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집회 금지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점, 집회 행위에 대해 범죄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사회안전단속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점은, 2008년 남한에서 있었던 거대한 규모의 촛불시위를 친북세력에 의한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집회를 헌법 상 규정된 신고사항이 아닌 허가사항처럼 제한했던 남한정부의 태도와 유사하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체제 내적으로 민생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때 인민들이

---

1) CCPR/C/PRK/2000/2

2) E/1990/6/Add.35

자신의 의견을 드러낼 수 있는 최후의 방법으로 다른 인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최종견해<sup>3)</sup> 24항에서 제시한 ▷집회가 사전에 금지될 수 있는지, ▷어떤 조건 하에서 그러한지, ▷그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추가 정보에 덧붙여, ▷최근 몇 년동안 어떤 집회가 절차에 따라 신고되었는지, ▷신고된 집회 중 몇 건이 금지되었는지, ▷집회를 금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 언론출판의 자유

17.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민들의 비판적인 의견이 존재하는 것, 그 의견이 정책결정기관의 상층에 전달되는 것, 그리고 그 의견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모두 중요하다. 우리는 북한의 자유권규약 이행보고서(1999) 119항에 제시된 수많은 언론과 출판기관이 있음에도, 당과 인민위원회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또는 소수 의견이 북한 내부에서 언론과 출판물을 통해 유통되는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출판법 4조에서 제시된 “출판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와 “유일적인 지도”를 실현하는 것이 비판적인 의견을 억압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우리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 23항에 덧붙여, 당과 인민위원회에 대해 독립적이면서 비판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언론, 출판기관의 운영을 장려할 것을 제안한다. 그 과정에서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 제도의 형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사형제도

18. 우리는 인간의 삶 자체를 파괴하는 사형제도의 반인권성에 반대하며, 사형제도의 완전 폐지를 지지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자유권규약 이행보고서(1999)를 통해 사형의 완전 폐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히고,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형법 상 사형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법률의 적용 측면에서는, 사형의 실행건수와 죄목 등이 공개되지 않아 현실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형사소송법과 같은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포고문이나 지시문 등

---

3) CCPR/CO/72/PRK

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고 있고, 공개처형도 진행되고 있다는 여러 보고들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형과 같은 반인권적 행위가 공포에 기반하여 인민들을 훈육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이 사형건수, 사형죄목, 사형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사형의 완전 폐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형법 상 사형대상이 되는 범죄 5개(제59조 국가전복음모죄, 제60조 테로죄, 제62조 조국반역죄, 제67조 민족반역죄, 제278조 고의적중살인죄) 중 4개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범죄이며, 용어가 포괄적이어서 사형을 부과하는 것이 주관적일 수 있다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 구금시설

19. 우리는 사회생활과 격리된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기 쉽다는 일반적인 사실에 주목한다. 북한이 인정했듯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사회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구금시설의 피구금자에게 주어지는 식량이 매우 부족해져 생명과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리는 남한의 구금시설에서 가혹행위가 빈번했던 것처럼 북한의 구금시설에서도 가혹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특히 정치범이 존재하거나, 정치범만을 구금하는 별도의 시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진다. 우리는 북한과 남한의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에도 정치범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며, 사회통제를 위해 정치범을 처벌할 때 사상·양심·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북한에서 정치범들에 대해 일반 형사범과 달리 사법기관인 검찰소나 재판소의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가 비공개, 단심제로 형벌을 결정하고 구금한다거나, 별도의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한다는 등의 구금시설과 정치범에 관련된 여러 보고들의 진위는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우리는 구금시설이 사회에 공개되지 않고 폐쇄적일수록 인권침해가 일어나기 쉽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금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 북한 정부가 구금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독립적인 국가인권보장체계를 통해 구금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기능을 높이기를 기대한다.

## 식량권

20. 북한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식량 부족을 인정하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해 왔다. 우리는 북한의 식량 부족이 자연재해와 더불어 사회주의경제권의 붕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북미 군사 대립을 통한 북한의 군비 증가, 정부 기관원의 부정부패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이해한다. 이 중 북한의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북한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식량 부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의무가 있다. <로동신문> 등에서 북한 정부가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이 드러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배급에 있어 군대에 우선 순위를 두는 점 등은 인민의 식량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 우려스럽다. 우리는 식량 위기나 경제 위기의 어려운 상황일수록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식량 부족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남한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실시하고, 북한 역시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받아들여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 순위를 두고 공정하게 식량을 분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여성인권보호

21. 우리는 북한이 성차별 해소를 위해 남녀평등권법을 제정하고 2001년 2월 27일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하지만 북한이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협약이행보고서(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2002)<sup>4)</sup> 85항과 86항에서 여성과 남성의 혼인연령차이를 전통적 기준에 따라 여성차별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규정한 부분이나, 같은 보고서 93항의 아동 양육에 있어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한 부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고정된 성역할의 강요가 전통과 관습에 의해 정당화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여성에게 전통적으로 부여된 가사노동과 아동양육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제난으로 인한 여성의 추가적인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차별이 심해지거나 여성들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이에 대해 북한 정부는 가족법과 교육제도의 개선을 통해, 가사노동과 아동양육의 역할을 여성들에게 부과된 전통적 역할이 아닌 모든 성별의 역할, 그리고 사회가 다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인식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4) CEDAW/C/PRK/1

22. 우리는 북한이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2002) 105항과 106항에서 성매매를 부끄러운 범죄로 인식하며 수년간 보고된 바 없다고 보고하였음에도, 경제난 이후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해 일부 북한 여성들이 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인신매매와 성매매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여러 보고서들을 통해 발표된 점에 주목한다. 더욱이 이러한 현실과 법률 상 범죄규정의 차이가 여성들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가난한 여성들을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빠뜨릴 수 있음에 주목한다. 우리는 경제난 속에서 여성이 성매매에 몰리는 상황이, 경제적 어려움이 여성의 책임으로 부과되며 가부장적인 질서를 강화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해지는 과정을 강조한다. 북한정부는 성매매를 택했던 여성이 형법 261조에 규정된 매음죄로 인해 제2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가 일어나는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3. 북한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2002) 244항과 245항에서 국가는 노동력 부족의 관점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고, 드문 경우에 조부모가 손자를 얻을 때까지 출산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사회분위기를 보고하였다. 우리는 여성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사회분위기가 여성에게 또다른 차별임을 확인한다. 북한정부는 1998년 제2차 어머니대회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이를 낳을 데 대한 지시’를 통해 다산을 장려하고 있다. 북한은 자유권규약 이행보고서(1999) 140항에서 “국가는 출산을 통제하는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지만, 여성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에 의해 피임과 낙태가 ‘금지’될 수 있음이 우려된다. 사회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낙태 시술은 여성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우리는 북한정부가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식량난 이후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 인권보장체제

24.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은, 국내에서 효과적인 인권보호 및 보장을 꾀하고, 국제인권보장체제나 지역적 인권보장체제에 비하여 실제로 접근이 용이한 인권보호제도를 개인들에게 제공하며, 동시에 국제인권법의 효과적인 국내 적용을 확보하기 위해 장려된다. 북한은 여러 국제인권협약 이행보고서를 통해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등이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국내적 차원의 인권보장체제의 구축과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25. 하지만,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권력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 견제, 시정하는 ‘인권수호 기구’로서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파리원칙이나 유엔의 설립권고안 등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국제규범에 따라 정부나 정당 또는 그밖에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상황들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가인권기구는 사법기관과는 별도로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의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인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그에 대한 구제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북한이 ‘여성차별 철폐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등 기존 국내적 인권보장체제의 구성 및 운영, 활동내역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들 기관에 사법기관과는 별도로 인권침해 권리 구제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26. 아울러, 파리원칙과 유엔의 설립권고안 등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국제규범에 따라 사안별 또는 전체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독자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인권이사회,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등의 국제인권기구와 함께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인권문제에 관한 논의를 교환하고 협력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 IV. 결론

27. 국가는 인권 실현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인권침해의 가해자이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 정부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며, 우리는 북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인민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 전체 인민의 인권현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한반도인권의 측면에서도 북한은 매우 중요한 주체이다.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북한의 성찰을 바탕으로, 북한과 남한이 공존하는 한반도인권을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끝)

##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검토(UPR) 제6차 회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NGO 보고서

2009년 11/ 12월

### 요 약

본 보고서는 ‘보편적정례검토 제도 하의 관련정보 준비를 위한 일반지침’<sup>1)</sup>에 따라 국제사면위원회가 작성하였으며, B장, C장, D장에 걸쳐 관련 정보를 기술하였음.

- 국제사면위원회는 B장에서 인권 관련 입법, 국제기구에 대한 접근 제한, 고문과 기타 형태의 학대, 사형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C장에서는 납치 및 강제실종,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식량권 등에 관한 우려를 기술하고 있음.
- D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우려사항들의 범위 내에서 국제사면위원회의 권고사항들을 제시하였음.

---

1) 유엔인권이사회 결의 5/1의 후속으로 동 이사회 결정 6/102에 포함. 1부(section 1)는 2007년 9월 27일 채택됨.

## B. 북한의 규범적·제도적 틀

### 인권관련입법

1.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제3·4차 통합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고, 2009년 1월 23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동 협약 및 기타 협약 기구들에 의해 제시된 권고사항들을 북한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그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2.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와 자유, 그리고 북한이 당사국으로 가입한 여러 협약들은 국내법에 의해 거의 보호되지 않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헌법 및 기타 법률 조항들, 특히 헌법 제162조는…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든 인권의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sup>2)</sup>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 북한 내 접근거부

3.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강하게 비난하는 유엔의 거듭된 결의안들과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협력에 대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는 독립적 인권 감시기구의 접근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2009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이 특별보고관의 수임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북한 정부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왜곡과 날조로 가득 차 있다”며 거부하여 왔다. 북한 정부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2002년), 종교와 신앙의 자유(1999년, 2002년의 재요청), 그리고 식량권(2003년)에 관한 특별보고관들의 앞선 방문 요청들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 고문과 기타 형태의 학대

4. 수용소와 구금시설들로 보내진 북한 사람들은 흔히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는다. 비록 각 시설들마다 상황은 다르고, 정치범

---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최종견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UN Doc. E/C.12/1/Add.95, 2003년 12월 12일, 9항; ([http://www.unhcr.ch/tbs/doc.nsf/\(Symbol\)/E.C.12.1.Add.95.En](http://www.unhcr.ch/tbs/doc.nsf/(Symbol)/E.C.12.1.Add.95.En)).



수용소(관리소)의 상황은 비정치적 수감자들에 대한 수용소들(교화소 또는 노동단련대)의 상황에 비해 변함없이 가혹하지만, 일반적으로 수감자들은 종종 벌목과 채석을 포함한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을 휴일도 없이 매일 10시간 또는 다음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하도록 강요된다. 수감자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노역을 빨리 하지 않는다거나, 충성심을 높이기 위한 노래들의 일부 가사를 잊은 것으로 간주될 경우, 처벌을 받는다. 처벌의 형태에는 구타, 강제적 훈련, 장시간 부동자세로 앉아있기, 굴욕적인 공개비판도 포함된다. 강제 중노동과 부족한 음식, 구타, 의료 부족, 비위생적 생활환경이 복합적인 요인이 되어 많은 수감자들이 병들고, 어떤 이들은 수감 중에 또는 석방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여왔다.

5. 북한 수용소 수감경험자들은 간수들이나 동료 수감자들에 의한 강제노동과 구타 사례들에 관해 종종 증언한다. 노동단련대로 보내졌던 한 여성 수감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를 산으로 올려 보내 등이나 머리에 돌을 지고 나르도록 했습니다. 마찰 때문에 등살이 벗겨지고 피도 흘렸습니다… 간수들은 늘 고향을 지르고 수감자들을 때렸습니다.”<sup>3)</sup>

## 사형

6. 북한에서 사형은 비밀리에 집행되고 있다. 사형은 전형적으로 총살형이나 교수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개처형과 적법절차에 의거하지 않은 사형집행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 공개처형은 북한 자체의 형법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일종의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선고된 죄가 북한의 국내법상 사형에 처해질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조차 종종 사형이 집행되기도 한다.<sup>4)</sup> 사형에 처해지는 죄목들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5개 중 4개의 사형 죄목들은 넓은 의미의 용어들로 정의된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범죄들”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있다.<sup>5)</sup> 이러한 죄목들에는 “국가전복음모죄,” “조국반역죄,” “테로죄,” “민족반역죄”도 포함된다.<sup>6)</sup>

3) 노르마 강 뮤코, 『북한 수용소의 강제 노동』, 국제반노예연대, 2007, p.14, (<http://www.antislavery.org/homepage/resources/PDF/NK%202007.pdf>).

4) 통일연구원(KINU), 『북한인권백서』, 2008, p.52.

5) 유엔인권위원회의 최종견해, 2001년 8월 27일, CCPR/CO/72/PRK, 13항, ([http://www.unhchr.ch/tbs/doc.nsf/\(Symbol\)/CCPR.CO.72.PRK.En?OpenDocument](http://www.unhchr.ch/tbs/doc.nsf/(Symbol)/CCPR.CO.72.PRK.En?OpenDocument)).

## C. 인권의 현실적 증진과 보호

### 식량권

7. 2009년 3월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2008년 긴급구호활동의 목표로 삼았던 620만 명 가운데 200만 명만이 식량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수혜자들조차 영양강화식품을 불충분하게 배급 받고 있다. 작년 세계식량계획은 수백만 명이 십 년 만에 최악의 식량부족을 겪고 있고, 여성과 아동, 노인들이 가장 취약한 상황이라고 발표하였다. 식량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식량 수입량도 감소하였다.
8. 2008년 세계식량계획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8개 도, 53개 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는 북한 가구의 거의 4분의 3 가량이 식량섭취량을 줄였음을 시사하였다. 대부분의 가정들에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을 중단하였고, 곡물과 야채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야생식품에서 식량을 찾아 헤매게 되었는데, 이러한 식품들은 영양가가 불량하며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세계식량계획과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5세 이하의 아동영양실조의 주요한 원인들 가운데 한 가지가 야생 식품 섭취의 증가로 인한 설사라고 한다.
9. 식량부족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는 자국민 전체의 최소 식량 필요량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구하는데 실패하여 왔다. 양국간의 긴장 관계로 인하여, 2009년 3월 북한은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 식량지원을 받기를 거절하였다. 또한 북한 정부는 5개의 미국 인도지원단체들에 대하여 같은 달 말까지 북한에서 철수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마찬가지로, 2008년에도 북한은 이전까지 식량과 비료에 있어서 가장 큰 지원국이었던 남한에 대하여 원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10. 북한 정부는 지원된 식량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세계식량계획과 기타 감시요원들의 제한 없는 접근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식량분배가 군대와 정부고위층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들을 받고 있다.

---

6) 통일연구원, 전계서, p.49.

## 이동의 자유 제한

11. 북한의 법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내 및 국외로의 여행에 있어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04년의 형법 제62조는 국가의 허가 없는 출국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제협약<sup>7)</sup>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러한 의무를 노골적으로 위반하여 해당자들을 사형에 처하기도 한다. 이러한 국내법상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식량획득과 생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억압으로 인하여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향한다. 그 중 대부분은 흔히 중국인 농부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는 여성들이다. 일부 브로커들은 이들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여 강제결혼 형태의 인신매매를 통하여 이득을 취하기도 한다.
12. 중국 정부는 증명서류 없이 입국한 북한 사람들을 모두 경제적 이주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들은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다. 사실상,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모든 사람들이 길게는 3년에 이르는 기간까지 수용소에 수감되어 강제노동과 고문, 기타의 학대를 받아왔다. 중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북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유엔난민기구(UNHCR)의 요청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2009년,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향한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와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난민(*refugees sur place*)으로서 국제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였다.<sup>8)</sup>

## 납치와 강제실종

13.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은 한국전쟁(1950-53) 이래로 계속되어 오고 있다. 납한, 일본, 태국, 레바논을 포함한 기타 여러 국가의 국민들은 물론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도 북한 정부에 의해 납치되어 왔다. 체제에 반(反)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가족들은 실종되거나 “연좌제” 원칙에 따라 처벌되어 왔다. 대부분의 사례들에서 북한 당국은 이러한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나 그들의 생사나 행방에 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여 왔다.

---

7)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2항.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UN Doc. A/HRC/10/18, 2009년 2월 24일,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hrcouncil/docs/10session/A.HRC.10.18.pdf>).

14. 한국전쟁 중에는 수천 명의 남한 국민들이 납치되어 북한으로 끌려갔다. 2,438명<sup>9)</sup>에서 94,700명<sup>10)</sup>에 이르기까지 통계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국전쟁 중 납치된 남한 국민들 가운데 북한이 남한으로 보내준 것으로 공식 확인된 경우는 한 명도 없다. 전쟁 이후에는 북한 공작원들에 의하여 3,795명의 남한 국민들이 추가로 납치되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그 중 상당수는 생환하였지만, 428명의 어부들을 포함한 약 480명의 생사는 불명상태로 남아 있다.
15. 이성환 씨는 1950년 9월 북한의 비밀기관 소속 공작원들에 의하여 납치되었다. 이 씨의 부인은 1951년 자신의 남편이 북한의 자강도 내 전쟁포로수용소로 끌려갔다고 국제사면위원회에 밝혔다. 그녀와 세 명의 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이성환 씨의 생사나 행방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16. 2008년 8월 13일, 북한측은 몇몇 일본인들의 생사와 행방에 관한 조사를 재개하는데 동의하였다. 2002년 9월 17일,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은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수상에게 북한이 1970~80년대에 13명의 일본인들을 납치한 바 있다고 시인하였다. 그 결과, 5명의 일본인들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한 일본인 여성의 자녀들과 미국인 남편도 북한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북한측은 나머지 8명의 일본인들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008년 10월, 일본의 특정 실종자문제조사회(COMJAN)는 납치된 것으로 보이는 일본인 32명의 명단을 추가하였고, 그 숫자는 총 62명으로 늘어났다.

##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제한

17. 북한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된다. 모든 언론은 국가에 의하여 통제되고,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 국가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를 담고 있는 방송을 청취하거나 보유하거나 퍼뜨리는 행위는 형법에 따라 최대 2년간의 “노동단련형”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보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최대 5년간의 “노동교화형”을 받을 수 있다.<sup>11)</sup> 인민보안성 소속 요원들은 주민들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각 가구들을 검열한다.<sup>12)</sup> 2008년에는 식량 부족상황에 대

9) 대한민국 공보처(1950) 참조.

10)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2005) 참조.

11) 통일연구원, 전계서, p.208.

한 소식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장거리 전화를 차단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방 당국들에서 남한 영상물을 보거나 허가되지 않은 휴대전화기를 소지한 사람들을 체포하였다는 보고들도 있었다.

18. 주로 평양에 몇몇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는 엄격하게 제한된다. 종교적 행위를 하였거나, 중국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을 만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수용소와 구금시설들로 보내지며, 국경을 넘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 D. 검토대상국에 대한 조치 권고사항

### 긍정적 성과

국제사면위원회는 장애인을 위한 2008-2010 행동계획 초안 작성과 2005년 7월의 조선 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의 설립 등 북한이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

### 북한정부에 대한 국제사면위원회의 권고

#### 인권보호 입법에 관한 권고

- 시급한 문제로서, 적절한 인권 관련 법제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엔의 인권 관련 협약기구들과 유엔헌장에 기초한 관련 기구들로부터의 권고사항들을 이행할 것.
-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에 관한 유엔협약과 동 협약의 선택의정서, 장애인권리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강제실종자보호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에 반영하며, 정책과 실행에 있어서 이를 이행할 것.

---

12) 상계서, p.210.

### **북한 내 접근 거부에 관한 권고**

- 독립적 감시기구들과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포함하여 유엔의 모든 특별절차들에 의거한 방북 허용요청을 받아들일 것.

### **고문 및 기타 부당한 처우에 관한 권고**

-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 및 기타 부당한 처우와 수용소 내 강제노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수감자들을 처우할 것.
- 최소한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용소 및 구금시설의 여건을 개선할 것.

### **사형제도에 관한 권고**

- 공개처형과 적법절차에 의거하지 않은 사형을 즉각 종식할 것.
- 사형제의 폐지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계로 공식적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할 것.

### **식량권에 관한 권고**

- 식량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즉각 적이고 자유로운 현장 접근권을 세계식량계획(WFP)에 부여할 것.

### **이동의 자유에 관한 권고**

- 허가 없이 국가를 떠나는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
- 국내 및 국외 여행에 있어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할 것.

### **납치와 강제실종에 관한 권고**

- 모든 납치 및 강제실종 문제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즉각 종식할 것.
- 과거와 현재의 납치 및 강제실종 사건들을 조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주는 가운데,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

- 납치 및 강제실종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생사와 행방에 관한 공식적이고, 정확하며, 최종적인 정보를 공개할 것.
- 형사 범죄로 간주될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납치 및 강제실종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국제법에 의거하여 자유롭게 북한을 떠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줄 것.

####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고

-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해제할 것.
-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해제할 것.

#### 참고문헌: 국제사면위원회의 관련 문서들<sup>13)</sup>

- Press release, “*North Korea: Amnesty International calls for release of detained US journalists*” 1April 2008
- Press release, “*North Korea: summary executions yet another injustice for beleaguered population*” 6 March 2008
- Report, “*Asia Pacific: Enforced disappearanc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must end*”, 30 August, 2008, AI Index: ASA 01/010/2008
- Urgent Action: fear of imminent execution, 15 February 2007, AI Index: ASA 24/001/2007
- Media Briefing, “*North Korea: Human rights concerns*”, 24November2006, AI Index: 24/002/2006
- Media Advisory, “*North Korea: briefing on present situation*”, 28July2005, AI Index: ASA24/002/2005
- Urgent Action: Disappearance/fear of torture/fear of death penalty, 15 September 2005, AI Index: ASA 24/003/2005

---

13) 이하의 모든 문서들은 국제사면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음, <http://www.amnesty.org/en/region/north-korea>

- Report, “*Starved of Rights: Human Rights and the Food Crisi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North Korea)*”, 20 January 2004, AI Index: ASA 24/003/2004
- Press release, “*NorthKorea:denialofrighttofood*”,20 January 2004, AI Index: ASA 24/004/2004
- Urgent Action: Fear of torture/ill-treatment, 19 November 2004, AI Index: 24/002/2004
- Urgent Action: Fear of torture/fear of death penalty, 23 December 2004, AI Index



**보편적정례검토:**  
**북한 Human Rights Watch의**  
**2009년 4월 유엔인권이사회 제출보고서**

2009년 4월 18일

**요약문**

북한 내 인권유린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조직적인 반대당이나 독립된 노동조합, 자유로운 언론, 시민활동 등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도 결여되어 있다.

자의적 체포 및 구금, 적법절차의 결여, 고문, 기타 학대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북한은 대규모 수용소를 운영하여 아동을 포함한 수십만 명의 인민들을 노예와 같은 상황에 몰아넣고 있다. 국가재산 절도, 식량의 비축, 기타 반사회주의 범죄를 이유로 주기적으로 공개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 정부는 정권에 대한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인민들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의 세 계층으로 분류한다. 의료혜택, 교육 등 기본적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개인의 계층에 따라 차등하게 구분된다.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4개의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상태이다.

북한은 유엔의 인권전문가와의 대화를 대체로 거부해왔으며, 2004년에 임명된 비릿 문

타폰(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입국을 계속 불허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식량권, 월경자(越境者) (혹은 도강자/탈북자), 아동 권리, 노동자 권리 등 Human Rights Watch가 조사한 주요 4개 주제에 치중하였다.

## 식량권

북한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수많은 아동들의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 90년대 중반의 기근으로부터 대체로 회복한 상태이나, 심각한 식량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계속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

배급제도가 와해되다시피 한 상태에서 엘리트집단 외의 인민들은 식량 및 기타 생필품을 얻기 위해 거의 전적으로 시장에 의존한다. 현재 보통 인민들에 대한 배급은 1년에 몇 번, 김정일의 생일과 같은 주요 국경일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정기적인 배급을 받는 이들은 노동당 고위간부나 군인, 정보요원 등 소수 계층에 한정되어 있다.

1990년대 중반 이래 북한은 매년 대규모의 해외원조를 받고 있으나, 지원물품의 배분을 감독하고자 하는 국제지원단의 입국을 지속적으로 제한하여왔다.

한국은 매년 50만 톤의 쌀과 30만 톤의 봄철 모내기용 비료를 지원하는 등 수 년간 북한의 주요 식량지원국이었으나, 2008년 초 보수적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원조를 중단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원조 재개의 조건으로 북한의 공식적 요청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2008년 5월 미국은 북한에 50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2008년 6월부터 국제원조기구들이 미국의 지원식량을 배급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3월까지 17만톤의 식량이 북한에 지원되었다.

2009년 3월 말 북한은 미국의 추가적인 식량지원을 거부하며 미국 지원단을 북한에서 추방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북한의 로켓발사 준비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북한은 4월초에 로켓을 발사하였다.)

비릿 문타폰 유엔특별보고관은 2009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상황이 “심각하고 (dire) 절망적(desperate)”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 월경자(越境者) (혹은 도강자/탈북자)

1990년대 중반 이래 수십만 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탈북하였다. 정치적·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혹은 식량난 및 기타 경제적 이유에서 많은 이들이 북한을 떠나갔다. 그 외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공식적으로 여행허가를 받고 중국을 방문하는 이들도 있으며, 상인들이 비밀리에, 혹은 국경경비대를 매수하여 국경을 수시로 넘나들고 있다.

북한 여성과 소녀들의 중국으로의 인신매매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 피해는 특히 국경지대에서 심각하다. 많은 피해자들은 납치되거나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며, 강제로 매춘부나 성적(性的) 착취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일부 북한 여성은 중국 남성과 장기적인 실질적 결혼생활을 영위하나, 법적 지위가 없는 관계로 체포 및 강제송환의 대상이 되며, 중국 남성과의 사이에 자식을 낳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조치에 예외가 되지 않는다.

공식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것은 북한에서는 반역죄에 해당되며, 장기간의 징역 혹은 사형으로 처벌된다. 아동들 역시 탈북 후 귀국한 경우 감금 등 가혹한 처벌이 가해진다. 따라서 중국 및 타지역으로 떠난 탈북자들은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공포를 지녔기 때문에, 경제적인 사유로 북한을 떠난 경우에도 ‘현장난민’(refugee sur place)에 해당된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들을 일괄적으로 경제적 이주자로 간주하여 이들을 주기적으로 체포하고 북송한다. 이는 박해·고문·학대에 처해질 개연성이 있는 이들을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중국의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최식을 전후하여 중국 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체포 및 송환 활동을 한층 강화하였다.

강제로 송환된 이들 중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기독교 선교사와 접촉하였거나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더욱 가혹한 처벌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정부 수립 이후 종교 활동을 하는 이들을 ‘적대분자(敵對分子)’로 간주하여 지속적으로 박해하여 왔다.

북한 정권은 특히 기독교인들을 반(反)북한 반(反)혁명 제국주의적 침략의 앞잡이로 간주한다. 북한 정권이 종교를 탄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종교 활동이 건국자 김일성과 현 지도자인 그의 아들 김정일을 숭배하는 주체사상과 모순된다는 데 있다.

## 아동권

북한에서 아동들은 그들의 부모 혹은 가족 구성원들의 지위, 활동, 의사 표현, 사상 등에 따라 차별 및 처벌의 대상이 된다. 북한에서는 정치적 범죄에 대한 연대처벌이 보편적이어서, 정부 및 당에 대한 ‘반역자’는 아동을 포함한 그 가족 전체가 감옥 혹은 강제노동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외딴 산악지방으로 추방된다. 설사 아동들이 연대처벌로서의 구금이나 강제노동수용소행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대개 고등교육을 받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

정치적으로 사회계층이 분류되는 북한사회에서 아동들의 교육기회는 큰 제약을 받는다. 모든 아동들에게 11년간의 의무교육이 주어지지만, 대학으로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은 대개 정치적 지도계층의 자제들에 국한된다. “동요계층,” “적대계층”에 속한 아동들에게는 교육 및 취직 기회가 지극히 한정적이다. “선군정책”을 강조하는 이념 교육이 일반 학과학습보다 우선시되며,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매 주 수 시간 동안 의무 군사훈련과 주입식 사상교육을 받게 된다.

## 노동자의 권리

노동법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법은 국가이념인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로동당 당책에 기초한다. 고(故) 김일성 주석의 지도방침이나 지침이 헌법이나 기타 법보다 더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북한의 노동법은 사회주의노동법, 헌법 및 형법의 노동 관련 조항, 그리고 외국 투자자 및 기업에 관한 법 등으로 구성된다.

국가가 노동시장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며, 국가가 인가하고 감독하는 노동조직만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노동자들은 로동당 통제 하의 국가 노동행정기관에서 일을 배정 받기 때문에 북한 법에는 고용계약이라는 개념이 없다. 식량, 보건의료, 교육, 주거 등 기본적인 혜택을 국가에서 제공하며, 노동의 대가로 현금 혹은 추가 식량, 의류, 가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권이 주어진다.

북한은 2004년 6월 현대아산(주)과 한국 정부 소유의 한국토지공사와의 계약 하에 개성공단을 설립하였다. 개성공단은 개성시와 휴전선 서쪽 끝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에서 차로 약 1시간 떨어져 있다. 개성공단 내 기업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규정하기 위해 개성공단노동법이 제정되었다.

개성공단에서는 약 3만 9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한국 기업을 위해서 일하며, 대부분 소비재를 생산한다. 개성공단의 노동환경을 규정하는 법은 노동자들의 대표선출권, 노조권, 단체교섭권 등의 부분에서 국제 기준에 크게 미달한다. 성차별이나 성희롱, 위험한 아동노동 등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 장치도 없다.

개성공단노동법은 또한 한국 기업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북한의 요구에 따라 임금을 북한 정부에게 지불하며,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 정부로부터 실제 받는 금액은 그들의 본래 임금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기 위해 불가리아, 중국, 이라크, 쿠웨이트, 몽고, 러시아 등 해외로 이주했다는 보도가 있다. 이 중 몇몇 나라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 정부가 이들 노동자들의 이주, 표현,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노동자들 주위에 항상 감시자들을 두고, 북한 정부가 노동자들의 임금의 상당 부분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 등이 문제시 되고 있다.

북한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국이 아니다. 북한은 자국내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ILO와 논의하기를 거부해왔다.

## 권고사항

**식량권과 관련하여 북한 정부는 다음을 이행할 것:**

- UN 세계식량계획(WFP)을 포함한 국제 인도주의기구들이 북한에 필요한 식량공급 활동을 재개하고, 정상적 국제관례에 따라 지원품의 배급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뤄지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국제관례에 따라 국제기구들이 북한 전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불시로 사찰하거나 무작위로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함.
- 배급이 공평하고 충분하도록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북한주민들이 시장이나 외부 지원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 식량을 구할 수 있도록 할 것.
- 로동당이나 군, 정보기관, 경찰 등의 고위 간부에게 유리하고, 정부나 당에 정치적으로 불충한 것으로 간주되는 “적대계층”에 불리한 식량배급 상의 차별을 중단할 것.
- 어린 아동들,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이 식량을 우선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

**월경자 (혹은 도강자, 탈북자)와 관련하여 북한 정부는 다음을 이행할 것:**

- 모든 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입·출국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 송환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할 것.

**아동 권리와 관련하여 북한 정부는 다음을 이행할 것:**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아동들의 권리가 어떠한 차별도 없이 존중되고 보호 받도록 할 것.
- 온 가족에 대한, 특히 아동에 대한 연대처벌을 중단할 것.
-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 및 인신매매 대상 아동들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간주하고, 그들이 북한사회에 다시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상담을 제공할 것.
- 학생들의 조기(早期) 군인화를 중단할 것.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북한 정부는 다음을 이행할 것:**

-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고 그 주요 협정에 조인하고, 북한 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ILO관계자들과 논의하고 그들이 조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현행 개성공단노동법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노동자들이 한국 고용주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이 명시적으로 보호되도록 개성공단노동법을 개정할 것.
- 성차별이나 성희롱을 금지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노동법으로 개정할 것.
- 북한노동법의 최소연령조항을 개성공단노동법에 포함시키고, 18세 이하의 아동이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것.
-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현지 주민들과 같은 인권 및 노동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주재국 조사관이나 ILO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하여, 북한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해외 시설에 대해 철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검토: 북한

2009년 4월 18일

### 서 문

1. 종교자유를 위한 인권단체인 세계크리스찬연대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CSW)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가 북한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악명 높은 인권탄압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2. 북한의 국경봉쇄 정책은 정확한 수치를 얻는데 어려움이 된다. 그러나 이 분야에 관련된 한국의 학계 및 기타 기관들, 그리고 생생한 증언들과 상담을 통해 얻어낸 자료 조사(대량학살<sup>1)</sup>)의 징조들과 반인류적 범죄들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북한 정부의 엄격한 위계체제와 정책결정에 대한 정보에서 북한 수뇌부, 특히 김정일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국제법상 북한의 의무들을 비추어 볼 때, 이 보고서는 법률적이고 헌법적인 틀 안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현장에서의 인권촉진과 보호에 관해 검토하였다. 특히 구금, 수용 체계와 인권침해를 허용하는 정부기관에 초점을 두었다.

---

1) 첨부된 CSW Report, "A Case to Answer - A Call to Act" p91 참조

## 배경과 구조

### 국제적인 의무의 범위

4. 북한정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그리고 차후 언급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의무사항들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5. 권고: 국가 정책과 그 이행에 있어 북한이 가입한 국제조약들을 전적으로 반영할 것을 북한당국에게 촉구한다.

### 헌법과 법률 구조<sup>2)</sup>

6. 1948년에 채택되고 1972년도에 개정된 후, 1992년과 1998년에 수정된 북한 헌법은 유엔과 국제기구<sup>3)</sup>의 기본 인권들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에 대한 해석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서 크게 다르다. 북한 정부는 개발권이 시민적권리와 정치적권리의 우위에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권리들은 권리 그 자체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수령님'의 호의에 의해 수여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7. 권고: 북한의 헌법은 최근 개정되었지만 더욱 근대화되어야 한다. 헌법은 인권의 보호와 평등하고 선천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모든 권리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 현장에서의 인권의 촉진과 보호

### 인권기구들과의 협력

8. 북한 정부는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에 있어 완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는데 대해 우려와 계속되는 거부를 보이고 있다.
9. 권고: 북한이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북한 정부는 유엔인

---

2) CSW Report, p18 참조

3) Articles 62 et seq. of the 1998 Constitution 참조



권이사회의 주제별 특별절차의 상시 초청을 확대해야 한다.

## 인권의무의 이행

### 평등과 비차별<sup>4)</sup>

10. 북한은 헌법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비차별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sup>5)</sup> 성분에 따른 차별제도는 과거보다는 완화되었지만 명백한 위반행위이다. 북한 주민들은 정권의 충성도에 따라 세 가지의 계층으로 나누어지며, 다시 51가지의 하위부류로 나누어진다. 형사처벌, 교육·직업·의료혜택의 및 식량분배와 같은 기본 생필품의 접근성이 각자의 신분에 의해 결정된다. 인구의 27%에 해당하는 적대계층은 종교 신자와 정치적 반대파 같은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며 매우 가혹하게 다뤄진다.
11. 권고: 북한은 성분에 따른 차별제도의 폐지를 시작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에 전적으로 순응하면서 현존하는 국내법의 이행을 강화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

## 생명권, 자유권, 인신의 안전권

### a) 생명권

#### i. “긍정적 조치<sup>6)</sup>”

12. 일반적 견해 6번<sup>7)</sup>은 당사국들이 생명권<sup>8)</sup>을 보호하기 위해 “긍정적 조치를 채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북한 당국의 정치범 수용소 정책은 수십만<sup>9)</sup>의 희생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아주 적은 식량 할당량과 강제 노동 제도는 계속해서 기아를 만들고, 수용소 안에서의 궁핍은 만연해 있다. 북한 당국은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필요한 식량의 제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은 극히 적은 양의 식량을 받고 채광과 벌목,

---

4) CSW Report p19 참조

5) ICCPR, Article 2 (1) and Article 26; and ICESCR Article 2 (2)

6) CSW Report p26 참조

7) ICCPR, General Comment 6.

8) ICCPR, Article 6.

9) 정치범수용소 캠프에 수용된 인원의 정확한 수치의 판명이 어렵지만, 200,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CSW Report p27 참조

그리고 공장에서 혹독한 노역을 강요받는다. 그로 인해 수감자들은 피로와 질병에 쉽게 노출되며 많은 경우 결국 사망에 이른다. 이는 국제사회의 강제노동 금지<sup>10)</sup>에 위배되는 것이다. 강제노동수용소가 사실상 사형으로 여겨지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13. 또한 제6조는 당사국들이 유아 사망률을 줄이고 평균 수명<sup>11)</sup>을 늘이기 위한 조치들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수용소에서의 관행은 이 조항과 극명하게 반대된다. 증언들에 의하면 수용소 안에서의 임신은 대부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실행하는 낙태에 성공하지 못하면 태어난 아이를 질식시키거나 얼굴을 엮드리게 한 채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된다고 한다.<sup>12)</sup> 몇몇 증언들은 태어난 아이들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라고 강요당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중국인의 피가 섞여있기 때문이다.

## ii. 사형제도

### - 가장 심각한 범죄들

14.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에 의하면, 당사국들은 가장 심각한 범죄에만 사형선고를 내리도록 제한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강제수용소 안팎에서 처형이 자유롭게 행해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식량을 약탈하거나 훔치거나 도주하려고 시도했거나 폭동에 가담하거나 간수들을 공격하거나 신앙심을 버리지 않는다고 북한정부를 비판하는 등의 행위는 형벌이 주어진다. 또한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과 접촉이 있고 난 후 강제송환된 북한 사람들에게도 형벌이 내려진다. 그밖에 음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등 명백하게 “가장 심각한 범죄” 항목에 들어맞지 않는 사람들도 형벌이 가해진다.

### - 절차상 보호장치<sup>13)</sup>

15. 사형선고는 반드시 “관할법원에 의해서 내려지는 마지막 심판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sup>14)</sup> 그러나 법원의 관할능력은 매우 의문스럽고 북한이 주장하는 재판기준이라고

---

10) ICCPR, Article 8 (3b);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Article 2

11) ICCPR, Article 6; CRC, Article 24 (2a)

12) CRC, Article 6 또한 위반한다.

13) CSW Report p36 참조

국제기준과 매우 다르다.<sup>15)</sup>

## b) 자유권, 인신의 안전권

### i. 자의적인 자유박탈<sup>16)</sup>

16. 범죄자의 체포와 구금에 관한 관행<sup>17)</sup>은 명백히 자의적인 자유박탈로부터의 국제 자유를 명백히 위반한다.<sup>18)</sup> 더욱이 북한 정부는 수감자들의 정치범죄와 사회분류에 의존하는 연좌제를 실시하고 있다. 법적 근거 없이 수감자의 삼대(조부모, 부모와 아이들)가 수감된다.

### ii. 고문<sup>19)</sup>

17. 수용소 안에서의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고문은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간혹 죽음<sup>20)</sup>에까지 이르게 한다. 고문은 대부분 조사실에서 이루어지며, 종종 장애, 마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수감자들은 생체, 생화학 또는 의학실험<sup>21)</sup>에도 사용된다고 보고된다. 더욱이 수감자들은 “자유 박탈<sup>22)</sup>에서 초래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떠한 고초나 강요에 종속되면 안 된다.” 강제노동수용소<sup>23)</sup>는 이러한 의무와 현저히 반대되는 것이다.

18. 권고: 법집행자들에게 인권을 존중하는 확실한 교육이 주어져야 하며, 그들의 임무를 감시하는 것이 책임감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국가는 처형 및 개인의 안전과 자유를 남용하는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사형제도는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공정한 재판기준을 보장하는 법률체제 하에서 운용되어야만 한다. 수감 체제는 국제기준을 따라야 하며 현재 임의적으로 수감되어 있는 자들은 석방되어야 한다.

---

14) ICCPR, Article 6 (2)

15) paragraphs 19-20 참조

16) CSW Report p47 참조

17) paragraphs 19-20 참조

18) ICCPR, Article 9; General Comment 8

19) CSW Report p37 & p48 참조

20) Contravenes ICCPR, Article (조항) 10 위반

21) Contravenes ICCPR, Article( 조항) 7 위반

22) ICCPR, General Comment 21

23) paragraph 12 참조

## 사법행정과 법치

19. 미약한 권력의 분리는 북한의 사법부가 독립된 정부기관 으로서의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sup>24)</sup> 모든 관사임용은 행정부가 결정하고, 사법부는 사법심사를 관할하지 않으며, 사법부의 기능은 최고인민위원회에서 주관한다. <sup>25)</sup>
20. 형사법을 위반한 자들은 대개 공식소송절차를 따르지만, 정치범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소송절차를 따를 수 없다.<sup>26)</sup> 이들은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해 고문을 당하면서 조사받고 사건이 결론지어진다. 법률자문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고 법적근거에 대해 도전할 수도 없다. 그들의 ‘죄’가 한번 공식적으로 결정되면 정치범수용소로 옮겨진다. 경범죄로 여겨지는 자들은 단기간 노역을 위한 수용소로 보내질 수도 있다. 상관이 행정상으로 직원들을 이러한 노역을 선고할 수도 있다. 형사법을 어긴 자들은 대부분 공식소송절차를 따르지만 이러한 집행과정들 또한 국제법에 위배된다.<sup>27)</sup> 증언과 영상자료들에 의하면 즉결심판 후에 처형이 이루어지는데, 피고들은 군중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끌려 나와 발언권도 주어지지 않은 채 공개적으로 처형당한다. 사법부에서 항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충분한 메커니즘도 결핍되어 있다.<sup>28)</sup>
21. 권고: “합법적이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사법부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와 입법 그리고 사법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모든 범죄자들의 정당한 재판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부에 관련된 전문가들은 국제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 신앙 및 믿음의 자유<sup>29)</sup>

22. 북한 헌법<sup>30)</sup>에서 보장된 종교자유의 존중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탄압은 혹독하다. 특히 기독교인에 대한 대우는 혹독하여, 이들에게는 심각한 학대와 처형이 처해지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 이러한 대우는 명백히 집단학살의 목적과 실행을 보여주는 것이다.

---

24) As required by ICCPR( ICCPR로부터 요구되는 바와 같이), Article (조항) 14 (1)

25) CSW Report p17 참조

26) CSW Report Pp24-25 참조

27) ICCPR, Article (조항) 14

28) ICCPR, Article 14 (6) 위반

29) CSW Report p52 참조

30) Article(조항) 68: “Citizens have freedom of religious beliefs”(시민들에게는 종교적인 믿음의 자유가 있다)

23. 최근 북한정부는 엄격한 규제<sup>31)</sup>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감독 하에 운영되는 몇몇 종교단체를 만들고 적은 수의 종교행사를 허락하면서, 더 나은 종교자유를 증명하려고 공공연하게 시도해왔다. 국가가 통제하는 종교단체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 받은 진실된 신도들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 신앙심을 자유롭게 따를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에 그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

24. 권고: 북한당국은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종교와 양심 및 사상의 자유에 관련된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이것은 국가의 정책과 그 이행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ICCPR 제18조에 따라 모든 형태의 차별을 막고 근절시키는 적합한 조치들이 행해져야 한다. 사회 전반에 걸쳐 종교에 대한 관용과 대화가 장려되어야 한다.

#### 이주민, 난민, 망명희망자들<sup>32)</sup>

25. 북한 헌법의 제233조는 정부의 허락 없이 국경을 넘는 것을 범죄로 간주한다.<sup>33)</sup> 그러나 식량난과 경제적 궁핍, 계층에 따른 차별, 그리고 정치탄압은 현재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추산되는 주민들을 북한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들었다. 체포전담반이 국경 반대편의 중국의 협조로 도주자들을 찾아서 강제송환하기 위해 파견되었다.<sup>34)</sup> 송환된 자들은 심문과 학대, 고문, 그리고 최악의 경우 장기간 투옥이나 처형에 처해진다. 많은 증언들에 의하면 중국에서 임신하여 강제송환된 여성들은 강제낙태와 영아살해에 직면한다.<sup>35)</sup>

26. 권고: 북한당국은 어느 누구도 국경을 넘는 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그 정책과 이행을 바꾸어야 한다. 희생자들을 처벌하기 보다는 난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31) 그 종교단체들은 한국기독교연합, 한국불교연합, 한국천주교연맹, 한국 천도교연맹 그리고 한국정교회연맹이다.

32) CSW Report p23

33) ICCPR, Article(조항) 12 위반

34) Contravening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 Article 33 1951년 망명자들에 관한 조약에서의 조항 33 위반; 그리고 고문방지협약 조항 3 위반

35) Paragraph(문단) 13 참조

##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검토(UPR) 제6차 회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NGO 보고서

2009년 11/ 12월

### 1. 소개

본 보고서는 북한 아동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룬다.

- 가족배경에 따른 북한의 차별정책과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계급제도
-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장벽과 직업선택 자유의 결핍
- 청소년 사법정의와 구류

### 2. 북한의 현대판 카스트 제도

1970년 북한은 가족배경 및 출신 성분에 대한 감시를 기반으로 한 차별을 타국의 카스트 제도와 유사한 법체로 제도화하였다. 그리고 이는 북한 아동의 복지와 그들의 교육 및 직업과 관련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차별제도를 도입하여 북한 사회를 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의 3개 계층과 52개 부류로 분류하였다. 2007년 인민보안성에서발간한비밀문건에관한한국언론소식통에따르면, 유럽에서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후 1991년에 이에 대한 보완수정이 있어 부류가 56개로 확대되었다는 증거가 있다. 주민들의 정치적 혹은 종교적 성향이 주요 차별 지표가 된다.

이러한 계급제도는 모든 북한 주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 ‘좋은’ 인민과 ‘나쁜’ 인민이라는 차이를 만들어 식량, 의료, 대학교육 및 직업에 대한 접근성의 측면에서 큰 사회적 간극을 낳고 있다. 모든 북한 주민은 이러한 제도를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의 신상명세서에 부정적인 기록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다. 그러나 신상명세서는 비밀에 부쳐져 있고 북한 주민이 이를 열람하거나 재판 또는 배상을 추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가족의 과오는 그대로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데, 이는 북한이 가입한 아동권리협약(CRC),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ESCR)이 규정하고 있는 비차별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이 1987년 유엔에 가입한 이후에도 이러한 차별제도의 수정이 이루어져왔고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제거되지 않았다.

북한의 이러한 계급제도는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UN 산하 기관들과 관련 국가들은 북한에 실재하는 관련 차별 조항들의 전말을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특히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법적 문서와 시행 법규들을 유엔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북한의 계급제도가 존재하는 한 유엔 기구를 통한 어떠한 권고도 효과적이거나 온전히 실행되지 못할 것이다.

### 3. 진학과 직업선택에 대한 체제적 장벽

북한의 차별적인 계급제도는 하위 계층이나 부류에 속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주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한다고 해도 대학 진학 기회가 배제된다는 사실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진학 전망이 어둡고 한번 짝한 하위 계급 낙인을 극복한 길이 없다 보니 아동과 학부모 모두가 교육은 불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장애를 뛰어넘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탈북아동들은 특수직업전문학교 입학 역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부모의 직업이나 집안 배경에 좌우되고 관련당국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시 말해, 어린 학생들은 그들의 재능과 능력, 학업 성적과 상관없이 그들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을 것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최고 부류에 속한 가정의 자녀들만이 학업 성적과 관계없이 자유로이 진학을 결정하고 선망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계급적 낙인은 지역적 불균형과 학교에서의 아동의 대우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권층에 속한 이들은 평양이나 여타 특별 주거 지역에 거주하고 이들을 북한당국이 중

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일류 학교를 다니며 잡부금을 내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을 하지도 않는다.

이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학교 출석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가령, 학교 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과도할 정도로 많은 잡부금이 부과되고 국영 농장 운영 혹은 교사나 학교 관리자 등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학생 노동 착취도 존재한다. 북한의 법정 최소노동연령은 16세로 되어 있고, 과거 북한 대변인이 UN 아동권리위원회에 미성년 노동이 북한에서 근절되었다고 보고한 것과는 달리 북한의 아동은 중학교에 입학하는 12세부터 그들은 농사일에 동원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극빈에 시달리고 있는 함흥북도 지역, 특히 온성과 경원 지역에서는 8, 9세에 정도의 어린 아동까지 동원되고 있다. 일 년 내내 이들은 토끼 사육이나 조약돌 수집과 같은 가벼운 ‘숙제’를 부여 받을 뿐 아니라 홍수피해 복구 작업, 건설공사, 우물 파기, 철도 유지보수, 그리고 도로포장 같은 중노동에도 동원되고 있다.

계급 낙인으로 인해 이미 낙후된 사회경제적 상황 하에 처해 있는 가정의 아동과 부모들에게 강제노동과 잡부금으로 인한 과도한 부담은 이러한 아동의 높은 자퇴를 야기하고 있다. (평양과 몇몇 특권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균 60-80%의 자퇴율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평양을 포함한 몇몇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문맹률이 증가하고 북한 어린이의 전반적인 학업성취도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거의 100%에 달하는 취학 및 졸업의 근거와 신빙성 대해 북한당국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북한 아동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수업을 빼먹은 아이들이 자동으로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거나 학년말에 졸업하게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를 통해 북한당국은 북한 내 현실과는 동떨어진 높은 취학률 및 졸업율을 문서상으로 보여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를 불신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현 교육제도에 환멸을 느낀 많은 학생들이 학업이나 진학을 거부하고 있다. 이 염려스러운 현상은 이미 몇몇 지역에서 확인되었으며, 이제는 광범위한 사회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 결과 국제 사회는 북한 아동에게 좋은 음식이나 학용품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북한 아동의 출석률 증가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의 교육정책과 북한 학교의 현실 이면에 북한당국과 해결해야 할 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 4. 아동의 권리와 자유의 침해. 청소년 사법정의와 고문

1990년 대 이후 가족배경 및 출신 성분에 대한 감시를 기반으로 한 차별은 국경을 넘어 중국 등 타국으로 탈출 했거나 그러한 전력이 있는 자들의 가족 혹은 그들의 자녀에 대한 북한당국의 감시와 함께 이루어져 왔다. 몇몇 어린이들은 감시를 피하기 위해 집을 버리고 깊은 산 속이나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친척 집에 숨어야 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어린이들은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탈북이나 소위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로 온 가족이 먼 산악지방으로 추방당하는 고통을 겪기도 했다.

북한당국이 제시한 보고서들은 국가보위부 혹은 인민보안성 같은 국가조사기관에 의해서나 여러 구류 시설에서 어린이에게 자행되는 고문이나 학대 상황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하여 이러한 기관들에게 부여된 역할이나 능력 그리고 실제적인 권한의 범위에 관해 북한당국에 질문할 것을 권고한다.

북한 내 고문에 관한 2007년의 보고서에서 인터뷰를 한 20명의 아동 중 다섯 명이 1998년과 2003년 사이에 고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정치 범죄나 경범죄를 자백시키기 위해 아동을 고문한 것이 밝혀졌다. 자의적인 징역연장, 극심한 기아, 그리고 열악한 감옥 환경 역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고문과 비인간적인 대우의 요소로 강조되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이후 다행스럽게도 몇몇 관련 절차가 완화되었지만, 사실은 오히려 더욱 더 난해해져 버렸다. 타국으로 탈북했다가 송환된 아동은 좀 더 짧고 간소화된 조사를 받은 후, ‘사회적 교양처분’에 처해지는데 이 용어는 아직 정확히 정의되지 않아 임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2005년과 2006년에 함경북도에서의 두 가지 예는 ‘사회적 교양처분’이 교사들의 구타와 같은 처벌로 이행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양처분에 처해진 학생은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함경도 소재의 조사기관들이 구타를 가한다는 사실도 여러 사건을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사형을 언도 받은 어린이들과 전선을 훔친 죄로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진 11살짜리 어린이들에 대한 보고도 있다.

아동에 대한 잘못된 대우 때문에 법적 구제나 배상 절차를 밟았다는 기록은 그 어느 보고서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아마도 이들이 실제로 이러한 절차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게다가 북한당국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공개처형에 어린이들을 강제 참여하

게 한 사실도 언급되어야 한다.

부모가 없거나, 주소가 불명하거나, 신상기록이 말소되거나, 국가에 의해 부모로부터 강제적으로 분리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어진 보호시설들은 보호시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구금시설에 가깝다. 그곳의 아이들은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관리소)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그 부모들과 동반하여 들어온 아동과 관련하여 독립된 권고가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교도시설에 감금된 이들은 시민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정치범’ 부류에 속하게 되어 북한당국의 통계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교육이나 의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고역에 이용된다는 것이 보고됐다. 특별사면이나 탈출 같은 매우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어린 수감자들은 이러한 시설에서 죽게 된다.

# 보편적정례검토 실무그룹의 보고서 초안







총 회

배포  
한정

A/HRC/WG.6/6/L.12  
2009년 12월 9일

원본: 영어

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검토(UPR) 실무그룹  
제6차 회기  
제네바, 2009년 11월 30일 - 12월 11일

편집 전(前) 보고서

<번역: (사)북한인권시민연합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보편적정례검토 실무그룹의 보고서 초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서론

1. 2007년 6월 18일에 유엔인권이사회 결의 5/1에 의거하여 설립된 보편적정례검토(UPR)의 실무그룹은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제6차 회기를 가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에 대한 검토는 2009년 12월 7일 제11차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북한의 대표단장은 리철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가 맡았다. 2009년 12월 9일 열린 제16차 회의에서 실무그룹은 북한에 대한 본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 최종 보고서는 문서번호 A/HRC/13/13으로 간행될 예정이다. 본 보고서의 부록은 제출된 그대로 회람된다.

2. 2009년 9월 7일에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검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멕시코, 노르웨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보고그룹(트로이카)으로 선정하였다.
3. 결의안 5/1의 부속서 제15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문서들이 북한에 대한 검토를 위해 간행되었다:
  - (a) 제15(a)항에 의거하여 작성/제출된 국가보고서(A/HRC/WG.6/6/PRK/1);
  - (b) 제15(b)항에 의거하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준비한 취합보고서 (A/HRC/WG.6/6/PRK/2);
  - (c) 제15(c)항에 의거하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준비한 요약문 (A/HRC/WG.6/6/PRK/3).
4. 아르헨티나, 캐나다, 체코 공화국, 덴마크,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일본, 라트비아, 노르웨이, 대한민국,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에 의해 사전에 준비된 질문 목록은 트로이카를 통해 북한에 전달되었다. 이 질문들은 UPR의 엑스트라넷에서 열람가능하다.

## I. 검토 과정 진행과정에 대한 요약

### A. 검토대상국의 발표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인권이사회 정례인권검토의 제6차 회기에 참가하게 된 이번 기회를 기쁘게 생각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해마다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이 진정한 인권과는 관계가 없는 목적과 동기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상정·논의 되고 있고, 그에 따라 부당한 결의가 강행·채택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도, 접수도 하지 않으며 인권의 정치화와 선택성, 이중기준의 극치로 단호히 전면배격한다.
6. 그러나 우리는 사상과 제도, 문화와 전통이 각이한 모든 유엔회원국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UPR의 제도를 중시하며, 그것이 인권 분야에서 나라들 사이의 이해를 깊이하고 세계적인 인권 보호·증진 노력을 추동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번 UPR에 참가하였다. 때문에 우리는 본 회의가 우리 인민 자신이 선택한 인권 이념과 정책, 그리고 인권 실상에 대하여 국제사회도 협력적인 자세에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한다.

7. 공화국은 시종일관 인권을 우선시하고 유엔헌장과 국제인권협약들을 존중하는 정책을 견지하여 오고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공화국의 역사는 인민들의 참다운 인권을 옹호, 고수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8. 우리나라가 1945년에 일제의 군사적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직후, 우리 인민정권은 민주주의적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토지개혁법령, 산업국유화법령, 노동법령, 남녀평등화법령 등 민주주의적 법령들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민주 선거를 실시하였다.
9. 해방된 때로부터 5년 밖에 안 되는 우리 공화국이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3년간의 전쟁에서 자기의 제도와 존엄을 수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참다운 인권 보장 제도를 지키려는 우리 인민의 희생적인 투쟁의 결과였다. 공화국은 전쟁 후 모든 것이 파괴되어 영락(零落)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쟁 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공화국 정부는 전쟁의 불길 속에서도 인민들의 생활 안정과 인권 보장의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전재민 구호대책들을 비롯하여 제반 인권 보장 시책들을 실시하였다.
10. 공화국 정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분야에서의 인권향유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 나라의 경제력과 인민 생활에서 일대 전성기를 펼쳐놓았다. 그러나 1990년대 초에 사회주의 시장이 없어지고 1990년대 중엽부터 수년간 자연 재해가 계속된 것은 인민들의 경제·문화적 권리 향유의 전반에 커다란 부정적 후과를 초래하였다.
11. 엄습해온 경제적 난관과 때를 같이 하여 극도에 달해 있던 적대세력의 군사적 압력과 침략 위협은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자주적인 삶을 지키는가, 노예로 전락하는가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하였다. 행복하였던 지난 연대들의 귀중한 체험을 되새기면서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 영도를 높이 받들고 불굴의 투쟁을 벌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공화국은 참다운 인권 제도를 튼튼히 보위할 수 있는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가지게 되었다.
12. 오늘 우리 인민은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자기 경제의 사회·문화적 권리 향유의 실질적인 담보를 자기 손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경제 강국 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으며 모든 분야에서 경이적인 기적들을 연이어 창조하고 있다.

13.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위대한 주체 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우리 공화국에서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 인텔리 등을 비롯한 근로하는 인민에게 있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공화국의 법률제도는 인민들의 민주주의 권리와 의무들,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담보하는 조약과 수단, 방법들까지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14. 매 개인이 권리 향유자가 되고 국가가 권리 보장의 의무자로 되는 바로 여기에 우리나라 인권보장제도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있다.
15. 공화국 정부는 가까운 앞날에 인민들이 보다 유족하고 문명화된 생활, 인권과 기본 자유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향유하도록 하기 위한 확고한 물질적 담보를 마련할 것이다.
16. 대표단은 이번 UPR이 우리나라의 인권 실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리라 확신하면서 건설적이며 진지한 자세로 심의에 참가할 것이다.

## B. 상호간 대화와 검토대상국의 답변

17. 52개국이 상호 대화에 참가하였다.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건강, 교육, 성평등 분야에서의 많은 성취들을 인정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와의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결정과 UPR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북한의 결정은 환영받았다. 북한정부가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목표(MDG)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장려되었다. 1990년대 연속적으로 북한에 닥친 수많은 자연재해는 인명 손실에 더하여 경제 상황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상호 대화시간에 이루어진 권고사항들은 본 보고서의 제2장에 수록되었다.
18. 브라질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어서 내부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브라질은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사형 집행과 식량 분배에서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였다. 브라질은 북한당국이 일본인 피납 문제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재실시할 것과 일본당국과의 대화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였다.
19. 일본은 아동권리위원회와의 대화에 참여하고 아동의 보건 상태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엔아동기금(UNICEF)과 협력하는 등 북한이 취한 긍정적인 조치들



에 대해 주목하였다. 일본은 해외로부터 북한으로 강제로 추방당하거나 돌아간 주민들에 대한 처벌, 공개 처형, 납치 문제, 구금시설들에서의 문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우려사항들에 대해 북한이 충분히 응답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일본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우려하였다.

20. 대한민국은 북한이 아동권리위원회에 참여하고,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한다고 헌법에 명시한 최근 북한의 긍정적인 노력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정치범수용소에서의 구금, 이동·표현·사상·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 법조문상의 인권에 대한 인정과 실제 이행 간의 격차, 이산가족들과 전쟁포로들, 납북자들의 상황에 여전히 우려한다고 언급하였다.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하여 당사국이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과 같은 인권조약들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내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인권과 기본 자유를 일반대중이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민국은 북한정부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제공하는 기술적 지원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권하였다.
21. 쿠바는 특별보고관제도와 북한에 대한 정치적 조작으로는 협력과 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쿠바는 북한이 개발도상국이고, 제국주의적 공세정책의 희생자이며,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있고, 평등과 사회정의를 보장하는 사회주의적이고 공명정대한 사회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쿠바는 그 중에서도 전반적 무상치료제의 존재와 문맹 퇴치, 누구에게나 교육에 대한 접근권을 부요하고 있음을 특히 강조하였다.
22. 미국은 비사법 처형, 고문, 적법절차의 체계적 박탈 및 강제노동에 관해 보고되고 있는 내용들을 우려하였다. 미국은 북한이 인권침해에 대한 주장을 다룰 구체적이나 투명한 책임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보고되고 있다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미국은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북한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23. 벨기에는 최근 북한이 헌법에 인권을 포함한 것에 주목하였으나, 정치범들의 상황과 수감 환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였다. 벨기에는 특히 정치범수용소 내에서의 인

도적 수감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통제메커니즘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벨기에는 식량부족에 대응하여 어떠한 특별 대책이 취해졌는지 질의하였다.

24. 알제리는 주체의 개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였다. 알제리는 모든 이의 기초 교육을 위한 새천년개발목표(MDG)의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북한정부의 교육권 증진 노력을 환영하였다. 알제리는 자연 재해와 기근으로 인해 아동들이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것을 포함하여 식량권 실현에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지원을 할 것을 호소하였다.
25. 베네수엘라 는 전반적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소학교와 중학교에서의 아동 출석률은 100퍼센트에 달하는 지표를 보이며, 이는 북한 내 문맹을 완전히 근절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26. 파키스탄은 북한이 주요 인권조약들의 당사국이며 북한 헌법에서 인권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파키스탄은 북한의 보건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보장하는 제도, 인권교육에 대한 강한 강조, 협력적 대화를 통한 국제 인권 협력에 대한 공약을 높이 평가하였다.
27. 벨로루시는 물질적·문화적 복지의 진보적 실현을 성취하기 위한 북한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벨로루시는 의료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벨로루시는 북한이 자국의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28. 터키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에 가입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포함한 특별 절차에 협력하는 것이 북한당국이 몇 가지 결점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터키는 북한이 유엔 기구들과 그 밖의 인도주의 활동주체들에게 자유롭고 완전한 접근권을 제공할 것을 권한 유엔사무총장의 권고에 동의하면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적 지원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북한의 입장을 질의하였다.
29. 말레이시아는 2012년까지 진보적이고 변영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북한의 결연한 노력을 격려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국가의 전반적 인권 상황의 개선과 관련하여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늘릴 것을 권하였다.

30. 시리아는 모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완전한 전반적 무상 치료제 및 교육제도와 남녀평등법은 북한에 대한 불법적 제재가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올바른 경로상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언급하였다.
31. 태국은 헌법이 인권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고, 북한이 특정 그룹들을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국내법과 정책들을 채택해왔으며, 의료보건과 교육은 사회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언급하였다. 태국은 북한이 자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인권과 인도적 우려사항들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권하였다.
32. 프랑스는 북한을 떠나려고 시도한 사람들에게 형사적 처벌을 가하고 있는 이유들과 지난 3년 동안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된 인원수에 대해 질의하였다. 프랑스는 북한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투옥된 인원수에 대해 질의하였다. 프랑스는 모든 주민들에게 식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대하였다.
33. 호주는 북한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 참여, 2008-2010 장애인을 위한 노동 프로그램의 초안 작성, 그리고 유엔인구기금(UNFPA)과의 협력을 긍정적 발전으로 주목하였다. 그러나 북한정부가 많은 측면들에서 그 밖의 유엔제도와 국제사회로의 참여를 거절한 것은 여전히 실망스럽다고 언급하였다.
34. 스리랑카는 북한이 국가보고서에 언급한 인권의 네 가지 고유의 성격에 대해 질의하였고, 상호 존중을 기초로 한 국제메커니즘과 국내적 필요성 및 이해는 북한이 계속해서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환경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35. 미얀마는 2012년까지 경제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북한의 노력을 환영하였다. 미얀마는 교육과 건강권을 보장함에 있어서의 실질적 진전을 칭찬하였다. 미얀마는 의료진을 훈련하는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공유할 것을 권하였다.
36. 니카라과는 인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북한의 법적, 제도적 틀에 대해 강조하였다. 니카라과는 북한이 유엔헌장과 국제인권조약들에 명시된 원칙들을 준수하는 가운데,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독려하였다.

37. 영국은 이해관계자들의 보고서에서 제기된 심각한 인권 문제들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영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고문의 금지, 그리고 의약품 부족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38. 리비아는 북한 헌법이 인권존중과 이를 위한 방안의 필요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국가보고서에서 모두를 위한 평등과 존엄성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39. 멕시코는 경제악화, 자연재해, 식량부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건, 교육, 그리고 고용에서의 성평등의 향상을 인정하였다. 멕시코는 강제 실종 및 납치와 관련된 혐의에 관하여 후속적으로 채택된 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40. 이란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분야에 특별히 취해진 조치들에 주목하였고, 북한정부가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한 것을 격려했다. 이란은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 적절한 식량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도와줄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이란은 여성과 아동의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도 주목된다고 하였다.
41. 북한 대표단은 공화국 헌법 제67조에 공민은 언론·출판·집회·시위·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과 사회단체들의 자유로운 활동 조건을 보장한다고 언급하였다. 집회와 시위는 해당법과 규정에 규제된 대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 비폭력적인 것이라면 그 내용과 형식에는 관계없이 허용되고 보장된다고 언급하였다.
42. 견해·의사표시의 자유도 헌법적 권리이다. 어느 공무원이나 법집행관도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해할 수 없고, 조금이라도 제한하거나 박해하면 사람들 속에서 비난과 비판을 받으며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북한 대표단은 언급하였다.
43. 헌법 제68조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며 이 원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고 규제하고 있다. 국가는 모든 종교에 대하여 다 같이 평등하게 대해주고 있고, 종교건물의 건설과 운영, 종교단체들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자기 신념에 따라 어떤 종교든지 자유로이 믿을 수 있다고 북한 대표단은 언급하였다.
44. 주민들을 계층별로 분류하고 차별한다는 문제에 대해, 헌법 제65조에서 공민은 국

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하고 있다. 주민들을 여러 부류로 나누고 차별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물질·문화생활에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특권을 가진 사람이 따로 없다고 북한 대표단은 언급하였다.

45. “정치범수용소”의 문제에 대해, 대표단은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가 될 수가 없고, 사상과 정치적 견해는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북한에는 정치범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으며 정치범 수용소도 없다고 북한 대표단은 언급하였다. 북한에도 범죄자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 감옥이라고 부르는 교화소가 있으며, 반국가범죄를 비롯하여 형법에 규제되어있는 범죄를 범하여 노동교화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인민보안기관이 관리하는 교화소에서, 그리고 경한 범죄를 범하여 노동단련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사회와 격리되지 않은 해당 지역의 노동 현장에서 형을 집행하게 되어있다고 언급하였다.
46. 선군정치와 식량권 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향유에 대해, 나라가 처한 특수한 환경으로부터 국가의 최고 이익을 지키고 인민의 생명안정과 복리를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해 선군정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북한 대표단은 언급하였다. 선군정치는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지켜줄 뿐 아니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47. 정부가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하여 취하고 있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대표단은 국토의 80%가 산지로써 경지 면적이 제한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게다가 지난 여러 해 동안 지속된 자연재해로 인하여 식량 문제 해결에서 일정한 여러 난관들이 있었고, 정부는 식량문제의 해결에 최우선권을 부여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등 그 해결에 큰 힘을 넣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지난 시기에 여러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이 북한에 제공한 식량지원은 식량문제해결을 위한 인민의 노력을 많이 고무하여 주었고, 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나라의 전망적 식량수요를 자체로 충족시켜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48. 협조기구들의 현장접근문제에 대하여, 북한 대표단은 “접근 없이는 지원도 없다(no access, no aid)”라는 원칙은 유엔산하기구 및 전문기구들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협조에서 공인된 보편적 원칙이라고 언급하였다. 공화국 정부는 이 원칙에 따라 협조기구들의 현장 접근을 비롯한 충분한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49. 특별보고관과 그 밖의 국제인권기구들과의 협력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년 선별적으로 상정, 논의되고 있고, 이에 따라 부정한 “결의”가 채택되고 있으며, “결의”에 의해 임명된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또한 계속해서 왜곡된 정보에 기반을 두어 북한의 체제와 정책을 비난하는 보고서들을 계속해서 제출하고 있다고 북한 대표단은 언급하였다. 앞서 언급한 이유들로 인하여, 북한은 “결의”를 완전히 배격하고 특별보고관의 어떠한 의무도 인정하지 않으며, 북한은 앞으로도 모순되는 “결의”와 인권의 정치화를 거부하고, 참된 대화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북한은 충실하게 국제인권조약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며, 따라서 인민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권과 기본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50. 북한 대표단은 국제인권조약들의 가입과 관련하여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인권의 장에서 북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선택성과 이중기준이면서도, 북한이 국제인권조약들의 목적과 요구에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북한이 아직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을 포함한 여러 인권조약들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 조약들의 요구사항들은 국내법에 반영되어 이행되고 있고, 일단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적절한 조건과 상황이 제공되면, 북한은 어떠한 요구 없이도 자발적으로 협약들과 그 의정서들에 가입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51. 베트남은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의 권리 보호와 건강 및 교육에 대한 보장을 위한 노력을 인정하였다. 베트남은 북한이 인도주의 문제와 농업 개발, 식량안보 보장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과 관련하여 베트남의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52. 중국은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헌법과 법률들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중국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 북한의 여러 기관의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하였다. 북한은 양질의 교육제도와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 전략들은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것이며, 중국은 북한에 인도주의적 개발 원조를 제공하고, 경제 개발과 인민생활 증진을 위한 북한정부의 노력을 지지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였다.
53. 짐바브웨는 생활수준의 전반적 향상을 위한 진전에 주목하였다. 북한은 주로 세계경제 및 정치적 요인들로 인해 몇몇의 권리들에 대한 보장을 이행하는데 있어 많은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였다.

54. 이스라엘은 북한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적 공약을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55. 인도네시아는 북한정부가 그 밖의 주요 인권조약들에 가입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북한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납치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이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법적으로 응당하게 고려할 것을 촉구하였다.
56. 노르웨이는 성평등, 아동권, 법률개정에 대한 노력을 인정하였다. 노르웨이는 아동들이 사회적 출신에 기초하여 차별 당한다는 것에 주목하였고, 국가가 적법절차에 의거하지 않은 활동들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였다. 노르웨이는 북한이 몇몇 국제조약의 당사국이라는 것에 높이 평가하였고, 의사·표현·결사·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노르웨이는 법률개정, 식량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의 불평등, 구금시설 방문 허용, 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처우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57. 슬로베니아는 인권조약의 비준, 학교·직장·법적 공동체 내에서의 인권교육 계획, 판사 및 법집행관들을 위한 인권훈련, 교육·식량·보건·직업·결혼·당원의 기회에 있어서 아동의 출신 배경으로 인한 영향, 강제낙태의 폐지를 위한 조치, 감옥 환경의 개선을 위한 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58. 카타르는 북한이 여러 인권조약의 당사국인 것에 주목하였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더욱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카타르는 인권, 특히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게 될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하였다.
59. 예멘은 입법을 통한 성평등, 특히 여성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무료교육, 직장에서 여성을 위한 특별서비스의 제공을 달성하기 위한 북한의 정치적 의지에 주목하였다.
60. 오스트리아는 북한이 당사국인 조약상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질의하였다. 오스트리아는 정치적 반체제인사들의 실종과 관련하여 보고된 많은 사례들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61. 독일은 실종자와 이산가족의 상봉 문제를 포함해 전쟁(1950-1953년)의 결과들과 관련하여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촉구했던 조치들을 북한이 어떻게 따랐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62. 캐나다는 북한이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강조한 것에 주목하였고, 최근 헌법 개정을 환영하였다. 캐나다는 북한에서의 기본적 자유의 전반적 부족과 인도적 상황, 특히 만성적 식량부족과 안전한 식수에 대한 불충분한 접근상황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63. 네덜란드는 구금시의 비인도적인 환경, 공개처형, 비사법 및 자의적 구금, 적법절차의 부재, 정치적 및 종교적 이유에 대한 사형 부과 등을 포함한 고문의 사용이 보고되고 있다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64. 칠레는 공공장소 및 구금시설들에서 행해지는 비사법 처형, 교육권에 대한 접근기회에 있어서의 차별, 강제노동 및 여성에 대한 폭력이 보고되고 있다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칠레는 납치와 개개인의 강제실종 문제에 관하여 우려하였다.
65. 라오스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 식량안보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진전에 주목하였다. 라오스는 북한정부가 빈곤의 근절과 식량안보의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계속 완수해나갈 것을 기대하였다.
66. 스웨덴은 북한이 아동의 건강과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유엔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WHO)와 협력한 것에 주목하였다. 스웨덴은 강제노동, 정보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뒷발 경작의 제한에 관해 보고되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였다.
67. 이탈리아는 공개처형, 비사법 처형, 종교 활동의 박해에 대하여 보고되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이탈리아는 법적으로 강제 또는 강압적 노동을 금지하고 아동 노동을 범죄시하고 있지만 매우 자주 아동과 관련된 강제노동이 보고되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68. 아일랜드는 북한에서 사람들이 인권침해에 의해 고통 받는 정도가 진정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은 이러한 문제에 깊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일랜드는 사법사안의 행정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고, 종교 활동에 대한 박해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69. 인도는 조약기구들이 북한의 11년제 무상의무교육제와 1차 의료보건 전략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한 점에 주목하였다. 인도는 교육의 질, 영양실조가 아동들에게 미



치는 심각한 영향, 식량 접근에 있어서의 부족과 불평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인도는 국가인권기구(NHRI)의 설립에 관한 계획, 해외여행 통제를 완화할 것, 이산 가족의 정기적 상봉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70. 폴란드는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하였다. 폴란드는 과잉의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많은 수의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형사 사법체계에 의해 부과되는 강제노동의 광범위한 사용 및 가혹한 수감환경에 대해 언급하였다.
71. 뉴질랜드는 종교·표현·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생활에 대한 권리, 정보에의 동등한 접근, 공무수행에 참여할 권리가 제한되는 데 대해 우려하였다. 노동수용소의 상황, 반체제인사와 그 가족에 대한 구금과 공개처형을 비롯한 고문의 지속적 사용이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언급하였다. 뉴질랜드는 북한에 대하여 인권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72. 팔레스타인은 북한의 헌법이 모든 주민들에게 인권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고 일반 대중이 인권에 대한 지식이 높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팔레스타인은 의료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보장하는 제도와 긍정적 대화를 통해 인권에 관해 국제적으로 협력할 것을 북한이 공약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73. 필리핀은 교육부문의 성과와 경제·정치·사회·문화적 생활에서의 여성의 참여에 주목하였다. 필리핀은 성평등과 여성권을 증진하고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74. 나이지리아는 북한의 헌법이 인권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하였다. 나이지리아는 제기되고 있는 인권침해 사안들에 대해 우려하였고, 북한 정부가 이를 해결할 것을 기대하였다. 나이지리아는 북한정부로 하여금 인권의 완전한 향유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직접 개입하기 시작할 것을 지지하였다.
75. 스페인은 북한정부가 체계적인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어떠한 중요한 대책도 취하지 않았다고 유엔사무총장이 우려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스페인은 더 이상은 학교에서 아동들이 이른 시기부터 군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76. 리투아니아는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인권 관련 국제기구들과 협력하며,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형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77. 그리스는 여성의 권리 보장,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해결, 주민들에 대한 보장 대책,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세계식량계획(WFP)에 대한 접근권 허용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78. 스위스는 북한정부에 대하여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인권침해를 종식시키며,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을 기소할 것을 촉구하였다. 스위스는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북한에 권하였다. 스위스는 이동의 자유의 제한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국가의 배급제도가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적절히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79. 헝가리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유엔메커니즘과의 협력 계획에 대해 질의하였다. 헝가리는 종교·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정보접근의 권리,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헝가리는 북한이 여러 조약기구들로부터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데 실패했다고 간주하였고, 이산가족 상봉 절차가 중단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80. 북한 대표단은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관련하여 인권 옹호 및 보장과 관련된 주된 사업은 인민정권기관인 각급 인민위원회들이 실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신소청원의 처리사업도 인민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이고, 지금까지 인민정권기관들의 인권보장 기능을 보면, 파리원칙이 내세운 요구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인민들의 인권의 보호·증진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견지에서, 또 북한의 구체적인 현실과 인민의 요구에 비추어 독자적인 인권기구 수립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81. 북남사이의 흠어진 가족문제와 전쟁포로 문제(납북자 문제)에 관하여, 공화국 정부는 외세에 의한 국토 분단으로 흠어진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기 위하여 시종일관 성의 있는 노력을 주동적으로 해왔다고 북한 대표단은 언급하였다. 특히 2000년 6월 15일, 북남 최고위급 상봉이 있은 후 오늘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흠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과 화상상봉이 진행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지난 세기 여러 차례 명백히 한 것과 같이 전쟁포로문제는 이미 반세기 전에 정전 협정에 따라 진행된 포로교환 당시에 해결된 문제이고, 이른바 납북자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늘 북과 남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의 해결방도는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충실하고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는데 있다고 언급하였다.

82. 북한 대표단은 영양실조에 걸린 여성과 아동,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에 관한 우려에 대해 설명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 중엽부터 경제적 난관을 겪었고, 이 과정에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비롯한 인민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영양식품의 공급과 합리적인 영양 관리, 적극적인 의료봉사의 제공과 같은 공화국 정부의 실천적 조치들과 노력에 의해 2000년대 초엽부터 북한 인민들의 영양상태가 많이 개선되었으며, 북한의 심각한 영양실조의 문제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밝혔다. 아동들을 소년단, 붉은청년근위대와 같은 준군사조직들에 강제로 가입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북한 대표단은 북한 어린이들의 소년단 조직은 9살부터 13살까지의 유년기 어린이들이 학교 행정 조직의 방조 밑에 수학여행과 견학, 실습을 비롯한 과외활동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자율 조직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런 것을 두고 북한 어린이들을 어린 시기부터 준군사조직에 강제징집해서 훈련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왜곡된 논평이라고 북한 대표단은 언급하였다.
83.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대표단은 일본 총리가 2002년 9월 17일에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북일 평양선언이 채택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이 선언에서 북한측은 그러한 불행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확인하였고, 그 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일본측에 전달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북한은 평양선언의 정신에 입각한 다양한 북일 협정들 하에 그 의무를 충실히 충족시켜왔고, 납북자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이끌어 내었다고 언급하였다.
84. 사법의 독립성 및 공정성 문제에 대해, 사회주의 헌법의 제11조, 제164조, 제166조, 제168조의 체계적인 해석, 내용적인 해석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명백한 인식이 주어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북한 대표단은 언급하였다. 중앙재판소가 최고인민회의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는 것은 사건에 대한 심리 판결, 즉 사법 활동 그 자체에 대해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라, 채용과 인사 관리 및 행정 사업과 같은 사법부분의 행정적인 부분에서 책임을 진다는 뜻이고, 최고인민회의는 사건취급처리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로 개입, 간섭 할 수 없게 되어있다고 언급하였다. 집권당인 조선노동당의 영도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당도 국가 안에 있는 당으로써 헌법 밖에서 활동할 수 없고, 재판기관에 대한 노동당의 지도는 재판활동에서 독자성과 준법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는 지도라고 언급하였다.

85. 고문, 그 밖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해, 북한 대표단은 형법 제253조에서 고문과 같은 비법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심문하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고문, 유도진술과 같은 강압적, 회유적인 방법으로 범죄사실을 시인하도록 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고, 그렇게 받은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사소한 위반이라도 제기가 되면 그 관리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고 언급하였다. 북한은 인민보안기관들이 교회소와 구류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1990년대 국제사면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국제비정부기구들과 서방나라 인사들이 교회소와 구류장을 참관한 적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86. 난민 발생의 원인과 대책, 비법 출국하였다가 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대표단은 북부 국경지대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법 월경자 문제는 피난민 지위에 관한 1951년도 협약, 1967년도 의정서 조항으로 평가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1990년대 중엽부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경제적 난관과 관련해서 비법 국경 출입 현상이 갑자기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 공화국 정부는 여러 가지 적극적 대책들을 세우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인민정권기관들에서는 생활상 곤란이 있는 인민들을 조사하여 이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한 특별보장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세워오고 있고, 또한 정권기관들에서도 중국 동북 지방에 친척을 두고 있는 주민들의 방문 사업을 그들의 요구에 따라 계획적으로 조직하고 수속하는 사업을 주동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87. 여성인신매매문제에 대해서 북한 대표단은 여성인신매매 방지 및 처벌이라는 국제적 노력을 환영하였다. 북한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고, 금전이득을 추구하는 외부 세력들과 연결되는 경우에 여성인신매매의 현상이 있을 수 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해서 매우 각성을 높이고 있고 사소한 시도에 대해서도 적발, 대책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88. 공개처형에 대해서는, 비공개처형이 원칙이긴 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 즉 흉악범죄 등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범죄에 대하여 그 피해자들의 가족이나 친척의 확인 요청에 따라 한두 건 공개처형한 사례들이 있고, 사형은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된 범죄에만 적용된다고 북한 대표단은 언급하였다.

89. 북한에서 인권이 제도적, 체계적으로 유린된다는 혐의에 대해서, 북한 대표단은 북한의 법과 조항들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북한에서의 인권 유린이 제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왜곡된 사실이나 거짓에 의한 것이고,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악평, 단정적이고 선입견적인 평가는 자신을 키워준 조국을 버린 사람들에게 의해 날조된 것이라고 북한 대표단은 언급하였다.

## II. 결론 및/또는 권고사항

90. 북한은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들을 검토할 것이며,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권고사항들에 대한 북한의 답변은 제13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는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다.

1.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 대한 협약(ILO 협약 제182호),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CERD),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 및 선택의정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CRMW)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을 비준할 것 (칠레)
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고려할 것 (필리핀)
3. 세계인권선언과 북한이 가입한 두 개의 국제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 보장된 원칙과 권리들에 전적으로 부응하도록 할 것 (슬로베니아)
4. 핵심적인 보편적 인권조약들, 특히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과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비준하고 그 의무를 이행할 것 (브라질)
5.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들과 같은 기본적 인권협약들을 비준할 것 (헝가리)
6.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포함하여 남아있는 국제인권조약의 서명/비준을 고려할 것 (나이지리아)

7.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되고, 그 규정에 부합하는 필요한 국가적 조치를 취할 것 (영국)
8.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할 것 (터키)
9.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과 그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폴란드)
10.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할 것을 고려하고 그 주요 협약들, 특히 아동노동과 강제노동과 관련하여 협약 제29호, 제105호, 제182호에 가입하고 이행할 것 (브라질)
11. 국제노동기구와 그 주요 협정들에 가입하고 국제노동기구 담당관이 북한의 노동권 실태를 분석할 수 있도록 아무런 제한 없이 상시 초대할 것 (스페인)
12.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고 주요 협약들, 특히 제105호, 제182호, 제138호에 비준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 담당관이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미국)
13. 모든 주요 국제인권협약들에 서명하는 것을 고려할 것 (파키스탄)
14. 그 밖의 현행 인권조약들의 비준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 (슬로베니아)
15.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및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응하여, 특히 개인의 이동의 자유에 관한 권리와 관련하여 북한정부의 국제적 의무와 호환될 수 있도록 국내 형사상 및 이민에 관한 법률을 검토할 것 (멕시코)
16. 개성공단의 노동법을 개정하고 미성년자의 건강, 안전 혹은 덕성에 유해한 노동에 대한 최저연령을 18세로 규정할 것 (스페인)
17.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취약집단의 존엄성과 더 나은 생활조건을 보장하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검토할 것 (말레이시아)
18.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에 국내법이 조화되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같은 여타의 기본적 인권조약들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것 (알제리)
19. 여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개인에 대해 고발할 수 있는 가정폭력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룰 명확한 법률을 통과시킬 것 (미국)
20. 관리직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수를 늘리고 여성의 권리를 전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 (알제리)
21. 관련 특별보고관들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북한이 가입한 인

- 권조약들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것 (오스트리아)
22. 북한이 약속했던 모든 국제인권 의무를 이행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 (리투아니아)
  23. 북한이 당사국인 협약들의 의무를 이행하고,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사회의 지원을 구할 것 (헝가리)
  24. 향후 법률의 발전에 있어서 전적으로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을 채택할 것 (나이지리아)
  25. 국가인권기구를 창설하고 이 기구의 설립을 위하여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인정을 받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들일 것 (미국)
  26.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국가기구를 강화할 것 (나이지리아)
  27. 교육과 언론캠페인을 통해 보호 프로그램을 만들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며, 예방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특별전문위원회를 창설할 것 (미국)
  28. 국민들이 자주적인 방법으로 선택한 경제적·정치적·사회적 모델을 유지 및 강화하고, 공정하며 더욱 참여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 (쿠바)
  29. 인권분야에서 비정치화, 협력 및 대화의 환경을 달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 (쿠바)
  30.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 (베트남)
  31. 전반적 11년제 무상의무교육제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원배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모두를 위한 교육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을 지속할 것 (베네수엘라)
  32. 가치가 있다고 입증된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전략을 취함으로써 농업생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다각화할 것 (알제리)
  33. 공공안보업무에 있어서 대중의 전적인 참여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사회적·경제적 개발과 산업화 및 현대화를 촉진하고,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할 것 (라오스)
  34. 상호 관심사인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베트남)
  35. 경제발전에 더 중점을 두면서 북한주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지속적으로 증진 및 보호할 것 (스리랑카)
  36. 모든 북한주민들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 및 법집행관들에게 인권훈련을 할 것 (슬로베니아)

37. 역사적·문화적·종교적 배경뿐만 아니라 국가적·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진정한 인권문화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 (이란)
38. 임산보건 증진 전략(2006-2010), AIDS 예방 국가전략(2008-2012), 1차의료 보건전략(2008-2012), 아동복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2001-2010), 장애인을 위한 통합행동계획(2008-2012)의 이행을 통하여 여성, 아동, 장애인의 권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되도록 보장할 것 (시리아)
39. 북한이 당사국인 인권조약의 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 (슬로베니아)
40. 관련 조약기구들에 제출을 지연하고 있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 (파키스탄)
41.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기한을 넘긴 보고서들을 일정에 따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유엔조약기구들과의 협력을 증진할 것 (노르웨이)
42. 특별보고관들 및 그 밖의 유엔인권메커니즘들에 대하여 북한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함으로써 협력할 것 (한국)
43.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하도록 초청하고 특별보고관과 최대한 협력할 것 (이탈리아)
44. 식량권 특별보고관의 방문요청에 동의할 것 (노르웨이)
45. 여성폭력특별보고관과 고문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더욱 광범위한 권고사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을 초청할 것 (미국)
46.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고문특별보고관이 북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모든 인권메커니즘과 전적으로 협력할 것 (벨기에)
47.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들로부터의 방문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유엔인권메커니즘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 (브라질)
48. 북한방문을 요청한 세 명의 주제별 특별보고관들의 접근을 허용할 것 (영국)
49. 특별절차들의 임무수임자들이 국가방문을 요청한 것에 대해 호의적으로 응답하고 특별절차들 및 그 밖의 인권메커니즘과 협력할 것 (슬로베니아)
50. 북한방문을 요청한 특별절차들의 임무수임자들을 초대할 것 (터키)
51. 특별보고관들과 유엔인권최고대표를 포함한 유엔인권메커니즘과의 대화에 협력하고 참여할 것 (일본)
5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제18조에 명시된 국제인권의 무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협력할



것 (아일랜드)

53. 관련 국제인권메커니즘과의 인권대화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협력할 것 (파키스탄)
54. 객관성, 공정성, 비정치화의 원칙에 입각하여 유엔인권이사회의 주제별 특별절차들과 협력을 추구할 것 (짐바브웨)
55. 필요성과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의지와 추진방향을 견지한 가운데, 모든 장애물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제인권메커니즘들과의 협력을 계속하고 인권대화를 강화할 것 (팔레스타인)
56.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아동들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존중하고 보장할 것 (슬로베니아)
57.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아동들이 생명과 발달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스웨덴)
58.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필리핀)
59. 직업, 교육 및 보건분야에서 평등의 원칙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것 (리비아)
60. 모든 아동들에게 학업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저마다의 재능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노르웨이)
61. 국제원조의 분배에 있어서 취약집단에 지속적인 우선순위를 둘 것 (예멘)
62. 법집행관들에 의한 인권침해를 지속적으로 예방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 (벨로루시)
63.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할 것 (벨로루시)
64.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이전의 권고사항들에 맞추어 모든 아동의 생명권과 발달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 (독일)
65.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특정한 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조를 구축할 것 (칠레)
66. 여성과 아동, 특히 취약한 상황에 있는 여성과 아동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것 (리투아니아)
67. 아동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 (브라질)
68.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적 대화와 협력을 포함한 대책을 강화할 것 (필리핀)
69. 인신매매와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중 인식

- 캠페인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말레이시아)
70. 사회 내 법에 대한 존중을 확립하는 목표를 계속 달성해나갈 것 (벨로루시)
  71.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북한 내 모든 구금시설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네덜란드)
  72. 구금중인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노르웨이)
  73. 공정한 재판과 법치에 관한 국제기준들에 대하여 사법부문의 전문가들을 훈련할 것 (스웨덴)
  74.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들이 인도적으로 처우되고,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받도록 보장할 것 (폴란드)
  75. 이산가족들이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서신을 교환하고 상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장할 것 (한국)
  76. 한국과 협력하여 최대한 많은 수의 이산가족의 상봉이 개최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스위스)
  77. 고령자들에게 이산가족 상봉이 1년이나 2년 늦춰진다는 것은 친척들을 만날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산가족상봉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 (헝가리)
  78.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권고하였듯이 이산가족 상봉을 용이하게 할 방안을 채택할 것 (독일)
  79. 시민사회의 단체들을 육성 및 촉진하고 이들의 합법적 지위 획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결사 및 집회의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이스라엘)
  80. 허가 없이 국가를 떠나는 것을 범죄시하지 않고, 최소한 국가 내에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은 허용할 것 (그리스)
  81. 국가를 떠날 권리를 포함하여 이동의 자유에 관한 시민적·사회적 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헝가리)
  82. 허가 없이 여행하는 것을 범죄시하지 않을 것 (스위스)
  83. 결사·표현·종교 혹은 신앙·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존중하도록 보장할 것 (캐나다)
  84.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권을 뒷받침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 (뉴질랜드)
  85.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방법으로서 국가 내에서 국민과 외국인들에게 더 많은 이동의 자유를 허용할 것 (말레이시아)

86. 적절한 경우, 최고인민회의와 기타 의사결정기구들에서 여성대표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고려할 것 (스리랑카)
87. 정치 및 경제 부문 모두에서 여성이 지도적인 위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예산지원과 가시성을 강화할 것 (노르웨이)
88. 주민들이 특히 경제 및 상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 (말레이시아)
89. 모든 주민들이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취할 것 (칠레)
90. 특히 아동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주민들에게 식량권을 보장할 것 (일본)
91. 주민들의 식량권을 보장하고 새천년개발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것 (베트남)
92. 취약집단을 포함하여 사법권 내의 모든 주민들이 적절한 식량, 식수 및 기타 생필품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캐나다)
93. 식량, 의료 및 기타 인도주의적 서비스의 부족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우려사항들을 해결할 것 (필리핀)
94.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식량안보정책을 실행하며, 주민들의 경작과 식량매매에 대한 국가적 규제를 줄일 것 (뉴질랜드)
95. 외부세계의 강제조치에 의해 인권의 증진 및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계속 해결할 것 (이란)
96. 취약집단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국제 인도지원물자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분배되고, 주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할 것 (멕시코)
97. 아동, 임산부,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들에 대한 특별한 도움의 필요성을 유념하여, 식량 및 기타 생필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인도지원 기구들과 기타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이 북한 내 모든 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이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 (스위스)
98.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을 포함한 사회 내 특정집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취약성을 완화하는 견지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 (태국)

99. 영아 및 산모 사망률을 더욱 낮추기 위한 긍정적 조치를 취할 것 (시리아)
100. 의료시설과 의약품 부족으로 인해 악화된 보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이란)
101. 무상보건 프로그램과 무료기초교육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필요한 원조를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 (리비아)
102. 2012년까지의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높은 목표가 인권의 증진 및 보호에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것 (이란)
103. 더 나은 교육의 질을 위해 교육부문에 할당되는 자원을 증가시키고, 당국이 이 부문에서의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 (알제리)
104. 세계식량기구와 같은 국제 인도주의 기구들의 접근을 허용할 것 (네덜란드)
105.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세계식량기구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그리스)
106.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식량이 도달될 수 있도록 세계식량기구에 완전한 접근권을 부여하고,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농업부문 종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경제개혁 등 식량권 증진 방안을 채택할 것 (영국)
107. 식량공급을 위해 필요한 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원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식량권특별보고관과 세계식량기구를 포함한 국제 인도주의 기구들이 아무런 장애 없이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벨기에)
108. 인도주의 기구들이 식량원조를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세계식량기구가 원조의 배분을 감시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할 것 (캐나다)
109. 세계보건기구(WHO)와 보건분야의 국제 NGO들이 더욱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영국)
110.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적 지원 제공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관련된 국가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들과 협력할 것 (멕시코)
111.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제공하는 자문서비스를 받아들일 것. (칠레)
112.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원조기구들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활동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계속 모색할 것 (스리랑카)
113.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 분야에서 역량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국제원조 기구들의

- 회원국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것 (말레이시아)
114. 국가 역량을 구축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인권과 인도주의 사안들에 관련한 유엔 및 유엔메커니즘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 (태국)
115.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국제사회와 유엔과의 협력을 통하여 경제문제 및 자원부족과 관련된 난관들을 극복할 것 (리비아)
116. 비(非)대립적이고 비(非)정치적인 방법으로 인권 관련 국제메커니즘과 기타 국가들과의 건설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구할 것 (짐바브웨)
117. 모든 인도주의적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라오스)

91. 북한은 다음의 권고사항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가입·비준하고, 보안부대와 수감시설의 간수들에 의한 모든 형태의 고문을 근절하기 위한 모든 수감시설에 대한 사법적 감독을 확립하며,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 (오스트리아)
2. 북한이 당사국인 인권조약들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자의적 구금, 노동수용소와 집단적 처벌의 사용을 중단할 것 (캐나다)
3. 북한의 형사사법체계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기타 국제인권 조약의 의무에 일치하도록 국제사회와 노력할 것 (호주)
4.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고 협력하며 방북을 허용할 것 (네덜란드)
5. 최우선 과제로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접근을 허용할 것 (그리스)
6. 우선 조치로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문요청이 빠른 시일 내에, 최상의 조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별보고관의 권고사항들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 (스위스)
7.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식량권특별보고관의 거듭된 방문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특별절차들과 구체적으로 협력할 것 (칠레)
8. 특히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식량권특별보고관의 거듭된 방문요청에 긍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더욱 집중적으로 협력할 것 (스페인)
9.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문요청에 동의할 것 (노르웨이)
10. 유엔인권이사회와 전적으로 협력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문요청을 받아들일 것 (캐나다)
11. 특히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그 밖의 특별보고관들의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개선할 것 (독일)

12. 특히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적 지원 제공에 긍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국제기구 및 각 메커니즘과의 인권 관련 협력을 발전시킬 것 (리투아니아)
13. 북한 내에서의 국제적 식량분배 활동이 발전될 수 있도록 즉각 허용하고, 식량 분배의 우선순위를 아동, 임산부, 장애인, 노인에 두으로써 정부 식량분배상의 차별을 근절할 것 (스페인)
14.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사형집행 일시중지를 확립할 것 (브라질)
15.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사형집행 일시중지를 확립할 것 (칠레)
16. 모든 공개처형과 비사법 처형을 폐지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사형집행 일시중지를 도입할 것 (이탈리아)
17. 공개처형 집행과 종교적 혹은 정치적 범죄에 대한 사형 선고를 종식하기 위해 사형집행 일시중지를 채택할 것 (스페인)
18. 사형으로 처벌하는 범죄의 수를 줄이려는 것에 주목함으로써 차후 사형제도를 폐지할 목적으로 사형집행 일시중지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것 (리투아니아)
19. 모든 공개처형을 중단하고 수감자들이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 (뉴질랜드)
20. 사형제도를 신속하게 폐지하기 위해 사형집행 일시중지를 도입할 것,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가장 심각한 범죄에만 사형제도를 부과하도록 제한하며 아동·임산부·정신질환자들에게 사형제를 부과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국제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존중할 것 (프랑스)
21.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보고하였듯이 북한의 형법에 위반하는 국민에게 겁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공개처형의 실행을 중단하고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해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할 것 (이스라엘)
22. 비사법 공개 및 비밀 처형을 종식시킬 것 (칠레)
23. 비사법 처형과 집단적 처벌의 관행을 즉시 종식시킬 것 (노르웨이)
24. 모든 국적의 국민들에 대한 납치와 강제실종을 종식시킬 것 (칠레)
25. 일본인 납북자를 비롯한 외국인 납북자들의 즉각적인 송환 보장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빨리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잡고,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 (일본)
26. 즉시 공개처형과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혹은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사용을 중단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 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비준할 것 (캐나다)
27.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보고하였듯이 가족에 대한 집단처벌을 포함한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혹은 굴욕적인 처우를 폐지하고,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하였듯이 아동에 대한 고문 및 그 밖의 학대를 금지하는 국가법률을 개정할 것 (이스라엘)
  28. 구금시설에서 고문 및 학대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이행하고 여성 범법자들이 여성간수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남성 범법자들과 분리되도록 할 것 (미국)
  29. 가족에 대한 집단적 처벌, 특히 아동에 대한 처벌을 중단할 것 (슬로베니아)
  30. 아동에 대한 군사훈련을 폐지할 것 (슬로베니아)
  31. 송환자들에 대해 처벌을 가하는 관행을 종식시킬 것 (네덜란드)
  32. 북한에서 인신매매된 사람들에 대한 문제에 특별히 대처하는 법률을 제정·채택하고, 인신매매된 여성과 아동이 불법적으로 국가를 떠났다는 이유로 북한에 송환된 후 처벌되는 모든 관행을 폐지할 것 (이스라엘)
  33. 구금시설 등에서의 강제노동 관행을 중단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고 아동을 동원 계획에 강제참여시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즉시 취할 것 (미국)
  34. 아동노동을 포함한 강제노동의 관행을 중단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할 것 (이탈리아)
  35. 강제노동 관행을 종식시킬 것 (칠레)
  36. 독립적인 사법체계와 개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 (스웨덴)
  37. 법에 의해 설립된 유능하고,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 의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공정한 공개청문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할 것 (아일랜드)
  38. 사법절차에 있어서의 정치적 간섭을 중단할 것 (스웨덴)
  39. 독립적인 사법부를 확립하고 모든 구금자들이 법률적 조언과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오스트리아)
  40. 국가에 의한 정치적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적 사법부를 보장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가 권고하였듯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할 수 있는 헌법상 및 입법상의 조항들을 검토하고 개정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법치의 개념을 존중할 것 (이스라엘)

41. 개인의 견해 또는 평화적·정치적 활동과 관련한 이유로 구금된 이들을 석방할 것 (벨기에)
  42. 반체제인사의 모든 가족 구성원을 구금하는 관행을 종식시키고, 정치범 및 그 가족 구성원을 지체 없이 석방하며,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 (프랑스)
  43. 적용 가능한 국제기준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북한 내에서와 외국으로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즉시 형법을 개정할 것 (프랑스)
  44. 모든 주민들에게 북한 내에서와 외국으로의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난민과 망명자를 포함하여 외국으로부터 추방되거나 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종식시킬 것 (일본)
  45.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종교 집단 및 단체들에 대한 법률을 재검토할 것 (이탈리아)
  46. 종교 활동에 부과된 제한을 철폐하고,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박해와 엄격한 통제를 중단하며, 국내법과 그 이행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전적으로 부응하도록 보장할 것 (폴란드)
  47. 구금시설과 노동수용소에 수감된 이들을 포함한 모든 주민들에게 식량권을 보장하기 위해 역량 있는 유엔기구들과 건설적인 자세로 협력하고, 북한 내에 상주한 비정부기구들이 모든 주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활동을 용이하게 할 것 (프랑스)
  48. 시장의 폐쇄,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의 억압, 대안매체의 부족, 외부정보에 접근하는 이들에 대한 가혹한 형벌 등 주민 통제를 완화할 것 (뉴질랜드)
  49.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접근권을 부여하는 등 인권문제에 대한 기술적 협력을 증대할 것 (영국)
  50.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활동에 더욱 긍정적이고 개방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인권상황을 증진시키기 위한 참된 의지를 보이고, 인권 상황을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유엔과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 (호주)
92. 본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결론 및/혹은 권고사항들은 의견제출국 및/혹은 검토대상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 및/혹은 권고사항들이 전체적으로 실무그룹에 의해 추인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 부 록

### 대표단의 구성원

북한의 대표단은 리철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를 대표단장으로 하여 12명으로 구성되었다.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  
김명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과장  
심형일, 중앙재판소 법률국장  
김순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원  
한채순, 보건성 보건연구소 소장  
장일훈, 외무성 국제기구국 과장  
김용호, 외무성 국제기구국 책임부원  
계춘영,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부대표  
리장건,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  
최명남,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  
석종명,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  
전영룡,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1등 서기관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Sixth session**







**General Assembly**

Distr.  
GENERAL

A/HRC/WG.6/6/PRK/1  
27 August 2009

Original: ENGLISH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Sixth session  
Geneva, 30 November-11 December 2009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A)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 The present document was not edited before being sent to the United Nations translation services.

1.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onouring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to achiev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promoting and encouraging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th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251 of March 15, 2006 on establishing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mechanism, submits the present report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of Information under the UPR set out in document A/HRC/6/L.24.

## **I. PREPARATION OF THE REPORT**

### **1. Organizational arrangements and methodology**

2. The Government of the DPRK (Government) briefed to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the Central Court, the Central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relevant commissions and ministries of the Cabinet on the information of the UPR schedule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of Information and invited them to prepare specified outlines and facts and figures pertaining to their functions.

3. A task force was set up comprising experts from 20 institutions such as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the Central Court, the Central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hich drafted and finalized the present report based on the information submitted respectively by the institutions concerned. (See annex 1)

4. The report focuses on the principled stand of the DPRK on human rights,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and polici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as well as national efforts and experiences, challenges and prospect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It has been written in such a way as describing the essence of the matter in question intensively, and supporting it with typical or general information on the ground.

### **2. Consultations with civil society**

5. The task force held consultations on 24 occasions with broad sections of public figures including from soci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orking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from legal and academic circles. (See annex 2)

6. At each consultation experts from specific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figures presented their views on the part of the report they were concerned about and supplemented information they deemed necessary.

## **II. BACKGROUND**

### **1. Country review**

7. Korea is situated in the north-eastern part of the Asian continent. It consist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4,198 islands around it, extending over a total area of 222,200 square kilometers. It was divided into the north and the south at the 38<sup>th</sup> parallel of the north latitude soon after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military occupation on August 15, 1945 and then after the Korean war (June 1950-July 1953) at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defined as boundary in the Armistice Agreement. The area over which the DPRK's sovereignty is exercised is 122,760 square kilometers.

8. The DPRK is a homogeneous national State. As of 2008 its population stands at 24,051,000.

9. Korea was formed as a State before the 30<sup>th</sup> century BC, and developed itself creating its own culture. However, in the modern times it was repeatedly violated and trifled by big powers as it was weak in national power, and finally, to its disgrace, was conquered by the Japanese imperialists at the beginning of the 20<sup>th</sup> century.

10. The Korean people waged anti-Japanese revolutionary struggle against the Japanese imperialists for 20-odd year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great leader President **Kim Il Sung**, thus achieving the cause of national liberation on August 15, 1945. With the founding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all the Korean people, the Korean people came to have, for the first time in national history, an independent and genuine people's Government.

11. Since its founding, the DPRK has consolidated the people's power and the socialist system invincibly. Today the Korean people, under the seasoned leadership of the great leader General **Kim Jong Il**, are striving to further consolidate their own people-centred socialist system, build a prosperous powerful nation, and achieve the independent and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country.

## 2. Basic ideas and position on human rights

12. The great leader General **Kim Jong Il** said that human rights are the inviolable and inalienable rights of the people in our country as they are the masters of the State and society. The Government, based on the fundamental requirement of the Juche idea which places human person at the centre of all considerations and makes everything in the nature and society serve him/her, and specific reality and practical experiences of the country, has comprehensively defined Juche-oriented ideas and position on human rights, and is actively pursuing their realization.

13. The Government considers that human rights are the rights that all human beings are equally entitled to and the rights that enable them to live as human beings with their dignity fully respected. In other words, they are the rights universal to all human beings that are recognized and guaranteed by the State and enable the human beings to enjoy equal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This consideration is based on the following four unique characteristics of human rights that distinguish them from all kinds of rights that human beings hold.

(a) **Universality and equality:** Human rights are what every human being is entitled to. Hence they are universal and equal.

(b) **Individuality:** Human rights belong to an individual. A human person is a social being, which makes him/her the holder of not only the rights enjoyed individually but also those rights enjoyed in community with others. With respect to the right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the holder of which is the collective, discrimination based on nationality or race constitutes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collective and eventually, the victims of the violation are none other than the individuals, the members of the collective. In the same vein, in a country that is independent and prosperous the enjoyers of human rights are the individual citizens of that particular country.

(c) **Dignity:** Human rights are, in essence, the rights related to the dignity of a human person.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rights lie in that they are the rights that a human person, aware of his/her dignity as a human being, claims in order to live a life worthy of his/her dignity as a human being.

(d) **Indivisibility:** Human rights are indivisible from the holder of the rights. A human person may waive or assign of himself/herself some rights like the right of ownership but never the human rights unless he/she gives up living as a human person.

14. The Government, based on the above-mentioned consideration of human rights, holds that the genuine human rights are the independent rights. To be specific, these rights imply the possibility for a human person to freely conduct the activities to overcome or remove all the fetters of the nature and society as the master of his/her own destiny, and to make everything serve his/her independent needs and interests. Human rights can be truly genuine rights of a human being when they become independent rights that enable him/her to be the master of the nature, society and himself/herself. Herein lies one of the new aspects of the Juche-oriented ideas of the DPRK on human rights. Moreover, human rights are realized only under the guarantee of the State, although they are the inalienable and inviolable birthrights of a human being. That is why the DPRK recognizes that human rights are not the rights to “freedom irrespective of the State and society” but they are the rights to “freedom guaranteed by the State and society”.

15. The Government respects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 respect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maintains the principle of recognizing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while taking due account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of different countries and nations, and the level of their development, peculiarities, characteristics and diversity of their historical and cultural traditions. It welcomes and encourages, in dealing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issues, dialogues and cooperation based on respect for sovereignty and equality, rejects the application of double standard, and calls for strict observance of the principle of impartiality, objectivity and non-selectivity. It is of the view that as human rights are guaranteed by sovereign States, any attempt to interfere in others’ internal affairs, overthrow the governments and change the systems on the pretext of human rights issues constitutes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is sense, the DPRK holds that human rights immediately mean national sovereignty.

### **III. NATIONAL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 **1. The Constitution and human rights-related legal system**

##### **A. The Constitution**

16.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PRK (Constitution) comprehensively provides for the principles of the State administration in the fields of politics, the economy and culture, as well as the fundamental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in all spheres of social activity, and the principles of their materialization. It was adopted in 1972 and amended and supplemented on three occasions (1992, 1998 and 2009). The stipulation in the Constitution that the State shall respect and protect human rights is the manifestation of the commitment of the State to ensuring full enjoyment by citizens of human rights on a high standard. The Constitution comprehensively provides for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in all fields of State and public activity such as the right to elect and to be elected, the freedoms of speech, the press, assembly, demonstration and association, the rights to complaints and petitions, work and relaxation, free medical care, education and social security, freedoms to engage in scientific, literary and artistic pursuits, and freedoms of residence and travel. It also explicitly stipulates that these rights and freedoms are provided to everyone equally and practically, and shall be amplified with the consolidation and development of the socialist system.

## **B. Sector-specific laws**

17. Since the founding of the DPRK in 1948, hundreds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human rights were enacted, thus providing firm legal guarantees for the effectiv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See annex 3). Each sector-specific law has rules and regulations for its implementation.

### **2. Structure of State organs and mechanism for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18. The political system of the DPRK is socialist democratic republicanism. The sovereignty resides in the workers, peasants, servicepersons, working intellectuals and all other working people. They exercise power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s –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local people’s assemblies at all levels.

19. The organ of State power consists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local people’s assemblies.

20. The system of administrative organs includes the Cabinet, commissions and ministries and local people’s committees at all levels.

21. The system of procuratorial organs consists of the Central Public Prosecutors Office,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of the province (or municipality directly under central authority), city (or district) and county and the special public prosecutors office. Their functions are to protect, through the surveillance of law observance and combat against crimes, the State power of the DPRK, the socialist system, the property of the State and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s and personal rights a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people’s lives and property.

22. The system of judicial organs consists of the Central Court, the people’s court of the province (or municipality directly under central authority), city (district) and county and the special court. Their functions are to protect through judicial activities the State power of the DPRK, the socialist system, the property of the State and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s and personal rights a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people’s lives and property.

23. In the DPRK, the people’s committees at all levels assume direct responsibility for the ensuring of human rights. Procuratorial, judicial and people’s security organs also discharge the important functions of protecting human rights. Inter-agency organizations such as the 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s for UNICEF and UNFPA, and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nd soci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omen's union, youth league, the Democratic Lawyers' Association, the bar association, teachers' union, the Red Cross Society, the Federa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uman Rights Institute, Education Fund, the Association for Family Planning and Maternal and Infant Health, Measure Committee for Demanding Compensation to "Comfort Women" for the Japanese Army and the Victims of Forcible Drafting are working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missions and action programmes.

24. The citizens whose rights are violated are duly compensated. The compensation system is guaranteed by the Civil Law, the Law on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Law on Complaints and Petition and other relevant laws.

### **3. Human rights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25. Education on the Constitution and laws and their studies and dissemination are organized and conducted systematically with a view to making the citizens fully aware of their rights and duties, exercise the full range of their rights and faithfully fulfill their duties. Education on laws related to human rights is provided in two tracks, one in general public education and the other in specialized education. Education on the laws with human rights implications, which was once confined to the professional education for the training of specialists, is now given within the regular education system, i.e. at universities and colleges, as well as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 a manner appropriate to the level of targets of education. The Grand People's Study House (the biggest library in the capital city of Pyongyang), libraries and other social education establishments, mass media and the press give wide publicity to the legal and common knowledge concerning human rights. Seminars, symposiums and training courses are regularly arranged for civil servants, judges, lawyers, prosecutors, people's security officers and other law enforcement officials, social workers from women's union, youth league and other civil society.

26. Knowledge and awareness of human rights of the general public are at high level. Whereas knowledge and concern about this question was once a matter of interest exclusively to experts, civil servants and social workers, they are now a general concern of broad spectrum of the public as well as young generation. Accordingly, there prevails in the society a firm and widespread view that neglect of human rights means neglect of human beings.

### **4.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to which the DPRK is a party, and fulfillment of commitments and obligations thereunder.**

27. The DPRK acceded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some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28. The rights set forth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re effectively guaranteed in the DPRK through the Constitution, sector-specific laws and regulations. The requirement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re given effect either through their incorporation into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r through direct invo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instruments.

29. As of January 2009, the DPRK submitted four periodic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RC, two periodic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ESCR, two periodic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CCPR, initial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EDAW and had them reviewed by the relevant treaty bodies. The DPRK has taken into serious consideration the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made by the treaty bodies, and accepted and implemented them in the light of its reality.

#### **IV. EFFORTS AND EXPERIENCES I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 **1. Civil and political rights**

###### **A. Right to dignity**

30. Respect for the dignity of a human person is a requirement set out in the Constitution and a basic principle to be adhered to as required by “Believe in People like in Heaven”, the idea governing the State activities. Insult to dignity and libel are defined as penal offences in the Criminal Law and the perpetrators are liable for compensation under the Law on Compensation for Damages.

31. The Government is of the view that full development of individual freedom and individual qualities contributes to both the promotion of well-being of individuals and advancement of the society as a whole, and accordingly, effectively protects and ensures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 freedom by organically combining them with the healthy sus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nation, society and collective. The Constitution and many other laws contain provisions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 freedom and individual qualities. This is a freedom of healthy individuality, as it does not mean the freedom of “self-indulgence” which prejudices others’ freedom or disregards the law.

32. In the DPRK, equality is fully ensured based on unity and cooperation between persons. No citizen is discriminated on the basis of his/her race, sex, language, religion, education, occupation and position and property, and all citizens exercise equal rights in all fields of the State and public activities.

###### **B. Right to life**

33. The DPRK regards the right to life as an essential requirement guaranteeing the very existence of human being and effectively ensures that the right to life and existence is protected.

34. No person is arrested, detained or arbitrarily deprived of lif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Law, unless he/she has committed a very serious crime. Death penalty is imposed only for five categories of extremely serious penal offences and the sentence of death is not imposed for a crime committed by persons below eighteen years of age nor it is carried out on pregnant women.

35. Inviolability of every part of human body is guaranteed by law. Taking off internal organs of human body and selling and buying them or crippling any of its part are regarded as a grave violation of the right to life and thus subjected to serious legal punishment.

### **C. Prohibition of torture and other inhuman treatment**

36. The Criminal Procedures Law strictly prohibits forcing a suspect to admit offence or leading statement by such coercive methods as torture or beating. Confession or admission is regarded ineffective unless it is supported by valid evidence. Conducting coercive interrogation through torture, exaggeration or fabrication of cases and passing unwarranted judgment or award are defined as offences in the Criminal Law. Victims of the aforementioned torture and other coercive means of interrogation are duly compensated.

37. The institutions for training law enforcement officials educate students in such a way that they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illegality and harmful effects of torture and other coercive methods of interrogation, fully ensure scientific accuracy, objectivity and prudence in dealing with criminal cases and strictly adhere to the principle of attaching primary significance to evidence. Law enforcement organs regularly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such undesirable methods as coercive interrogation and leading. Procuratorial organs play a vital role in preventing the occurrence of torture and other inhuman treatment and punishment. Public prosecutors conduct regular surveillance of the institutions of investigation, preliminary examination and reformation and take necessary legal measures in case any violation of human rights is found or complaints are lodged by the examinees, defense counsel and others.

### **D. Right to fair trial**

38. The DPRK has established fair trial system and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operating it without deviation. The principles, procedures and methods of fair trial are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the Law on the Constitution of the Court, the Criminal Procedures Law, the Civil Procedures Law and other relevant laws, and strict compliance with them is ensured.

39. Justice is administered only by a tribunal composed of a judge and two people's assessors elected by the corresponding people's assemblies. The tribunal carries out judicial proceedings in strict accordance with law independently of any interference or influence. The tribunal passes a judgement of guilty or of not guilty when the truth of the case in question has been proved beyond doubt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thoroughly examined and verified in the course of the trial. The presence of the accused in the trial is compulsory, where he/she defends himself/herself in person or through legal assistance of his/her own choosing. The accused may request the presence of a witness necessary for his/her defence and question him/her. The accused is not forced to make a statement or confession that is disadvantageous to him/her. In the event that the court decision is disagreeable, the accused and the defense counsel may make an appeal, with no restrictions being applied, within 10 days after the passing of the decision.

### **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ocial and political life**

40. The DPRK legalized, as fundamental social and political rights, the right to elect and to be elected, the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religious beliefs and is ensuring them in practice.

41. All citizens who have reached the age of 17 have the right to elect and to be elected, irrespective of sex, nationality, occupation, length of residence, property status, education, party affiliation, political views or religion.

42. All citizens have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ere are 480 kinds of newspapers published and circulated at national and provincial level, factories, enterprises and universities and there are hundreds of kinds of magazines published by scores of publishing houses. All citizens can express their views and opinions through TVs and publications. They have the freedom of literary and creative activities by virtue of the Constitution and relevant laws. They have the rights, under the Law on Complaints and Petitions, to criticize institutions,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and civil servants for their illegal acts and lodge complaints against them and have them redressed.

43. Citizens have freedom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under the Constitution. The organizers of the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are required to send notification to the local people's committees and people's security organs three days in advance, in which the purpose, date, time, venue, organizer and scope of the event are to be specified. The latter provides conditions for the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and ensures that public order and security are maintained.

44. Citizens have freedom of association by virtue of the Constitution. The State provides conditions for free activities of democratic political parties and social organizations. In case a democratic social organization is to be formed, an application should be sent to the Cabinet thirty days in advance, which specifies the purpose of the organization, the number of its members, organizational structure, date of inauguration, and the name of the leader, accompanied by a copy of the statute. At present, various political parties and soci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Workers' Party of Korea, the Korean Social Democratic Party, the Chondoist Chongu Party, the trade union, agricultural workers' union, women's union and youth league are active in the DPRK.

45. Citizens are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freedom of religious beliefs such as the right to practise religion of their own free choice, to set up religious buildings and facilities, to freely hold religious ceremonies openly or privately, individually or in community with others and to give religious education. There are such religious organizations as Korea Christian Federation, Korea Buddhists' Federation, Korea Roman Catholic Association, Korea Chondoist Society and Korea Religionists' Society. In recent years the Pongsu Christian Church, the Janchung Roman Catholic Church in Pyongyang and Ryongthong Buddhists' Temple in Kaesong have been rebuilt and expanded, and the Singye Temple in Mt. Kumgang and Bopun Temple in Mt. Ryongak restored to their original state. A Russian Orthodox Church was built in Pyongyang in August 2006, where Russian religious persons staying in the DPRK are holding religious ceremonies. The publications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s include "Chondoism Scriptures", "Chondoism Digest", "The Old Testament", "Hymn", "Choice and Practice", "Let's learn Roman Catholicism", "Steps of Religious Life" and "Catholic Prayer". The State is separated from religion and all religions are equal. Religious organizations operate their own educational institutions.

## **2.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A. Right to work**

46. Citizens have the right to work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labour-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ll citizens choose their occupations according to their wishes and talents and are provided with secure jobs and working conditions by the State. They work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and receive remuneration according to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work done.

47. There are no unemployed people in the DPRK. Institutions,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have legal obligations to provide working people with jobs. Special attention and encouragement are given to providing jobs to women.

48. All the working people are provided with equal remuneration for equal work without distinction as to sex, age and nationality. Women receive equal pay with men for equal work and, in particular, women with three or more children are paid eight hours' salary for six hours' work.

49. The State adopted legislative measures to prevent any practices that violate political and economic rights and freedoms of citizens in their working life. The relevant laws provide that women should not be employed in such areas as are prohibited by law, that labour protection and safety facilities be sufficiently provided, that the principle of remunerating according to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work done be strictly observed, and that citizens' complaints and petitions concerning, for instance, not assigning the right job to a right person in time and their rights to work be addressed fairly and promptly. Accordingly, legal punishments are meted out to managerial officers responsible for any practices contrary to these principles.

#### **B. Right to rest and leisure**

50. The right of the working people to rest and leisure is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and other labour-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is right is ensur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working hours, the provision of holidays, paid leave, accommodation at health resorts and holiday homes at State expense and by a growing network of cultural facilities.

51. The working day is eight hours and overtime work is strictly prohibited. In case working on a holiday was unavoidable in circumstances of serial non-stop production process and disaster relief operation, workers are given a day off in the following week. They have a fortnight's regular holiday every year with full payment of salary and, depending on their trades, they are entitled to an additional holiday of seven to twenty-one days. In addition to regular and additional holidays, working women enjoy maternity leaves, sixty days before and ninety days after the childbirth.

#### **C. Right to social benefits**

52. All citizens are legally entitled to the benefits of the State social security and social insurance.

53. In case workers and office employees stay away from work temporarily on account of illness, injury, tending of a sick family member, recuperation or other reasons, they receive subsidies. Women receive, during their maternity leave, maternity subsidies equal to 100 per cent of their monthly salaries. There are also social security pension granted to those who are under social security scheme and those who lost ability to work, nursing subsidy to those who tend disabled soldiers and seriously injured person, funeral subsidy to those under social security scheme and their families when they pass away, grant-in-aid to the dependents of servicemen and supplementary living allowance to the weak.

54. The expenses for the State social security and social insurance are disbursed from the State budget, of which the social insurance premium paid by the working people accounts for one percent.



#### **D. Right to adequate standard of living**

55. The Government takes it as the supreme principle of its activities to steadily raise the material and cultural standards of people and is taking various legislative and policy measures to meet the demands of people for affluent life with decent food, clothing and housing.

56. The State pursues the policy of assuming responsibility for the supply of food to all population. The State has, in accordance with the Law on Food Administration, the Labour Law and the Regulation on Distribution of Food, provided a cheap, timely and equitable supply of food to the workers, office employees and their dependents. However, the considerable decrease in the grain output due to serious natural disasters that repeatedly hit the country since the mid-1990s adversely affected the people's living in general, and in particular, the exercise of their rights to adequate food. The Government, while meeting the pressing demands with a large amount of food obtained through its appeal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assistance, has taken measures to solve the food problem on its own through the increased agricultural production.

57. Citizens are provided with dwelling houses from the State free of charge and have the rights to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 to use and to the inviolability of their hom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other relevant laws. The house rent accounts for only 0.3 per cent of their total living expenses. Hundreds of thousands of modern multi-storied apartments have been built during the last two decades in the capital city of Pyongyang and a lot of new houses built and old ones renovated in the towns and rural areas throughout the country. There are some people living in inadequate conditions but no one is left homeless, since people's committees at all levels are responsibly taking care of people's life as householders would do.

#### **E. Right to education**

58. The Government has considered education as an important issue decisive for the future of the country and the nation, and has, ever since its founding, devoted great attention to its development. 77 per cent of the population was illiterate when the country was liberated from the Japanese military occupation in August 1945, and illiteracy was completely eradicated by March 1949 as a result of the primary efforts directed by the Government in this regard.

59.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developed an advanced education system that is accessible and available to everyone. Universal primary compulsory education system and universal secondary compulsory education system were enforced from August 1956 and November 1958 respectively. Tuition fee was completely abolished at education institutions at all levels, making it possible to enforce universal secondary free and compulsory education. And 11-year universal free compulsory education system has been in force since 1972.

60. The Government has undertaken various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11-year free compulsory education system despite the economic hardship that persisted since the mid-1990s.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Education for All was developed in 2001 in response to the Dakar Action Plan for Education for All of the UNESCO after an extensive discussion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ies concerned and research institutions, the implementation of which is being actively pursued. Various measures were adopted to encourage social support to educational work, while systematically increasing expenditure for education. Expenditure for education increased from 7.4 per cent in 2002 to 8 per cent in 2006. Currently 1,644,000 students are learning at 4,904 primary schools and 2,415,000 students at 4,801 schools.

61. The Government directed great effort to training all members of society to be possessed of techniques and skills of higher education level by properly combining regular higher education and study-on-the-job education. 302 universities and 460 colleges have been set up since 1946 when Kim Il Sung University,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country, was established, and the system of study-on-the-job education has been perfected with the founding of the factory college, farm college and fishermen's college in 1951, 1981 and 1993 respectively, thus making it possible to attain the Government goal of making the whole of society intellectual.

#### **F. Right to health**

62.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strengthened a popular public health system since the early days of its founding. It promulgated on January 27, 1947 the decision on providing to the workers, office employees and their dependants free medical care under social insurance programme and adopted relevant measures for its implementation. This was the first State-funded free medical care in the history of Korea. The Government introduced universal free medical care in all parts of the country from January 1, 1953, the hard time of the Korean War (1950-1953). Complete and universal free medical care has been provided since February 1960, which was later legaliz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Public Health Law. Everyone in the DPRK receives medical service of all categories equally, practically and free of charge.

63. The public health system has been further strengthened thanks to the popular health policy of the Government. People's life expectancy increased 1.7 times, or from 38.4 (37.3 for male and 39.5 for female) in the pre-liberation days to the present 67.6 (63.5 for male and 71.4 for female). There were only 9 hospitals in 1945 (the year of country's liberation from Japanese military occupation) but now there are 1,986 hospitals and 6,104 clinics. The number of doctors per 10,000 population increased from 1.1 in 1949 to the present 32. In its efforts to attain the relevant targets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Strategy for Health for All of the WHO the Government has adopted measures to supply safe drinking water to all people, prevent communicable diseases through the increased immunization coverage and improve the primary health care service. Household-doctor system has a large share in the primary health care system. 44,760 doctors at about 7,000 polyclinics, ri-people's hospitals and clinics are responsibly taking care of people's health at a ratio of one doctor per an average of 134 households.

#### **G. Right to cultural life**

64. Citizens are free to engage in scientific, literary and artistic pursuits under the Constitution. The State grants benefits to inventors and innovators and protects the copyright, inventions and patents.

65. The Government has set forth the policy of encouraging people to actively take part in the literary and artistic activities, and created conditions for them to fully enjoy cultural life by setting up cultural establishments and facilities of various kinds. The thousands of theatres, cinemas and culture halls in Pyongyang, provinces and counties greatly contribute to the cultural life and amenities of the working people.

66.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economic rights to their inventions and to benefit from them. These rights are guaranteed by the Copyright Law, the Law on Invention, the Law on Industrial Designs, the Trademark Law and their implementation regulations.



### **3. Rights of specific groups**

#### **A. Women's rights**

67. The Government promulgated the Decree on Sex Equality on July 30, 1946 with a view to freeing women from the centuries-old feudal fetters, which specifies that women have equal rights with men to political life, to work, to education, to family life and to property ownership, etc. The contents of the decree were incorporated later in the Constitution to be further developed in depth. The State further concretized the political status of women and thei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rough the adoption of the Nationality Law, the Law on Election, the Law on Local Power Organs, the Civil Law, the Civil Procedures Law, the Family Law, the Law on Education, the Labour Law, the Law on Public Health, etc.

68. Today women are taking part in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life with equal rights with men. Women make up 15.6 per cent of the deputies to the Supreme National Assembly. They account for 49 per cent of the workforce. There are thousands of associate doctors and doctors, and 463,000 engineers, technicians and specialists.

69. Under the Government's policy on public health which focuses special attent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women's health, and the reproductive health strategy, all women are under the responsible care of household doctors,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which help improve their health steadily. More than 98 per cent of pregnant women receive the assistance of professionals in child delivery. The maternal mortality rate was 96.3 per 100,000 live births in 2006.

#### **B. Child rights**

70. The State has invariably maintained, ever since the early days of its founding, the principled stand that children are the future and the "Kings" of the country. The State secured legal guarantees for bringing up children to be reliable leaders of the future and guaranteeing their rights to the fullest possible extent through the adoption of the Constitution, the Law on Education, the Law on Public Health, the Law on Upbringing and Nursing of Children, the Social Security Law,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Family Law, etc. With a view to further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children the Government formulated in 1992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Well-being of Children (1992-2000) and reviewed its implementation stage by stage. A new action plan for 2001-2010 containing follow-up measures and new goals is being implemented through various programmes.

71. All the children receive compulsory education free of charge starting from the age of six or seven under the universal 11-year free compulsory education system, giving full scope to their wishes and talents. The enrolment rate in primary school is 100 per cent, the advancement rate 99.7 per cent and the graduation rate 100 per cent.

72. Children without parents are cared in orphanages, and when they reach school age, they study at orphans' primary schools and secondary schools receiving stipends. There are, for orphans, 14 nurseries and 12 kindergartens and 17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73. Before 1945 (the year of the country's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military occupation) child mortality rate was 204 per 1,000 live births, which was reduced to 11.4 in the 1980s. Children's health which was temporarily aggravated in the mid-1990s due to successive natural disasters, has improved, with the result that under-5 mortality rate was reduced from 50 per 1,000 in 1998 to 40 in 2005. Children's nutritional status also improved, thus reducing the low birth rate from 6.7 per cent in 2002 to 6.3 per cent in 2006. Breastfeeding rate of infants below 6 months is 98.7 per cent. Child vaccination coverage is at a high level, with the vaccination rate for mixed DPT-3 82.2 per cent, the measles 96.9 per cent, polio 99.8 per cent and tuberculosis 99.8 per cent.

### **C. Right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74. The DPRK adopted in 2003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a view to protect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atisfactorily. They receive education and medical treatment, choose their occupation according to their talents and abilities, and enjoy cultural life with equal rights with others. According to the selective survey conducted in 2005 there were 3,639 children with mobility disabilities, of whom 2,176 were boys and 1,463 girls. Blind children and deaf and dumb children are learning at special schools receiving stipends, while children with other disabilities are included in the mainstream classes. Disabled soldiers' factories and welfare service centres were set up for the purpose of creating jobs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nic medicine and walking aid devices are provided free and paid vacation and allowances are provided to them.

75. Colorful functions are arranged annually on June 18, the da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serve as an important occasion in facilitating their integration into society and encouraging the general public to respect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nder them support. The Korean Federa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started functioning in July 2005,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is regard.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receive full protection of their rights thanks to the Government's popular policy and the amicable social atmosphere in which the beautiful traits of helping and leading each other flourish.

### **4.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76. The DPRK pays due regard to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attaches importance to genuinely constructive dialogues and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dies. Accordingly, invitations were extended to the delegations of the Amnesty International, International Association against Torture and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team of Special Rapporteur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who were given, as they wished, the opportunities to talk with the local law enforcement officials, visit the reformatory and detention facilities and inmates, thereby obtaining first-hand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77. In particular, the DPRK,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European Union (EU), responded with sincerity to all questions raised by EU as regards human rights and conducted a wide range of dialogues and cooperation. Each political dialogue between the DPRK and EU was attended by the human rights experts of the former to provide explanation and clarification to the latter's questions. Furthermore, in October 2001, the DPRK side gave

answers with tolerance even to the EU's written questions little short of interference in internal affairs. There were regular contacts between the human rights experts of the DPRK and the ambassadors of the member states of EU to the DPRK, in which the position and activities of the DPRK in respect of human rights including status of submission of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were informed. A delegation of French parliamentarians visited a reformatory and met with local officials during their visit to the DPRK in September 2001, and Director in charge of East Asia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Germany met with a released convict as he wished during his visit to the DPRK in May 2002. These above-mentioned activities took place within only two years since the beginning of human rights dialogues between the DPRK and EU.

78. In utter disregard of the above-mentioned cooperation and sincere efforts by the DPRK, the EU surprisingly tabled an anti-DPRK "draft resolution" at the 59<sup>th</sup>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2003. The continued adoption since then of the anti-DPRK "resolutions" by the EU at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General Assembly only served to put an end to the human rights dialogu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DPRK and EU.

## **V. OBSTACLES AND CHALLENGES TO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 **1. Hostil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ward the DPRK**

79. The United States has persistently pursued the hostile policy towards the DPRK since the early days of its founding. This policy covering the political, economic, military and all other areas poses the greatest challenge to the enjoyment of genuine human rights by the Korean people.

80. The United States is making an undisguised attempt to interfere in the internal affairs of the DPRK and change its system under the pretext of "human rights protecti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enacted by the US Congress in 2004 is a typical example. Let alone its content, the title of this "Act" itself suggests its provocative and interventionist nature. This abnormal "Act" aims, under the pretext of promoting "human rights",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in the DPRK, at inciting dissatisfaction among the citizens with their Government and thus leading them to change their system and overthrow their Government. The "Act" provides for 12-hour-per-day radio broadcasting in Korean language against the DPRK, massive input of mini-radios tuned to its broadcasting, inciting the citizens to "defection" and "immigration" to and "asylum"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financial and material support for these programmes (the US administration appropriated USD 24,000,000 for this "Act"). Numerous non-Government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are hell-bent on anti-DPRK campaigns under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US administr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ct".

81. It is up to the people of a country to decide what type of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they wish to choose. The social and political system established in the DPRK is a socialist system of the Korean people's own choice. The enactment by the United States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s an all-out interference in internal affairs of the DPRK. Any move aimed at divorcing the DPRK citizens from their Government under the pretext of "protection of human rights" is an undisguised attempt to overthrow the Government and infringement on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82. The United States has imposed numerous sanctions on the DPRK historically, thus inflicting on it tremendous economic losses and gravely hindering the enjoyment by the Korean people of the human rights.

83. The United States is militarily threatening the DPRK while annually staging different DPRK-targeted war exercises like “Key Resolve” and “Ulji Freedom Guardian”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ggression by the United States in recent years upon other countries and their mass killing of civilians left a serious lesson that failure to defend the national sovereignty will result in inability to defend the rights of people to life. The DPRK will further intensify its self-defensive measures in order to safeguard sovereignty and dignity, and human rights of its citizens.

## **2. Anti-DPRK campaigns including adoption of “human rights resolutions” at the United Nations**

84. As mentioned above, EU in collusion with Japan and other forces hostile to the DPRK has adopted every year since 2003 the anti-DPRK “human rights resolution” at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Human Rights Council and UN General Assembly.

85. These “resolutions” aim at tarnishing the image of the DPRK and thereby achieving political purpose of eliminating the ideas and system that the Korean people have chosen for themselves and defended, and not at the genuin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e sponsors of the “resolution” preposterously argue that they are aimed at promoting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However, the reality speaks by itself that the “resolutions” are the root source of mistrust and confrontation, and the impediments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86. The DPRK attaches importance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However, as has been made clear by the Government on several occasions, the very impediments in the way of materializing this cooperation are the above-mentioned “resolutions”, which are thoroughly politicized and selective. Selective attack and cooperation are incompatible.

## **3. Dissolution of the socialist market, successive natural disasters and their consequences**

87. Dissolution of the socialist market in the early 1990s and the tremendous financial and economic losses and depletion of material resources owing to the successive natural disasters that started in the mid-1990s brought the gravest difficulties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88. The most serious difficulty was the worsening of the condition of food supply. In 1996 alone, 3,180,000 tons of food was in short supply, thus causing a sharp decrease in the amount of provisions. Consequently, health condition of people in general deteriorated; infant and child mortality rate and malnutrition rate increased and diseases like infants’ diarrhea, respiratory tract infection and tuberculosis broke out.

89. Infrastructure of the national economy was devastated and numerous factories, enterprises, coal mines, mines, reservoirs and dams were seriously destroyed, making it impossible to

regularize production and in particular, to provide sufficient heating to schools in the winter time and textbooks to students.

90. The Government has adopted various measures to remove the after effects of natural disasters as soon as possible and reactivate the economy. Priority has been directed, for increased agricultural production, to the expansion of arable land through land reclaiming and rezoning, and to the boosting of grain production through improvement of seeds, double cropping and potato farming. Decisive measures have also been taken to raise the whole of the economy to a high level through concentration of efforts on electricity production, coal mining, metallic industry and railway transport and other key sectors of economy.

91. Positive steps taken by the Government and the patriotic efforts of the people have resulted in the increase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ion and the State budget in recent years and improvement of the people's life in general. Today all the Korean people are working devotedly full of confidence and optimism under the slogan of "Let us optimistically advance however tough our road might be!" for the building of a great prosperous powerful nation where everything thrives and everyone is well-off.

## VI. CONCLUSIONS

92. The Government of the DPRK, while reviewing, for preparation of the present report, the experiences so far gained in the activities for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observing global human rights situation, considered what conditions are essential for the effective ensuring of a full range of human rights and how to realize them. It became convinced that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genuine human rights a State should:

- (i) Defend the country against foreign interference and achieve durable peace and stability;
- (ii) Build a social system free from the root source of exploitation and oppression;
- (iii) Ensure that unity and cooperation between persons prevail society, and not confrontation and mistrust and;
- (iv) Attain high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cutting-edge science and technology, and promote healthy culture.

93. The Government, regarding it as the supreme principle of its activities to ensure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well-being of people, has set as its immediate major task to attain the goals for the building of an economic power by 2012 through concerted efforts of the army and people and thereby raise the people's living to a high standard.

94.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ll continue to hold fast to its own socialist human rights theory and policy, the validity of which has been fully manifested. At the same time, it will take the useful recommendations and observations seriously, and do its best for the enjoyment at a higher level of human rights by the Korean people, thus positively contributing to th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his end.

## **Annex 1**

### **Typical National institutions participated in the preparation of national report for UPR**

- (1)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 (2) Secretariat of the Cabinet
- (3) Central Court
- (4) Central Public Prosecutors Office
- (5) State Planning Commission
- (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7)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 (8) Ministry of Finance
- (9) Ministry of Education
- (10) Ministry of Public Health
- (11) Ministry of Agriculture
- (12) Ministry of Food Administration
- (13) Ministry of Labour
- (14) Ministry of Culture
- (15) Ministry of Land and Environment Protection
- (16) Ministry of Construction
- (17) Ministry of City Administration
- (18) State Bureau of Quality Supervision
- (19) Invention Office
- (20) Central Statistics Bureau.

## Annex 2

### **Social organizations, academic institu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participated in the consultation for the preparation of national report for UPR**

- (1) Korean Human Rights Institute
- (2) Central Committee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 (3) Korean Democratic Lawyers' Association
- (4) Central Committee of the Korean Trade Union
- (5) Central Committee of the Korean Agricultural Workers' Union
- (6) Central Committee of the Korean Democratic Women's Union
- (7) Central Committee of **Kim Il Sung** Socialist Youth League
- (8) Central Committee of the DPRK Red Cross Society
- (9) Korean Religionists' Conference
- (10) Central Committee of Korean Chondoists' Society
- (11) Central Committee of Korean Buddhists' Federation
- (12) Central Committee of Korean Christians' Federation
- (13) Central Committee of Korean Roman Catholic Federation
- (14) Central Committee of Korean Journalists' Union
- (15) Korean Medical Association
- (16) Central Committee of Korean Federa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17) Korean Association for Family Planning and Maternal and Infant Health
- (18) Population Institute
- (19) Korea Education Fund
- (20) Law College of the **Kim Il Sung** University
- (21) Law Institute of the Academy of Social Sciences
- (22) University of National Economy.

### Annex 3

#### Typical Sector-Specific Laws of the DPRK with Human Rights

- (1) Nationality Law
- (2) Law on Election of Deputies to the People's Assemblies at All Levels
- (3) Law on the Constitution of Local Power Organs
- (4) Socialist Labour Law
- (5) Law on Food Administration
- (6) Education Law
- (7) Law on Public Health
- (8) Law on Upbringing and Nursing of Children
- (9)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10) Law on the Protection of Elderly Persons
- (11) Social Security Law
- (12) Law on Medical Care
- (13) Law on Prevention of Communicable Diseases
- (14) Law on Food Hygiene
- (15) Law on Public Sanitation
- (16) Law on Physical Culture and Sport
- (17)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 (18) Civil Law
- (19) Civil Procedures Law
- (20) Criminal Law
- (21) Criminal Procedures Law
- (22) Law on Complaints and Petitions
- (23) Family Law
- (24) Law on Inheritance
- (25) Law on Compensation for Damages
- (26) Law on Constitution of Court
- (27) Lawyers' Law
- (28) Law on Notary Public
- (29) Law on Citizens' Registration
- (30) Law on City Administration
- (31) Law on Dwellings
- (32) Copyright Law
- (33) Law on Invention
- (34) Law on Industrial Design
- (35) Trademark Law.

-----





**General Assembly**

Distr.  
GENERAL

A/HRC/WG.6/6/PRK/2  
18 September 2009

Original: ENGLISH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Sixth session  
Geneva, 30 November-11 December 2009

**COMPILATION PREPARED BY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B)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present report is a compilation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reports of treaty bodies, special procedures, including observations and comments by the State concerned, and other relevant official United Nations documents. It does not contain any opinions, views or suggestions on the part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other than those contained in public reports issued by OHCHR. It follows the structure of the general guidelines adopt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Information included herein has been systematically referenced in endnotes. The report has been prepar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four-year periodicity of the first cycle of the review. In the absence of recent information, the latest available reports and documents have been taken into consideration, unless they are outdated. Since this report only compiles information contained in official United Nations documents, lack of information or focus on specific issues may be due to non-ratification of a treaty and/or to a low level of interaction or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 I. BACKGROUND AND FRAMEWORK

### A. Scope of international obligations<sup>1</sup>

<i>Core universal human rights treaties<sup>2</sup></i>	<i>Date of ratification, accession or succession</i>	<i>Declarations /reservations</i>	<i>Recognition of specific competences of treaty bodies</i>
ICESCR	14 Sep 1981	None	-
ICCPR	14 Sep 1981	Notice of withdrawal <sup>3</sup>	Inter-State complaints (art. 41): No
CEDAW	27 Feb 2001	Yes (art.2(f), art.9(2), art. 29(1)) <sup>4</sup>	-
CRC	23 Feb 2000	None	-

*Core treaties to whic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not a party: OP-ICESCR<sup>5</sup>, ICERD, ICCPR-OP 1, ICCPR-OP 2, OP-CEDAW, CAT, OP-CAT, OP-CRC-AC, OP-CRC-SC, ICRMW, CRPD, CRPD-OP, CED.*

<i>Other main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i>	<i>Ratification, accession or succession</i>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Yes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No
Palermo Protocol <sup>6</sup>	No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 <sup>7</sup>	No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Additional Protocols thereto <sup>8</sup>	Yes, except AP II and III
ILO fundamental conventions <sup>9</sup>	No
UNESCO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No

1. In 2009,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and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in 2005, encourage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consider ratifying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nd its Optional Protocol.<sup>10</sup> CEDAW also encouraged it to consider ratify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as did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in 2003<sup>11</sup>, and to ratif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sup>12</sup>

2. CRC recommended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atify the Optional Protocols to the Convention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an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sup>13</sup> CEDAW encouraged the State to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sup>14</sup>

3. CRC recommended – as CESCR did in 2003<sup>15</sup> –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consider joining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with a view to ratifying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No. 182) and the Minimum Age for Admission to Employment Convention (No. 138)<sup>16</sup>, and to consider ratifying the 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sup>17</sup>

### B. Constitutional and legislative framework

4.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the Special Rapporteur) noted that some law reforms have been made to bring national security standards more into line with international ones.<sup>18</sup> In a 2008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the Secretary-General urged the Government to show visible signs of domestic legal reform so as to fulfil its treaty obligations and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sup>19</sup>

5. A 2006 UNICEF report noted that in 2003 a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adopted in order to ensure equal acces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ublic spaces, transportation and public services.<sup>20</sup>

### C. Institutional and human rights infrastructure

6. As of 10 July 2009,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id not have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accredited by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sup>21</sup>

7. CEDAW expressed concern that the national machinery might not have sufficient visibility, decision-making power or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to promote effectively the advancement of women and gender equality.<sup>22</sup>

### D. Policy measures

8. The Special Rapporteur stated that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would require, inter alia, laws, policies, programmes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sup>23</sup> He recommended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bide by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shift military expenditure to the human development sector and allocate national resource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human security.<sup>24</sup>

9. While not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information regarding the increased budget allocations to the health and education sectors, CRC noted that these are not sufficient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lated to health and education of children.<sup>25</sup>

10. CEDAW recommended developing a comprehensive and coordinated plan of action to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nsure gender mainstreaming at all levels.<sup>26</sup>

11. In 2005,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dopted the Plan of Action (2005-2009) for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focusing on the national school system.<sup>27</sup>

## II.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ON THE GROUND

### A. Cooperation with human rights mechanisms

#### 1. Cooperation with treaty bodies

<i>Treaty body<sup>28</sup></i>	<i>Latest report submitted and considered</i>	<i>Latest concluding observations</i>	<i>Follow-up response</i>	<i>Reporting status</i>
CESCR	2002	28 Nov. 2003	-	Third report overdue since 2008.
HR Committee	2000	26 July 2001	30 Jul 2002	Third report overdue since 2004.
CEDAW	2002	18 July 2005	-	Second report overdue since 2006.
CRC	2007	29 Jan 2009	-	Fifth report due in 2012.

12. The Special Rapporteur recommended implementing the human rights treaties to whic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party, in addition to acceding to and implementing the totality of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according adequate resources to ensure their implementation.<sup>29</sup> He further recommended inviting the various human rights monitoring bodies under the four treaties to visit the country.<sup>30</sup>

## 2. Cooperation with special procedures

<i>Standing invitation issued</i>	No
<i>Latest visits or mission reports</i>	-
<i>Visits agreed upon in principle</i>	-
<i>Visits requested and not yet agreed upon</i>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quested visits in 2004, 2005, 2006, 2007 and 2009.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 requested visits in 2003 and 2009.
<i>Facilitation/cooperation during missions</i>	-
<i>Follow-up to visits</i>	-
<i>Responses to letters of allegations and urgent appeals</i>	During the period under review, 11 communications were sent concerning particular groups and one woman. The Government replied to 4 communications, representing replies to 36 per cent of communications sent.
<i>Responses to questionnaires on thematic issues<sup>31</sup></i>	DPRK responded to none of the 15 questionnaires sent by special procedures mandate-holders during the period under review, <sup>32</sup> within the deadlines.

13. In 2009, the Human Rights Council extended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for a period of one year.<sup>33</sup>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s to date not accepted requests to visit the country made by the Special Rapporteur.<sup>34</sup> The Secretary-General urged the Government allow access for the Special Rapporteur and other special procedures to observe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at first hand, as part of its cooperation with the Human Rights Council.<sup>35</sup>

## 3. Cooperation with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14. The Secretary-General noted that OHCHR has not succeeded in engaging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a substantive dialogue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at country.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will continue to work with other United Nations agencies to strengthe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all nationals of the country.<sup>36</sup> Offers of technical assistance made by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ave been rejected by the Government.<sup>37</sup> The Secretary-General stressed the independent role of OHCHR and appealed to DPRK to positively consider its offer of technical assistance.<sup>38</sup>

### B.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taking into account applicabl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1.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15. The Special Rapporteur stated that, although less explicit than in the past, the authorities divided people into three categories: those in the elite group, the middle level, and those hostile to the authorities.<sup>39</sup> He noted that there is a great disparity between access by the elite to food and other necessities and access by the rest of the population to the wherewithal of life. This is

most evident in regard to the question of food.<sup>40</sup> Women who are not part of the elite are often disadvantaged in their access to food and other necessities and those who are seen as enemies are subject to persecution and marginalization.<sup>41</sup>

16. CEDAW noted with concern the persistence of stereotyped assumptions and attitudes in respect of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women and men, which are discriminatory against women,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education and employment.<sup>42</sup> In 2003, CESCR expressed similar views.<sup>43</sup> CEDAW urge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initiate a comprehensive review and reform of all legislation to bring its laws into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sup>44</sup>

17. CEDAW expressed concern that there was a lack of specific legislation to deal with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including domestic violence, and a lack of prevention and protection measures for victims.<sup>45</sup> CESCR expressed similar concerns in 2003.<sup>46</sup> The Special Rapporteur noted that violence, neglect, abuse and exploitation posed a continuing concern for women at home, outside the home, within the country and across borders. The issue of sexual violence at home had not been dealt with adequately, while women who are on the move were often abused and exploited.<sup>47</sup>

18. CRC noted that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was not fully respected in practice, vis-à-vis children with disabilities, children living in institutions, and children who are in conflict with the law. CRC was further concerned that children may face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the political opinion, social origin, or other status, either of themselves, or of their parents.<sup>48</sup> The Special Rapporteur expressed similar views.<sup>49</sup> CRC recommended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onitor and ensure implementation of existing laws guaranteeing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sup>50</sup> CESCR recommended that the country change the present system concerning the educ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by allowing them to be educated in the regular school system.<sup>51</sup>

## **2.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

19. The Special Rapporteur noted reports of public executions, secret executions in political detention camps,<sup>52</sup> and the continuing use of public executions to intimidate the public, despite various law reforms in 2004 and 2005.<sup>53</sup> While welcoming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criminal offences carrying the death penalty, in 2001 the Human Rights Committee (CCPR) was concerned by acknowledged and reported instances of public executions, and recommended refraining from any public executions and working towards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sup>54</sup>

20. In March 2008, 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together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question of torture, sent a joint allegation letter regarding information received on the alleged public execution of 13 women and 2 men, who were reportedly accused of planning to cross over to a neighbouring country. It was alleged that this execution was designed to dissuade people from crossing illegally. The Government did not reply to this communication.<sup>55</sup>

21. The cases of nine disappeared foreigners that were submitted by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and Involuntary Disappearances remain outstanding.<sup>56</sup> The Special Rapporteur recommended addressing the issue of abductions/enforced disappearances effectively and providing redress to victims and their families.<sup>57</sup>

22. CRC was deeply concerned that children's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continue to be severely violated. CRC was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stunting, wasting and deaths of children resulting from severe malnutrition and urge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make every effort to reinforce protection of the right to life and development of all children.<sup>58</sup>

23. The Special Rapporteur noted that there were continuing reports of violence committed by State authorities, such as torture, which is prohibited by law, and persecution of political dissidents and substandard prison conditions, despite legislative improvements. There are a large variety of detention centres ranging from those for political dissidents to those for criminals, as well as re-education camps and forced labour camps.<sup>59</sup> The abhorrent prison conditions result in myriad abuses and deprivations.<sup>60</sup> The Special Rapporteur reiterated that collective punishments were used against people and that information confirms the practice of whole families being persecuted and sent into detention when a member falls foul of the authorities.<sup>61</sup> The Secretary-General noted that punishment of the family members of defectors has reportedly been used as a deterrent to prevent defection.<sup>62</sup>

24. CCPR recommended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nsure that all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are treated with humanity and with respect for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and that sufficient food and appropriate and timely medical care are available to all detainees.<sup>63</sup> In its follow-up response, the Government noted, inter alia, that it prohibits and controls by law torture, inhuman treatment and punishment in custody and detention. It added that strict legal day-to-day supervision and investigation is undertaken by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sup>64</sup>

25. CRC recommended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ter alia, include a provision in its domestic legislation prohibiting children from being subjected to torture and establishing appropriate sanctions against the perpetrators of torture; and investigate and prosecute all cases of torture and ill-treatment of children.<sup>65</sup> CRC was also concerned about the reported use of corporal punishment in alternative care institutions.<sup>66</sup>

26. On 20 December 2005,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sent a joint allegation letter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question of torture,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Special Rapporteur on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concerning allegations of trafficking of female citizens to foreign countries. Reportedly, the situation of trafficked women is exacerbated by th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upon their deportation back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s nationals of the State commit a criminal offence if they leave the country without official permission, punishable by up to three years in a labour training camp or a detention centre.<sup>67</sup> Reports indicate that a considerable number of citizens clandestinely cross international borders and in case of deportation from a foreign country they fac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upon return.<sup>68</sup> Reportedly, after the interrogations, the majority of persons are sent without trial or any form of judicial process to a labour training camp or a provincial detention centre.<sup>69</sup>

27.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ted that there was rampant human smuggling and trafficking where women and other groups seek to leave the country. Some fell prey to human trafficking and ended up in

forced labour, prostitution and forced marriage.<sup>70</sup> CRC was concerned that there were no laws that specifically address trafficking in persons in the country.<sup>71</sup>

28. The Secretary General noted information from UNHCR and concerns including: increased risk of smuggling and of trafficking in human beings, in particular women, for the purposes of prostitution and/or forced marriage; reports of severe punishment in case of forced retur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limited possibilities with respect to regularizing the stay of children born of mixed parents (one parent a national of another country); and prolonged exit procedures that have a severe impact on the well-being of citizens awaiting settlement in third countries. Unaccompanied women and children are particularly affected by those issues.<sup>72</sup>

29. CRC was concerned that children who have been victims of trafficking, and subsequently return, or are repatriated, may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It recommended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nsure that trafficked children be regarded and protected as victims and not be criminalized, and that they be provided with adequate recovery and social reintegration services and programmes.<sup>73</sup>

### **3. Administration of justice, including impunity and the rule of law**

30. According to the Special Rapporteur, the justice system lacks an independent judiciary, lawyers acting genuinely on behalf of accused persons, and juries. Even though all three elements exist in the system, they are subservient to the State and do not uphold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notion of the rule of law. In fact, judges operate under the direction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sup>74</sup> In 2004, CESCR recommended that the constitutional and legislative provisions that may compromise or diminish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the judiciary be immediately reviewed.<sup>75</sup>

31. CCPR recommended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nsure that all instances of ill-treatment and of torture and other abuses committed by State agents be promptly considered and investigated by an independent body and that a system of independent oversight of all places of detention and custody be instituted.<sup>76</sup> The Special Rapporteur stated that another issue needing a response is that of 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y with regard to the impunity which has been enjoyed by those at the top and related officialdom.<sup>77</sup>

32. CRC regretted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d not developed a full-fledged juvenile justice system in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and other relevant United Nations standards.<sup>78</sup> The Special Rapporteur noted an urgent need to improve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ffecting children, bearing in mind juvenile justice standards of a universal kind.<sup>79</sup>

### **4. Right to privacy, marriage and family life**

33. The Special Rapporteur stated that the right to privacy is continually infringed by the State apparatus. Neighbourhood groups are used as an instrument of social control and surveillance, creating a system of fear and mistrust.<sup>80</sup>

34. The Special Rapporteur urged that measures should be adopted to facilitate family reunification, coupled with measures to ensure that no intimidation or other forms of coercion are used against those family members who remain in the country of origin or any other country.<sup>81</sup> He also noted that there remain various consequences of the Korean War of 1950-53,



which have an impact on human rights, for instance the issue of missing persons and the reunification of families separated by the war.<sup>82</sup>

35. CRC was alarmed that many of the children placed in residential care were in fact not orphans and that a large number of children are customarily placed in residential institutions. CRC was also concerned about the situation of children whose parents are detained. CRC recommende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urther strengthen the foster care system and to set clear quality standards for existing institutions.<sup>83</sup> CESCR urged the Government to strengthen its efforts to provide alternative family care for orphans and to include them in the regular school system.<sup>84</sup>

### **5. Freedom of movement**

36. The Secretary-General noted that UNHCR continued to observe that a constant flow of national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ntinues to leave the country to seek protection and/or settlement elsewhere. Reportedly, the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including the right to leave the country, has been severely curtailed.<sup>85</sup> The Special Rapporteur said that for years there has been a constant flow of people persecuted by the authorities fleeing the country clandestinely, without travel permits.<sup>86</sup> In 2001, CCPR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eliminate the requirement of administrative permission and an exit visa as a general rule.<sup>87</sup>

### **6.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expression,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 and right to participate in public and political life**

37. The Secretary-General noted reports that the population was being denied the freedoms of religion, opinion and expression,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movement and access to information.<sup>88</sup> The Special Rapporteur noted that, while some religious ceremonies seem to be allowed, there are indications that practising religion gives rise to persecution.<sup>89</sup> CCPR was concerned that the practice regarding the exercise of religious freedom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8 of the Covenant.<sup>90</sup> In its follow-up response, the Government stated, inter alia, that the religionists are free to have a religious life and ceremonies according to their own religious rules at family worship centres and other facilities.<sup>91</sup>

38. The Special Rapporteur noted that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were impeded by the closed nature of the State and rigid State control over the information flow and media.<sup>92</sup> The reading of books from one neighbouring country is punishable as a crime of espionage. There is extensive wiretapping of telephones.<sup>93</sup> CCPR was concerned that the notion of "threat to the State security" may be used in such ways as to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that foreign newspapers and publications are not readily available to the public at large and that journalists may not travel abroad freely.<sup>94</sup> In its follow-up respons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ted, inter alia, that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restricted only subject to the requirement of the Covenant and mentioned, in that regard, the threat to State security.<sup>95</sup>

39. CCPR remained concerned about restriction on public meetings and demonstrations, including possible abuse of the requirements of the laws governing assembly.<sup>96</sup> In its follow-up respons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ted, inter alia, that an assembly that obstructs State security and public order may be restricted subject to the Law on Control for People's Security.<sup>97</sup>



40. UNCT noted that women hold approximately 20 per cent of seats in the national Parliament and 30 per cent of the People's Assemblies, and that CEDAW expressed concern over the relatively low numbers of women in decision-making positions in politics, the judiciary and the civil service.<sup>98</sup> The Special Rapporteur made similar comments.<sup>99</sup>

41. The Special Rapporteur noted that there was no genuine people's participation; those who are regarded as dissidents were marginalized, discriminated against and persecuted.<sup>100</sup> CCPR considered that the fact that no regulation or legislation governing the creation and registration of political parties was envisaged, runs counter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5 of the Covenant, as it may adversely affect the rights of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conduct of public affairs through freely chosen representatives.<sup>101</sup>

42. CRC expressed concern that existing NGOs lack autonomy, which distinguishes them from state-sponsored organizations.<sup>102</sup> CCPR was concerned about the limited number of human rights organizations in the DPRK, and the limited access that is accorded to human rights organizations from abroad.<sup>103</sup>

#### **7. Right to work and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43. CESCR expressed concern that the right to work may not be fully assured in the present system of compulsory State-allocated employment, and encourage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ake legislative measures to guarantee the right of everyone to choose his/her career and workplace.<sup>104</sup> UNCT noted the success of pay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though gender hierarchy still exists with men occupying higher-skilled positions.<sup>105</sup> CEDAW commended the Government for its use of temporary special measures to increase the number of women in certain management positions.<sup>106</sup>

44. Regarding workers and migrant labourers, the Special Rapporteur highlighted the need to respect labour rights, such as fair wages, collective bargaining and freedom of association, and humane working conditions.<sup>107</sup> He noted that women have been particularly affected by the State's control over its population in the economic sphere, such as its prohibition of women under a certain age from trading and the closure of markets.<sup>108</sup>

45. CRC noted with concern that the labour laws do not prohibit harmful or hazardous work for children aged under 18 and recommended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ake urgent measures to monitor and address exploitative forms of child labour.<sup>109</sup> UNCT noted that the Civil Law defined children as persons below the age of 17 years.<sup>110</sup>

#### **8.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46. CRC noted with concern the persistence of widespread poverty and that the standard of living of children remains very low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access to, and availability of, food, safe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It recommended taking steps to improve this situation.<sup>111</sup> UNCT indicated that whil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laimed to have achieved 100 per cent access to safe water, this was not corroborated by field observations.<sup>112</sup> CEDAW urged the Government to introduce specific poverty alleviation measures aimed at improving the situation of women to eliminate their vulnerability.<sup>113</sup>

47. The Secretary-General highlighted his particular concern about the severity of the food situation the country is facing and its impact on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the

population.<sup>114</sup> UNCT referred to WFP and FAO assessments in 2008 that the impact of food shortages has been unevenly divided and that the vulnerable population includes young children, pregnant and lactating women and the elderly.<sup>115</sup> CESCR was concerned, inter alia, about the consequences of the widespread famine suffered by the country from the mid-1990s and that certain groups, in particular women, children and older persons, have been more severely affected than others.<sup>116</sup>

48. The Special Rapporteur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immediately ensure effective provision of and access to food and other basic necessities for the people, cooperate constructively with United Nations agencies and other humanitarian actors, progressively overcome disparities in access to food and other basic necessities, and build food security through sustainable agricultural development.<sup>117</sup> He also noted that the elderly had been affected by the food shortages, and declining social services and medical care.<sup>118</sup>

49. On 17 May 2006,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 together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rote to the Government concerning reports of governmental decisions to restrict emergency food assistance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an the private sale of grain and fully reinstate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PDS). During the food crisis of the 1990s, a large number of people who depended on their PDS rations died from starvation and many suffered severe malnutrition and hunger as the system broke down. The Government replied, rejecting the communication on the basis that it spread fabricated information.<sup>119</sup>

50. CESCR expressed concern about the alarming increase in maternal mortality rates and recommended that increased attention be paid to providing adequate nutrition to children suffering from chronic malnutrition, and tha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ake measures to improve the conditions of maternal care, including prenatal health services and medical assistance at birth.<sup>120</sup> UNCT noted that neonatal deaths are underreported.<sup>121</sup> A 2008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source indicated that the proportion of children under 5 moderately or severely underweight in 2004 was 23.4 per cent.<sup>122</sup> The Secretary General noted information from UNFPA indicating a sharp increase in the rate of maternal mortality, due primarily to consecutive natural disasters, which had a tremendous negative impact on women's nutritional status, as well as to the collapse of the national economy.<sup>123</sup>

## **9. Right to education and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51. CESCR<sup>124</sup> and CEDAW commended DPRK for its policy, in force since 1972, of providing 11 years of compulsory free universal education, and welcomed the availability of facilities for working mothers.<sup>125</sup> UNCT indicated, based on field observations, that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 relating to, inter alia, net enrolment ratio in primary schools was in all probability fully achieved.<sup>126</sup> The Special Rapporteur noted that the problem lay in the quality of education, which is further hampered by the decline in school facilities. Education is also a key instrument of indoctrination of the population.<sup>127</sup> Children between 14 and 16 have to undergo military training, combined with ideological studies.<sup>128</sup>

52. CRC recommended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ter alia, increase budget allocations to the educational sector, focus on an overall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education provided, ensure that the time allocated to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cluding agricultural work, does not interfere with the child's learning process, and take immediate measures to eliminate the burden of additional costs of schooling.<sup>129</sup>

## 10. Migrants, refugees and asylum-seekers

53. CESCR recommended that national legislation be reviewed in order to eliminate penalties against persons having travelled abroad in quest of employment and better living conditions.<sup>130</sup> CEDAW urged the Government to assist women economic returnees who went abroad without valid travel permits to reintegrate into their families and society and to protect them from all forms of violations of their rights.<sup>131</sup>

54. The Special Rapporteur noted that more restrictions and more severe sanctions had been imposed on departure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stead of the previous practice of imposing fines, prison sentences are now being applied.<sup>132</sup> He further noted that women constitute the majority of asylum-seekers. They are at times accompanied by children, and many seek to reunite with spouses and families in the final asylum country.<sup>133</sup>

55. CRC was concerned about children who cross the border into neighbouring countries who may face harsh treatment upon return or repatriation. It recommended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nsure that no persons under the age of 18 be subjected to punishment for leaving its territory without due authorization.<sup>134</sup>

### III. ACHIEVEMENTS, BEST PRACTICES, CHALLENGES AND CONSTRAINTS

56. CRC noted with appreciation the adoption of the Strategy for the Promotion of Reproductive Health (2006-2010), the Strategy for Prevention of AIDS for 2002-2007, and the Primary Health Care Strategy, the Medicine Strategy and other sector-specific strategies for 2008-2012.<sup>135</sup> The Special Rapporteur noted that the country had formulated a National Programme of Action for the Well-being of Children 2001-2010, reflecting some of the MDGs.<sup>136</sup> UNCT noted that despite gradual improvements in recent years, widespread food shortages, declining health system, lack of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or quality education seriously hamper the fulfilment of human rights of the population.<sup>137</sup>

57. UNCT indicated that health care is by law provided completely free of charge. UNCT also indicated that the existence of a network of health care institutions is a major achievement and an advantage in the provision of health services to children. However, the system has become increasingly vulnerable due to the economic difficulties faced by the country which has led especially to shortages of medicines and other supplies.<sup>138</sup>

58. CRC noted with appreciation the National Plan of Action on Education for All (2003-2015), the compulsory pre-school year, and the School Assistance Fund, aimed to support the reconstruction of schools.<sup>139</sup> The 2004-2006 DPRK-UNICEF Master Plan of Operations noted that economic difficulties have resulted in shortages of textbooks, school materials and fuel for heating during the winters.<sup>140</sup>

59. CESCR was aware of the difficulties faced on many levels and in various areas, including food security, the high cost of rebuilding the infrastructure destroyed, and the declining attendance rate in schools, as a consequence of the natural disasters during the mid-1990s.<sup>141</sup>

60. The Special Rapporteur welcomed the adoption of the 2003 law reforming the antiquated system and the former practice of incarcerating people with disabilities. He further stated that the damage caused by past State practices needed to be rectified: victims of inhumane conditions need to be assisted to recover and be reintegrated fully into society.<sup>142</sup>

#### IV. KEY NATIONAL PRIORITIES, INITIATIVES AND COMMITMENTS

N/A.

#### V. CAPACITY-BUILDING AND TECHNICAL ASSISTANCE

61. The Secretary-General called upon the Government to extend free and full access to United Nations agencies and other humanitarian actors in order for them to be able to carry out their mandates. He expressed hope that through improved cooperation and dialogue, the United Nations would be able to help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up>143</sup>

62. CRC recommended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eek technical assistance: (a) from UNICEF to develop a comprehensive system of collection of dat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sup>144</sup>; (b) from OHCHR, UNICEF and WHO and other relevant agencies, as well as NGO partners,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of the United Nation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sup>145</sup>, and use the recommendations of the Study as a tool for action<sup>146</sup>; (c) from, *inter alia*, UNICEF as regards street children<sup>147</sup>; (d) from UNICEF and the UN Interagency Panel on Juvenile Justice in the area of juvenile justice.<sup>148</sup>

63. CESCR recommended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its efforts aimed at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under the Covenant, continue to seek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engage itself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 the regional activities undertaken by international and regional agencies, including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sup>149</sup>

#### Notes

<sup>1</sup> Unless indicated otherwise, the status of ratifications of instruments listed in the table may be found in *Multilateral Treaties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Status as at 31 December 2006* (ST/LEG/SER.E.25), supplemented by the official website of the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database, Office of Legal Affairs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http://treaties.un.org/>.

<sup>2</sup> The following abbreviations have been used for this document:

ICERD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SCR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P-ICESCR	Optional Protocol to ICESCR
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OP 1	Optional Protocol to ICCPR
ICCPR-OP 2	Second Optional Protocol to ICCPR,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P-CEDAW	Optional Protocol to CEDAW
CAT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P-CAT	Optional Protocol to CAT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P-CRC-AC	Optional Protocol to CRC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OP-CRC-SC	Optional Protocol to CRC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ICRMW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P-CRPD	Optional Protocol to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ED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sup>3</sup> On 27 August 1997, the Secretary-General received a notification of withdrawal from the Covenant. As the Covenant does not contain a withdrawal provision,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forwarded on 23 September 1997 an aide-mémoire to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plaining the legal position arising from the above notification. As elaborated in this aide-mémoire, the Secretary-General is of the opinion that a withdrawal from the Covenant would not appear possible unless all States Parties to the Covenant agree to such a withdrawal. The above notification of withdrawal and the aide-mémoire were duly circulated to all States Parties under cover of C.N.467.1997.TREATIES-10 of 12 November 1997 (<http://treaties.un.org/>).

<sup>4</sup> Austria,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Ireland, Netherlands, Norway, Portugal, Spain,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objected to the reservations relating to article 2, paragraph (f), and article 9, paragraph 2.

<sup>5</sup>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in its resolution 63/117 of 10 December 2008, in which the General Assembly recommended that a signing ceremony be organized in 2009. Article 17, paragraph 1, of OP-ICESCR states that "The present Protocol is open for signature by any State that has signed, ratified or acceded to the Covenant".

<sup>6</sup>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sup>7</sup>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its 1967 Protocol, 1954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and 1961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sup>8</sup> Geneva 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Wounded and Sick in Armed Forces in the Field (First Convention); Geneva 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Wounded, Sick and Shipwrecked Members of Armed Forces at Sea (Second Convention); Convention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Third Convention);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Fourth Convention);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I);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II);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Adoption of an Additional Distinctive Emblem (Protocol III). For the official status of ratifications, see 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of Switzerland, at [www.eda.admin.ch/eda/fr/home/topics/intla/intrea/chdep/warvic.html](http://www.eda.admin.ch/eda/fr/home/topics/intla/intrea/chdep/warvic.html).

<sup>9</sup>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vention No. 29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Convention No. 105 concerning the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No. 87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Convention No. 98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Right to Organize and to Bargain Collectively; Convention No. 100 concerning Equal Remuneration for Men and Women Workers for Work of Equal Value; Convention No. 111 concerning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No. 138 concerning Minimum Age for Admission to Employment; Convention No. 182 concerning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sup>10</sup>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CRC/C/PRK/CO/4, para. 32 (f); CEDAW,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ixtieth session, Supplement No. 38 (A/60/38)*, para. 74.

<sup>11</sup> CESCR, *Official Record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2004, Supplement No. 2, (E/2004/22)*, concluding observations, para. 540.

<sup>12</sup> A/60/38, para. 74.

<sup>13</sup> CRC/C/PRK/CO/4, para. 75.

<sup>14</sup> A/60/38, para. 71.

<sup>15</sup> E/2004/22, para. 541.

<sup>16</sup> CRC/C/PRK/CO/4, para. 61 (d).

<sup>17</sup> *Ibid.*, para. 69.

<sup>18</sup> A/HRC/10/18, para 18. See also A/HRC/4/15, paras. 2 and 11; A/60/306, para. 7.

<sup>19</sup> A/63/332, para. 57.

<sup>20</sup> UNICEF,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6, p. 44, available at <http://www.unicef.org/publications/files>.

<sup>21</sup> For the list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with accreditation status granted by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 see A/HRC/10/55, annex I.

<sup>22</sup> A/60/38, para. 47.

<sup>23</sup> A/HRC/10/18, para. 53.

<sup>24</sup> A/62/264, para. 58.

<sup>25</sup> CRC/C/PRK/CO/4, para. 15.

<sup>26</sup> A/60/38, para. 50.

<sup>27</sup> Se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9/113 B and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6/24. See also letters from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dated 9 January 2006 and 10 December 2007, see <http://www2.ohchr.org/english/issues/education/training/Summary-national-initiatives2005-2009.htm>.

<sup>28</sup> The following abbreviations have been used for this document:

CESCR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CPR	Human Rights Committee
CEDAW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RC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sup>29</sup> E/CN.4/2006/35, para. 81 (a).

<sup>30</sup> Ibid., para. 81 (j).

<sup>31</sup> The questionnaires included in this section are those which have been reflected in an official report by a special procedure mandate-holder.

<sup>32</sup> See (a)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A/HRC/4/29), questionnaire on the right to educ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ent in 2006; (b)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A/HRC/4/24), questionnaire on the impact of certain laws and administrative measures on migrants sent in 2006; (c)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A/HRC/4/23), questionnaire on issues related to forced marriages and trafficking in persons sent in 2006; (d)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E/CN.4/2006/95 and Add.5), questionnair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mote and Protect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sent in June 2005; (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indigenous people (A/HRC/6/15), questionnaire on the human rights of indigenous people sent in August 2007; (f)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in women and children (E/CN.4/2006/62)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E/CN.4/2006/67), joint questionnai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fficking and the demand for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sent in July 2005; (g)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E/CN.4/2006/45), questionnaire on the right to education for girls sent in 2005; (h)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mercenaries (A/61/341), questionnaire concerning its mandate and activities sent in November 2005; (i)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A/HRC/4/31), questionnaire on the sale of children's organs sent on July 2006; (j)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A/HRC/7/8), questionnaire on assistance and rehabilitation programmes for child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sent in July 2007; (k)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A/HRC/4/35/Add.3), questionnaire on human rights policies and management practices; (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A/HRC/8/10), questionnaire on the right to education in emergency situations sent in 2007; (m)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June 2009) (A/HRC/11/8), questionnaire on the right to education for persons in detention; (n) 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on the question of human rights and extreme poverty to the eleventh session of the HRC (June 2009) (A/HRC/11/9), questionnaire on Cash Transfer Programmes sent in October 2008; (o)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June 2009) A/HRC/11/6, questionnaire on violence against women and political economy.

<sup>33</sup> A/HRC/10/16.

<sup>34</sup> A/63/332, para. 11.

<sup>35</sup> Ibid., para. 59.



- <sup>36</sup> Ibid., para. 58.
- <sup>37</sup> Ibid., para. 2.
- <sup>38</sup> Ibid., summary.
- <sup>39</sup> A/HRC/10/18, para. 21.
- <sup>40</sup> A/HRC/7/20, para. 15.
- <sup>41</sup> A/63/322, para. 46.
- <sup>42</sup> A/60/38, para. 53.
- <sup>43</sup> E/2004/22, para. 522.
- <sup>44</sup> A/60/38, paras. 41-42.
- <sup>45</sup> Ibid., para. 55.
- <sup>46</sup> E/2004/22, paras. 528, 548.
- <sup>47</sup> A/HRC/10/18, para. 42. See also E/CN.4/2006/35, para. 24; A/60/306, paras. 39-40.
- <sup>48</sup> CRC/C/PRK/CO/4, para. 19.
- <sup>49</sup> E/CN.4/2006/35, para. 29.
- <sup>50</sup> CRC/C/PRK/CO/4, para. 20.
- <sup>51</sup> E/2004/22, paras. 534, 555.
- <sup>52</sup> A/HRC/10/18, para. 23. See also A/63/332, para. 5.
- <sup>53</sup> A/HRC/7/20, para. 26.
- <sup>54</sup> A/56/2001, para. 86 (4), (13).
- <sup>55</sup> A/HRC/10/5/Add.1, paras. 46-47.
- <sup>56</sup> E/CN.4/2006/56, para. 188.
- <sup>57</sup> A/62/264, para. 58.
- <sup>58</sup> CRC/C/PRK/CO/4, paras. 23-24.
- <sup>59</sup> A/HRC/4/15, para. 13.
- <sup>60</sup> A/HRC/10/18, para. 24.
- <sup>61</sup> A/HRC/10/18, para. 21. See also A/60/306, para. 19.
- <sup>62</sup> A/63/332, para. 5.
- <sup>63</sup> A/56/2001, para. 86 (16).
- <sup>64</sup> Follow-up response provid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CPR/CO/72/PRK/Add.1 (2002), paras. 1-3.
- <sup>65</sup> CRC/C/PRK/CO/4, paras. 31, 32 (a)-(c).
- <sup>66</sup> Ibid., para. 36.
- <sup>67</sup> E/CN.4/2006/52/Add.1, paras. 62-63.
- <sup>68</sup> Ibid., paras. 62-63.
- <sup>69</sup> A/HRC/4/33/Add.1, p. 78; E/CN.4/2006/52/Add.1, para. 63.
- <sup>70</sup> A/HRC/10/18, para. 42. See also E/CN.4/2006/35, para. 24; A/60/306, paras. 39-40.
- <sup>71</sup> CRC/C/PRK/CO/4, paras. 67-68.
- <sup>72</sup> 2008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63/332, para. 53.
- <sup>73</sup> CRC/C/PRK/CO/4, paras. 67-68.
- <sup>74</sup> A/HRC/10/18, para. 25. See also A/63/332, para. 4.
- <sup>75</sup> E/2004/22, paras. 518, 537.

- <sup>76</sup> A/56/2001, para. 86 (15).
- <sup>77</sup> A/HRC/10/18, para. 53.
- <sup>78</sup> CRC/C/PRK/CO/4, paras. 70-71, 73.
- <sup>79</sup> A/HRC/7/20, para. 40.
- <sup>80</sup> A/HRC/10/18, para. 32.
- <sup>81</sup> A/HRC/7/20, para. 42.
- <sup>82</sup> A/HRC/4/15, para. 59.
- <sup>83</sup> CRC/C/PRK/CO/4, paras. 34-35, 37 (f).
- <sup>84</sup> E/2004/22, paras. 529, 550.
- <sup>85</sup> A/63/332, para. 53.
- <sup>86</sup> A/HRC/10/18, para. 35. See also E/CN.4/2006/35, para. 13; A/61/349, para. 21.
- <sup>87</sup> A/56/2001, para. 86 (20).
- <sup>88</sup> A/63/332, para. 4.
- <sup>89</sup> A/HRC/10/18, para. 33. See also A/HRC/4/15, para. 16; E/CN.4/2006/35, para. 19; A/60/306, para. 36; A/61/349, para. 30.
- <sup>90</sup> A/56/2001, para. 86 (22).
- <sup>91</sup> CCPR/CO/72/PRK/Add.1 (2002), paras. 4-6.
- <sup>92</sup> A/HRC/4/15, para. 14.
- <sup>93</sup> A/HRC/10/18, para. 29.
- <sup>94</sup> A/56/2001, para. 86 (23).
- <sup>95</sup> CCPR/CO/72/PRK/Add.1 (2002), paras. 7-10.
- <sup>96</sup> A/56/2001, para. 86 (24).
- <sup>97</sup> CCPR/CO/72/PRK/Add.1 (2002), para. 11.
- <sup>98</sup> UNCT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bmission to the UPR, p. 3. See also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coordinated data and analyses, available at <http://mdgs.un.org/unsd/mdg>.
- <sup>99</sup> A/HRC/10/18, para. 40. See also, A/HRC/7/20, para. 36; E/CN.4/2006/35, para. 22; A/60/306, para. 37; A/61/349, para. 33.
- <sup>100</sup> A/HRC/7/20, para. 8.
- <sup>101</sup> A/56/2001, para. 86 (25).
- <sup>102</sup> CRC/C/PRK/CO/4, para. 13.
- <sup>103</sup> A/56/2001, para. 86 (11).
- <sup>104</sup> E/2004/22, paras. 523, 543.
- <sup>105</sup> UNCT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bmission to the UPR, p. 3.
- <sup>106</sup> A/60/38, p. 32.
- <sup>107</sup> A/HRC/7/20, para. 35.
- <sup>108</sup> A/HRC/10/18, para. 41. See also A/HRC/7/20, para. 13.
- <sup>109</sup> CRC/C/PRK/CO/4, paras. 60-61.
- <sup>110</sup> UNCT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bmission to the UPR, p. 2.
- <sup>111</sup> CRC/C/PRK/CO/4, paras. 50-51.
- <sup>112</sup> UNCT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bmission to the UPR, p. 5.
- <sup>113</sup> A/60/38, p. 60.



- <sup>114</sup> A/63/332, para. 6.
- <sup>115</sup> UNCT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bmission to the UPR, p. 2.
- <sup>116</sup> E/2004/22, paras. 527 and 530.
- <sup>117</sup> A/63/322, para. 62.
- <sup>118</sup> E/CN.4/2006/35, para. 31.
- <sup>119</sup> A/HRC/4/30/Add.1, paras. 20-21
- <sup>120</sup> E/2004/22, paras. 532, 552-553.
- <sup>121</sup> UNCT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bmission to the UPR, p. 3.
- <sup>122</sup>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coordinated data and analyses, available at <http://mdgs.un.org/unsd/mdg>.
- <sup>123</sup> A/63/332, para. 51.
- <sup>124</sup> E/2004/22, para. 516.
- <sup>125</sup> A/60/38, paras. 31-32.
- <sup>126</sup> UNCT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bmission to the UPR, p. 2.
- <sup>127</sup> A/HRC/4/15, para. 33.
- <sup>128</sup> A/HRC/10/18, para. 46.
- <sup>129</sup> CRC/C/PRK/CO/4, paras. 52, 54 (a)-(d).
- <sup>130</sup> E/2004/22, paras. 524, 544.
- <sup>131</sup> A/60/38, para. 60.
- <sup>132</sup> A/HRC/10/18, para. 38. See also A/HRC/7/20, para. 29; A/HRC/4/15, para. 22.
- <sup>133</sup> A/HRC/10/18, para. 43. See also A/HRC/7/20, para. 29; A/HRC/4/15, paras. 24-27; A/60/306, paras. 26-31; A/61/349, para. 20.
- <sup>134</sup> CRC/C/PRK/CO/4, paras. 56-57.
- <sup>135</sup> Ibid., paras. 3 (a)-(c), 44-45.
- <sup>136</sup> A/HRC/7/20, para. 39.
- <sup>137</sup> UNCT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bmission to the UPR, p. 1.
- <sup>138</sup> Ibid., p. 4. See also UNICEF,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orea, 2006, p. 40, available at <http://www.unicef.org/publications/files>.
- <sup>139</sup> CRC/C/PRK/CO/4, paras. 53, 55 (a)-(d).
- <sup>140</sup>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UNICEF Master Plan of Operations, Country Program of Operations 2004-2006, p. 4.
- <sup>141</sup> E/2004/22, paras. 517, 533.
- <sup>142</sup> A/HRC/10/18, para. 48.
- <sup>143</sup> A/62/318, para. 44.
- <sup>144</sup> CRC/C/PRK/CO/4, para. 18.
- <sup>145</sup> A/61/299.
- <sup>146</sup> CRC/C/PRK/CO/4, para. 33.
- <sup>147</sup> Ibid., para. 65.
- <sup>148</sup> Ibid., para. 74.
- <sup>149</sup> E/2004/22, para. 536.

-----



**General Assembly**

Distr.  
GENERAL

A/HRC/WG.6/6/PRK/3  
28 August 2009

Original: ENGLISH

---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Sixth session  
Geneva, 30 November-11 December 2009

**SUMMARY PREPARED BY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C)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The present report is a summary of 12 stakeholders' submissions<sup>1</sup> to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It follows the structure of the general guidelines adopt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It does not contain any opinions, views or suggestions on the part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nor any judgement or determination in relation to specific claims. The information included herein has been systematically referenced in endnotes and, to the extent possible, the original texts have not been altered. Lack of information or focus on specific issues may be due to the absence of submissions by stakeholders regarding these particular issues. The full texts of all submissions received are available on the OHCHR website. The report has been prepar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four-year periodicity of the first cycle of the review.

---

\* The present document was not edited before being sent to the United Nations translation services.

## **I. BACKGROUND AND FRAMEWORK**

### **A. Scope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1. Human Rights Watch (HRW) informed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s a party to four ma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sup>2</sup>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CSW) urged the DPRK to ensure that its policy and practice is reflective of the international treaties which it has bound itself to.<sup>3</sup>

### **B. Constitutional and legislative framework**

2. According to CSW, the DPRK's Constitution guarantees, in basic form, the human rights identified by the UN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However, the interpretation of these rights differs from internationally recognised standards. The Government argues that developmental rights take precedence ov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moreover, such rights are guaranteed not as rights, but awarded at the goodwill of the leadership<sup>4</sup>. CSW recommended that the Constitution be modernised further, human rights protected and recognised as equal, innate and inalienable.<sup>5</sup>

3. Amnesty International (AI) noted that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enshrin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treaties to which the DPRK is a party remain largely unprotected by domestic legislation.<sup>6</sup> Citizen'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Korean Bar Association (NKHR/KBA) noted that there are still substantial discrepancies between institutional (or legal) stipulations and their practice, whereby discriminatory social class policies and socio-political control continue to infringe on basic rights.<sup>7</sup>

4. AI called on the Government to: implement, as a matter of urgency, the recommendations of UN human rights treaty bodies and charter-based bodies, including ensuring that adequate human rights legislation is introduced and implemented; and ratify, incorporate into domestic legislation and implement in policy and practice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s.<sup>8</sup>

5. HRW informed that the DPRK's laws, including its labor laws, are based on the country's state ideologies of "*juche*" (self-reliance), socialism, communism and the policies of the Workers' Party. Guiding principles or instructions from late President Kim Il Sung have legal force that supersedes the Constitution or laws.<sup>9</sup>

### **C. Institutional and human rights infrastructure**

6. Life Funds for North Korean Refugees/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LFNKR/HRWF) informed that there are no national mechanisms for redress of human rights abuses. They added that there does not appear to be a civil society as such in the DPRK.<sup>10</sup>

7.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Peace Network/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CHRC/PN/SARANGBANG) proposed that the DPRK make transparent the activities of its domestic human rights regime, including the National Coordination Committee for the implementation of CEDAW and the National Coordination Committe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RC. They further proposed devising human rights protection functions at these institutions and expected the DPRK to: establish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that are independent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participate in exchanging opinions on human rights issues with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participate activel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member.<sup>11</sup>

#### **D. Policy measures**

8. NKHR/KBA indicat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country will have to be positioned as the utmost priority.<sup>12</sup> CHRC/PN/SARANGBANG expressed hope that the Government will examine the country's human rights situation and improve it.<sup>13</sup>

## **II.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ON THE GROUND**

### **A. Cooperation with human rights mechanisms**

9. AI mentioned that the Government continues to deny access to independent human rights monitors<sup>14</sup> and called on it to grant access to all UN Special Procedures requesting a visit, in particular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and independent monitors.<sup>15</sup> Similar information was reported by HRW<sup>16</sup>, LFNKR/HRWF<sup>17</sup>, Open Doors International (ODI)<sup>18</sup>, Jubilee Campaign (JC)<sup>19</sup> and CSW.<sup>20</sup>

10. AI welcomed the submission of the combined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 to the CRC Committee by the DPRK and its participation in the Committee's review. However, in previous years, AI has noted with concern that the Government has consistently failed to implement recommendations by this and other treaty bodies or to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on their implementation.<sup>21</sup>

### **B.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taking into account applicabl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1. Equality and non discrimination**

11. CSW reported that, though less explicitly than in the past, the "*seongbun*" (social status by birth) discriminatory system stands in clear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spite of constitutional guarantees.<sup>22</sup> The Asia Centre for Human Rights (ACHR) indicated that discrimination based on the surveillance of the family background and social origins was institutionalized in the 1960s into a legal system that resembles the caste system in other countries.<sup>23</sup> HRW mentioned that the Government divides the population into different categories "core," "wavering" and "hostile" based on its assessment of an individual's political loyalty.<sup>24</sup>

12. ACHR noted that this system ultimately creates gaps in the society in terms of 'good' and 'bad' citizens and their access to food, health care, university education or occupation.<sup>25</sup>

According to NKHR/KBA, DPRK authorities deny the existence of any such classification. However, North Korean refugees have repeatedly confirmed both the existence of this system and its continued use.<sup>26</sup> ACHR recommended that the DPRK make available to the UN system all secret legal documents and regulations in force that have relevance to the operation of the caste system and that this system be fully abolished.<sup>27</sup> A similar recommendation was made by CSW.<sup>28</sup>

13. CHRC/PN/SARANGBANG indicated that the DPRK has taken action in law and policy to promote women's participation in society by acceding to CEDAW. However, they were still concerned that the DPRK emphasize women's role in child rearing, and does not consider differences in the age for marriage between men and women a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HRC/PN/SARANGBANG added that these points condone the tradition and national customs, enforcing a discriminatory gender role upon women.<sup>29</sup>

14. CHRC/PN/SARANGBANG stated that the social pressure on women to give birth to children against their own will is a form of discrimination and hoped that the Government will make efforts in establishing population policies that will improve women's rights to health and self-determination.<sup>30</sup>

## **2.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

15. AI mentioned that the death penalty is carried out in secrecy in the DPRK. Executions are typically by firing squad or hanging, and there are reports of public and extrajudicial executions. Public executions, a breach of the DPRK's own penal code, are used to set an example to others, and although there has been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crimes carrying the death penalty, four of the five remaining offences are essentially political offences with such broad terms that they risk being applied subjectively.<sup>31</sup>

16. CHRC/PN/SARANGBANG considered to be positive the DPRK's intention, stated in its second periodic report to the HR Committee (1999) to completely abolish the death penalty and to prescribe more strictly the elements of crime for death penalty in criminal law. For these organisations, an analysis of the reality is impossible because the number of cases and charges of death penalty are not released. Moreover, DPRK's explanation is necessary regarding several reports on public executions performed, and the death penalty enforced in accordance with decrees or directions, not with the legal procedures like the Criminal Procedures Act. CHRC/PN/SARANGBANG opposed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s a tool to discipline people based on fear and hoped that the DPRK release information on the number of cases, charges and methods of death penalty and take effective measures to completely abolish it.<sup>32</sup>

17. According to CSW, DPRK defectors give testimonies of executions taking place both inside and outside the detention and prison system. Inside, the penalty has reportedly been carried out for acts such as foraging for or stealing food, attempting to escape, rioting, assaulting guards, refusing to abandon religious beliefs and criticizing the country. It has also been used as a punishment for those North Koreans, repatriated from a neighbouring country, who have had contact with South Koreans or Christians. Outside the prison system, the acts subject to execution are often simple efforts such as those to secure food.<sup>33</sup> AI called on the Government to immediately end public and extrajudicial executions, and to introduce a formal moratorium on executions as a first step towards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sup>34</sup>

18. CSW said that pregnancies are generally disallowed inside prisons, and testimonies suggest that, should efforts by authorities to induce abortion not be successful, babies alive at birth are killed. Women detained for having crossed the border into a neighbouring country have suffered similar treatment. Some accounts even describe prisoners being forced to kill their newly born child.<sup>35</sup> Similar information was reported by the Centre for Human Rights and Peace/Korean War Abductees Research Institute (CHRP/KWARI)<sup>36</sup> and LFNKR/HRWF,<sup>37</sup> which also indicated that North Korean women who cross the border with a neighbouring country and are found to be pregnant upon their return are commonly forced to undergo abortion.<sup>38</sup>

19. According to AI, DPRK's policy of abduction and enforced disappearance has continued since the Korean War (1950-53). Ten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s, as well as nationals from other countries, have been abducted by the DPRK. North Korean family members of suspected dissidents have disappeared or been punished under the principle of "guilt by association". In the majority of cases, the authorities have refused to acknowledge that these individuals are being detained or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ir fate or whereabouts.<sup>39</sup> Similar information was provided by CHRP/KWARI.<sup>40</sup> AI called on the Government to: publicly condemn and immediately stop all abductions and enforced disappearances; thoroughly and impartially investigate past and current allegations of abductions and enforced disappearances; make public official, accurate and conclusive information on the fate and whereabouts of all persons subjected to abduction or enforced disappearance; and ensure that all persons subjected to abduction or enforced disappearance be free to leave North Korea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unless they are charged with a recognizable criminal offence.<sup>41</sup>

20. JC noted that the Government has no restrictions on its ability to detain, imprison, or hold its citizens incommunicado in practice, despite the fact that under the penal code a prosecutor's approval is required. People are often sent to political camps without fair trial.<sup>42</sup> HRW mentioned that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lack of due process and torture and other mistreatment remain serious concerns.<sup>43</sup>

21. NKHR/KBA said that there are various kinds of detention camps, including 6 large colonies for political detainees and facilities for detaining the increasing number of homeless and vagrants resulting from the 1990s famine. The most serious human rights abuses occur in the political prison camps, more exactly, political penal-labor colonies. Their official name is "Management Center" (*Gwalliso*).<sup>44</sup>

22. NKHR/KBA reported that there are two kinds of punishment facility (*Guryujang*) for political detainees. The first is for preliminary examination, while the second is located within the prison camp. Detainees undergo severe physical and mental torture in both facilities, and most of those sent to the latter do not survive.<sup>45</sup> AI reported that prisoners in general are forced to undertake physically demanding work often for 10 hours or more a day, with no rest days.<sup>46</sup> CSW<sup>47</sup> and NKHR/KBA<sup>48</sup> reported similar information.

23. AI stated that prisoners are punished if suspected of lying, not working fast enough or forgetting the words of patriotic songs. It noted that due to the combination of forced hard labour, inadequate food, beatings, lack of medical care, unhygienic living conditions, many prisoners fall ill, and some have died in custody or soon after release.<sup>49</sup> CSW reported similar information.<sup>50</sup> AI called on the Government to: take immediate action to stop the use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of prisoners and forced labour in prison camps; ensure that international

standards are applied in the treatment of prisoners; and improve conditions in prison camps and detention facilities to meet minimum international standards.<sup>51</sup>

24. CHRC/PN/SARANGBANG proposed to the Government to carry out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detention facilities and to release the results. They expected the Government to enhance the supervisory function of detention facilities through an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system.<sup>52</sup> NKHR/KBA said that as the Government denies the existence of any political prison camp, it has to allow UN representatives and international NGOs to visit the following places: *Gwalliso* no. 14 Kaecheon, *Gwalliso* no. 15 Yodeok, *Gwalliso* no. 16 Hwaseong, *Gwalliso* no. 18 Bukchang, *Gwalliso* no. 22 Haengyong, and *Gwalliso* no. 25 Cheongjin. They recommended that all political prison camps be dismantled, and detainees be released immediately.<sup>53</sup>

25. According to NKHR/KBA, the procedures of arresting and detaining political criminals are against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 military who has committed a mistake may be detained, for an undetermined period, in a closed labor facility. There is also a closed detention facility where only anti-government military officers are detained. In these facilities, detainees cannot be protected by the law.<sup>54</sup>

26. NKHR/KBA stated that the arrest and detention procedures are against DPRK domestic laws and the ICCPR. The system of guilt by association, property confiscation and the withdrawal of a citizen’s registration card, which are applicable to lineal family members, are in violation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sup>55</sup> CSW mentioned that the Government practices the principle of guilt by association and social classification of the prisoner. Without a legal basis, up to three generations – grandparents, parents and children – related to the accused can be incarcerated.<sup>56</sup> HRW reported that North Korean children face discrimination and punishment on the basis of the status, activities, opinions or beliefs of their parents, or other family members, and that collective punishment is common for political offenses.<sup>57</sup>

27. HRW stated that trafficking of North Korean women and girls to a neighbouring country persists, especially near the border, and that victims are often abducted or duped into marriage, prostitution, or sexual slavery.<sup>58</sup> According to JC, the Government neither acknowledges the issue of trafficking in general, nor differentiates between trafficking and illegal border crossings for economic or political reasons. The Government appears to make no effort to implement laws that would protect victims of sex and labor trafficking.<sup>59</sup> Similar information<sup>60</sup> was provided by CHRP/KWARI, which noted that the more serious cases of violence against women are mental and physical abuses that female defectors experience when they fall victim to human trafficking.<sup>61</sup> JC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implement a system of identification to protect victims of trafficking and permit NGOs to be in the country to run these projects.<sup>62</sup>

28. For ACHR, reports presented by the authorities evade reporting on torture or abuse against children carried out by national investigative agencies or in various detention facilities.<sup>63</sup> ACHR stated that there were reports on cases of children being sentenced to death, that DPRK authorities make watching public executions a compulsory participation for children in a hope to prevent juvenile crime, and that there were reports on cases of 11 year-old children sent to forced labor camp for stealing electric wires. Custody facilities serving the purpose of protecting children without parents, or those forcibly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resemble rather a



detention facility more than a protection facility, and children in these centres are deprived of education and exploited for labor.<sup>64</sup>

29. ACHR said that, despite the fact that the minimum working age defined by law is 16 years old, it is commonly accepted that children are mobilized for agricultural work from their middle-school years (12 years old). In the poverty-stricken Northern provinces, children are mobilized as early as 8-9 years old. Children also have other “assignments” such as raising rabbits, but also are mobilized for heavy labour, such as flood damage recovery, railway maintenance and road paving.<sup>65</sup>

30. According to the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GIEACPC), corporal punishment is lawful in the home and children have limited protection from violence and abuse under the Family Law, the Criminal Law and the Law on Nursing and Upbringing of Children, as these laws are not interpreted as prohibiting all corporal punishment.<sup>66</sup> Government policy states that corporal punishment should not be used in schools but there is no explicit prohibition in law.<sup>67</sup> In the penal system, corporal punishment appears to be unlawful as a sentence for crime for young people under 18 years. However, it has yet to confirm that it is not an element of the “public education” measures that may be imposed on children aged 15-16 (Criminal Law, article 49). There was unconfirmed information that corporal punishment appears to be unlawful as a disciplinary measure in penal institutions.<sup>68</sup> GIEACPC also stated that there is no explicit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in alternative care settings<sup>69</sup> and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introduce legislation to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in all settings.<sup>70</sup>

31. CHRP/KWARI mentioned that the high frequency in domestic violence may be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and poor awareness and that it could be improved only after economic growth and efforts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this issue.<sup>71</sup>

### **3. Administration of justice, including impunity and the rule of law**

32. CSW indicated that a tenuous separation of powers ensures that the DPRK judiciary does not function as an independent branch of the Government: all judicial appointments are made by the executive, the judiciary does not engage in judicial review of legislation, and its functions are exercis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sup>72</sup> It noted that those accused of breaching criminal law are generally subject to formal judicial procedures, while those considered to be political offenders have no recourse to them and that the latter are removed, investigated, typically under torture, and their cases are decided by the State Security Protection Agency. There is no access to legal counsel or the possibility of challenging the legality of detention.<sup>73</sup> LFNKR/HRWF stated that there is no judicial mechanism where North Koreans can be heard by an impartial judge, and where allegations of wrongdoing by authorities can be answered.<sup>74</sup>

33. CSW recommended a review of the political, legislative and judicial system so as to ensure a judiciary, which is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nd that all professionals involved in the system of justice be trained on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sup>75</sup>



#### **4. Right to privacy, marriage and family life**

34. ACHR reported that discrimination based on the surveillance of family background and social origins, has been coupled since the 1990s with practices of monitoring the remaining family and children of individuals who have defected or have a history of crossing the border to a neighbouring country. Some children reported that they were compelled to abandon their homes to escape surveillance, and that other children suffered because entire families were exiled to remote mountainous areas as a punishment for the defection or for so called ‘anti-socialist’ behaviour of other family members.<sup>76</sup>

#### **5. Freedom of movement**

35. HRW indicated that since the mid-1990s, hundred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s have crossed into a neighbouring country and that they include those fleeing political and religious persecution, and people who left because of the food shortage or other economic reasons. HRW stated that leaving the country without state permission is considered an act of treason, punishable by lengthy prison terms and even the death penalty. Some children who have crossed the border without permission have been subjected to detention and severe ill-treatment upon return. LFNKR/HRWF<sup>77</sup>, AI<sup>78</sup>, JC<sup>79</sup> and CSW<sup>80</sup> reported similar information.

36. HRW recommended the Government to allow all North Korean citizens to travel freely in and out of the country; stop punishing North Koreans who are repatriated; treat migrant and trafficked children as victims and not as criminals, and provide them with the necessary support and counselling for reintegration.<sup>81</sup> CSW recommended that, instead of criminalising the victims, the Government focus on addressing the root causes behind the refugees’ plight.<sup>82</sup>

#### **6.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expression,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 and right to participate in public and political life**

37. HRW stated that there is no freedom of religion in the DPRK<sup>83</sup> and that the Government has persistently persecuted religious-active people, typically categorizing them as “hostile elements”.<sup>84</sup> CSW added that, despite stated respect for religious freedom in the Constitution, repression has been brutal<sup>85</sup>, and that,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 has overtly attempted to demonstrate greater religious freedom, establishing some state-controlled religious bodies and allowing a few places of worship to function, albeit under tight restrictions.<sup>86</sup>

38. ODI added that the possession of a bible or other religious literature is illegal and that it is forbidden to share one’s religion or to be engaged in proselytizing.<sup>87</sup> Similar information was provided by JC.<sup>88</sup> The European Centre for Law and Justice (ECLJ) noted that observers of mono-theistic religions must violate their religious views and worship or face severe punishment.<sup>89</sup> ODI recommended that the DPRK immediately release all prisoners of conscience and dismantle labour camps,<sup>90</sup> review the laws regarding religious groups and organizations, and make sure that they comply with the obligations under the ICCPR.<sup>91</sup> CSW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respect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as enshrined in international law.<sup>92</sup>

39. HRW noted that there is no organized political opposition, independent labor unions, free media, or civil society.<sup>93</sup> JC indicated that no freedoms of press, assembly, petition, or

association were respected in practice even though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sup>94</sup> AI mentioned that in 2008, long distance telephone calls were reportedly blocked to prevent news of food shortages from spreading and that there were also reports that local authorities arrested individuals who watched videos from a neighbouring country or were in possession of unauthorised mobile phones.<sup>95</sup>

40. According to LFNKR/HRWF criticism of the leadership, whether or not overt, is punished severely.<sup>96</sup> CHRC/PN/SARANGBANG were concerned that the realization of “Uniform guidance to publication industry” and “Singular guidance”, presented in Article 4 of the Press Law, can repress critical opinions and damage freedom of thought and conscience.<sup>97</sup>

41. For LFNKR/HRWF elections are not free: the leadership is approved by a rubber-stamp Parliament, the members of which are chosen by the Workers’ Party. Since there is only one political party which controls all aspects of citizens’ life, dissent is not possible. The lack of freedom of assembly in public and the existence of only Party-controlled media make it impossible to express dissenting opinions; those who do so are punished severely and as a result, there is no meaningful “public life” or “political life” as such.<sup>98</sup> LFNKR/HRWF urged the Government to allow a variety of media and other non-State-controlled information.<sup>99</sup>

## **7. Right to work and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42. According to HRW, the State has full control over the labor market, including labor organizations. Under DPRK’s law, there is no concept of an employment contract, as workers are assigned to their jobs by state labor administrative agencies under the control of the Workers’ Party. The state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basic services such as food, health care, education and housing; in return for their labor, workers are paid a small amount of remuneration in cash or coupons to cover items such as supplementary food, clothes and furniture.<sup>100</sup> LFNKR/HRWF reported similar information<sup>101</sup> and urged the Government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private enterprise.<sup>102</sup>

43. HRW reported that the law governing working conditions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falls far short of international standards<sup>103</sup> and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amend this law to: explicitly protect workers’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explicitly prohibit sex discrimination and sexual harassment; and prohibit the assignment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to dangerous or hazardous jobs. It also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enforce existing provisions of Labour Law effectively and allow workers to receive payment directly from their employers.<sup>104</sup>

44. HRW said that in some countries where North Koreans have reportedly migrated for employment, concern was expressed for workers’ basic rights, including efforts by the DPRK Government to restrict freedom of movement, expression and association, the presence of “minders”, and indirect salary payments under which large portions of salaries are allegedly recouped by agencies or by the Government.<sup>105</sup> It recommended that the DPRK join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ccede to its core treaties, and invite ILO officials to investigate and discuss protection and promotion of workers’ rights, and allow thorough on-site investigations abroad, where North Koreans work.<sup>106</sup>

## **8.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45. HRW said that the DPRK has largely recovered from a famine in the mid-late 1990s that killed millions of people, but that serious food shortages persist and vulnerable members of the population, including young children, pregnant and nursing women, the disabled and elderly, still suffer.<sup>107</sup> Non-elite members of the society are almost completely dependent on markets to access food and other necessities, since the ration system is deficient. They receive rations a few times each year, typically on major national holidays and only a small minority, mostly high-ranking members of the Workers' Party and the security and intelligence forces, still receive regular rations.<sup>108</sup> NKHR/KBA reported similar information<sup>109</sup> and added that the soaring of food prices is causing an enormous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North Korean residents. Socially powerful groups have food rations and accumulate wealth through embezzling foreign aid.<sup>110</sup>

46. HRW reported that since the mid-1990s, the DPRK has received a large amount of foreign aid each year, but has consistently limited access to international humanitarian aid workers monitoring aid distribution inside the country.<sup>111</sup> HRW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1) allow international humanitarian agencies, including the UN World Food Programme, to resume necessary food supply operations and to properly monitor aid according to normal international protocols, which include having access to the entire country, being able to make unannounced visits, and being able to select interviewees at random;<sup>112</sup> (2) ensure that its distribution system is both fair and adequately supplied, or permit citizens alternative means to obtain food, including access to markets and aid; (3) end discrimination in government distribution of food in favour of high-ranking Workers Party officials, military, intelligence and police officers; and (4) assist young children, pregnant and nursing women,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as priority recipients of food aid.<sup>113</sup>

47. According to CHRC/PN/SARANGBANG, Government's efforts to solve these problems are positive. Yet, the priority given to the military in the distribution of goods is worrisome.<sup>114</sup> AI mentioned that the Government has failed to seek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needed to ensure minimum essential levels of food for the whole population.<sup>115</sup>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 neighbouring country should provide humanitarian aid that the DPRK should accept without conditions and fairly distribute it, with socially disadvantaged as priorities, according to CHRC/PN/SARANGBANG.<sup>116</sup>

48. LFNKR/HRWF stated that access to hospitals and clinics is limited and that medicines and most kinds of medical treatment are unavailable, having a deleterious effect on the health of North Korean children.<sup>117</sup> They urged the Government to commit to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eking any necessary outside expertise, so as to ensure that the country has high-quality medical facilities, stocked with suitable supplies, and staffed by qualified medical personnel available to all North Koreans.<sup>118</sup>

## **9. Right to education and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49. ACHR mentioned that the discriminatory caste system has a profound impact on the fact that most students, belonging to lower classes, often choose not to continue their education in high school and even if they do so, they are prevented from entering university.<sup>119</sup> Children who belong to the privileged class attend top schools and are not required to provide labor as well as

miscellaneous fees for their education.<sup>120</sup> HRW reported similar information.<sup>121</sup> ACHR indicated that in all other areas, various factors contribute to low school-attendance rates, such as excessive miscellaneous fees and exploitation for labor, both on the state-run farms and as a source of private income for teachers and school authorities.<sup>122</sup> LFNKR/HRWF made similar comments.<sup>123</sup> Consequently, according to ACHR, it seems that both literacy rates and the overall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of North Korean youth have decreased in most areas except for Pyongyang and a handful of other areas.<sup>124</sup> LFNKR/HRWF urged the Government to commit to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eking any necessary outside expertise, to rebuild its educational system and ensure that all North Korean children receive, at minimum, appropriate free and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that is comparable to those of other countries.<sup>125</sup>

50. HRW stated that an ideological education with an emphasis on a “military first” policy takes precedence over academic education. From an early age children are subject to several hours a week of mandatory military training and political indoctrination at their schools.<sup>126</sup> It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respect and ensure the rights set forth 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ithout any discrimination and avoid the early militarization of children in schools.<sup>127</sup>

#### **10. Migrants, refugees and asylum-seekers**

51. HRW considered that a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upon return turns many North Koreans abroad into refugees’ *sur place*, even if they left for mere economic reasons.<sup>128</sup> ACHR indicated that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confirmed that being accepted to specialized vocational training schools depends upon the parents’ occupation and family background, and it is ultimately decided by the authorities.<sup>129</sup>

### **III. ACHIEVEMENTS, BEST PRACTICES, CHALLENGES AND CONSTRAINTS**

52. AI welcomed DPRK’s measures to address the need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e drafting of an Action Pla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2008-2010 and the establishment in July 2005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Korean Federa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sup>130</sup>

53. CHRC/PN/SARANGBANG gave credit to the DPRK for its effort in trying to improve human rights. According to these organisations, the Government has been emphasizing that its various social security policies, like the health and education systems, have ensured human rights. ‘The Law on Sex Equality’ was enacted in 1946 to stress the rights of women. However, recent food shortages, the economic crisis, military threats and economic san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greatly contributed in deteriorating human rights conditions.<sup>131</sup>

54. CHRC/PN/SARANGBANG noted that militarism has heightened in the DPRK. They were also concerned over discrimination against groups such as women, the disabled and sexual minorities. The issues of right to food and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ich have been raised several times over the years, still need improvement. CHRC/PN/SARANGBANG added that they oppose the politicization of human rights, and that the human rights in DPRK will improve through a humane process.<sup>132</sup>

#### IV. KEY NATIONAL PRIORITIES, INITIATIVES AND COMMITMENTS

N/A.

#### V. CAPACITY-BUILDING AND TECHNICAL ASSISTANCE

N/A.

#### Notes

<sup>1</sup> The stakeholders listed below have contributed information for this summary; the full texts of all original submissions are available at: [www.ohchr.org](http://www.ohchr.org). (One asterisk denote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 Civil society

GIEACPC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London, United Kingdom
HRW	Human Rights Watch*, Geneva, Switzerland
CSW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New Maldon, United Kingdom
LFNKR/HRWF	Life Funds for North Korean Refugees, Tokyo, Japan; 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Brussels, Belgium
ECLJ	European Centre for Law and Justice, Strasbourg, France
NKHR/KBA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eoul, Republic of Korea; Korean Bar Association, Seoul, Republic of Korea
ACHR	Asia Centre for Human Rights, Seoul, Republic of Korea
AI	Amnesty International*, London, United Kingdom
ODI	Open Doors International, AA Harderwijk, The Netherlands
CHRP/KWARI	Centre for Human Rights and Peace, Daegu, Republic of Korea; Korean War Abductees Research Institute, Seoul, Republic of Korea
JC	Jubilee Campaign, Fairfax, VA, United States of America
CHRC/PN/SARANGBANG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Peace Network/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eoul, Republic of Korea.

<sup>2</sup> HRW, p. 1.

<sup>3</sup> CSW, p. 1, para. 5.

<sup>4</sup> CSW, p. 1, para. 6.

<sup>5</sup> CSW, p. 1, para. 7.

<sup>6</sup> AI, p. 3, para. 2.

<sup>7</sup> NKHR/KBA, p. 10.

<sup>8</sup> AI, p. 6.

<sup>9</sup> HRW, p. 3.

<sup>10</sup> LFNKR/HRWF, p. 2.

<sup>11</sup> CHRC/PN/SARANGBANG, p. 10.

<sup>12</sup> NKHR/KBA, p. 10.

<sup>13</sup> CHRC/PN/SARANGBANG, pp. 5-6.

<sup>14</sup> AI, p. 3, para. 3.

<sup>15</sup> AI, p. 6.

<sup>16</sup> HRW, p. 1.

<sup>17</sup> LFNKR/HRWF, p. 5.

- <sup>18</sup> ODI, p. 4.
- <sup>19</sup> JC, p. 6, para. 25.
- <sup>20</sup> CSW, p. 2, paras. 8-9.
- <sup>21</sup> AI, p. 3, para. 1.
- <sup>22</sup> CSW, p. 2, para. 10.
- <sup>23</sup> ACHR, p. 2.
- <sup>24</sup> HRW, p. 1.
- <sup>25</sup> ACHR, p. 2.
- <sup>26</sup> NKHR/KBA, p. 10.
- <sup>27</sup> ACHR, p. 5.
- <sup>28</sup> CSW, p. 2, para. 11.
- <sup>29</sup> CHRC/PN/SARANGBANG, pp. 8-9.
- <sup>30</sup> CHRC/PN/SARANGBANG, p. 9.
- <sup>31</sup> AI, p. 4, para. 6.
- <sup>32</sup> CHRC/PN/SARANGBANG, p. 7.
- <sup>33</sup> CSW, p. 3, para. 14.
- <sup>34</sup> AI, p. 7.
- <sup>35</sup> CSW, p. 3, para. 13.
- <sup>36</sup> CHRP/KWARI, p. 6.
- <sup>37</sup> LFNKR/HRWF, p. 2.
- <sup>38</sup> LFNKR/HRWF, p. 4.
- <sup>39</sup> AI, pp. 5-6, paras. 13-16.
- <sup>40</sup> CHRP/KWARI, pp. 7-10.
- <sup>41</sup> AI, p. 7.
- <sup>42</sup> JC, p. 2, para. 5.
- <sup>43</sup> HRW, p. 1.
- <sup>44</sup> NKHR/KBA, p. 4.
- <sup>45</sup> NKHR/KBA, p. 9.
- <sup>46</sup> AI, p. 3, 4, para. 4.
- <sup>47</sup> CSW, pp. 2-3, para. 12.
- <sup>48</sup> NKHR/KBA, p. 8.
- <sup>49</sup> AI, p. 3, 4, para. 4.
- <sup>50</sup> CSW, p. 3, para. 12.
- <sup>51</sup> AI, p. 7.
- <sup>52</sup> CHRC/PN/SARANGBANG, p. 8.
- <sup>53</sup> NKHR/KBA, p. 10.
- <sup>54</sup> NKHR/KBA, p. 7.

- <sup>55</sup> NKHR/KBA, p. 7.
- <sup>56</sup> CSW, pp. 3-4, para. 16.
- <sup>57</sup> ACHR, p. 5.
- <sup>58</sup> HRW, pp. 2-3.
- <sup>59</sup> JC, p. 6, para. 18.
- <sup>60</sup> CHRP/KWARI, pp. 5-6.
- <sup>61</sup> CHRP/KWARI, p. 5.
- <sup>62</sup> JC, p. 6, para. 26.
- <sup>63</sup> ACHR, p. 4.
- <sup>64</sup> ACHR, p. 5.
- <sup>65</sup> ACHR, p. 3.
- <sup>66</sup> GIEACPC, p. 2, para. 1.1.
- <sup>67</sup> GIEACPC, p. 2, para. 1.2.
- <sup>68</sup> GIEACPC, p. 2, para. 1.3.
- <sup>69</sup> GIEACPC, p. 2, para. 1.4.
- <sup>70</sup> GIEACPC, p. 1.
- <sup>71</sup> CHRP/KWARI, p. 6.
- <sup>72</sup> CSW, p. 4, para. 19.
- <sup>73</sup> CSW, p. 4, para. 20.
- <sup>74</sup> LFNKR/HRWF, p. 3.
- <sup>75</sup> CSW, p. 4, para. 21.
- <sup>76</sup> ACHR, p. 4.
- <sup>77</sup> LFNKR/HRWF, p. 4.
- <sup>78</sup> AI, p. 5, paras. 11-12.
- <sup>79</sup> JC, p. 3, paras. 7-8.
- <sup>80</sup> CSW, p. 5, para. 25.
- <sup>81</sup> HRW, p. 5.
- <sup>82</sup> CSW, p. 5, para. 26.
- <sup>83</sup> HRW, p. 1.
- <sup>84</sup> HRW, p. 3.
- <sup>85</sup> CSW, p. 5, para. 22.
- <sup>86</sup> CSW, p. 5, para. 23.
- <sup>87</sup> ODI, p. 3.
- <sup>88</sup> JC, p. 5, para. 20.
- <sup>89</sup> ECLJ, p. 2.
- <sup>90</sup> ODI, p. 4.
- <sup>91</sup> ODI, p. 4.

- <sup>92</sup> CSW, p. 5, para. 24.
- <sup>93</sup> HRW, p. 1.
- <sup>94</sup> JC, p. 2, para. 3.
- <sup>95</sup> AI, P6, para. 17.
- <sup>96</sup> LFNKR/HRWF, p. 3.
- <sup>97</sup> CHRC/PN/SARANGBANG, p. 7.
- <sup>98</sup> LFNKR/HRWF, p. 3.
- <sup>99</sup> LFNKR/HRWF, p. 6.
- <sup>100</sup> HRW, p. 4.
- <sup>101</sup> LFNKR/HRWF, p. 3.
- <sup>102</sup> LFNKR/HRWF, p. 6.
- <sup>103</sup> HRW, p. 4.
- <sup>104</sup> HRW, p. 5.
- <sup>105</sup> HRW, p. 4.
- <sup>106</sup> HRW, p. 5.
- <sup>107</sup> HRW, p. 1.
- <sup>108</sup> HRW, p. 2.
- <sup>109</sup> NKHR/KBA, pp. 3-4.
- <sup>110</sup> NKHR/KBA, p. 2.
- <sup>111</sup> HRW, p. 2.
- <sup>112</sup> HRW, p. 4.
- <sup>113</sup> HRW, p. 5.
- <sup>114</sup> CHRC/PN/SARANGBANG, p. 7.
- <sup>115</sup> AI, p. 4, para. 9.
- <sup>116</sup> CHRC/PN/SARANGBANG, p. 7.
- <sup>117</sup> LFNKR/HRWF, p. 4.
- <sup>118</sup> LFNKR/HRWF, p. 6.
- <sup>119</sup> ACHR, p. 2.
- <sup>120</sup> ACHR, p. 3.
- <sup>121</sup> HRW, p. 3.
- <sup>122</sup> ACHR, p. 3.
- <sup>123</sup> LFNKR/HRWF, p. 4.
- <sup>124</sup> ACHR, p. 3.
- <sup>125</sup> LFNKR/HRWF, p. 6.
- <sup>126</sup> HRW, p. 3.
- <sup>127</sup> HRW, p. 5.
- <sup>128</sup> HRW, pp. 2-3.



<sup>129</sup> ACHR, p. 3.

<sup>130</sup> AI, p. 6.

<sup>131</sup> CHRC/PN/SARANGBANG, p. 4.

<sup>132</sup> CHRC/PN/SARANGBANG, p. 4.

-----



# NGO UPR Submissions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NKHR)



Korean Bar Association (KBA)

---

##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bmission to the UN Universal Periodic Review  
Sixth session of the UPR Working Group of the Human Rights Council

November/December 2009

Joint Submission by the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NKHR)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KBA) to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pertaining to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up>1)</sup>

Prepared by: HEO Man-ho, KIM Tae-hoon, LEE Jae-won, SONG Hyun-uk

### Executive Summary

In the DPRK, the policy of social classification with 3 strata and 51 categories has resulted i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nequalities, which presently persists in the country in the name of "*Seongbun*" and has an impact on the enjoyment of civil and socio-economic rights. The continuing infringements of human rights in the DPRK represent "a consistent pattern of gross and reliably attested violations of human rights." Accordingly the DPRK government has to apply social policy to correct the result of *Seongbun* caste system. All of the political prison camps must be dismantled, and the detainees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Keywords: Right to Food, Food Entitlement, Food Distribution, Chronic Food Shortage, *Seongbun* (social background), *Bowibu*(secret police), Political Prison Camps, Arbitrary Detention, Torture, Infanticide, Sexual Abuse, Slavery Labor

---

1) Except for several personal names, the system of romanizing the Korean alphabet is consistent with the July 7, 2000 Noti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names in this submission are all written with the family name first, followed by the given name.

Any attempt to monitor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is extremely difficult. The only way to bypass that difficulty is to gather testimonies from North Korean refugees who fled the country and succeeded in resettling in a third country. The Korean Bar Association (KBA) conducted two times of interviews with 100 North Korean refugees in 2006 and 2008. The present submission has been elaborated on the basis of these interviews and written sources.

Among the diverse human rights abuses in the DPRK, this submission focuses on the systematic violations of right to food according to a discriminative social class policy and political prison camps. These two issu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ques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refugees as push effects and the aftermath of these situations.

I . The Right to Food

II . Political Prison Camps

## **I . The Right to Food**

The Right to Food indicates the right of all people to access food in order to manage a healthy, active, nutritious and culture-filled life. It means the right to access safe and nutritious food, the right to secure sufficient food and the right to be free from hunger, which was reconfirmed at the World Food Summit Conference held in Rome in 1996.

It is hard to predict when the ten-year chronic food crisis in the DPRK will be ameliorated. Even now, with a slightly eased food shortage in the DPRK, in terms of ‘food entitlement’ the famine in the DPRK remains a fundamentally grave and still worsening problem. The right to food for the DPRK people is completely controlled by the authorities and the Right to Life of six million vulnerable people with insufficient ability to survive is threatened in this critical situation. Furthermore, soaring food prices are causing an enormous conflict between the DPRK government, which tightens its grip on food for social control, and North Korean residents, who are left behind on a dead-end road. The socially powerful groups usually have food rations and accumulate wealth through earning foreign currency and embezzling foreign aid.

The famine in the DPRK is not a temporary issue caused by natural disaster or a withdrawal of food aid from external sources. It must be understood as a result of a process that happen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 reasons for the DPRK authorities failing to adequately provide food are closely related to the deprivation of social and political rights of the DPRK people.

### **1. Difference in Food Distribution Based on Class**

When asked, “Was there any difference in food distribution between people with power and general residents?” in the interview with 100 North Korean defectors conducted by the KBA in 2008, defectors said powerful agencies, such as the Workers’ Party of Korea (WPK), the prosecution, the *Bowibu* (secret police), high ranking officials, managers, military supplies production units and other agencies such as grain mill factories and the organizations earning foreign currency normally receive food ration. In addition, the ratio of grain that the people in authority receive was mostly rice, while general residents receive corn. Furthermore, the amount and frequency of food distributed to the ordinary people was not fixed. Sometimes there was no food distribution at all. Even when there was the frequent food distribution, on average people receive food ration from two to seven days per a month.

ID023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privacy and safety, ID with numbers was given instead of his or her real name) testified that his or her family received a month’s ration once a month, even during the time of mass starvation, since his or her father worked for the *Bowibu*. ID011 testified that he or she received the food distributed four to five times a year and the food provided was extremely insufficient to live on.

ID019 testified that he or she could receive potatoes and corn for ten days every month because the pharmaceutical factory where he or she worked at was well run. In food distribution, the food aided by foreign countries was provided for at least two to three days and at most seven days, and the food produced in the DPRK is hardly supplied for the distribution (Interview with ID019 on May 10, 2008).

The right to access to food in the DPRK is determined by the hierarchy of power. Although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has continued for over 10 years, the aid program has not been up to international standards because the food distribution

system is based on the hierarchical class system. Currently, the loyal hierarchical strata claim the right to decide the distribution of food and receive the distributed food exclusively and steadily. According to a person's political status, food distribution in the DPRK has become a system which favors individuals with vested rights over ordinary residents. The party, the military, and government high-ranking officials are normally provided with food through a separate distribution channel. In practice, the distribution system mainly for workers has been nearly paralyzed.

After the 'July 1st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 in 2002, key agencies of power, including the WPK, the *Bowibu*, the Ministry of People's Armed Forces, the Public Security Agency, and high ranking officials and strategically important military factories have their own food distribution system and manage a stable life, which is incomparable to that of ordinary people. They exercise control over the lives of ordinary workers and farmers who constitute 80% or more of the population to maintain current ruling system. Therefore,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aid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only benefits the key ruling strata of the DPRK such as the WPK, th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The smallest number of people required to maintain the DPRK's ruling system, an estimated 6.5 million, belong to the first to third rank of the country's distribution system. Authorities of the DPRK require a minimum of 1.2 million tons if one needs 500g a day, or up to 1.7 million tons if one needs 700g a day. No matter how famine happens in the DPRK, the amount of food required can be produced in the country, which indicates the amount of food produced within the country is sufficient for the maintenance of its own system without any external support.

From the facts above, authorities of the DPRK seem to ignore criticism on their intentional negligence of the food supply to ordinary people, believing that society of the DPRK would not be affected as long as they manage the core loyal class in good faith.

## **2. Regional Imbalances in Food Distribution**

In spite of the chronic food shortage over 10 years, Pyongyang, the "Capital of the Revolution", has been the preferential area in food distribution over the other areas.



In the interviews conducted by the KBA regarding the difference in food supply between Pyongyang and the other local regions, 20 out of 60 North Korean defectors testified that there was food distribution in Pyongyang but not in other local areas. The other 40 defectors testified that they heard from relatives in Pyongyang that there might well be food distribution in Pyongyang, the center of the country.

ID023 testified that food is distributed first to the People's Army all over the country. The next order of preference is Pyongyang city and the neighboring militaries, with rural areas at the lowest priority. Only after supplies are distributed to strategically important areas and Pyongyang, the leftovers have been supplied to local regions.

Conditions in Pyongyang are relatively better than other areas since Pyongyang is adjacent to Pyong-an Province and Hwanghae Province, which together produce 80% of the total food output of the DPRK. About 43.5% (Heungnam 13.5%, Cheongjin 9.5%, Wonsan 9.5%) of the total quantity of rice aid was carried through Nampo Harbor from 2003 to 2006. Fertilizer aid was transported mainly to Nampo Harbor (50%), and secondly to Haeju Harbor. The other harbors, Heungnam, Cheongjin (Chŏngjin) and Wonsan, are all about equal, with less than 10%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data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n 2005, 16.92% of ships laden with rice for the DPRK docked in Nampo Harbor, adjacent to Pyongyang. On the other hand, a little less was distributed through Ryanggang Province (4.57%) and Gangwon Province (5.76%), where food is relatively insufficient.

Considering deaths due to the shortage of food in the eastern area, provinces of South and North Hamkyeong(Hamgyŏng), Gangwon and Yanggang, it is not just due to regional imbalance but a deeply rooted discrimination policy based on background and class by the DPRK authorities.

## **II. Political Prison Camps**

There are various kinds of detention camps in the DPRK, including facilities for detaining the increased number of homeless and vagrants resulting from the famine during the late 1990s; 6 large colonies for political detainees, and prisons, called

“Labor Correction Centers (*Nodong gyoyangso*)” or “Edification Centers (*Gyohwaso*)”, Detention Center (*Jipgyeolso*) for temporary confinement, Labor-Training Camps (*Rodong-danryeondae*) for short term penal labor of 3 to 4 months under the pretext of edification.

Among these detention camps, the most serious human rights abuses occur in the political prison camps (more exactly, political penal-labor colonies). Their official name is “Management Center Number OO (*OO Ho Gwalliso*)”.<sup>2)</sup> The North Koreans call them “Districts under Special Dictatorship (*Teukbyeol dokje daesang guyeok*)”, “Concentration Camps for Political Prisoners (*Jeongchibeom jipdan suyongso*)”, “The Land of Exile (*Yubaeso*)”, “Caves for Factionalists (*Jongpagul*)”, “Districts for Removed Residents (*Ijuguyeok*)” etc.

It is assumed that political prison camps in the DPRK have undergone several phases since the 1950s. Mr. KANG Cheol-hwan, a North Korean refugee who was a detainee at the Yodeok (Yodök or Yoduk) Prison Camp (*Gwalliso No.15*), stated that a colony of prison camps had been partially built at Yodeok-gun (county), South Hamgyeong Province, before 1959. From 1959 to 1964, the inhabitants of the Yodeok-gun were forcibly removed to separate them from individuals that had been expelled there from other provinces. This policy was assumed to be related to the “Intensive Guidance of the Party (*Jung-angdang jipjung jidosaeop*)”, which operated for two years from the end of 1958. In other words, the DPRK authorities classified their population based on “3 strata with 51 categories” after investigating their thought and social background (*Seongbun*);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enemy stratum” was sent to prison camps. As such, the Yodeok Prison Camp was seemingly built for this purpose.

In 1968, KIM Il Sung gave instructions that “if enemies of the class create riots in the *Gwallisos*, they must be stopped forever by deploying the army”, thus the present style of prison camp was likely formed around 1968 based on the deployment of the army as prison guards.

---

2) Generally, local government offices in the DPRK are called *Gwallisos* (management centers) and include a reference to their location and/or function. Yet, in political prison camps, such offices only have numbers, e.g. *Gwalliso No. 14*, seemingly to hide their location and real function.

The DPRK political prison camps are located at the counties of Yodeok, Dancheon, and Deokseong in South Hamgyeong Province, plus two colonies of camps at Onseong, Hoeryeong, and Hwaseong Buryeong-gun in North Hamgyeong Province, Gaecheon, Bukchang-gun in South Pyeong-an Province, Cheonma-gun in North Pyeong-an Province, and Dongsin-gun in Jakang Province. These camps include “Districts under Special Dictatorship”, in other words “Absolutely Controlled Districts (*Wanjeon tongje guyeok*)”, and “Districts under Edification for Revolution (*Hyeokmyeonghwa daesang guyeok*)”. The detainees in the former type of camp are deprived of their citizenship and can never be released, even after their death, whereas the detainees in the latter can be released, and their citizenship is sustained.

Basic rights taken for granted in a normal state such as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freedom of religion, opinion, and expressions are considered to be deviations when attempted to be enjoyed by North Korean civilians. This is for the security of the regime and the maintenance of the system on part of the DPRK’s authorities. Therefore, the suspects of such ‘deviation’, such as dissents of the regime or the system, people with religions, escapees or border crossers, and repatriates arrested in China and returned to the DPRK, are known to not even undergo due process of arrest or preliminary hearing in the process of detaining them and also to put them under extreme forms of torture and various forms of inhumane treatment.

### **1. Arbitrary Detention**

In the 2006 interview on 100 North Korean defectors by the KBA, 90% of respondents said “No” when they were asked if the investigation agency follows due legal procedure in the DPRK. When asked if due procedure is observed when people are put into a detention facility, 71.1% of the interviewees said the DPRK authorities kept investigating for more than two months without any warrants. However, Article 1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enacted in 1999, which should have been applied to these people, says that “A person shall not be arrested or kept in custody, if the case is not specified by law or the legal procedure is not followed. When a person is arrested, his family or the organization the arrestee belongs to must be notified of the date and reason of arrest within 48 hours of arrest. If the prosecutor finds a person is illegally detained, the prosecutor should set the arrestee free.”

We see evidence of non-compliance with due procedure in arrest or detention as designated by the Criminal Procedure Act from the answers to the question “Please, elaborate on procedures taken when you were arrested or put into custody.” Examples of testimonials to non-compliance with due procedure, follow:

- [ID001] There is no specific procedure. The responsible officer at the police stand tells the arrestee to write a statement and refers the arrestee to his secretary.
- [ID009] I am not sure about procedure. I had a visit from the *Bowibu* and also from the Provincial *Bowibu*. I also had to visit the City *Bowibu* at its request.
- [ID035] A *Bowibu* agent arrested my father without any explanation when he was at home.
- [ID040] They just came and arrested my mother.
- [ID049] I was notified to come to the *Bowibu* at a designated time and day, and did so.
- [ID051] When repatriated to the DPRK from China, I was taken to the *Bowibu* and Hyesan Detention Center right away.
- [ID054] I was caught by a *Bowibu* agent and handed over to the Hoeryeong authorities.
- [ID076] There was no procedure. I was strolling around in the early morning when two cars stopped in front of me. A *Bowibu* agent and a spy came together. The spy was shackled. The agent put me into a car and took me away.
- [ID084] I was caught by Chinese soldiers on the borderline when I was attempting to go to Mongolia from Manzhouli of inner Mongolia, China. I was handed over to the Onseong(Onsŏng) *Bowibu* within ten days and then put under detention at the Agency.

Lacking defectors who experienced arrest after 2004, it is difficult to verify how the detention procedure has changed since the two recent revisions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However, when we interviewed the defectors who were subject to the 1999 Criminal Procedure Act, whether “legal procedure was duly observed, for example, were you well informed of your arrest or presented an arrest warrant,” they said they were not well informed about their arrest or presented with any warrant. In a 2006 interview, only four out of 100 respondents said, “the authorities checked their identification, explained verbally their arrest, handcuffed, and arrested them. The other respondents said there was no explanation. Four testified that mostly the authorities checked for identification, and bound people with handcuffs, straw rope, shoestrings, or white rope, saying that they have something to check. In some cases, they would shackle a person and take him away.

But, when asked in a 2008 interview about how long they were detained after arrest before they stood trial, some people testified that they were detained in the *Bowibu* for two to three days to a maximum of two years and 11 months without any trial (ID076). Since the exact time of their experience cannot be identified, it is hard to gauge how things have progressed. We can see a sign of change to some extent, though from several responses that the period of detention reduced to days from the previous weeks.

Regarding the trial and detention procedures, Mr. YOON Dae-il, who is the former member of the *Bowibu* and defected from the DPRK in September 1998, said that the authorities follow formalities to some extent even though there is no attorney or audience, while two sons and a niece of Ms. SHIN Jeong-ae stood their trial and were sentenced to ten years and five years of “reeducation” (i.e. imprisonment) respectively. However, Ms. SHIN Jeong-ae, without going through any court procedure, was detained for one year in the “revolutionary district” of Yodeok Prison Camps. In case of three torture victims interviewed by the KBA in 2006, the respondent was detained in Yodeok Prison Camps for three years without any trial. Judging from these cases, the degree of punishment varies depending on the degree of “crime”.

However, things do not seem to have progressed much since the Criminal Procedure Act was revised in 2004 and 2005. It is because, according to Mr. YOON Dae-il, the *Bowibu* takes care of all case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but concerning “Case No. 8 or No. 9 (in charge of Office No. 10)” related to gossiping about the “Kim (KIM Il Sung and KIM Jong Il) family”, or spreading rumors, the Agency does not observe due procedures as the case is not specified by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refore, a person is secretly executed without any trial if convicted of undermining the authority of the Kims, father and son. Even though the Criminal Procedure Act was revised afterwards, there are no relevant provisions and it does not help improve such situations.

As such, in the DPRK, the procedures of arresting and detaining political criminals are against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nd they still have a time-old and non-humanitarian prosecuting system, such as a family association system. There are special detention facilities inside the military besides the known facilities in the six

political prison camps. In other words, there are closed underground labor facilities to put a person that has committed a mistake in the military for good. There is also a closed place called, “*Ttukseom*,” where only anti-government military officers are detained. As these facilities are outside the law, arrestees cannot be protected by law in the arrest and detention.

The two-rounds of interviews by the KBA revealed that the arrest and detention procedures of the DPRK are against its domestic laws, such as Criminal Law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also against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at the DPRK has ratified. Even though the number of victims has recently decreased by means of divorce, however, an association system, property confiscation, withdrawal of a Citizen’s registration card that are applicable to lineal family members are in violation of each relevant provision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2. Infringements of Human Rights in the Prison Camps**

The purpose of imprisonment, detention process, and treatment after detention of the DPRK regime on its civilians in political prison camps, without exception, fall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f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1) The Ten Laws and Regulations of Prison Camps**

The ‘Ten Laws and Regulations’ that Mr. SHIN Dong-hyuk remembers was applied within *Gwalliso* 14 (Prison Camps at Gaecheon) until January 2005 when he had escaped. Therefore, they can be evidences to which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can be applied. According to the ‘Ten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rison camp, even trivial violations of any regulations end in execution by firing squad.

‘Prisoner will be immediately executed by firing squad when he or she commits the following crimes; fleeing, and having witnessed but not reporting an attempt of fleeing (Article 1, Clause 1, 2); arbitrary movement to another region without the approval of a Bowibu agent, and trespassing of the Bowibu agents’ area or destruction of property (Article 2, Clause 1, 2); theft or possession of any weaponry, overlooking over colluding the theft or possession of any weaponry, theft or concealment of all food within Gwalliso, and intentional damage or theft of all facilities within Gwalliso (Article 3, Clause 1, 2, 3, and 4); having discontent against or physically abusing

protection guard in charge, and dishonesty or disobedience to the orders of protection guard in charge (Article 4, Clause 1, 2); concealment or protection of an outsider, and possession, concealment, collusion, or non-reporting of goods from outside (Article 5, Clause 1, 2); negligence or nonobservance of tasks given (Article 7, Clause 1); unapproved physical contact between a male and a female (Article 8, Clause 1); not acknowledging, disobeying, or having opinions over one's wrongdoings (Article 9, Clause 1).'

Such provisions are intended to thoroughly isolate the detainees from the outside, oppress their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and deprive of their minimum physical freedom so as to adapt them to slave labor. The above provisions all fall under 'murder,' 'extermination,' and 'slavery' of Article 7 of the Rome Statute.

## **2) Excessive Labor and Undernourishment**

Although there are a few differences between the prison camps and some variety in the work, all detainees have a tight daily work schedule. They get up at 5:00 AM (4:00 AM in the Yodeok Camp), take breakfast until 6:00 AM, form into ranks at 6:30 AM, then leave for their workplace at 7:00 AM. After arriving at the workplace, the detainees are searched for any explosives before being allowed to enter the mines. Work in the mines lasts from 8:00 AM to 8:00 PM with 30 minutes for lunch from midday. In the *Gwalliso* No.15, Yodeok Camp, the detainees are allowed to take a rest during the afternoon, except for those in *Gwalliso* No.14.

According to the Mr. KIM Yong's witness account, the detainees in *Gwalliso* No.14 were also forced to work on Saturdays and Sundays. Their only day of rest was January first, even though the birthdays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 were prescribed as holidays in the rules of the Camp. Since the productivity of *Gwalliso* No.14 was so low, they had no production plan. In contrast, *Gwalliso* No.18 had a serious production plan, and if the targets were not achieved based on a 12-hour work day, the detainees had to work 15 hours a day.

Mr. KIM Yong gave a testimony that the detainees in Camp No.14 only received 20 to 30 grains of corn and a bowl of soup cooked with just cabbage and salt. As such, the detainees took 15 minutes to move 100 meters and became dizzy with any digging. These detainees were mostly attacked by pellagra, a disease related to protein deficiency disease, and/or various epidemics originating from undernourishment, and

even mental disease.

To appease their hunger, the detainees often stole pig fodder, used the wastewater from cleaning fish storage tanks as soup, caught worms, hunted rats, and ate the bark off trees and grass. Yet, if such activities were caught by the Camp guards, a heavy punishment was imposed, sometimes leading to death.

### **3) Punishments in the Prison Camps**

There are two kinds of punishment facility (*Guryujang*) for political detainees. The first is for preliminary examination, referred to as '*Maram Chodaeso* (Maram Guesthouse)', while the second is located within the prison camp. The detainees undergo severe physical and mental torture in both facilities; however, most of the detainees sent to the latter do not survive.

If a detainee is sent to the punishment facility inside the camp, they are tonsured without consideration of their sex, then beaten until near death. The detainees are then forced to sit on their knees with a four-angled rule under their legs preventing the blood circulation. If they move or disobey, they are severely beaten. Food is also withdrawn as another form of punishment for disobedience. As such, the detainees are forced to endure relentless pain in their legs, which then start to rot and decay, eventually leading to death within about five months. For this reason, being sent to the punishment facility is equivalent to a death sentence.

Mr. KIM Yong witnessed 15 summary executions during his two years of detention at *Gwalliso* No.14, and about 30 summary executions during his three years of detention at *Gwalliso* No.18. At *Gwalliso* No.14, secret executions were preferred over public executions, as the latter were no longer found to be a deterrent to the detainees. According to Mr. An Myeong-cheol, a former truck driver and guard at *Gwallisos* Nos. 11, 13, and 22, guards often shot innocent detainees, as special citations were given for catching an escapee.

Many testimonies have been recorded on infanticides in various contexts. The infanticides that occur in the political prison camps are the direct result of KIM Il Sung's dictates: "Factionalists or enemies of class, whoever they are, their seed must be eliminated through three generations." Except for political detainees held as a



family, pregnancy and childbirth are considered as crimes and those involved are cruelly punished and executed along with their babies.

### **Concluding Recommendations**

The DPRK government, since its entry in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n 14 September 1981, continues to maintain that the North Korean people have complete enjoyme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owever, there are still substantial discrepancies between institutional (or legal) stipulations and their practice, whereby discriminative social class policies and strong socio-political control continue to infringe on basic rights.

The DPRK authorities deny the existence of any such classification. However, North Korean refugees have repeatedly confirmed both the existence of this system and its continued use. Accordingly, the DPRK government has to apply social policy to correct the result of *Seongbun* cast system.

As the DPRK government denies the existence of any political prison camp, it has to allow UN agents and international NGOs to visit the places as follow:

*Gwalliso* No. 14 Kaecheon (39.579 N, 126.068 E), *Gwalliso* No. 15 Yodeok (39.727 N, 126.845 E), *Gwalliso* No. 16 Hwaseong (41.3 N, 129.2 E), *Gwalliso* No. 18 Bukchang (39.554 N, 126.065 E), *Gwalliso* No. 22 Haengyong (42.536 N, 129.935 E), and *Gwalliso* No. 25 Cheongjin (41.9 N, 129.7 E).

All of the political prison camps must be dismantled, and the detainees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Bearing in mind that the biggest obstacle to improv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is the lack of awareness in human rights within the DPRK society, the implementation and the spread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country will have to be positioned as the utmost priority. Nevertheless, there have not been any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s developed to be implemented in the DPRK and there are no plans to share human rights textbooks developed in the Republic of Korea. Therefo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need to concentrate on this matter strategically with

the help of the ROK government and NGOs.

---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NKHR)**

3F, Shimji Bldg, 10-22 Gyobuk-dong, Jongno-gu, Seoul, 110-090, Republic of Korea

Website: [www.nkhumanrights.or.kr](http://www.nkhumanrights.or.kr)

Tel: +82-2-723-1672, 2671 Fax: +82-2-723-1671

Email: [mhheo@knu.ac.kr](mailto:mhheo@knu.ac.kr), [nkhuman@nkhumanrights.or.kr](mailto:nkhuman@nkhumanrights.or.kr)

**Korean Bar Association (KBA)**

5F, Lawyers' Hall, 1718-1, Seocho 3-dong,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Website: [www.koreanbar.or.kr](http://www.koreanbar.or.kr)

Tel: +82-2-3476-4003 Fax: +82-2-3476-4008

Email: [kwonja100@koreanbar.or.kr](mailto:kwonja100@koreanbar.or.kr)

**The statement of Peace and Human Rights NGOs' for  
United Nations Universal Periodic Revie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9. 4. 20

**I. Introduction**

1. The 6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of the Human Rights Council will take place from November 30 of 2009 to December 11 of 2009. One of the countries examines will b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Regarding this event, Peace and Human Rights advocacy groups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including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Peace Network, and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are submitting to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a report containing our progressive stance on the DPRK's human rights issues. We hope tha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will be improved through the UPR and expect active cooperation of both the government of the DPRK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mmary**

2. This Report contains the following concerns of progressive Peace and Human Rights advocacy groups in the ROK: the historical cond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which North and South Korea are coexisting; human rights principles to be understood not just pertaining the DPRK but a part of the historical cond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alities of life in the DPRK:  
In this manner, this Report:
  - (a) emphasizes the necessity to approach human rights issues of the whole

Korean Peninsula, taking into the consideration of human rights within DPRK is closely interrelated with human rights of the ROK both politically and historically;

- (b) insists all parties concerned with DPRK's human right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government of the ROK, and the DPRK human rights advocacy groups in the ROK must act in a manner of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the DPRK so they can be a subject of their own human rights improvement. These all parties must not take an ambiguous position stating a desire to improve human rights through means or measures that are actually against of human rights;
- (c) recommends initial measures for the government of the DPRK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its people including the freedom and guarantee of assembly and speech,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detaining facilities, the elimination of conventional oppression against women, and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human rights assurance.

### **Historical Background and Human Rights in the Korean Peninsula**

3. As a result of the Korean War, which is an outcome of the Cold War, millions of people were killed or seriously injured, and most of Korea's social and industrial infrastructure was destroyed. The hostile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remains today. While still in a state of armistice, the two Koreas continue to maintain an antagonistic relationship and use such status quo for their structural competition and survival or as an excuse to commit violations of human rights to the people of both countries respectively. In case of the ROK, the National Security Law, which is also widely know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 great example because many efforts to improve democracy of the ROK have been punished by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this extent, the human rights situations of the North and the South Koreas cannot be understood as a separate phenomenon but needs to be comprehended together along with other related themes such as the Cold War, the Korean War, the division of Korea, and an ongoing ideological conflict. Therefore, the true meaning of human rights improvement can only be achieved when it is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peace and human rights of the whole Korean Peninsula rather than separate issues of the North or the South Korea. This is how we are trying to approach and solve

the human rights issues of both the DPRK and the ROK and this is a definition of the concept, 'Human Rights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based on the indivisibility, interdependence and interrelatedness of human rights.

4. From the concept of 'Human Rights of the Korean Peninsula', some concerns arise in respect to the act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in the ROK which only pursue so called, 'North Korean Human Rights.' This includes distortion of the DPRK's actualities based on their own animosity toward the DPRK, attempts of executing advocacy acts without the conside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human rights, lack of understanding in various other aspects of human rights due to their sole concentration on DPRK, and over-emphasized abuses of human rights acts in DPRK to justify and conceal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ing in the ROK.
5. We also convey our apprehension to participating states to the UPR regarding previous witnesses and repor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which disseminated limited and exaggerated information due to an Anti-Communist and Anti-DPRK ideology, and a confrontationist approach. Parties must be cautious of the few limited witnesses being referenced repetitively in related reports and white papers, and often recognized as facts. Considering the government of the DPRK is not providing enough information and the government of the ROK is also restricting access to necessary information related to the DPRK, the quality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must be thoroughly assessed and analyzed. Also, both the governments of the DPRK and the ROK should exert every effort to improve such situation of restricted information.

## **II. Our Principles of Approach to DPRK's Human Rights**

### **The Primary Subject of Human Rights Improvement is the People of the Concerned Society**

6. As Article 1.1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 is about the self-determination, we confirm that the primary subject of the human rights improvement in the society of the DPRK should be its own peop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ROK can assist and support the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but cannot improve it by themselves. We note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s invasion to Iraq, which was based on the assertion that its purpose was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acted against human rights causing civilian deaths of more than 90,000 people since the invasion in 2003. (<http://www.iraqbodycount.or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ROK must seek a way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while respecting its people as the most primary subject.

### **Realization of Universal Human Rights Respecting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

7.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However, we indicate that a specific method and form to realize such universality cannot be standardized. It should be stat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even retreating human rights conditions when imposing a standardized system in context with different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This is reaffirmed in Article 5 of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as it states, “... national and regional particularities and various historical, cultural and religious backgrounds must be borne in mind...” Nevertheless of such effort, it is true that there has been limitation to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regimes including systems of national human rights resolution and Special Rapporteur. Such systems often applied double standards to human rights or were used as a means to add political pressure. It is for this reason that the DPRK rejected both the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Should the United Nations insist to enforce such standardized regimes on the DPRK, we express our concern that this misses an opportunity to improve the actual situation through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Improvement of the situation cannot be accomplished by political pressure. Thus, we reaffirm the necessity of a more careful approach and respect toward the DPRK's historical, cultural, and political backgrounds- the socialistic political structure of East Asia-in order to truly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 **Our perception on the reality of human right in the DPRK**

8. To understand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DPRK accurately, we are going to look at the society from its internal perspective. Only when we interpret human rights and their violations through DPRK's social principal,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of DPRK can sympathize with us and would be more willing to work toward improvements in human rights conditions. Meanwhile, we would like to give credit to the DPRK government for its effort in trying to improve human rights conditions. The DPRK government has been stressing over the years that its various social security systems such as mandatory medical and education have ensured human rights.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e Law on Sex Equality' was enacted in 1946 to stress the rights of women. However, the conditions have deteriorated due to recent food shortages and the economic crisis, and military threat and economic san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S.A. and Japan have contributed greatly in worsening human rights conditions. Although we are trying to understand the situation, we are concerned about the current human rights condition. It has come to our attention that militarism in DPRK has heightened, there is over emphasis on military liberalism and the use of phrases like 'Military First', 'Respect Guns, Respect Military' in the Rodong Sinmun have increased. In addition, we are concerned over discrimination against groups such as women, the disabled and sexual minorities. The issues of right to food, and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ich have been raised several times over the years, still need improvement even though we tried to interpret from the standpoint of DPRK social principle. We hope that DPRK government makes a positive effort to improve the issues mentioned above.

### **From 'North Korean human rights' to human rights on the Korean peninsula**

9. We are examining how the focu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 naming and shaming of DPRK has a political effect. Human rights violations exist in all countries, and blaming a particular country politically doesn't contribute to improvement. Continual criticism of human rights in DPRK by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dds to the existing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countries still stand face to face militarily. As the relations between the ROK and DPRK have worsened and the fear of military confrontation has escalated, human rights criticisms of the DPRK by the ROK government and some

human rights organizations have escalated. The ROK government pushed for enactment of the law on human rights in DPRK and pushed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to criticize conditions in DPRK. Some ROK's human rights organizations on North Korea flew balloons over northern sky with propaganda notes inside, further escalating tension. Meanwhile, the right to live peacefully of the people of both countries is being threatened. We would like to reaffirm that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is the right of all people living in Korean peninsula. As the people actually living in Korean peninsula who are the beneficiary of the right to live in peace, we oppose the politicalisation of DPRK human rights. The human rights in DPRK will improve only through a humane process.

10. Human rights conditions in the region are inter-linked. Historically, the division of the Korea has contributed greatly to the current human rights status. During the intensified military conflict, both countries oppressed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expression and freedom of association and demonstration of its people through the development of inhumane system, that leads to large numbers of political prisoners and prisoners of conscience. The competition of military spending distorted the financial structure of both governments, and the strong militarism in both nations resulted in a degradation of human rights conditions. We believe that human rights in DPRK and ROK are intertwined and would like to stress again the importance of looking at the human rights on the Korean peninsula. Human rights conditions can only improve by a collective effort by both DPRK and ROK.

#### **Analysis and Concern over so-called 'North Korean Human Rights'**

11. The human rights condition in DPRK needs more improvement. However, some ROK based organizations approach human rights in DPRK with a narrow interpretation and actually distorted the concept of human rights. Firstly, this is partly based on a history of an Anti-Communist and Anti-DPRK ideology which was the basis for ROK's military dictatorship that prevailed until early 1990s. Their ideological background stands in the way of understanding the condition of DPRK comprehensively. Secondly, while these organizations emphasis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they show no interest and an inhumane attitude toward human rights issues in ROK. It is sad that some of these organizations have very close relationships personally and politically with groups violating human rights, and



maintain silence over the violation of those rights in ROK. Thirdly, they disregard historical questions such as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distinguishing human rights generation, make their own interpretation on human rights unilaterally, and distort the concept. Generally, the ROK human rights organization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mote tensions, threatening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y also play a role in bringing down not only human rights conditions in DPRK but also in ROK, too.

### **The Difficulty of Gathering Information on DPRK and Concern**

12. Article 19 of CCPR states, “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shall includ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f all kinds, regardless of frontiers, either orally, in writing or in print, in the form of art, or through any other media of his choice” but it is very difficult to determine human rights condition on DPRK in ROK.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ROK still limits gathering information on DPRK and it has legislation that may punish people in the reason of thinking and speaking about DPRK freely. Hence, only selected and limited information that was filtered by the government is available in ROK. In addition, the DPRK government is passive reluctance in sharing information is reducing improvement in human rights. This situation leads to information with unconfirmed sources and speculation receiving great attention. The DPRK government needs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when a question of violation is raised rationally. In the case if such violation, the DPRK government should actively provide measures to correct the human rights violation. We are repeating the paragraph 5 of this report, and expect the DPRK government to take appropriate measure to dissolve these difficulties.

### **DPRK Should reflect on its ‘Human Rights Question’ openly**

13. We would like to clarify that there is no state free from human rights violations. All states including both ROK and DPRK should make an effort to improve human rights condition. We are deeply concerned over the DPRK government’s thinking on human rights that was stated in the Rodong Sinmun on the November 11th, 2008, “We would like to clarify over and over again that in our socialist system of people being the center of the system which treasures respect for the people and

civil and political rights, human rights violation cannot exist from the beginning.” We hope that the DPRK government examines its human rights conditions and has a will to improve them, so it can really more closer to being system of people at the center.

### **III. Concern for DPRK's reality**

14. We expect The DPRK's political system to guarantee and enhance the rights of the DPRK's people better. Even though there is limited information on the rights of the DPRK, we convey the concern and proposal for the DPRK's reality in the view of the human rights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a humanitarian process, not through political criticism.

#### **Freedom of thought and conscience**

15. Regardless of the political systems' differences, freedom of thought and conscience must be guaranteed. When reading the article from the Rodong Sinmun about non-socialist group inspection or broad provisions of political crimes in Article 61, Anti-state Propaganda and Sedition and in Article 67, Treason against one's people of the criminal law, the possibility of punishment based on mere differences in thought and conscience is concerning. The principle that the state should not punish people on account of freedom of thought and conscience will be confirmed in the following paragraphs

#### **Freedom of assembly**

16. On November 5th, 2008 the DPRK criticized the government of ROK for suppressing candle-light rallies in the Central Committee of Chosun Democratic Women's Union spokesperson's speech, etc. However, the possibility that the government of DPRK may also be repressing the freedom of assembly in similar ways as the government of the ROK as reported in paragraph 125 and 126 of Second periodic report of the DPRK on its implementation of CCPR (1999) and in paragraph 31 of Second periodic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CESCR)(2002) is concerning. Setting forth the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order as reasons for assembly

prohibition, and reporting that the punishment is possible under the Law on Public Security Control with unclear elements of crime on assembly acts, are similar to the attitude of the government of the ROK, who described mass candle-light rallies to be illegal demonstrations by the pro-DPRK influences and limited assembly to strict permission rather than allowed under the Constitution. When problems concerning public welfare cannot be solved within the system,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s the last resort of people to express their opinions may become the final means to protect other rights. For such reasons, information on ▷whether assembly can be prohibited in advance, ▷under what conditions it can be prohibited in advance, ▷ whether a complaint possible, which are presented in paragraph 24 of the concluding observations by the Commission on CCPR and additional information on ▷which assemblies were reported according to the procedures in the recent years, ▷how many of the reported assemblies were prohibited, ▷why the assemblies were prohibited should all to be released.

### **Freedom of speech and publication**

17. In a democratic society, the presence of citizens' critical opinions, the delivery of the opinions to policy making institutions' upper offices, and the communication of opinions to the members of society are all important. Despite numerous speech and publication institutions presented in paragraph 119 of the Second periodic report of the DPRK on its implementation of CCPR(1999), there is a concern whether critical opinions or minority opinions on the party and people's committee are circulated in the DPRK through speech and publication. That realization of "Uniform guidance to publication industry" and "Singular guidance" presented in Article 4 of the DPRK's Press Law can repress critical opinions and damage freedom of thought and conscience is confirmed. Adding to paragraph 23 of concluding observations by the Commission on the CCPR, operation of speech and publication institutions that are independent from the party and people's committee and able to perform critical functions, is proposed. The for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system recommended by the United Nations may be referred to this process.

## **Death Penalty**

18. There is obviously no more important human right than that of life itself. Therefore, the complete abolition of death penalty is supported. In this respect the DPRK's intention through Second periodic report of the DPRK on its implementation of CCPR(1999) of its aim to completely abolish the death penalty and to prescribe, through several revisions, more strictly the elements of crime for death penalty in the criminal law is positive. However in the view of law enforcement, on analyses of the reality is impossible because the number of cases and charges of death penalty are not released. Moreover, DPRK's active explanation about several reports on public executions performed and the death penalty enforced in accordance with decrees or directions, not the legal procedures such as the Criminal Procedures Act, is necessary.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s a tool to discipline people based on fear is opposed. The DPRK is expected to release information on the number of cases, charges and methods of death penalty and take effective measures to completely abolish. The Commission on CCPR's concluding observations that four out of five crimes with death penalty (the Criminal Law ; Article 59 Conspiracy against the state power, Article 60 Terrorism, Article 62 Treason Against One's nation, Article 67 Treason against one's people, Article 278 Intentional Grave Murder) are essentially political crimes and that due to broad wording a sentence of death penalty may be subjective is agreed, and specific measures to resolve such concerns are demanded to be taken.

## **Detention facilities**

19. Attention is paid to the general fact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are likely to arise in detention facilities isolated from social life. As the DPRK acknowledged, in a situation where food has been scarce since the mid 1990s, there is high possibility that the life and health of detainees in detention facilities may be impaired due to the food scarcity. Also the possibility of abuse in the detention facilities of the DPRK, just as abuse were frequent in the detention facilities of the ROK, is concerning. The concern grows especially with political criminals, or separate facilities detaining only political criminals. In a hostile situation between the DPRK and the ROK, the possibility that political criminals may exist in DPRK, as in the ROK, is concerning and the fact that freedom of thought and conscientious expression is violated when political criminals are punished for the

sake of social control is confirmed. The authenticity of the reports related to political criminals and detention facilities, that unlike general penal criminals the political criminals are imposed punishments in a single-trial system not open to the public and detained by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without undergoing legal procedures of a judiciary, law court or prosecutor's office, must be confirmed. That the less open to the public the detention facilities are, the more likely human rights violations may arise is emphasized, and the government of DPRK is proposed to execute independent investigation on detention facilities to address several kinds of concerns for them and to release the results. Also the government of DPRK is expected to enhance the continual supervisory function about detention facilities through an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System.

### **Right to food**

20. Since the mid 1990s the government of DPRK has acknowledged the food shortage and requested help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DPRK's food shortage is understood to have been aggravated by a combination of factors: natural disasters, collapse of the social economic system, economic sanctions impo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rease in the DPRK's armaments due to United States-DPRK military confrontation and government personnel's corruption. To address the internal issues, the government of DPRK has the obligation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caused by food shortages. The government of DPRK's efforts to solve this problems, as shown in the Rodong Sinmun, etc, is positive but putting the military as a priority in distribution is worrisome for it may aggravate the food situation. Attention is paid to the fact that in difficult situations of food or economic crises, the socially disadvantaged such as the aged, children, women and the disabled are easily exposed to human rights violations.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ROK should provide humanitarian aid to the DPRK, and the DPRK should accept without conditions and take measures to fairly distribute the food, with socially disadvantaged as priorities.

### **Protection of Women's Rights**

21. We draw attention that DPRK has taken action in law and policy to promote

women's participation in society by entering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However, we are still concerned because according to paragraph 85 and 86 of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DPRK under CEDAW(2002), the DPRK does not consider differences in the proper age for marriage between men and women a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the same report, it emphasizes women's role in child rearing in paragraph 93. We are concerned because these points condone the tradition and national customs enforcing a discriminatory gender role upon women.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 responsibility of house work and child rearing placed on women is not decreasing and the worsening economic situations demand extra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the discrimination can worsen and negatively affect women's health. In response to this, the DPRK government needs to emphasize through improvements in family and education law the responsibility of society as a whole which both genders involved in house work and child rearing, that this is not solely women's responsibility in the traditional role.

22. According to paragraph 105 and 106 of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DPRK under CEDAW(2002), DPRK reports that there is no reported cases of prostitution and that it is a regrettable crime. However, we draw attention to other reports that North Korean women voluntarily and involuntarily get involved in human trafficking and prostitution in order to sustain their family due to economic distress. Under these circumstances, differences i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give heavier penalties to women and expose women with low economic standing to criminal persecution. We emphasize that the situation women are forced into prostitution is an ongoing process to worsene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DPRK government should ensure women forced into prostitution are not exposed to criminal penalty under the Criminal Law Article 261 for prostitution and become re-victimized. At the same time, it should establish policies to prevent causes of prostitution.
23. In paragraph 244 and 245 of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DPRK under CEDAW(2002), the DPRK promotes child birth, because of short supply of labor in the country, and reported that there is pressure for couples to produce grand children for their parents. We confirm here again that the social pressure for women to produce children against their own will is a form of discrimination. The

DPRK promotes child birth in its 2nd Mothers' Convention in 1998 and Guidelines of Giving Child. The DPRK indicated in paragraph 140 of Second periodic report of the DPRK on its implementation of CCPR(1999) that it "does not regulate to control child birth at the national level." However, the social atmosphere where child birth is emphasized can "forbid" contraception and abortion. The practice of illegal abortion when the society forbids will negatively affect women's health. We expect that the DPRK government will put their efforts in establishing population policies that will improve women's rights to health and self-determination, and that it will analyze the reasons why women do not want children, in order to devise related solutions.

### **Protection of Human Rights by Policies**

24. An establishment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s expected in order to promote effective human rights protection domestically and devise accessible human rights protection policies for individuals in term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and Regional Human Rights Regime and effectiv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domestically. The DPRK indicates in their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 that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Coordination Committee for the Implementation of CEDAW, the National Coordination Committee of the Implementation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others can highlight on their efforts in establishing human protection policies and their operation.
25. However, in order to properly act as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which watches, safeguards, and corrects human right violations committed by national agencies or authorities, the institution should be independent from the government, any party, or other agency that can influence its power over in the course of its operation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and Functioning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t the same tim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should have functions to secure independently people's human rights that could be violated by government agencies, and review the current human rights situation and be able to devise policies to improve that. From this perspective, we propose that the DPRK make transparent the organization, operation, and activities of its Domestic Human Rights Regime including the National Coordination Committee for the Imple-

mentation of CEDAW and the National Coordination Committee of the Implementation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e further propose devising human rights protection functions at these institutions which are separated from the judicial agencies.

26. In addition, we expect the DPRK to establish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that are independent and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incidents and issues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Also, we expect the DPRK to proactively participate in exchanging ideas and opinions on human rights issues with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Council and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ts efforts of promoting human rights protection and participating proactivel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member.

#### **IV. Conclusion**

27. A State can be an active party in helping actualize human rights while it can also be an active member in committing human rights violations. This fact can be applied to the DPRK and we implore the DPRK to take proactive steps in realizing human rights in the country. In the process, human rights of the whole popul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put into perspective and the DPRK is an active entity in realizing their rights. Based on the DPRK's reflection of the universal human rights, we expect to actively contribute to human rights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two countries, the DRPK and the ROK coexist.



Amnesty International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bmission to the UN Universal Periodic Review**

Sixth session of the UPR Working Group of the Human Rights Council  
November -December 2009

**Executive summary**

In this submission, Amnesty International provides information under sections B, C and D as stipulated in the *General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of Information under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sup>1)</sup>

- In section B, Amnesty International raises concern over human rights legislation, denial of access fo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nd the death penalty.
- In section C, we describe concerns related to abductions and enforced disappearances,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e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and the right to food.
- In section D, Amnesty International makes a number of recommendations in the areas of concern listed.

---

1) Contained in Human Rights Council Decision 6/102, Follow-up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section I adopted 27 September 2007.

## **B. Normative and institutional framework of the State**

### **Human rights legislation**

1. Amnesty International welcomes the submission of the combined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and its participation in the Committee's review on 23 January 2009. However, in previous years Amnesty International has noted with concern that the government has consistently failed to implement recommendations by this and other treaty bodies or to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on their implementation.
2.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enshrin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treaties to which North Korea is a state party remain largely unprotected by domestic legislation.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as noted with concern that "the constitutional and other legal provisions, particularly article 162 of the Constitution... seriously compromise the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have an adverse impact on the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sup>2)</sup>

### **Denial of access to North Korea**

3. The government continues to deny access to independent human rights monitors, despite repeated UN resolutions condemning the "systematic, widespread and gra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urging the government to cooperate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March 2009, the UN Human Rights Council expressed serious concern at the refusal of North Korea to recognize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His report had been rejected by the government as being "full of distortions and fabrications". The government has not responded to previous requests for visits by the Special Rapporteurs on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2002), on freedom of religion and belief (1999 and a

---

2) 2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E/C.12/1/Add.95, 12 December 2003, para. 9. ([http://www.unhcr.ch/tbs/doc.nsf/\(Symbol\)/E.C.12.1.Add.95.En](http://www.unhcr.ch/tbs/doc.nsf/(Symbol)/E.C.12.1.Add.95.En))

reminder in 2002) and on the right to food (2003).

###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4. North Koreans sent to prison camps and detention centres are often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lthough conditions vary from one facility to another, and are invariably harsher in political prison camps (*kwanliso*) than in prison camps for nonpolitical prisoners (*kyohwaso or nodong danryundae*), prisoners in general are forced to undertake physically demanding work, including mountain logging and stone quarrying, often for 10 hours or more a day, with no rest days. Prisoners are punished if suspected of lying, not working fast enough or forgetting the words of patriotic songs. Forms of punishment include beatings, forced exercise, sitting without moving for prolonged periods of time and humiliating public criticism. Due to the combination of forced hard labour, inadequate food, beatings, lack of medical care and unhygienic living conditions, many prisoners fall ill and some have died in custody or soon after release.
5. People who have served time in prison camps in North Korea often cite cases of forced labour and beatings by prison guards or fellow prisoners. A female prisoner who was sentenced to a *nodong danryundae* described: “We were sent to the mountains to carry stones on our backs or heads. Because of the friction, the skin on my back peeled and bled... Guards were always yelling and hitting the prisoners”.<sup>3)</sup>

### **The death penalty**

6. The death penalty is carried out in secrecy in North Korea. Executions are typically by firing squad or hanging. There are reports of public and extrajudicial executions. Public executions are a breach of North Korea’s own penal code and are used to set an example to others. Executions are often carried out even though the alleged crime is not subject to a death sentence under domestic law.<sup>4)</sup>

---

3) Norma Kang Muico Forced Labour in North Korean Prison Camps Anti-Slavery International, 2007, p 14 (<http://www.antislavery.org/homepage/resources/PDF/NK%202007.pdf>).

4)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Although there has been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crimes carrying the death penalty, four of the five remaining offences carrying the death penalty “are essentially political offences” with such broad terms that they risk being applied subjectively.<sup>5)</sup> This includes “conspiracy to overturn the state,” “treason against the Fatherland,” “terrorism,” “and treason against the people”.<sup>6)</sup>

### **C.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on the ground**

#### **Right to food**

7. According to the World Food Programme (WFP) in March 2009, only 2 million people are able to receive food assistance out of the 6.2 million targeted by its emergency operation in 2008. Even these beneficiaries are receiving incomplete rations of fortified foods. Last year, the WFP announced that millions of people experienced the worst hunger in a decade with women, children and the elderly being the most vulnerable. Food production dropped sharply and food imports declined.
8. A 2008 survey by the WFP and the Food and Agricultural Organisation (FAO) of 53 counties in eight provinces indicated that almost three quarters of North Korean households had reduced their food intake. The majority of families had stopped eating protein-rich foods and were living on cereals and vegetables. Many people were forced to scavenge for wild foods which are poor in nutrition and may cause digestive problems. According to the WFP and FAO, one of the leading causes of malnutrition among children under the age of five is diarrhoea caused by increased consumption of wild foods.
9. Despite the food shortages reaching critical levels, the government has failed to seek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needed to ensure minimum essential levels of food for the whole population. Due to strained relations, North Korea in March 2009 refused to accept any further food aid from the USA. The government also told five US humanitarian aid organisations to leave North

---

Korea”, 2008 p52

5)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27 August 2001 CCPR/CO/72/PRK para. 13 ([http://www.unhchr.ch/tbs/doc.nsf/\(Symbol\)/CCPR.CO.72.PRK.En?OpenDocument](http://www.unhchr.ch/tbs/doc.nsf/(Symbol)/CCPR.CO.72.PRK.En?OpenDocument)).

6)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 p. 49.

Korea by the end of March 2009. Similarly in 2008, North Korea did not request assistance from South Korea, the biggest donor of rice and fertilizer in previous years.

10. The government continues to deny unrestricted access to the WFP and other monitors to ensure that food is distributed to those most in need.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eived reports of food rations being prioritised to the military and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11. DPRK law requires that its citizens obtain permission to travel both within the country and abroad. Article 62 of the 2004 Criminal Code criminalises travel to another country without state permission. This crime can carry the death penalty, in blatant violation of North Korea's obligation to respect the right of every person to be free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his or her own.<sup>7)</sup> Despite this ban, thousands cross the border into China mainly in search of food and economic opportunities, but also because of political oppression. Most are women who often marry Chinese farmers. Some brokers take advantage of their vulnerability by trafficking them into forced marriages.
12. As the Chinese government considers all undocumented North Koreans in China as economic migrants, they live in fear of being caught and forcibly repatriated to North Korea. Virtually all those forcibly returned to North Korea have faced up to three years in a prison camp where they have been subjected to forced labour,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China continues to deny the UNHCR access to the North Koreans in their territory. In 2009,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tated that most North Korean border crossers in China are entitled to international protection as *refugees sur place* because of the threat of persecution or punishment upon return.<sup>8)</sup>

---

7) 7 Article 12(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8)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10/18, 24 February 2009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hrcouncil/docs/10session/A.HRC.10.18.pdf>).

### **Abductions and enforced disappearance**

13. North Korea's policy of abduction and enforced disappearance has continued since the Korean War (1950-53). Ten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s, as well as nationals from other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Japan, Thailand and Lebanon, have been abduct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North Korean family members of suspected dissidents have disappeared or been punished under the principle of "guilt by association". In the majority of case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refused to acknowledge that these individuals are being detained or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ir fate or whereabouts.
14. During the Korean War, thousands of South Korean nationals were abducted and taken to North Korea. Figures vary from 2,438<sup>9)</sup> to 94,700<sup>10)</sup>. No-one abducted during the Korean War has been officially confirmed to have returned to South Korea. After the war, it is estimated that a further 3,795 South Koreans have been abducted by North Korean agents. Most have since been returned, but around 480 individuals remain accounted for, including 428 fishermen.
15. Lee Seong-hwan was abducted by agents belonging to the North Korean Secret Service in September 1950. Lee's wif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her husband had been taken to a prisoner of war camp in Jagang-do in North Korea in 1951. No information has been forthcoming from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on the fate and whereabouts of Lee Seong-hwan despite efforts from his wife and three daughters.
16. North Korean officials agreed on 13 August 2008 to re-open investigations into the fate and whereabouts of several Japanese nationals. On 17 September 2002,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admitted to Japan's then Prime Minister Koizumi Junichiro that North Korea had abducted 13 Japanese nationals in the 1970s and 1980s. Subsequently, five Japanese nationals were allowed to return to Japan. The children and an American husband of one of the Japanese women were also allowed to leave North Korea. North Korean officials claimed the remaining eight Japanese nationals had died. In October 2008, the Investigation Commission on Missing Japanese Probably Related to North Korea (COMJAN)

---

9) According to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Public Information (1950).

10) According to the Korean War Abductees' Family Union (2005).

added 32 names of Japanese nationals to the list of alleged abductions raising the estimate to 62.

###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17. Freedom of expression is severely restricted in North Korea. All media is controlled by the state and dissent is not tolerated. Listening to broadcasts, retaining information or disseminating information perceived as opposing the state is punishable under the Criminal Code by up to two years in a “labour training camp” or five years of “correction labour” in more serious cases.<sup>11)</sup>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regularly conduct inspections in private homes to ensure compliance.<sup>12)</sup> In 2008, long distance telephone calls were reportedly blocked to prevent news of food shortages from spreading. There were also reports that local authorities arrested individuals who watched South Korean videos or were in possession of unauthorised mobile phones.
18. Despite the existence of some churches largely in Pyongyang, freedom of religion is severely restricted. North Koreans suspected of practising religion or meeting with Christian missionaries in China are subject to harsher punishments in prison camps and detention facilities than other border crossers.

### **D. Recommendations for action by the State under review**

#### **Achievements**

Amnesty International welcomes North Korea’s measures to address the need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e drafting of an Action Pla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2008-2010 and the establishment in July 2005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Korean Federa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1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 p. 208.

12) *Ibid.*, 2008 p. 210.

##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the government:**

### *Human rights legislation*

- To Implement, as a matter of urgency, the recommendations of UN human rights treaty bodies and charter-based bodies, including to ensure that adequate human rights legislation is introduced and implemented;
- To ratify, incorporate into domestic legislation and implement in policy and practice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nd its Optional Protocol,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s.

### *Denial of access to North Korea*

- To grant access to the all UN Special Procedures requesting a visit as well as to independent monitors, in particular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 To take immediate action to stop the use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of prisoners, and forced labour in prison camps, and to ensure that international standards are applied in the treatment of prisoners;
- To improve conditions in prison camps and detention facilities to meet minimum international standards.

### *The death penalty*

- To immediately end public and extrajudicial executions;
- To introduce a formal moratorium on executions as a first step towards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Right to food*

- To grant immediate and unfettered access to the World Food Programme to ensure that food reaches those most in need.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 To amend its Criminal Code so that leaving the country without permission does not constitute a criminal offence;
- To abolish the requirement for permission to travel internally and abroad.

*Abductions and enforced disappearances*

- To publicly condemn and immediately stop all abductions and enforced disappearances;
- To thoroughly, independently and impartially investigate past and current allegations of abductions and enforced disappearances;
- To make public official, accurate and conclusive information on the fate and whereabouts of all persons subjected to abduction or enforced disappearance;
- To ensure that all persons subjected to abduction or enforced disappearance be free to leave North Korea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unless they are charged with a recognizable criminal offenc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 To lift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freedom of the press and expression;
- To lift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 Appendix: Amnesty International documents for further reference<sup>13)</sup>

- Press release, “*North Korea: Amnesty International calls for release of detained US journalists*” 1 April 2008
- Press release, “*North Korea: summary executions yet another injustice for beleaguered population*” 6 March 2008
- Report, “*Asia Pacific: Enforced disappearanc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must end*”, 30 August, 2008, AI Index: ASA 01/010/2008
- Urgent Action: fear of imminent execution, 15 February 2007, AI Index: ASA 24/001/2007
- Media Briefing, “*North Korea: Human rights concerns*”, 24 November 2006, AI Index: 24/002/2006
- Media Advisory, “*North Korea: briefing on present situation*”, 28 July 2005, AI Index: ASA 24/002/2005
- Urgent Action: Disappearance/fear of torture/fear of death penalty, 15 September 2005, AI Index: ASA 24/003/2005
- Report, “*Starved of Rights: Human Rights and the Food Crisi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20 January 2004, AI Index: ASA 24/003/2004
- Press release, “*North Korea: denial of right to food*” 20 January 2004, AI Index: ASA 24/004/2004
- Urgent Action: Fear of torture/ill-treatment, 19 November 2004, AI Index: 24/002/2004
- Urgent Action: Fear of torture/fear of death penalty, 23 December 2004, AI Index: ASA 24/007/2004

---

13) All of these documents are available on Amnesty International’s website: <http://www.amnesty.org/en/region/north-korea>

Human Rights Watch

**UPR Submissi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pril 2009

**Summary**

Human rights condi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remain dire. There is no organized political opposition, independent labor unions, free media, or civil society. There is no freedom of religion.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lack of due process and torture and other mistreatment remain serious concerns. The DPRK runs large prison camps where hundreds of thousands of its citizens—including children—are enslaved in deplorable conditions. Periodically, the DPRK publicly executes individuals for stealing state property, hoarding food, and other “anti-socialist” crimes.

The DPRK divides the population into different categories—“core,” “wavering,” and “hostile”—based on the government's assessment of an individual's political loyalty. Basic services, such as access to health care and education, are parceled out according to this classification scheme.

The DPRK is a party to four ma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DPRK has largely shunned dialogue with UN experts on human rights, including Vitit Muntarbhorn, who was appointed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in the DPRK in 2004, whom it does not permit to visit the country.

This submission focuses on four core areas on which Human Rights Watch has

conducted research: right to food, border crossers, children's rights and workers' rights.

### **Right to Food**

The DPRK has largely recovered from a famine in the mid-late 1990s that killed millions of people and stunted the development of many children for life, but serious food shortages persist and vulnerable members of the population, including young children, pregnant and nursing women, the disabled and elderly, still suffer.

Non-elite members of the society are almost completely dependent on markets to access food and other necessities, since the ration system is largely defunct. They receive rations a few times each year, typically on major national holidays such as leader Kim Jong Il's birthday. Only a tiny minority, mostly high-ranking members of the Workers' Party and the security and intelligence forces, still receive regular rations.

Since the mid-1990s, the DPRK has received a large amount of foreign aid each year, but has consistently limited access to international humanitarian aid workers monitoring aid distribution inside the country.

While the Republic of Korea (ROK) was a major donor of food aid for years, providing up to 500,000 tons of rice per year and about 300,000 tons of fertilizer for spring planting, such aid stopped when conservative ROK President Lee Myungbak took office in early 2008. The DPRK so far has rejected the ROK's offer to discuss food aid if the DPRK makes a formal request.

In May 2008, the United States agreed to provide the DPRK with 500,000 tons of food. International humanitarian agencies began distributing US food aid in DPRK in June 2008. By March 2009, almost 170,000 tons have been delivered to DPRK.

At the end of March 2009, the DPRK expelled American humanitarian workers after notifying Washington that it does not wish to receive additional US food assistance. The suspension of food aid and expulsion of aid workers occurred amid rising tensions surrounding the DPRK's planned launch of a rocket. (The DPRK launched the rocket in early April.)

U.N. investigator Vitit Muntarbhorn told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in March 2009 that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was “dire and desperate.”

### **Border-Crossers**

Since the mid-1990s, hundred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s have crossed into China. They include those fleeing political and religious persecution, and people who left because of the food shortage or other economic reasons. Other North Koreans have visited China with travel permits to meet their relatives, and merchants regularly cross the border for business either secretly or by bribing border guards.

The trafficking of North Korean women and girls to China persists, especially near the border. Victims are often abducted or duped into marriage, prostitution, or sexual slavery. Some North Korean women live with Chinese men in long-term de facto marriages, though they lack legal resident status and remain vulnerable to arrest and repatriation, even if they have had children with Chinese men.

In the DPRK, leaving the country without state permission is considered an act of treason, punishable by lengthy prison terms and even the death penalty. Even some children who have crossed the border without permission have been subjected to detention and severe ill-treatment upon return. The resulting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upon return turns many North Koreans in China and elsewhere into refugees *sur place*, even if they left for economic reasons.

The authorities in China categorically label North Koreans illegal economic migrants and routinely arrest and repatriate them, violating China’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not to repatriate anyone where they are likely to face persecution, torture or ill-treatment. Ahead of and during the Beijing Olympic Games in 2008, China stepped up the arrest an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s.

Among those forcibly returned, North Koreans who have had contact with Christian missionaries or converted to Christianity while in China are known to receive harsher punishment. Since the foundation of the DPRK, the government has persistently persecuted religiously active people, typically categorizing them as “hostile elements.”

The DPRK views Christians in particular as tools of anti-DPRK counter-revolutionary imperialist aggress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for the DPRK’s repression of religious practice is its clash with the cult-like reverence of the DPRK’s late

founder Kim Il Sung and his son and present leader Kim Jong Il under the *juche* (roughly translated as “self-reliance”) ideology.

### **Children’s Rights**

North Korean children face discrimination and even punishment on the basis of the status, activities, expressed opinions, or beliefs of their parents or other family members. Collective punishment is common in the DPRK for political offenses, as entire families, including children, of those accused of disloyalty to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are themselves often imprisoned, sent to forced labor camps, or internally exiled to remote mountainous areas. Even if children avoid being imprisoned or sent to forced labor as part of collective punishment, they are often barred from higher education or good jobs.

The DPRK’s politically determined classification system restricts children’s access to education. Although all children are required to attend school for 11 years, it is generally children of the political elite who are allowed to advance to college and hold prominent occupations. Those belonging to “wavering” or “hostile” groups have very limited choice in education or work. An ideological education with an emphasis on a “military first” policy takes precedence over academic education, and from an early age children are subject to several hours a week of mandatory military training and political indoctrination at their schools.

### **Workers’ Rights**

The DPRK’s laws, including its labor laws, are based on the country’s state ideology of *juche*, or self-reliance, socialism, communism and the policies of the Workers’ Party. Guiding principles or instructions from late President Kim Il Sung have legal force that supersedes the constitution or laws. The DPRK’s labor laws are composed of the Socialist Labor Law and relevant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penal code, in addition to laws concerning foreign investors and businesses.

The state has full control over the labor market, and the law permits only labor organizations sanctioned and controlled by the state. Under the DPRK’s law there is no concept of an employment contract, as workers are assigned to their jobs by state labor administrative agencies under the control of the Workers’ Party. The state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basic services such as food, health care, education and housing, and in return for their labor, workers are paid a small amount of remuneration in cash or coupons to cover items such as supplementary food, clothes, and furniture.

The DPRK opene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in June 2004 under a contract with Hyundai Asan Corporation and the ROK-owned Korea Land Corporation. The complex is located between the city of Kaesong and the western end of the border between the two Koreas, an hour's car ride from Seoul. A specific KIC Labor Law was drafted and adopted to govern the rights of workers employed by enterprises in the KIC.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bout 39,000 North Korean workers produce mostly consumer goods for South Korean businesses. The law governing working conditions in the complex falls far short of international standards on the right to elect their own representatives, form trade unions, and bargain collectively. The law also does not adequately protect workers from gender discrimination and sexual harassment, and hazardous child labor.

Moreover, the KIC Labor Law stipulates that South Korean companies shall pay wages to North Korean workers directly in cash. However, on the DPRK's demand, South Korean companies remit worker salaries to the DPRK government, which in turn pays North Korean workers a small fraction of their salaries.

North Koreans have reportedly migrated for employment in Bulgaria, China, Iraq, Kuwait, Mongolia, and Russia. In some of these countries, activists have expressed concern for workers' basic rights, including efforts by the DPRK government to restrict freedom of movement, expression, and association, the constant presence of "minders" accompanying workers, and indirect salary payments under which large portions of salaries allegedly are recouped by agencies or the DPRK government.

The DPRK is not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It has not engaged ILO officials to discuss the protection of workers' rights in DPRK.

##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right to food, the DPRK government should:*

- Allow international humanitarian agencies, including the UN World Food Programme, to resume necessary food supply operations and to properly monitor aid according to normal international protocols for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These standards include having access to the entire country, being able to make unannounced visits, and being able to select interviewees at random.
- Ensure its distribution system is both fair and adequately supplied, or permit citizens alternate means to obtain food, including access to markets and aid.
- End discrimination in government distribution of food in favor of high-ranking Workers Party officials, military, intelligence and police officers, and against the “hostile” class deemed politically disloyal to the government and Party.
- Assist young children, pregnant and nursing women,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as priority recipients of food aid.

*Regarding border crossers, the DPRK government should:*

- Allow all North Korean citizens to travel freely in and out of the country.
- Stop punishing North Koreans who are repatriated.

*Regarding children’s rights, the DPRK government should:*

- Respect and ensure the rights set forth 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each child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 End collective punishment of families, especially against children.
- Treat migrant and trafficked children who return to the DPRK as victims and not as criminals, and provide them with the necessary support and counseling for reintegration.
- Avoid the early militarization of children in schools.

*Regarding workers’ rights, the DPRK government should:*

- Join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ccede to its core treaties, and



invite ILO officials to investigate and discuss protection and promotion of workers' rights in the DPRK.

- Enforce existing provisions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Labor Law effectively and, allow workers to receive payment directly from their South Korean employers.
- Amend the KIC Labor Law to explicitly protect workers'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 Amend the KIC Labor Law be amended to explicitly prohibit sex discrimination and sexual harassment.
- Amend the KIC Labor Law to incorporate the North Korean Labor Law's minimum age provision and to prohibit the assignment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to dangerous or hazardous jobs.
- Act to ensure that North Korean workers living abroad enjoy the same human and workers' rights as others in the host country.
- Allow thorough on-site investigations in overseas facilities where North Koreans work, whether through the host country's inspectors or with the cooperation, for example, of experts from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ANNEX

### **Right to Food**

#### **Give North Koreans food**

For North Koreans leaving the country to escape hunger, the situation is also becoming more desperate. Refugees told of repeated announcements warning of heavier punishment for illegal border crossings. That includes most North Koreans leaving the country, since permission to travel abroad is extremely difficult and costly to obtain. The government is said to be increasing border patrols on the North Korean side.

September 26, 2007 Commentary

#### **North Korea: Ending Food Aid Would Deepen Hunger**

##### *Resume Food Aid to North Korea's Vulnerable Population*

Emergency food aid to North Korea should not be suspended in response to the country's alleged nuclear test, Human Rights Watch said today. Since the mid 1990s, North Korea has been dependent on foreign aid to feed up to one third of its population.

October 9, 2006 Press Release

#### **North Korea: Policy Changes May Foster New Hunger**

##### *Government Must Grant Fair Access to Food and Aid*

Recent decisions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suspend the operation of the World Food Programme, ban the private sale of grain, and fully reinstate the discredited Public Distribution System could lead to renewed hunger for North Korea's already poor and destitute people.

May 3, 2006 Press Release

## **A Matter of Survival**

###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Control of Food and the Risk of Hunger*

This 34-page report examines recent worrisome developments in North Korea's food policies, its marginalization of the World Food Programme, its refusal to allow adequate monitoring of food aid, and the implications of the government's new policies. Human Rights Watch noted that only a decade ago, similar policies led to the famine that killed anywhere from 580,000 to more than 3 million, according to independent researcher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May 3, 2006 Report

## **North Korea is headed toward another famine**

North Korea has also banned the buying and selling of grain by individuals at farmers' markets and ordered workers who abandoned their jobs during the famine of the 1990s to return to work, or be punished. It also announced it was reviving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under which only the state can distribute grain, through workplaces and schools. These are dangerous moves. Only 10 years ago, North Korea experienced a famine that killed from 500,000 to three million people, according to economists, demographers and aid agencies.

May 3, 2006 Commentary

## **Border-Crossers**

### **North Korea's Cruelty**

North Korea is again dominating headlines by signing a deal to close its main nuclear reactor and allow international inspectors to return in exchange for energy and economic assistance. As North Korea watchers cautiously welcome this possible step toward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a deeply disturbing development has garnered almost no attention: Pyongyang's hardening policy toward North Korean border-crossers.

March 16, 2007 Commentary

### **North Korea: Harsher Policies against Border-Crosser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hardened its policy towards its citizens it catches crossing the border into China without state permission, or whom China has forcibly repatriated. Until around November 2004 those who crossed the border—often to find food—were typically released after questioning or served at most a few months in forced labor camps, a relatively light punishment by North Korean standards for what is considered an act of treason. Recent interviews by Human Rights Watch show that this relative leniency is over: in late 2004 North Korea announced a new policy of harshly punishing border crossers with prison sentences of up to five years.

March 5, 2007 Report

### **North Korea: Border-Crossers Harshly Punished on Return**

*China Should Grant UNHCR Access to North Koreans in Border Area*

Human Rights Watch urge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stop arresting people crossing the border, and to allow its citizens the freedom of movement inside and out of the country. North Korea is a party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ich guarantees everyone the freedom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their own. The government thus has a legally binding obligation to ensure its citizens can exercise this right, and not punish them for it.

March 4, 2007 Press Release

### **The Invisible Exodus**

*North Korea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must end the forcible return of North Korean asylum-seekers and the arrest and harassment of aid workers who assist them, Human Rights Watch said in a new report released today. The 36-page report, *The Invisible Exodus: North Korea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tails the exploitation and years of life underground that North Koreans endure in China. The report documents the trafficking of North Korean “wives” for Chinese men, and the torture and humiliation returnees suffer at the hands of North Korean officials.

November 19, 2002 Report

## **Children's Rights**

### **Government Violations of Children's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bmission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is submission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Human Rights Watch provided information to the Committee on violat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July 4, 2008 Amicus Briefing

### **Denied Status, Denied Education**

#### *Children of North Korean Women in China*

This 23-page report documents how such children live without legal identity or access to elementary education. These children live in the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in eastern Jilin Province, northeast China (near its border with North Korea). Some are from North Korea while others were born in China and have Chinese fathers and North Korean mothers.

April 11, 2008 Report

### **China: Educate Children of North Korean Women**

#### *Policies Marginalize Children, Force Family Breakups*

Many children of North Korean women living in China are denied legal identity and access to education.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its own laws, China should ensure all children can go to school, without preconditions such as requiring them to show household registration papers. China should also stop arresting and summarily repatriating North Korean women who have had children with Chinese men.

April 12, 2008 Press Release

## **Workers' Rights**

### **Mongolia: Protect Rights of North Korean Migrant Workers**

The Mongolian government should protect the human and labor rights of North Koreans coming to Mongolia to work, Human Rights Watch said today in a letter to Mongolia's minister of social welfare and labor.

August 19, 2008 Press Release

###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 *Annex 22-B: A Missed Opportunity on Workers' Rights in North Korea*

This 13-page briefing paper looks at Annex 22-B of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FTA) and how it flouts the spirit of the recently amended workers' rights provisions. It also makes recommendations on how to amend Annex 22 in order to effectively protect, in law and practice, the basic labor rights of the workers producing goods under the existing agreement.

August 2, 2007 Report

### **Not a sweatshop, but no 'workers' heaven'**

South Korea should be pushing to ensure its companies respect workers' rights, just as if they were operating within South Korea itself. At the same time, Pyongyang should amend the Labor Law to meet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and allow South Korean companies to pay the workers directly. North Korea should also join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ign its core treaties and invite its officials to discuss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workers' rights.

October 7, 2006 Commentary

### **North Korea: Workers' Rights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is 19-page briefing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labor conditions at the KIC, an industrial complex located in North Korea. It documents the KIC Labor Law's shortcomings in the area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the prohibitions on sex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and harmful child

labor, among others.

October 3, 2006 Briefing Paper

**North Korea: Labor Rights at Risk in Joint Industrial Complex**

*South Korean Companies Violate Labor Law*

The North Korean law governing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 new industrial joint venture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n companies, should be amended to ensure adequate protections of basic workers' rights. Although labor conditions for North Korean workers at the KIC likely represent an important step forward compared with the rest of North Korea, the law governing the complex and some practices by South Korean firms operating there still fall far short of international labor protection standards.

October 1, 2006 Press Release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iversal Periodic Review, 6<sup>th</sup> Session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Stakeholder Submissi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TRODUCTION**

1.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CSW), a human rights organisation specialising in religious freedom, wishes to draw the attention of the OHCHR to the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which have and continue to take plac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2. The country's closed-border policy ensures a challenge in obtaining exact figures. Nevertheless, research gained through first-hand witness testimonies and consultations with South Korean academics and agencies on the field has led us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is a *prima facie* case for the commiss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as well as indicators of genocide<sup>1)</sup>. The strict hierarchical system of government and the information available about decision-making in the DPRK suggests that the political leadership, and in particular Kim Jong-II, is to be held responsible.
3. In light of the DPRK'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o respect human rights, this submission focuses on the limits to freedoms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al and legislative framework, and reviews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on the ground. Particular attention is given to the detention and imprisonment system, the state apparatus which permits the deprivation of numerous human rights.

---

1) See Appendix 1.1 and attached CSW Report, "A Case to Answer . A Call to Act" p.91



## **BACKGROUND AND FRAMEWORK**

### **Scope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4. The DPRK Government is obliged to put into practice the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as later mentioned.
5. Recommendation: The State Party is urged to ensure that state policy and practice is wholly reflective of the international treaties which it has bound itself to.

### **Constitutional and Legislative Framework<sup>2)</sup>**

6. The DPRK's Constitution, adopted in 1948, revised in 1972, and further modified in 1992 and 1998 guarantees in basic form the human rights identified by the UN and the international system<sup>3)</sup>. However, the interpretation of these rights differs substantially from internationally recognised standards. The DPRK Government argues that developmental rights take precedence over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moreover, such rights are guaranteed and respected not as rights but awarded at the goodwill of the "Dear Leader".
7. Recommendation: Despite recent reforms, the Constitution must be modernised further. It needs to be a basis from which human rights can be protected, and from which all rights are recognised as equal, innate and inalienable.

##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ON THE GROUND**

### **Cooperation with human rights mechanisms**

8. The regime has displayed a strong recalcitrance towards engaging with international bodies, exhibited in its worrying and continued failure to recognise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

2) See Appendix 1.1; CSW Report, p18

3) See Articles 62 et seq. of the 1998 Constituti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9. Recommendation: The DPRK is implored to recognise the mandate of the Rapporteur. In furtherance, the Government should extend a standing invitation to all Human Rights Council thematic special procedures.

###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obligations**

#### *Equality and non discrimination<sup>4)</sup>*

10. Despite constitutional guarantees, de jure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sup>5)</sup> is not respected. Although it is less explicit than in the past, the *songbun* discriminatory system stands in clear violation. Citizens are placed under one of three classes depending on their loyalty to the regime, with a further 51 sub-classes. Criminal punishment, access to education, employment, health benefits and even such basic necessities as food distribution are all issued on the basis of one's placing. Those in the hostile class account for 27 percent of the population, are generally national enemies, such as religious believers and political opponents, and are treated extremely harshly.

11. **Recommendation: Starting with the abolition of the *songbun* system, the State Party needs to monitor and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of existing laws, beginning with a full compliance of the ICCPR and the ICESCR.**

####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 a) The right to life

##### i. "Positive Measures"<sup>6)</sup>

12. General Comment 6<sup>7)</sup> obliges State Parties to "adopt positive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 to life<sup>8)</sup>. In contrast, North Korea's political prison camp policy

---

4) See Appendix 1.1; CSW Report p19

5) ICCPR, Article 2 (1) and Article 26; and ICESCR Article 2 (2)

6) See Appendix 1.1; CSW Report p26

7) ICCPR, General Comment 6

8) ICCPR, Article 6

appears calculated to cause the death of hundreds of thousands<sup>9)</sup>. The pitiful food rations<sup>10)</sup> combined with the system of forced labour ensures that constant hunger and deprivation pervades the prison system. Authorities have seemingly taken no steps to provide the levels of food required in order to reduce mortality significantly. In the forced labour system<sup>11)</sup>, a systematic and long-standing practice, prisoners are forced to complete work such as mining, logging and intensive factory labour on the barest of food rations, leaving them prone to fatigue and sickness, and in many cases, to eventual death. Such a practice also violates the international prohibition on forced labour<sup>12)</sup>. It is little wonder that the system has been labelled a de facto death penalty<sup>13)</sup>.

13. Article 6 further necessitates States Parties to adopt measures which seek to reduce infant mortality and to increase life expectancy<sup>14)</sup>. The practice within the detention and imprisonment system substantially conflicts with this. Pregnancies are generally disallowed within the prisons, and thus if efforts by the state authorities to induce an abortion have not been successful, testimonies suggest babies alive at birth are killed, usually by being smothered or left face down to die unattended<sup>15)</sup>. Women detained for having crossed the border into China have suffered similar treatment. Some accounts even describe prisoners being forced to kill their own newly born child. The reason given was the child's part-Chinese descent<sup>16)</sup>.

## ii. The Death Penalty

– “Most serious crimes”

14. Under Article 6 of the ICCPR, States Parties must restrict the application of the death penalty to the “most serious crimes”. North Korean defectors give

---

9) While it is impossible to give a precise figure for the number of detainees in the political prison camps, it is believed to be around 200,000. See Appendix 1.1, CSW Report p27

10) See Appendix 1.1.1.1 for relevant testimony

11) See Appendix 1.1.1.2 for relevant testimony

12) ICCPR, Article 8 (3b);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Article 2

13) See Appendix 1.1.1.3 for relevant testimony

14) ICCPR, Article 6; CRC, Article 24 (2a)

15) Also violates CRC, Article 6

16) See Appendix 1.1.1.4 for relevant testimony

testimonies of executions liberally taking place both inside<sup>17)</sup> and outside<sup>18)</sup> the detention and imprisonment system. Within, the penalty has reportedly been given for acts such as foraging for or stealing food, attempting to escape, rioting, assaulting guards, refusing to abandon religious beliefs, and criticizing the North Korean regime. It has also been used as the punishment for those North Koreans repatriated from China who have had contact with South Koreans or Christians. Outside the system, the acts subject to execution are often similarly simple efforts such as those to secure food, which evidently fails to correlate with the “most serious crimes” stipulation.

– Procedural Guarantees<sup>19)</sup>

15. The death penalty must only be “carried out pursuant to a final judgment rendered by a competent court”<sup>20)</sup>. However, the competency of the court is highly questionable and the trial standards which they purport are barely comparable to international standards.<sup>21)</sup>

#### b)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 i. 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sup>22)</sup>

16. Practice regarding the detention and arrest of offenders<sup>23)</sup> clearly violates the international freedom against the 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sup>24)</sup>. In addition, the Government practices the principle of guilt by association, its use dependent upon the presumed political offence and social classification of the prisoner<sup>25)</sup>. Without a legal basis, up to three generations-grandparents, parents and children-related to the accused can be incarcerated.

---

17) See Appendix 1.1.1.5 for relevant testimony

18) See Appendix 1.1.1.6 for relevant testimony

19) See Appendix 1.1; CSW Report p36

20) ICCPR, Article 6 (2)

21) See paragraphs 19-20

22) See Appendix 1.1; CSW Report p47

23) See paragraphs 19-20

24) ICCPR, Article 9; General Comment 8

25) See Appendix 1.1.1.7 and 1.1.1.8 for relevant testimonies

ii. Torture<sup>26)</sup>

17. Within the detention and imprisonment system, torture is a widespread and systematic practice, taking on a variety of forms and often resulting in death<sup>27)</sup>. Torture is regularly used in interrogation facilities, sometimes to the point of disability, paralysis or death. Prisoners have also reportedly been used for medical, chemical and biological experiments<sup>28)</sup>. Additionally, prisoners should not be “subjected to any hardship or constraint other than that resulting from the deprivation of liberty”<sup>29)</sup>. The system of forced labour prisons<sup>30)</sup> stands in stark contrast to such a requirement.

**18. Recommendation: Clearer instructions need to be given to law enforcers to respect human rights, and a monitoring of their work is a prerequisite to ensure accountability. The State must put an end to executions and abuses against the 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 The death penalty should only be an exceptional measure for punishment, if used at all, and it should operate under a legal system which guarantees fair trial standards. The detention system should strictly mirror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ll those presently detained arbitrarily should be released.**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the rule of law*

19. A tenuous separation of powers ensures that the North Korean judiciary does not function as an independent branch of government<sup>31)</sup>: all judicial appointments are made by the executive, the judiciary does not engage in judicial review of legislation, and its functions are exercis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sup>32)</sup>.

20. Those accused of breaching the criminal law are generally subject to formal

---

26) See Appendix 1.1; CSW Report p37 & p48

27) Contravenes ICCPR, Article 10

28) Contravenes ICCPR, Article 7

29) ICCPR, General Comment 21

30) See paragraph 12

31) As required by ICCPR, Article 14 (1)

32) See Appendix 1.1; CSW Report p17

judicial procedures, while those considered to be political offenders have no recourse to them.<sup>33)</sup> The latter are removed, investigated (typically under torture) and have their cases decided, all by the State Security Protection Agency. There is no access to legal counsel, or to challenge the legality of their detention. Once “guilt” has been formally established, they are transferred to a political prison. Those deemed to have committed minor crimes may be sent extra judicially to short-term forced labour punishment facilities. Even work superiors can administratively sentence employees to such terms. Those accused of breaching the criminal law are usually subject to formal judicial procedures, however these trials still breach international law<sup>34)</sup>. Eyewitnesses and video footage testify to the practice of executions following summary trials, in which defendants are typically dragged out in front of a crowd, given no opportunity to speak, and then executed. There also lacks a satisfactory mechanism in the judicial system to allow for the right of appeal<sup>35)</sup>.

21. Recommendation: A review of the political, legislative and judicial system is imperative so as to ensure a judiciary which is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ll professionals involved with the system of justice need to be trained on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so as to ensure a fair trial for every offender.

####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sup>36)</sup>*

22. Despite stated respect for freedom of religious belief in the DPRK constitution<sup>37)</sup>, religious repression has been brutal. The treatment of Christians has been particularly harsh, with serious abuses committed against them and multiple executions and transfers to political prison camps taking place. Such treatment strongly indicates genocidal intent and practice<sup>38)</sup>.

23. In recent years, the DPRK Government has overtly attempted to demonstrate

---

33) See Appendix 1.1; CSW Report Pp24-25

34) ICCPR, Article 14

35) Contravenes ICCPR, Article 14 (6)

36) See Appendix 1.1; CSW Report p52

37) Article 68: “Citizens have freedom of religious beliefs”

38) See Appendix 1.1.1.9 for relevant testimony

greater religious freedom, establishing some state-controlled religious bodies and allowing a few religious places of worship to function, albeit under tight restrictions.<sup>39)</sup> While there is some discussion as to whether those in the state-sanctioned bodies are true religious believers who have been permitted a measure of freedom to practise their faith, none would contend that there is liberty to freely follow the faith of one's choice according to one's conscience.

- 24. Recommendation: The State Party must respect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as enshrined in international law, and this should be reflected in policy and practice. Suitable measures must be in place to prevent and eliminate all forms of discrimination on grounds within Article 18 ICCPR. There needs to be an encouragement of religious tolerance and dialogue throughout society.**

*Migrants, refugees and asylum seekers*<sup>40)</sup>

25. Article 233 of the North Korean penal code stipulates that it is a crime to cross the country's border without government permission<sup>41)</sup>. Regardless, food shortages, economic hardship, class-based discrimination and government repression have encouraged a significant number of North Koreans to flee the country, an estimated 30-50,000 at present. Arrest teams are dispatched to find and forcibly repatriate those who have left, in cooperation with China on the other side of the border<sup>42)</sup>. Those who are returned face interrogation, mistreatment, torture, and, in the worst cases, long-term imprisonment or execution. There is also significant defector testimony that women repatriated from China who are pregnant face forced abortion and the killing of their babies<sup>43)</sup>.

- 26. Recommendation: The State Party is urged to change their policy and practice to**

---

39) The religious bodies are the Korean Christian Federation, the Korean Buddhist Federation, the Korean Catholic Association, the Korean Cheondokyo Association and the Korean Orthodox Association

40) See Appendix 1.1; CSW Report p23; relevant testimonies in Appendix 1.2

41) Violates ICCPR, Article 12

42) Contravening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 Article 33; and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icle 3

43) See Paragraph 13

**ensure that no one is subjected to punishment for leaving their country. Instead of criminalising the victims, the DPRK should focus on addressing the root causes behind the refugees' plight.**



## APPENDIX

### 1.1 CSW 2007 Report-North Korea: A Case to Answer, A Call to Act

The report considers the available evidence, and concludes that there is a prima facie case for the commiss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It also examines the possibility of genocide and concludes there are indicators of genocide against religious groups, specifically Christians, implemented in particular in the 1950s and 1960s.

The CSW Report is attached with this submission, and is available in hard copy by request from our London office.

#### 1.1.1 Testimonies from Report

##### *1.1.1.1 Lee Yeong-Guk, former bodyguard of Kim Jong-Il and former prisoner of Yodeok Political Prison Camp*

“Prisoners who committed misdemeanours such as economic crimes received beans as well as corn for meals and that’s why there were much less likely to suffer from malnutrition. However, political prisoners were given only corn in a small cup, mixed with soup cooked with dried radish leaves. The radish leaves were leftovers and were marinated. There were no other side dishes. Corn and soup were all for three meals. We were made to work for 14 hours on a daily basis and if one prisoner does not work as well as guards expected, the whole group of 2-300 would be beaten up together. This is the way that they make prisoners watch each other. We caught mice and snakes for nutrition and ate them”.

##### *1.1.1.2 Kang Cheol-Hawn, former child prisoner at Yodeok Political Prison Camp*

“The political prisoners are not seen as human beings, rather as small parts of a big machine; treated worse than dogs and cats. Their reasoning is paralysed because they have to live like machines; they have no energy reserves to think. They get up at 5 o’clock in the morning and are subject to roll call three times a day to make sure that they stay at their respective sites of unspeakably hard labour. The prisoners would suffer injuries and illnesses - on average five or six out of ten prisoners would always be injured or die because they caught a disease. The types of labour they have to do include gold mining, quarrying, felling, road construction, livestock rearing and

production for foreign currency such as medicinal herbs, high quality timber and alluvial gold extracts. If they fail more than twice to be counted during the roll call, they are treated as having attempted to escape and are killed. With meagre food rations of corn, salt and soup made from waste leftovers, prisoners had to work 14 hours a day and often longer if their daily work quota had not been met. You did not normally get to sleep until after 10 at night but for those who had to carry on working, they would not be allowed to sleep. There are many children in the North Korean concentration camps because of the family quarters. Technically speaking, there are schools but these are just the meeting places where children gather for forced labour. The children have to endure more brutal labour than the adults. The reason why they have a higher death rate than the adults is because they are driven hard at work and they have malnutrition.”

*1.1.1.3 Kim Young-Soon, former prisoners at Yodeok Political Prison Camp*

“They are death camps. It would be kinder to kill outright, but in North Korea they make the process long, protracted and painful. One experiences ongoing agony and suffering leading to death instead of a quick death. The gruesome life and suffering is not a life anyone would want: the same horrific lifestyle, being forced to work from very early in the morning, day in day out, filled with abhorrent suffering. It is much better to be shot dead”.

*1.1.1.4 Lee Mi-Suk, former detainee at North Pyeongan Provincial Police Detention Centre in South Sinuiju*

“One morning I had to help escort three pregnant women to a military hospital outside North Pyeongan Provincial Police Detention Centre in South Sinuiju. The first woman was a 27-year old from Chongjin who was full term. The second was a 22-year-old from Musan who was also full term. The third was aged 30 and was about eight months pregnant. Because I was supposed to help escort the lady from Chongjin, I was in the room when she gave birth. This was the first time in my life that I saw a newborn baby. It was very tiny. It cried and moved its arms and legs. When the baby was born the umbilical cord was cut and then one of the nurses took the baby. She then took a wet cloth and smothered the baby to kill it. They killed the baby in the mother’s presence. She was beside herself, crying, shrieking and screaming. When the baby

stopped breathing the nurse wrapped it in a white cloth and took it away.

The nurses were acting like police officers. They said the baby was a “chink” and that they did not want Chinese babies. When I saw this I wondered what kind of crimes these women had committed to suffer this penalty. The nurses obviously believed defecting to be a serious crime against the fatherland and showed no mercy because they considered the baby to be born to a serious criminal. Seeing this made me want to stop living.

The other women also gave birth to living babies. I could not see them as they were behind another partition, but they were killed in the same way. Other girls saw such things and told me about them. The women who gave birth returned to jail later in the day to start work the next day. There was no special meal for them. I saw the lady from Chongjin when she came back. Her eyes were swollen and she kept crying. She was so sad, so depressed.

There were over ten pregnant women who forcibly lost their babies during the 50 days that I was there. Some were given an injection. Some babies were lost through forced abortion, others were delivered dead and others were born alive and then killed. The second time I was arrested, I was again sent to North Pyongan Provincial Police Detention Centre. This time, there were three women who were three or four months pregnant and they were all subjected to forced abortion.”

*1.1.1.5 Lee Yeong-Guk, former bodyguard of Kim Jong-Il and former prisoner at Yodeok Political Prison Camp*

“When public executions were about to start, they were announced very loudly by the prison guards through speakers; intimidating everyone that they must come out and attend the scene. The maximum number of prisoners who had witnessed public executions was 2500 and the minimum 500. During my five years prison camp life, three prisoners were publicly executed per month on average. If you calculate the number, I have witnessed about 180 prisoners being executed. Most executed prisoners were in their thirties to forties. More than 99% of them were male. Most of the executed prisoners were those who had no particular grounds for public execution and a few were those who stole food or made an attempt to escape. Public executions were carried out mainly to intimidate prisoners. The prisoners were already beaten before they were hung. They were already half dead when they were taken out and tied

to a tree for execution.

*1.1.1.6 Lee Jin-Taek, North Korean escapee*

“I have witnessed public executions in North Korea many times. There was a public execution in Onsong, my hometown, the day before my defection to China. Whenever there was a public execution posters were put up all around the place. Eventually people were not interested, so they then killed people in the market place where there was already a crowd. It is extremely unpleasant having to watch another man being killed. The first convict I saw was someone who made a mistake in building something. His family background was bad so they killed him. However, after that, the crimes they committed were related to the food shortage, such as stealing cows or food or similar acts. So it was not very pleasant to watch.

Any convict is already half dead by the time he is brought to the execution site. He cannot walk by himself. Guards have to hold him on both sides. He is blindfolded, gagged and tied to a pole. The ropes go around his chest, stomach and legs. First they shoot the rope to break the chest rope, the bullet enters the chest and the person falls forward. The next marksman shoots at the stomach rope and then the last one shoots at the rope around the legs. Then the whole body falls forward to the ground. Then they shoot him indiscriminately to make sure he is dead. There is only a short interval of a few seconds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bullet because when the chest rope breaks, the upper body starts falling.

After the convict is dead, they roll the dead body in a straw mat. It is put into a truck and nobody knows where it is taken afterwards.”

*1.1.1.7 Lee Min-Bok, former detainee at a police detention centre in Hyesan City*

“When I was punished, my mother and sister were banished to a remote, barren and inhospitable hillside village because of my defection. They were fortunate not to have ended up in a camp. North Korea i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where this evil practice is performed - due to the perceived offence of a single member of the family the entire family has to be punished.”

*1.1.1.8 Kim Young-Soon, former prisoner at Yodeok Political Prison Camp*

“Over 60% of the prisoners in Yongpyeong-ri Absolute Control Zone are victims of guilt by association. In other words, they are there simply because they are related to landowners. Japanese collaborators, missionaries, etc.”

#### *1.1.1.9 Ahn Myeong-Cheol, guard at number of political prison camps*

“We do not have ethnic groups so the genocide definition does not apply in this regard, but the treatment of Christians precisely fits the genocide definition. The genocide definition fits the policy towards Christians one hundred per cent. There was a special instruction from the political leadership that all religions are social evil. There were speeches, texts, instructions, textbooks and pamphlets covering this. Religion is seen to be like opium and has to be wiped out. When I was on duty I saw many Christians. One is meant to worship only the political leaders and any other worship was a deviation from loyalty to the regime. When North Koreans hear about God they think they are talking about Kim Il-Sung. All North Koreans have this confusion. If anyone embraces Christianity in North Korea they are called a crazy guy. No one could understand or imagine someone wanting to become a Christian. It is very unlikely one could find a descendant of a Christian still living. The camp rules were intended to prevent Christian families. Everyone in the camp was prevented from reproducing. If someone had a baby it would be a problem in the whole camp. Christians were reactionaries and there were lots of instructions and mottos to wipe out the seed of reactionaries. The purpose of the camps I was involved in was to kill the prisoners. Instead of killing them by shooting, the intention was to force them to work to the last minute. The intention was to kill, not to extract labour. The purpose was to kill; the method was just different.”

## **1.2 Other testimonies by North Korean defectors**

### **1.2.1 Pang Bun-ok**

I am prepared to disclose my identity to support my following testimony due to the fact that doing so will not endanger my family in North Korea. My husband died of hunger years ago in North Korea and my children are all safe in South Korea today.

### My Family Background

My name is Pang Bun-ok, and I am 55 years old in the current year of 2009. (date of birth: 19 Feb. 1954). My father was a carpenter and my mother was a homemaker. I was born at Shingong-ni, Tongnim-kun, North Pyongan Province, North of Pyongyang. While I was still a toddler, my family moved to Unit 4, Yonam-up, Paegam-kun, Yanggangdo Province, a remote timber production region where I finished compulsory junior high school in 1969. I was 15 years old at that time. I also attended Timber High School for 2 years after the middle school. After working as an accountant at a timber company for approximately five years, I married a miner in 1976 from Musan Coal Mine in Musan district. I have three children from this marriage, two girls and a boy. I was a singer at the Party Propaganda Troupe of the same mine. My first daughter eventually became a state singer/dancer in Pyongyang. My address in Musan: Unit 187, Musan-up, Musan-kun, North Hamkyong Province.

### First Defection to China

My husband died of starvation in 1997 during some of the worst times of the famine. Motivated by anger against the government and my own hunger, I defected to China in June 1998 with my two children (my first daughter had already been missing for some time.) I was soon separated from my two children in China as I fell victim to human traffickers. I was sold to a Chinese farmer in Shandong Province, who at that time was about 50 years old man, physically disabled and very poor. It was a hopeless situation as I was virtually locked up most of the time and monitored by family and villagers without any knowledge of where I was and without any grasp of the Chinese language. I was continually tormented by the thought of what must have happened to my children. Some months later, when everyone in the village was in the field, a strange gang of young Chinese men broke open the gate and came through my door and kidnapped me to another village at some distance on a motor bicycle. My life then took another dismal turn as I learned that I was to be sold to another Chinese man, this time a man much younger than I. I soon learned that this man was emotionally unstable and wild. He frequently threatened his own parents, brothers and villagers with a dagger. I was so terrified that I became an extremely submissive and compliant wife to him to avoid, at all costs, raising his ire. One day, I was asked to bring him some rice wine from the village shop. I offered him food and drink and he asked me to drink

with him. When I finished a second cup, he suddenly became drowsy and fell sound asleep. Sensing a rare opportunity, I looked around and saw that the front gate was unlocked. I ventured outside the gate to explore the edge of the village for the very first time. As I walked further on, I found no one in the village. Then, I began to run with all my strength, continued on over some hills and eventually came upon a village with a public telephone. There I called my first contact in China to ask for help. Following directions from this contact, I boarded a bus to Hwaeryong, a small Chinese town near the border. Shortly before arriving at the border town, the bus was boarded and I was arrested by the Chinese police. It was the fall of 1999.

#### Musan SSA, Labor Training Camp and Police

Approximately 40 other North Korean defectors were in the Chinese prison where I was taken upon arrest. I was in the prison for about 15 days, then was forcibly repatriated to North Korea. On arrival in the State Security Agency (SSA) in Musan District in North Korea, we were all strip-searched by female staff at the SSA office (telephone operators and kitchen staff). We were forced to repeatedly squat and stand upright as a way of dislodging hidden money from the vagina and anus. It goes without saying that being subjected to such a procedure was utterly debasing and humiliating.

The SSA facility was so crowded that they kept me there for only three days, then dispatched me to a labor training camp where I was detained for two months. The camp had a fairly large playground and we, including some elderly women, were forced to run 100 laps around it. When any woman would fall during the forced running exercise, guards would mercilessly kick the weak and old women hard, saying, "You bitches! You traitors!" The inmates in the camp included a young girl, about 21 years old from Musan, Yonghi by name, who was in her seventh month of pregnancy. The guards were particularly brutal to her and kicked her stomach area frequently. The training officer (I cannot remember his name) was in his 40's and had the grim nickname, Stinging Wasp (Oppasi). He stood about 1.65 m tall and was particularly cruel to inmates. Four prisoners died at the camp during the two months I was there.

I was then sent to the Musan Police for interrogation. No less than 40 prisoners were squeezed into my 3 x 5 meter cell, a very small cell. This cramped space was full of lice, fleas and other insects. Altogether, there were several hundred prisoners in the police station.

We were brutally treated there. All the pregnant women were forced to abort. Yonghi refused the order in an attempt to save her baby. She was singled out, badly beaten and forced to abort by two male prisoners who were forced to jump on a wooden plank laid over her abdomen. I was hit by a square bar and kicked by guards so severely that I had four upper teeth and four bottom teeth broken. To this day I carry the scar on my head. My left leg and thigh were badly swollen by vicious kicks by guards. These wounds later developed into osteomyelitis in the absence of adequate medical treatment.

Women prisoners were often forced to stand on their head and hands to make them a better target for kicking. The guards often humiliated and made fun of prisoners to kill time. One day, they shaved head of an old man, about 65, and painted a funny face on his forehead to make him appear comical. They forced him to walk back and forth in a military parade style for hours for their amusement. There was a tiny toilet in the cell and a water faucet that lacked running water most of the time.

As prisoners were not considered human beings, we were not allowed to even make eye contact with the guards. During my detention at this facility for six months, July 1999 to January 2000, prisoners died at the average of one prisoner per day. Eventually, I was tried and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five years for the crime of defecting to China. By this time, I was in such a weakened state that authorities thought my death was imminent. As a result, I was released on sick bail in early 2000.

### Prison in Hamhung

I managed to regain some strength and health in the following three months and in May, 2000, I reported to the police to serve the remainder of my prison term. I was sent to Prison No. 15, Songwon-ni, Hwesan District, Hamhung, South Hamkyong Province. On arrival at the prison, I was so shocked to see 700 women prisoners, whom I later learned had been transferred from Chungsan Prison. They looked so wretched that, in many cases, their profiles did not even appear human. The prison facilities were very primitive: earthen walls, a thatched roof and a rock floor. Prisoners often found snakes and frogs in the crevices of these rocks. Whenever such a discovery would be made, women prisoners would jump to catch it, then kill and eat it raw.

The poor and inadequate farm tools made weeding and other farm work extremely difficult. Some cows were kept on the prison grounds. Prisoners would secretly search



for undigested beans or corn kernels in the cow droppings. Prison rules strictly forbade eating anything other than the daily ration. Prisoners would grab the bits of beans and corn from the dung at the first opportunity, quickly wipe them off on their clothes and eat them. A woman in my unit was caught eating beans from the cow dung one day and was so badly beaten that she became almost disfigured. The ensuing punishment was to withhold both her and my food ration for the next three days, as I was the leader of the unit she was in. Prisoners died here at the average of a prisoner every other day. I remember seeing a boiler and a small forklift that was used to carry short lengths of firewood to the boiler. As the forklift was small and dead bodies were too long to balance easily, prison workers used the forklift to bend and break the dead bodies of prisoners so that they could more easily be piled up together with short lengths of firewood. All the prisoners believed that the dead prisoners were disposed of in the boiler. This “hell” lasted about two years. I was then released under amnesty in January of 2002.

### Second Defection and Arrival in South Korea

Not long after my release, there was unbelievably good news from my Chinese contact. My eldest daughter and son were safe in South Korea! I mustered all my courage and managed to defect to China yet again in October, 2003. I arrived in South Korea on 8 January 2004 via the South Korean Embassy in Beijing. My son later found my missing daughter in China and made successful arrangement to bring her to Korea. I am very happy to be reunited with all my children in South Korea today even though I am very poor on the welfare program of the government. I tried to find work as a dressmaker but was prevented from doing so by my poor health. Occasionally, I join in singing and dancing performances at various Christian churches.

#### **1.2.2 Mr Kim**

My name Mr. Kim and I am 49 years old in 2009 as I was born in 1960 in Onsong district in North Hamkyong Province in North Korea, a border town with China. My father was a factory clerk and my mother was a cook at a state-run restaurant for workers. I finished my senior middle school in 1976 when I was 16 years old and remained as a military base construction worker for 24 years until my first defection to China in May, 2000.

I was married when I was 29 years old and have two girls from this marriage. They are now 15 years and 17 years old respectively.

In May, 2000, out of curiosity, I crossed the border to China and bought a few items of clothing and shoes for my children before returning to North Korea the next day. I was arrested in North Korea a few days later as the local police detected my children wearing new clothing and shoes. I was subjected to very rough police interrogation for about a week. During this time I was badly beaten with both of my hands handcuffed. Out of desperation, I managed to find a way to escape the detention facility, still handcuffed, while the interrogator was asleep. I defected to China immediately.

In the winter of 2002, my wife and daughters joined me in China. A Chinese farmer, my employer, betrayed my presence to the local police in the summer of 2003 when I demanded from him my unpaid back wages. I was repatriated to North Korea but was released after a week with the help of a State Security Agency officer (SSA), a relative of my wife's family. I managed to defect to China a few days later, this time even more disillusioned with the North Korean system.

However, I was arrested and repatriated to North Korea by the Chinese police in the winter of 2004 with my daughters. I was interrogated at the Onsong District SSA facility over a six-month period. Despite extreme coercion by the SSA, I refused to confess that I'd tried to go to South Korea. I was so badly treated and undernourished at this time that it was generally assumed I was going to die. My SSA Interrogator, Captain Park Chol-wu, about 50 years old, 1.65 metre tall, beat virtually every part of my body on a daily basis with a length of vinyl water hose. This method allowed him to beat me using his full strength, but without breaking bones and leaving any serious bruises or marks on my skin. I was so badly undernourished that my average weight of 65 kg. plummeted to 29 kgs. during this very difficult period. The SSA was very careful not to allow me to die while in their custody and sent me to the local police, clearing me of political offense. The local police kept me in their detention facility for about a month before they attempted to transfer me to a local prison that refused to accept me because it appeared that my death was imminent. During this single month at the local police station, I saw no less than 18 prisoners die in the police cellblock.

Eventually, I was released on sick bail. Unable to walk on my own, my brother pulled me to his home with the use of a small cart. I was so disillusioned by the North Korean

judicial systems by this time and the fear of re-arrest was so real that I mustered the strength and determination to defect to China about two weeks later. This was in the summer of 2005. With the help of Chinese friends, I was among the 29 North Koreans who sought asylum in the Japanese School in Dalian, China. South Korean Embassy staff noted my deteriorated health and strength and put me first in line to fly to Seoul almost immediately while stronger refugees were asked to be patient for some months.

I was treated by the state hospital in Seoul. A full health checkup revealed serious problems with my heart, kidneys and blood pressure. I am now securely settled in Seoul but still unable to work. I am now slowly regaining my health and am now able to walk for 20 to 30 minutes at a time. I am on the government's welfare funds for survival. My two daughters are still in North Korea and that is the reason I cannot disclose my name. My deepest desire is to bring my children to Seoul as soon as possible.

### **1.2.3 Anonymous**

The husband was born in China and his family returned to North Korea when he was one years old. Before escaping to China, he was working in an arms factory. He chose to leave for political reasons (he was not a trouble maker as such but disagreed with the government). Note that his family had a lot of interaction with Chinese who visited North Korea. He fled to China in 1994 before Kim Il Sung's death. He lived in China for approximately 9 years, became a chef, opened a restaurant and bought an apartment. He met his wife in China, also a North Korean refugee. They were both denounced by a Korean Chinese, apparently jealous of their success, who sold them for 300 Won or 50 dollars (which is an average monthly salary in China) respectively. Korean Chinese are encouraged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denounce North Koreans.

They were both sent to some kind of a prison (they used the word prison in Korean not camp). He was badly tortured and beaten and is now suffering from a heart condition as a result. He has also several scars on his legs and must use an electrical lift to go up the stairs in their house. They were forced to work from 6am to 7pm everyday, were given some sort of a very liquid soup to eat three times a day and were allowed the toilet one time a day. Every day in the evenings, they also received reeducation

lectures for two hours. He was released after one year and his wife after 6 months.

They both escaped again to China and came to the UK around a year ago. The wife had originally left the country with her younger brother and mother after the death of the father. The brother did not want to do the military service/join the army. Before being arrested, she had been living in China for 7 years. She was also tortured in prison and has a nasty scar on her right foot. When they crossed the border they received no help but they both learned Chinese, which helped them dramatically. They chose to come to the UK because they thought their families in North Korea would be in trouble if the authorities knew where they were. Interestingly they had never heard of Christianity while in North Korea and cannot say they met any Christian while in prison. The man is confident that everybody in North Korea knows how well South Koreans are doing and his message to North Koreans is: “run away”.

##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bmission to the UN Universal Periodic Review**

Sixth session of the UPR Working Group of the Human Rights Council  
30 November - 11 December 2009

### **1. Introduction**

The present information focuses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e DPR Korea and covers the following issues:

- Discriminatory policies of the DPR Korea against family background and maintaining of official classification of 'caste' system
- Systemic barriers to continue education and lack of freedom of choice of one's occupation
- Juvenile justice and detention.

### **2. The modern caste system in the DPR Korea**

Discrimination based on the surveillance of the family background and social origins was institutionalized in the DPR Korea in the 1960s into the legal system that resembles the 'caste system' in other countries and has profound implications on the child's wellbeing and perspectives related with education and occupation.

DPR Korea introduced the discriminatory system of division of the society into 3 classes: 'core', 'wavering' and 'hostile' and 52 categories and according to South Korean media source which in 2007 have published a copy of secret document of the present People's Safety Agency (Inmin-boan-seong), there is an evidence that further amendments were made in the system in 1991 after the collapse of the communist system in Europe and categories were extended to 56. The major indicator for discrimination is the citizen's political or religious leaning. Sinc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rule in 1945,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conducted thorough invest-

igations to classify everyone according to their family history and loyalty to the country more than 10 times.

This system ultimately affects everyone and creates gaps in the society in terms of ‘good’ and ‘bad’ citizens and their access to food, health care, university education or occupation. Every person is aware of the system and maybe informed of the fact that his or her files contain unfavorable records, the files however are secret and there is no legal system for the North Korean citizens to have either access to them or to seek justice and redress. The family’s past is continuously inherited by children and violates non-discrimination clauses in the CRC, ICCPR and ICESCR Conventions that the DPRK is a party to. Moreover, the amendments in the system have been done despite the DPRK joining the UN in 1991 and have not been discharged to confirm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Since the caste system in the DPRK is secret, the UN organs and other state parties remain misinformed about the full scope of discriminatory legal provisions operating in the country. Thus, it is of an utmost priority that DPR Korea makes available to the UN system all legal documents and regulations in force that in particular pertain to this issue. None of the recommendations issued by any of the UN institution will be effective or properly implemented unless the contradictory caste system in the DPRK is in force.

### **3. Systemic barriers to continue education and to choose one’s occupation**

The discriminatory caste system has its profound impact on the fact that most students that belong to lower classes and categories often choose not to continue their education in high school and even if they do, they are prevented from entering university. Lack of perspectives of continuing education and of overcoming the unfavorable class stigma causes both parents and children to view education as unnecessary, since there is virtually little chance to overcome this obstacle.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confirmed that being accepted to specialized vocation training schools is also not a matter of freedom of choice but depends upon the parents’ occupation and family background and is decided by the authorities. In other words, young students are forced to inherit parents’ occupation without consideration of one’s talents, abilities and school’s performance. Only children whose family is

classified in the best categories have chance to freely continue their education and choose high-profile occupation despite their school performance.

The class stigma has indirect impact on regional discrepancies and treatment of children in schools. It is well known that those who belong to the privileged class inhabit Pyongyang or other areas deemed important by the authorities; their children attend top schools and are not required to provide labor as well as miscellaneous fees for their education.

In all other areas various factors contribute to low school-attendance rates, such as excessive miscellaneous fees which are demanded under the guise of school projects, exploitation for labor, both on the state-run farms and as a source of private income for the teachers and school authorities. Despite the fact that in North Korea, the minimum working age defined by law is 16 years old and against the country's government representatives assurances toward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e past that the children labor was eradicated in the country; it is commonly accepted that children are mobilized for agricultural work from their middle-school years (12 years old) and in the most poverty-stricken provinces in the Northern areas (especially Onsong and Kyongwon counties in North Hamgyong Province) children are mobilized as early as 8-9 years old. Throughout the year children also have other "assignments" such as raising rabbits, collecting pebbles but also are mobilized for heavy labour, such as flood damage recovery, construction, well digging, railway maintenance and road paving.

The overwhelming burden for children and parents resulting from forced labor and hidden financial fees in the situation where those families are already under worse socio-economic conditions due to the class stigma, cause high drop-out rates of those children from schools (on average 60-80% in most of the areas except for Pyongyang and privileged schools). Consequently, it seems that both literacy rates and the overall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of North Korean youth has decreased in most areas except for Pyongyang and a handful of other areas.

In addition,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should be questioned about the sources and reliability of their statistics which shows almost 100% enrollment and graduation rates. In the course of research conducted on North Korean children it was found that children not attending the school or missing classes are granted automatic promotion to the next grade and automatic graduation at the end of the school, even without

having it attended. This is why the DPRK authorities are able to show those high rates on paper against the reality in the country.

These problems have led students and parents to distrust the school system; an increasingly large number of pupils are refusing education or its continuation feeling disenchanted with the present education system. This worrisome phenomenon has been found in several regions and is becoming a widespread social trend. As a resul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not expect that the attendance rate will improve thanks to provision of nutritious food and school supplies for North Korean children. There are more fundamental structural problems lying beneath the North Korean education policies and the reality of schools that need to be addressed with DPR Korea.

#### **4. Infringements on the child's personal rights and freedoms. Juvenile justice & use of torture.**

Discrimination based on the surveillance of family background and social origins, has been coupled since the 1990s with the DPRK authorities' practices of monitoring the remaining family and children of individuals who have defected or have a history of crossing the border to China or other countries. Some children reported that they were compelled to abandon their homes and hide in remote mountainous areas or at their relatives' in other provinces to escape the surveillance. Other children suffered because the entire families were exiled to remote mountainous areas as a punishment for the defection or so called 'anti-socialist' behavior of other family members.

Reports presented by the DPRK authorities entirely evade reporting on the situation of torture or abuse against children carried out by national investigative agencies, such as the Bowibu (Secret Police) or the People's Safety Agency (PSA, National Police), or in various detention facilities. We recommend that DPR Korea is questioned on the role, competencies and actual scope of power vested into these institutions for dealing with children and youth.

The 2007 NGO report which focused on the situation of torture in the DPRK found that five children out of the 20 interviewees confirmed having been subjected to torture between 1998 and 2003. The incidents were discovered that children were tortured in order to make them confess to political crimes they never committed or for minor offences. Arbitrary extensions of prison term, severe starving, and poor prison



environment were also highlighted as some elements of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eed of further discussion.

After the revision of its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Act, some of the procedures were changed to show relief, but in fact became even more enigmatic. It was reported that the children repatriated after their defection from the country experienced shorter and simplified investigations by *the Bowibu* or PSA and then confined to ‘public educational correction’ which is undefined and leaves room for arbitrary interpretation. Two examples in North Hamgyong Province in 2005 and 2006 showed that educational correction was implemented through beatings and other corporate punishment inflicted by teachers. Children who were sentenced to educational correction eventually quit school. Other cases showed that the investigative agencies in Hamgyong Province used beatings. There were also reported cases of children being sentenced to death and 11 year-olds sent to forced labor camp for stealing electric wires. None of reports found single case where a legal relief or redress was sought in relation to wrongful treatment of children which may be a result of the fact that children are not granted it.

In addition, it must be added that DPRK authorities make watching public executions a compulsory participation for children in a hope to prevent juvenile crime.

It has also been found that the custody facilities which serve the purpose of protecting children without parents, fixed addresses, birth records, or those forcibly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by the government resemble rather a detention facility more than a protection facility for children, and children accommodated in the centers are deprived of education and exploited for labor.

The separate recommendations should be addressed in terms of children who are born or accompany parents in the political prison camps (*Gwalliso*) in the DPRK. By the fact that those confined to such penitentiary institutions are deprived of the citizens’ rights, the country statistics never include those children belonging to the ‘political criminal’ categories acquired by birth. It has been reported that young political prisoners are deprived of education, medical care and are used for slavery work. Apart from extremely rare cases of amnesty or escape, such child- prisoners die in these institutions.

### **Concluding Recommendations**

The DPRK should make available to the UN system all secret legal documents and regulations in force that have relevance to the operation of the caste system in North Korea. Furthermore, it should be recommended to the DPRK that the system is fully abolished.

The DPR Korea should be also questioned on the role, competencies and actual scope of power vested into the *Bowibu* (Secret Police) or People's Safety Agency (PSA, National Police) in the process of arresting, interrogation and punishment when dealing with children and youth. The DPRK should be asked that the independent bodies concerned with children wellbeing are monitoring such process conducted by either NSA, PSA or by teachers and party officials through the 'public education correction' measures.

The DPRK should be requested to reveal statistics on the number of child-political prisoners, their mortality rates, access to health and education and legal reasons for internment of the children born in political prison camps or sent there with their family members.

**DRAFT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Sixth session  
Geneva, 30 November –11 December 2009

Advance unedited version

<번역: (사)북한인권시민연합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 DRAFT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Introduction

1.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of 18 June 2007, held its sixth session from 30 November to 11 December 2009. The revie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 held at the 11th meeting on 7 December 2009. The deleg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 headed by H.E. Mr. Ri Tcheul, Ambassador and Permanent Representative

---

\* The final document will be issued under symbol number A/HRC/13/13. The annex to the present report is circulated as received.

DPRK Mission in Geneva. At its 16th meeting held on 9 December 2009, the Working Group adopted the present report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 On 7 September 2009, the Human Rights Council selected the following group of rapporteurs (troika) to facilitate the revie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exico, Norway, and South Africa.
3.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of the annex to resolution 5/1, the following documents were issued for the revie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a) A national report submitted / written presentation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a) (A/HRC/WG.6/6/PRK/1);
  - (b) A compilation prepared by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b) (A/HRC/WG.6/6/PRK/2);
  - (c) A summary prepared by OHCH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c) (A/HRC/WG.6/6/PRK/3).
4. A list of questions prepared in advance by Argentina, Canada, Czech Republic, Denmark, Germany, Hungary, Ireland, Japan, Latvia, Norway, Republic of Korea, The Netherlands, Sweden, Switzerland,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was transmitted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troika. These questions are available on the extranet of the UPR.

## **I . SUMMARY OF THE PROCEEDINGS OF THE REVIEW PROCESS**

### **A. Presentation by the State under review**

5. The deleg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stated that it appreciated this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6<sup>th</sup> session of the UPR Working Group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s it is known, at the UN HRC and the UN GA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DPRK has been singled out for discussion every year out of purposes and motives irrelevant to genuine human rights, resulting in

the adoption of the unjust “resolutions”. DPRK neither recognize nor accept such “resolutions”, and categorically reject them as the extreme manifestation of politicization, selectivity and double standards in the area of human rights.

6. However, DPRK has come to this session as it values the UPR mechanism, which is impartially treating all UN member states with different ideologies and systems, cultures and traditions. DPRK hopes that this session will serve as an excellent occasion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dopt a cooperative approach with a view to correctly understanding and impartially assessing the human rights ideas and policies DPRK people have chosen and the prevailing reality of the country.
7. The DPRK has consistently maintained the principle of prioritizing human rights and honouring the UN Charter a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Its history has been the history of struggle to safeguard genuine human rights of its people.
8. Immediately after the liberation from colonial rule in 1945, DPRK laid down a framework for establishing a democratic judiciary, instituted and promulgated the Decrees on Land Reform, Nationalization of Industries, Labour, and on Sex Equality, and carried out democratic elections.
9. The DPRK honourably safeguarded its system and dignity in the 3-year war imposed by foreign forces just 5 years, after the country’s liberation. After the war, which turned everything to ashes, the DPRK took active steps to raise the people’s deteriorated material and cultural living standard to the pre-war level. Its Government, even during the hard time of the war, effected human rights policies including through enforcing universal medical care and taking steps for the relief of war victims.
10. The Government laid foundation for ensuring, to a greater extent, the enjoyment by people of their human rights in material and cultural life, which, in the 1980s reached a heyday in the country’s economic power and people’s living. However, dissolution of socialist market in the early 1990s and consequences of natural disasters that hit our country repeatedly from the mid 1990s negatively affected economic and cultural rights in general.
11. It was also at this time that military pressure and threats of aggression by hostile

forces reached an extreme, compelling DPRK people to choose whether to “defend their independent lives or fall into slavery”. They have made tireless efforts in hearty response to the *Songun* leadership of the great General KIM JONG IL, and in the course, the country acquired a strong war deterrent that can firmly safeguard their human rights system.

12. Today DPRK people, with ever more heightened honour and pride, are working devotedly to make the country an economic power and to guarantee the effective enjoyment of their human rights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ectors.
13. The DPRK is a socialist State guided by the great *Juche* idea, the essence of which is that people are the masters of everything and decide everything. Its sovereignty resides in the workers, peasants, servicepersons, intellectuals and all other working people. The legal system that has embodied the *Juche* idea stipulates democratic rights and duties, as well as guarantees, ways and means for their realization.
14. Every individual citizen is entitled to enjoy human rights and the State is obliged to ensure those rights-this is one of the important features of the system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our country.
15. The Government of the DPRK will in the near future create a firm guarantee for the ensuring on a higher standard of a more affluent and civilized life for its people, thei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16. Finally, the delegation noted it will participate in the interactive dialogue in a constructive and sincere approach, convinced that it will serve as an occasion to facilitate understanding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the DPRK.

#### **B. Interactive dialogue and responses by the State under review**

17. Fifty-two countries took the floor during the interactive dialogue. A number of countries recognized the significant achievements by DPRK in the fields of health, education, gender equality. The decision of the Government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UPR process was welcomed, as well as the decision to engage in a dialogue with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Government was encouraged to intensify its efforts with a view to achieve MDGs by 2015. A



number of natural disasters, which consecutively hit the country in the nineties, gravely affected the economic situation in addition to the loss of human life. Recommendations made during the interactive dialogue appear in Chapter II of the present report.

18. Brazil enquired about internal challenges to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Brazil remained concerned about the practice of execution in political detention camps and the disparities in public distribution of food. Brazil hoped that the DPRK authorities re-establish full-fledged investigations on the abductions of Japanese nationals and engage in a dialogue with Japanese authorities.
19. Japan noted certain positive steps undertaken by DPRK such as engaging in dialogue with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cooperating with UNICEF to improve health situation and quality education for children. Japan expressed its regret that DPRK did not fully respond to the various concerns of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punishment against those citizens expelled or returned from abroad, public executions, the abduction issue and the issue of detention facilities. Japan was also concerned about those who are suffering.
20. The Republic of Korea noted the recent positive efforts of the DPRK to engage with the CRC and to stipulate in the Constitution that State shall respect and protect human rights. However, it remained concerned about the detention in political prison camps and violations of the freedoms of movement, expression, thought and religion; a huge gap between the recognition of human rights in legal codes and their actual implementation, and the situations of separated families, prisoners of war and abductees. It urged the Government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at the grassroots level to uphol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and domestic laws as well as in human rights treaties such as ICCPR, ICESCR, CEDAW and CRC, to which DPRK is a party. It strongly encouraged the Government to accept the technical assistance offered by OHCHR.
21. Cuba noted that the imposition of a Special Rapporteur and the political manipulation vis à vis DPRK does not lead to cooperation and dialogue. DPRK is a developing country, victim of imperialistic aggressive policies, and recurring natural disasters. DPRK works to consolidate a socialist and just society, which

guarantees equality and social justice. Cuba highlighted, inter alia, the existence of a universal and free health system, the elimination of illiteracy and access to education for all.

22.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concerned by reports on allegations of extrajudicial execution, torture, systematic deprivation of due process and of forced labor. It referred to the lack of remedies or transparent accountability in dealing with allegations of abuse and expressed concern about reports of violence against women. It urged to grant access to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it enquired about efforts to deal with these issues.
23. Belgium noted the recent inclusion of human rights in the Constitution, but remained concerned by reports on the situation of political prisoners and the conditions of detention. It asked what mechanisms of control exist to ensure human conditions of detention specifically in camps of political prisoners. It asked about specific measures taken to combat food shortages.
24. Algeria requested more information about the *Juche* concept. It welcomed efforts to promote the right to education, which have allowed achieving the MDG for primary education for all. Algeria referred to difficulties in realizing the right to food, including for children suffering from malnutrition, due to natural disasters, famine and appea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vide DPRK population with food assistance.
25. The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noted that DPRK has an index of one hundred per cent of children attending primary school, compulsory, universal and free of charge, and at secondary school, eradicating completely the illiteracy in the country.
26. Pakistan noted that the DPRK is party to core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that its Constitution guarantees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Pakistan appreciated the system of ensuring full access to health and education services, the strong emphasis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he commitment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human rights through cooperative dialogue.
27. Belarus welcomed the determination of DPRK to achieve progressive realisation of material and cultural well-being of its nation. Belarus commended the efforts

of DPRK in ensuring the principle of universal access to medical services and education. Belarus found it important that DPRK has continued its efforts to ensure food security in the country.

28. Turkey believed that acceding to CAT and cooperating with special procedures, including the Special Rapporteur on DPRK will help the authorities address some shortcomings. Turkey shared the UN Secretary General's recommendation that DPRK extend free and full access to UN Agencies and other humanitarian actors and asked DPRK's views on measures to enable it benefit from OHCHR's technical assistance.
29. Malaysia noted with encouragement the Government's concerted efforts aimed to build a progressive and prosperous nation by the year 2012. It also encouraged the DPRK to extend its engagemen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ddress the many challenges it faces with a view to improve the overall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30. Syrian Arab Republic commended efforts to protect and promote all human rights and noted that the complete and universal free medical care and education and the law on gender equality show that DPRK is on the right track to achieve development despite illegal sanctions imposed on it.
31. Thailand noted that the Constitution contains provisions on human rights and that some domestic laws and policies have been adopted to protect specific groups. Health care and education are central parts of the social policies. It encouraged the country to do its utmost to address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concerns with a view to improving the well-being of its people.
32. France asked about reasons for imposing criminal sanctions on people who try to leave the country and about the number of persons condemned to death and executed over the last three years. France noted that freedom of expression is limited and systematically violated and enquired about the number of persons incarcerated for political reasons. It hoped that the right to food for the entire population be ensured.
33. Australia noted the DPRK's engagement with the CRC, the drafting of a 2008-2010 work programm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cooperation with the UNFPA as positive developments. However, it remained disappointed by the

Government's refusal to engage with many other aspect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34. Sri Lanka enquired about the four unique characteristics of human rights mentioned in the national report and hoped that the international mechanisms, based on mutual respect, domestic requirements and understanding would facilitate the DPRK in enhancing the conducive environment to continue improving human rights.
35. Myanmar welcomed efforts to attain the goal to build an economic power by 2012. Myanmar commended DPRK for tangible progress in ensuring the rights to education and health. It asked DPRK to further elaborate on the realisation of universal free education at primary level. Myanmar encouraged DPRK to share lessons learned from its experience in training medical personnel.
36. Nicaragua highlighted DPRK's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which guarantees fundamental human rights to its citizens. It encouraged DPRK to continue strengthening the system of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observance of the principles enshrined in the UN Charter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37. United Kingdom noted with concern the range of grave human rights problems raised in the stakeholders report. It inquired about the right to a fair trial and the prohibition of torture and about the ways to address the shortage of medicines.
38. Libyan Arab Jamahiriya mentioned that the Constitution guaranteed the respect of human rights and the necessity to take measures to that end and that the National report referred to the objective of achieving equality and dignity for all.
39. Mexico acknowledged progress achieved on health, education and gender equality in employment, despite the many challenges stemming from the deterioration of the economy, natural disasters and food scarcity. Mexico enquired about measures adopted to follow up on alleged of enforced disappearances and abductions.
40. Islamic Republic of Iran noted the measures taken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encouraged the Government of DPRK to intensify its efforts with the view to achieve the MDGs. It recommend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help DPRK to secure adequate food for its people. Iran also noted with interest the special attention paid to improve the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41. The delegation of the DPRK noted that the Constitution provides in article 67 that citizens have the freedom of assembly, demonstration and association, and the State shall provide conditions for the free activities of democratic political parties and social organizations.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are permitted regardless of their forms and purposes unless they are not contrary to the democratic principle and public order.
42.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re also constitutional rights. No civil servant or law enforcement official can restrict or suppress these rights. Any slight manifestation of restriction or persecution of these rights may invite public criticism or denunciation, and in serious cases, lead to legal punishment.
43. The Constitution provides in article 68 that citizens have freedom of religious belief, and these rights are granted by the State by approving the setting up of religious buildings and holding of religious ceremonies. The State treats all religions equally and does not interfere in the setting up and operating of religious buildings, nor in the organization of religious bodies and their activities. Citizens are free to believe in religion of their choice.
44. On alleged classifying people into categories and practicing discrimination, the Constitution provides in article 65 that citizens have equal rights in all fields of State and public life. Such practices are inconceivable. No one is privileged or particularly disadvantaged in their access to material and cultural conditions.
45. On the issue of “political prisoners’ camps”, the delegation noted that freedoms of speech, press,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freedom of religious belief are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Exercising the rights to such freedom can never be criminalized. Thoughts and political views are not something that can be controlled by the law. The term “political prisoner” does not exist in DPRK’s vocabulary, and therefore the so-called political prisoners’ camps do not exist. There are reform institutions, which are called prisons in other countries. Those who are sentenced to the penalty of reform through labour for committing anti-State crimes or other crimes prescribed in the Criminal Law

serve their terms at the reform institutions.

46. Regarding the relations between *Songun* politics and enjoyme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delegate indicated that DPRK is pursuing the *Songun* politics to safeguard the supreme interests of the State and secure firm guaran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life and well-being of its people. *Songun* politics also makes great contributions to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improving of people's living.
47. On specific measures the Government is taking to secure sufficient food for the population, the delegate noted that DPRK has limited arable land, with 80 percent of its land made up of mountainous areas. Moreover, the consecutive natural disasters during the past several years stood in the way of providing sufficient food to our people. The Government gave top priority to the solution of food problem, took a series of practical measures and put a lot of efforts into their implementation. The food aid provided by different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ver the years greatly encouraged people in their efforts for the solution of food shortage. DPRK will, in the near future, meet the domestic demands for food on its own.
48. On the access to the sites of assistance by international aid agencies, the delegate noted that the principle of "no access, no aid" is a commonly recognized universal principle in cooperation activitie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specialized agencies of the UN. In accordance with this principle, the Government of the DPRK has provided all necessary arrangements including on-site visits for the aid agencies operating in the country and will do so, in the future, too.
49. On cooperation with Special Rapporteur and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dies, the delegation noted that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the DPRK is selectively tabled and discussed every year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nd General Assembly, resulting in the adoption of the unjust "resolution" thereon.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DPRK mandated by the "resolution" also continues to present reports that decry DPRK system and policies based on distorted information. For these reasons mentioned above, DPRK totally rejects the "resolution" and does not accept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The DPRK will, in the future, too, reject the confrontational "resolution" and politicization of human rights and will strive to make genuine dialogue and

cooperation a reality. It will also faithfully implement its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thus do everything to ensure that its people enjoy full rang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under any circumstances.

50. On accession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the delegate noted that the greatest obstacle here is the selectivity and double standard applied continuously to the country on the UN human rights arena.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DPRK is opposed to the purposes and requirement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lthough the DPRK is not yet a party to several human rights instruments includ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their requirements are, in fact, incorporated in the national laws and implemented. Once the obstacles are removed and appropriate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provided, DPRK will voluntarily accede to the conventions and protocols, not upon any request.
51. Vietnam acknowledged efforts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women, children, persons with disability and the elderly, and the guarantee of health and education. Vietnam expressed readiness to share its experience with DPRK related to the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community to solve humanitarian issues and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the guarantee of food security.
52. China appreciated that the Constitution and laws provide for respect for human rights. It noted that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are priority tasks of various State organs. DPRK has good educational and health care systems and strategies are in place for the attainment of MDGs. China called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vide humanitarian development assistance and support efforts of the Government to develop economy and improve peoples' life.
53. Zimbabwe noted the strides to improve the overall standards of living. DPRK has faced a number of challenges in implementing some of the rights, mainly due to some global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54. Israel stressed that as a party to the ICCPR, CRC, ICESCR and CEDAW, DPRK has an obligation to adhere to its international commitments and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55. Indonesia enquired about plans of the Governments to accede to other core human rights instruments. Indonesia called upon the DPRK to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legitimate concerns related to unresolved abduction cases, and in particular to speed up efforts to resolve them.
56. Norway recognized efforts on gender equality, child rights and legislative reforms. It noted that children face discrimination based on social origin and was concerned about State sanctioned extrajudicial activities. It appreciated that DPRK is a party to several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expressed deep concern about respect of the rights to freedom of opinion, expression,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 It enquired about legislative reforms, disparity in access to food, visits to detention facilities and the treatment of returnees.
57. Slovenia raised questions related to: ratification of HR treaties; plans for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 work place and legal community; human rights training for judiciary and law enforcement officials; the effect of the background of a child in access to education, food, health, jobs, marriage and party membership, measures for elimination of the use of forced abortions, measures for improvement of prison conditions.
58. Qatar noted that DPRK is a party to a number of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hoped for more progress in the dialogu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basis of mutual respect. It encouraged DPRK to continue its efforts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particularly economic and social rights, which will contribute to achiev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59. Yemen noted DPRK's political will to achieve gender equality through legislation, free education for all, especially women and the provision of special services to women at the work place. DPRK is party to a number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60. Austria asked if the Government has any plans to effectively implement its obligations under the treaties it is party to. It was concerned by many reported cases of disappearances of political dissidents.
61. Germany requested information about how DPRK followed up on the measures urged by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DPRK with regards to the consequences of the Korean War of 1950-1953, including the issues of missing persons and the reunification of families separated by the war.



62. Canada noted the emphasis placed on the provision of free universal medical care and welcomed the recent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Canada expressed concerns regarding to the overall lack of basic freedoms in the DPRK and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particular the chronic food shortage and inadequate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63. The Netherlands expressed concerns related to reports on the possible use of torture, including inhuman condition of detention, public executions, extrajudicial and arbitrary detention, the absence of due process and the imposition of the death penalty for political and religious reasons. It was concerned about the safety and well being of nationals who have returned to the country, and food security of the population.
64. Chile expressed concern about reported extrajudicial executions carried out in public and in detention camps, discrimination in access to education, practice of forced labour and violence against women. It was concerned about kidnappings and enforced disappearance of individuals.
65.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noted progress in promot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in addressing food security. It hoped that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fulfil its tasks of eradication of poverty and improving food security.
66. Sweden noted the cooperation of DPRK with the CRC and collaboration with UNICEF and WHO to improve children's health and education. Sweden expressed concerns regarding reports on forced labour, severe limits to freedom of information and reported restrictions to small-patch farming.
67. Italy was concerned about reports on public and extrajudicial executions and persecution for practicing a religion. It expressed concerns about reports of forced labour, very often involving children, despite the law prohibit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and criminalizing child labour.
68. Ireland stressed that there is a genuine alarm at the extent of human suffering caused by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The HRC and the UN have the responsibility to continue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se issues. It requested information about administration of justice issues and expressed a concern about persecution for practicing religion.

69. India noted that DPRK was commended by some treaty-bodies for its policy of providing 11 years of free compulsory education and its primary health care strategy. Concerns have been expressed about the quality of education, the severe impact of malnutrition on children, and the shortages and disparities in access to food. India requested information about plans to establish a NHRI, making easier travel abroad, and regular reunions of separated families.
70. Poland enquired about measures to secure the full enjoyment of the religious freedom. It referred to the existence of a large number of prison camps, the extensive use of forced labour and the harsh conditions imposed by the criminal justice system, giving rise to a plethora of abuses.
71. New Zealand expressed concerns about restrictions on freedoms of religion, expression,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the right to privacy, equal access to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take part in the conduct of public affairs. The situation in labour camps, the incarceration of dissidents and their families and the continued use of torture, including public executions were matters of concern. It called on DPRK to work constructively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DPRK to help resolve human rights issues together.
72. Palestine noted that DPRK's Constitution guarantees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to all citizens and that knowledge of human rights of the general public is high. Palestine appreciated the system of ensuring full access to health and education services and the commitment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human rights through positive dialogue.
73. Philippines noted achievements in education and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life. Philippines enquired about the further plans to: promote gender equality and the rights of women, and establish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74. Nigeria was encouraged that the Constitution provides protection of human rights. It was concerned on alleged human rights violations and hoped that the Government would address them. It supported the initiative of direct engagement by all to assist the government providing the enabling environment for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75. Spain mentioned that the UN Secretary General noted with concern that the

Government has not taken any significant initiative to end the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It requested information regarding practical measures to put an end to the early militarization of children in schools.

76. Lithuania made recommendations on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sations on human rights, protection of rights of children and women, and death penalty.
77. Greece enquired about: measures to ensure women's rights, and address the problem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to ensure right to movement for its citizens; plans to give access to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DPRK; and to the World Food Programme.
78. Switzerland called upon the Government to undertake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put an end to human rights violations a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for such abuses. It invited DPRK to cooperate activel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noted restrictions on freedom of movement. It also indicated that the state distribution system is not in a position to guarantee acceptable living conditions for the population.
79. Hungary not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with OHCHR and enquired about plans to cooperate with UN mechanisms. It was concerned about restrictions on freedoms of religion and expression, the right to free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movement. It considered that the DPRK failed to implement treaty bodies' recommendations and regretted that the family reunification process was stopped.
80. On establishing an independent human rights mechanism, the delegation noted that in DPRK much of the work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ar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people's committees at all levels, which are the people's power organs. Dealing with complaints and petitions fairly are one of the functions of the people's committees. The functions of the people's power organ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are not in conflict with the Paris Principle. However, DPRK will pay due attention to the establishing of independent human rights mechanism and conduct in-depth study in this regard.
81. On the issue of separated families, prisoners of war and abductions, the delegate noted that the government of the DPRK has consistently put forward initiatives

and made sincere efforts to relieve the pains of the families and their relatives. In particular, following the inter-Korean summit meeting on 15 July, 2000, reunions and video meetings of the separated families and relatives have been arranged scores of times. The issue of prisoners of war was already settled at the time of exchange of prisoners of war in accordance with the Armistice Agreement, and the issue of abduction does not exist. Solution of all problem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lies in faithfully translating the June 15th Joint Declaration and the October 4th Declaration into reality in the spirit of “by our nation itself”.

82. The delegation commented on the concerns expressed about women and children suffering from continued malnutrition and in particular about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The country suffered from serious economic difficulties starting from the mid-1990s, causing serious deterioration of the people’s health, in particular women and children. Supply of nutritious foods, nutritional and medical care, significantly improved the situation from the early 2000s. The issue of serious malnutrition is a thing of the past. Regarding the alleged forced enrolment of children in quasi-military organizations, the delegation stated that Children’s Unions are autonomous organizations of children aged 9 to 13 through which children, with the help of their school administration board, arrange excursions, visits, field practices and other extracurricular activities. Allegations that DPRK conscript children from early years and militarizing them, are very distorted information.
83. On the issue of abduction of Japanese nationals, the delegation noted that on 17 September 2002, DPRK-Japan Pyongyang Declaration was adopted during the visit of the Japanese Prime Minister. In the declaration, DPRK side affirmed that it would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uch unhappy issue. Thereafter, a special committee was formed, nationwide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and the result thereof was informed to the Japanese side. DPRK has faithfully fulfilled its obligations under the various DPRK-Japan agreements in the spirit of the Pyongyang Declaration, which resulted in the complete settlement of the abduction issue.
84. On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the judiciary, the delegation mentioned that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is issue can be provided through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of the DPRK, namely articles 11, 164, 166 and 168. The Central Court is held accountable before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r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not for the judicial proceedings, namely hearing of and passing judgement on cases, but for the administrative work related to justice, that is, recruitment and training of personnel and logistics.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under no circumstances can get involved or interfere in the treatment of individual cases, that is judiciary proceedings. With regard to the leadership of the ruling Workers' Party of Korea, its organizations can not operate outside the Constitution, as the Party itself exists within the State. The guidance of the Party over the judiciary is a policy guidance to ensure independence and law observance in the judicial activities.

85. On torture,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delegate noted that Criminal Law of the DPRK in its article 253 defines as crimes such acts as interrogating persons by torture or other illegal methods and exaggerating or fabricating cases. The Criminal Procedures Law prohibits forcing a person to admit an offence by such coercive and conciliatory methods as torture or leading a statement, and provides that statements obtained by such methods are inadmissible as evidences. Any transgression of the regulations is liable to legal punishment of the person responsible. In the DPRK, reform and detention facilities are operated by the people's security organs, which were visited in the 1990s by some international NGOs including Amnesty International and some western personnel.
86. Regarding the cause of refugee outflows and "punishment" of people upon their return or repatriation, the delegate stated that the illegal border crossing in the northern border area of the country is, in nature, not the issue to be assessed in the light of the 1951 Convention or 1967 Protocol on the Status of Refugees. In the mid-1990s the practices of illegal border crossing suddenly appeared due to economic reasons triggered by various factors. To cope with the situation, the government took a series of proactive measures. People's power organs in the border areas conducted in-depth survey into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families and provided them with special support. In addition, the power organs made all necessary arrangements for the people to visit their relatives in the north-eastern part of China upon their request.

87. Regarding women and human trafficking, the delegate welcomed international efforts to prevent and punish human trafficking and victims. DPRK strongly guard against the occurrence of such practices in the country. There are some people linked to outside forces seeking profit from human trafficking. DPRK is strongly against these practices and competent institutions are doing their best to identify and take necessary measures.
88. Regarding public executions, in some very exceptional cases, there are public executions for those criminals who committed very brutal violent crimes. These requests are often made by the families and relatives of the victims. In DPRK, death penalty is applied in very strictly limited crimes.
89. On the alleged systematic violation of human rights, the delegate noted that, should anyone study the laws and regulations of DPRK, it would be clear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are not systematic. This allegation is based on distorted facts or fabrication. Negative assessments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DPRK are based on misinformation fabricated by those who betrayed their country.

## **II.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

90.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will be examined by DPRK which will provide responses in due time. The response of DPRK to these recommendations will be included in the outcome report to be adopt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at its 13th session:
  1. Ratify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ILO Convention No. 182);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 and its Optional Protocol;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Chile)
  2. Consider ratification of CRPD (Philippines)

3. Fully comply with the principles and rights enshrin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two international covenant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o which it is a party (Slovenia)
4. Ratify core universal human rights instruments, in particular, ICERD and CAT, and fulfil its treaty obligations (Brazil)
5. Ratify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conventions such as ICERD or the optional protocols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Hungary)
6. Consider signing/ratifying the remain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including ICERD and ICRMW (Nigeria)
7. Become a party to CAT and take the necessary national measures to comply with its provisions (United Kingdom)
8. Ratify CAT (Turkey)
9. Ratify CAT and its Optional Protocol (Poland)
10. Consider joining ILO and accede to and implement its core conventions, in particular Nos. 29, 105 and 182, on child and forced labour (Brazil)
11. Join ILO and accede to its core instruments and extend an open invitation, and without restrictions, to ILO officials to analyze the situation of workers' rights in the country (Spain)
12. Join ILO and ratify core conventions, particularly Nos. 105, 182 and 138, and allow related monitoring by ILO staff (United States)
13. Consider signing all the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Pakistan)
14. Seriously consider ratification of other existing human rights treaties (Slovenia)
15. Undertake a review of national criminal and immigration legislation to ensure its compatibility with international obligations of the Government, in particular regarding the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of individuals, in response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on the Rights of the Child (Mexico)
16. Amend the Labour Law of the Industrial Complex of Kaesong and incorporate the minimum age of 18 years for work hazardous to the health, security or morality of minors (Spain)

17. Review its leg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with a view to ensuring the dignity and better living conditions of the vulnerable groups,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Malaysia)
18. Take the measures that it deems appropriate to ensure, as soon as possible, the harmonization of its national legislation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to which it is a party, and envisage acceding to other fundamental human rights instruments such CRPD (Algeria)
19. Pass legislation specifically dealing with violence against women, including domestic violence, providing for prosecution of individuals committing acts of violence against women (United States)
20. Increase the number of women in management posts and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envisage establishing full legislative provisions to promote and protect the rights of women (Algeria)
21. Systematically implement the ratified human rights treaties with the assistance of relevant Special Rapporteurs and OHCHR (Austria)
22. Enhance efforts to implement all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it has undertaken(Lithuania)
23. Fulfil its obligations assumed in several conventions to which it is a party, and if it deems useful, request the assista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ungary)
24. Adopt fully the rights-based approach in the development of future legislation (Nigeria)
25. Create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seek accredit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and accept technical assistance from OHCHR in setting up this national institution (United States)
26. Strengthen its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Nigeria)
27. Create a government task force to create protection programmes, provide resources for recovery and promote prevention through education and media campaigns (United States)
28. Maintain and strengthen its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model chosen by its people in a sovereign manner and continue advancing in its efforts to increasingly build a just and more participative society (Cuba)
29. Continue its efforts aiming at achieving an environment of non-politicization,



- cooperation and dialogue in the human rights field (Cuba)
30. Continue its efforts in ensuring economic and social rights (Viet Nam)
  31. Continue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Action Plan of Education for All, with a view to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system of 11 years of compulsory, free, universal education, increasing progressively the necessary resources allocated for this purpose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32. Continue to increase and diversify agricultural production by resorting to agricultural strategies, which could be based on models of production that have proven to be worthwhile (Algeria)
  33. Continue to strengthe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with full participation of the population in public and security affairs, boost socio-economic development,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and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Laos)
  34. Continue its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solving humanitarian issues of mutual concern (Viet Nam)
  35. Continue to promote and protect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its people, with greater emphasis on economic development (Sri Lanka)
  36. Provide human rights education to all citizens and provide human rights training to judges, prosecutors and lawyers and law enforcement officials (Slovenia)
  37. Take concrete measures aiming at fostering a genuine human rights culture with due regard to national and regional particularities as well as historical, cultural and religious backgrounds (Islamic Republic of Iran)
  38. Ensure that the rights of women, children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more effectively realiz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y for the promotion of reproductive health, 2006- 2010, the national strategy for the prevention of AIDS, 2008-2012, the primary health care strategy, 2008-2012,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well-being for children, 2001-2010 and the comprehensive action pla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8-2012 (Syrian Arab Republic)
  39. Continue reporting on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treaties to which it is a party (Slovenia)
  40. Submit its pending reports to the relevant treaty bodies (Pakistan)
  41. Improve its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treaty bodies by agreeing on timelines for submitting overdue reports, in particular to the Human

Rights Committee and CEDAW (Norway)

42. Cooperate with the special rapporteurs and othe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mechanisms by granting them access to the country (Republic of Korea)
43. Invite the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to visit the country and fully cooperate with her (Italy)
44. Agree to the requests for visit by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 (Norway)
45. Invite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to visit the country and provide more extensive recommendations (United States)
46. Fully cooperate with all human rights mechanisms, including accession to CAT, as well as access to the territory for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Belgium)
47. Positively consider requests for country visits of special procedures of the Council and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stemming from United Nations human rights mechanisms (Brazil)
48. Grant access to the three thematic Special Rapporteurs who have requested a visit (United Kingdom)
49. Respond favourably to the request of special procedures mandate-holders to enter the country and cooperate with special procedures and other human rights mechanisms (Slovenia)
50. Invite the special procedures mandate-holders who have requested visits (Turkey)
51. Cooperate and engage in dialogue within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mechanisms, including with the Special Rapporteurs and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Japan)
52. Work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religion to ensure that i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under article 18 of ICCPR are fully implemented (Ireland)
53. Continue to cooperate and strengthen its human rights dialogue with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Pakistan)
54. Pursue cooperation with the thematic procedures of the Council, based on the principles of objectivity, impartiality and non-politization (Zimbabwe)
55. Continue cooperation and strengthen human rights dialogue with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despite all obstacles and existing challenges while remaining confident of its will and its way to proceed according to its needs and national priorities (Palestine)

56. Respect and ensure the rights set forth in CRC of each child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Slovenia)
57. Tak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right of a child to life and development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Sweden)
58. Strengthen its efforts to promote gender equality and the rights of women (Philippines)
59. Invest sufficient resources to promote and protect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fields of work, education and health (Libyan Arab Jamahiriya)
60. Provide all children with equal opportunities to study and give them access to higher education based on their talent and individual capability (Norway)
61. Continue giving priority to vulnerable groups in the distribution of international assistance (Yemen)
62. Continue preventing and punishing human rights abuse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Belarus)
63. Continue to achieve its objective of establishing a society free from crimes (Belarus)
64. In line with previous recommendations made by CRC, make every effort to reinforce protection of the right to life and development of all children (Germany)
65. Enact specific legislation to punish violence against women and establish structures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Chile)
66. Enhance protection of rights of women and children, in particular those in the most vulnerable situations (Lithuania)
67. Take further measures to prohibit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women (Brazil)
68. Strengthen measures, including through international dialogue and co-operation, to combat human trafficking and provide appropriate assistance to victims of trafficking (Philippines)
69. Step up measures to comprehensively address the problem of trafficking and violence against women, including by increasing public awareness campaigns (Malaysia)

70. Continue to achieve its objective of establishing respect for law in society (Belarus)
71. Provide unlimited access to ICRC to all detention facilities in the country (Netherlands)
72. Give all in detention a fair trial (Norway)
73. Train professionals involved in the judicial system on th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on a fair trial and rule of law (Sweden)
74. Ensure that all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are treated with humanity and with respect for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being (Poland)
75. Guarantee separated families' fundamental right to know the fate of their family members across the border and to communicate and regularly meet together (Republic of Korea)
76. Do everything possible, in cooper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to ensure that the maximum number of meetings of separated families is organized (Switzerland)
77. Take concrete steps to continue the process of family reunification, because for the elder generation even a delay of one or two years means that their chance of seeing their relatives may be lost forever (Hungary)
78. Adopt measures to facilitate family reunification as recommended by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Germany)
79. Allow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assembly, by fostering and facilitating civil society entities and enabling them to obtain status under law (Israel)
80. Decriminalize the practice of leaving the country without permission or at least allow free movement of citizens within the country (Greece)
81.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in the field of freedom of movement, including the right to leave the country (Hungary)
82. Decriminalize unauthorized travel (Switzerland)
83. Ensure full respect for the rights to freedom of association, expression, religion or belief and movement (Canada)
84. Take further steps to support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New Zealand)
85. Allow more freedom of movement of the people and foreigners in the

- country as a way to generate economic activities (Malaysia)
86. Consider, as appropriate, increasing the percentage of representation of women in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other State decision-making bodies (Sri Lanka)
  87. Provide more opportunities for women to gain access to leading positions in both the political and economic spheres and strengthen funding and visibility of the national institutions that promote gender equality (Norway)
  88. Continue efforts to reinvigorate the national economy by, inter alia, allowing more freedom for people to engage in economic and commercial activities (Malaysia)
  89. Make every possible effort to ensure access to food for the entire population (Chile)
  90. Secure the right to food for all its citizens, especially so as to secure the right to health for children (Japan)
  91. Continue taking measures to ensure the right to food for its people and implement MDGs (Viet Nam)
  92. Take the necessary steps to ensure impartial access to adequate food, drinking water and other basic necessities for all people within its jurisdiction, including vulnerable groups (Canada)
  93. Address concer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shortage of food, medical and other humanitarian services (Philippines)
  94. Allocate resources equitably and implement food security policies, including through sustainable agricultural practices and reduced State restrictions on the cultivation and trade of foodstuffs (New Zealand)
  95. Continue to address the negative impact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s inflicted by external coercive measures (Islamic Republic of Iran)
  96. Strengthen measures to facilitate access and effective distribu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aid to the people in need, with special attention to vulnerable groups (Mexico)
  97. Give access to food and other essential products to those who need them, taking into account the particular needs of children and pregnant and nursing women, and cooperate constructively with humanitarian agencies and other humanitarian actors by ensuring them access to all the territory (Switzerland)

98. Intensify its efforts to promote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of specific groups within society, such as women, children, disabled persons and the elderly, with a view to empowering them and alleviating their vulnerability (Thailand)
99. Take positive measures to further reduce infant mortality rates and maternal mortality rates (Syrian Arab Republic)
100. Take measures to improve the quality of health services deteriorated due to lack of medical facilities and medicine (Islamic Republic of Iran)
101. Work on the enhancement of the free health care programme and free primary education, obtaining the necessary assistance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Libyan Arab Jamahiriya)
102. Ensure that high goals of economic development by 2012 contribute to bringing about a decisive turn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slamic Republic of Iran)
103. Increase resources allocated to the education sector for better quality of education and encourage the authorities to continue their efforts in this area (Algeria)
104. Grant access to international humanitarian agencies such as the WFP (Netherlands)
105. Allow access to WFP to those in need (Greece),
106. Grant full access to WFP to ensure food reaches the most vulnerable, and adopt other measures to promote the right to food including economic reforms to incentivize those working in the agricultural sector to increase production (United Kingdom)
107. Grant immediate access without obstacles to international humanitarian agencies, including WFP, as well as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 in order to allow the resumption of necessary operations for food supply and to ensure that aid is distributed on the basis of the genuine needs of the people (Belgium)
108. Allow humanitarian agencies to resume food assistance and grant WFP full, safe and unhindered access to the country in order to monitor aid distribution (Canada)
109. Grant greater access to WHO and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orking in the health field (United Kingdom)
110. Consider positively OHCHR offers of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e

with the Human Rights Council special procedures in support of national efforts in this regard (Mexico)

111. Accept the advisory services offered by OHCHR (Chile)
  112. Seek to continue to provide satisfactory conditions of operation to the United Nations aid agencies working in the country (Sri Lanka)
  113. Continue engaging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donor community in capacity-building in the field of economic and social rights (Malaysia)
  114. Strengthen its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and its mechanisms o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matters with a view to building national capacities and improving the people's well-being ; (Thailand)
  115. Work on overcoming the obstacles related to economic problems and the scarcity of resources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United Nations so as to ensure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Libyan Arab Jamahiriya)
  116. Continue to seek constructive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mechanisms and other countries in areas of human rights in a non-confrontational and non-politicized manner (Zimbabwe)
  117. Continue to cooperate with the United Nations,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world community to settle all the humanitarian issues(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91.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did not enjoy the sup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 Sign and ratify CAT, establish judicial oversight over all prison facilities and take immediate action with a view to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torture by the security forces and prison personnel (Austria)
  2. Implement its obligations under the human rights instruments to which it is party and cease the use of arbitrary detention, labour camps and collective punishment (Canada)
  3.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bring its criminal justice system into line with its obligations under ICCPR and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ustralia)
  4. Recognize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cooperate with him and grant him access (Netherlands)
  5. Grant access, as a matter of priority,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Greece),

6. As a first step, allow the visit requested by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to take place as soon as possible and on the best conditions, and take his recommendations seriously taken into account (Switzerland)
7. Cooperate with the special procedures concretely by accepting the repeated requests for a country visit by the Special Rapporteurs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situation and the right to food (Chile)
8. Cooperate more intensively with United Nations human rights mechanisms, in particular by responding positively to the repeated requests for visits by the Special Rapporteurs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food (Spain)
9. Agree to the requests for a visit by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Norway)
10. Fully cooperate with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accept the reques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to visit the country (Canada)
11. Improve its cooperation with United Nations human rights mechanisms, in particular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special procedures, and allow access (Germany)
12. Develop cooperation on the issues of human right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ir mechanisms, in particular by engaging constructively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and responding positively to offers of technical assistance by OHCHR (Lithuania)
13. Allow urgently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operations of food distribution in the whole country; put an end to discrimination in the governmental food distribution, prioritizing children, pregnant wome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enior citizens (Spain)
14. Establish a moratorium on executions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Brazil)
15. Abolish death penalty or at least to establish a moratorium on executions (Chile)
16. End all public and extrajudicial executions and introduce a moratorium on the death penalty with a view to its abolition (Italy)
17. Adopt a moratorium on the application of death penalty to put an end to the practice of public executions and the imposition of the death penalty for



religious or political crimes (Spain)

18. Taking note of reduction of number of crimes punishable by the death sentence, consider introducing a moratorium with a view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in the future (Lithuania)
19. Halt all public executions, and intensify efforts to ensure that no detainee is subject to torture o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New Zealand)
20. Establish a moratorium on executions with a view to the rapid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and in the immediate future, respect minimum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the right to a fair trial, the limitation of the death penalty to the most serious crimes, as well as the non application of the death penalty to minors, pregnant women and persons suffering from mental diseases (France)
21. Refrain from the practice of public execution used to intimidate the people, as reported by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contravention of its own penal code, and accept the recommendation of CCPR to work toward the abolishment of capital punishment (Israel)
22. Put an end to the practice of extrajudicial executions, public and secret (Chile)
23. Immediately end extrajudicial executions and the practice of collective punishment (Norway)
24. Put an end to kidnapping and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whatever their country of origin (Chile)
25. Set a concrete time frame and take concrete actions in order to resolve the abduction issue as soon as possible, including ensuring the immediate return of Japanese and other abductees (Japan)
26. Immediately cease public executions and the use of torture and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nd ratify CAT (Canada)
27. Abolish the practice of tortur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including the collective punishment of families, as reported by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and amend national legislation to prohibit the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of children, as recommended by CRC; (Israel)
28. Implement regulations to protect women from torture and abuse in detention facilities, and hold female criminal offenders separately from

- men, guarded by female guards (United States)
29. End collective punishment of families, especially against children (Slovenia)
  30. Abolish military training for children (Slovenia)
  31. End the practice of imposing punishment on returnees (Netherlands)
  32. Create and adopt a law that specifically addresses trafficked persons in the country and abolish all practices of penalizing trafficked women and children for unlawfully exiting the country upon their deportation back to DPRK (Israel)
  33. Take immediate action to cease the practice of forced labour, including in detention facilities, and take urgent measures to ensure that children are not forced to participate in mobilization projects (United States)
  34. Take effective measures against the practice of forced labour, including child labour and join ILO (Italy)
  35. Put an end to forced labour practices (Chile)
  36. Take measures to ensure an independent judicial system and the individual's right to a fair trial (Sweden)
  37. Implement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 14 of ICCPR to ensure that everyone without distinction is entitled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by a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established by law (Ireland)
  38. Abstain from political interference in judicial proceedings (Sweden)
  39. Establish an independent judiciary and guarantee access to legal counsel and judicial redress to all detainees (Austria)
  40. Ensure an independent judiciary that operates without political interference by the State and uphold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notion of the rule of law by reviewing and amending the constitutional and legislative provisions that may compromise or diminish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the judiciary, as recommended by CDESCR (Israel)
  41. Release persons detained for reasons related to their opinions or peaceful political activities (Belgium)
  42. Put an end to the practice of incarcerating all the members of the family of every opposition figure, release without delay political prison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y as well as ensure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ance)
  43. Reform its criminal code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guarantee freedom of movement both within its territory as well as towards foreign countries

- without the need for prior permission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standards (France)
44. Allow freedom of movement of its citizens within and across the border and end the punishment of those expelled or returned from abroad, including refugees and asylum-seekers (Japan)
  45. Review the legislation on religious groups and organizations so as to ensure its compliance with ICCPR (Italy)
  46. Lift restrictions imposed on religious practices, cease persecution and rigid control over those professing their religious beliefs and ensure that its domestic legislation and practice is in full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8 of ICCPR (Poland)
  47. With regard to ensuring the right to food to the entire population, including in jails and labour camps, cooperate in a constructive manner with the competent United Nations institutions and facilitate the work of NGOs present in the country by guaranteeing their access to the entire population (France)
  48. Reduce controls on its population, including the closure of markets, suppression of criticism of Government policies, lack of alternative media and harsh penalties on those who access external information (New Zealand)
  49. Increase technical cooperation on human rights issues including by granting access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United Kingdom)
  50. Demonstrate a genuine willingness to improve its human rights record by engaging more positively and openl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and work constructively with the United Nations system to bring its human rights into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ustralia).
92. All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present report reflect the position of the submitting State(s) and /or the State under review. They should not be construed as endorsed by the Working Group as a whole.

## ANNEX

### COMPOSITION OF THE DELEGATION

The deleg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 headed by H.E. Mr. Ri Tcheul, Ambassador and Permanent Representative DPRK Mission in Geneva and composed of 12 members:

*Mr. Kang Yun Sok*, Director-General of the Department of Legislation, DPRK Supreme People's Assembly

*Mr. Kim Myong Chol*, Section Chief of the Department of Legislation DPRK, Supreme eople's Assembly

*Mr. Sim Hyong Il*, Chief of Legal Bureau of DPRK Central Court

*Mrs. Kim Sun Hwa*, Official, Department of Legislation DPRK Supreme People's Assembly

*Mrs. Han Chae Sun*, Bureau chief of the Research Institute Ministry of Public Health

*Mr. Jang Il Hun*, Section Chief, DPR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r. Kim Yong Ho*, Senior official, DPR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r. Kye Chun Yong*, Deputy Permanent Representative, DPRK Mission in Geneva

*Mr. Ri Jang Gon*, Counsellor, DPRK Mission in Geneva

*Mr. Choe Myong Nam*, Counselor, DPRK Mission in Geneva

*Mr. Sok Jong Myong*, Counselor, DPRK Mission in Geneva

*Mr. Jon Yong Ryong*, First Secretary, DPRK Mission in Geneva

**Permanent 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Office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1, chemin de Plonjon 1207 Geneva Tel. 022 735 43 70 Fax: 022 786 06 62

Opening Statement by H.E. *Mr. RI Tcheul*

Ambassador and Permanent Representative  
At the 13<sup>th</sup>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Consideration of the UPR Outcome Report 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r. President,  
Distinguished Delegates,

The DPRK delegation appreciates this opportunity of discussion and adoption of the UPR outcome report on the DPRK.

The newly established UPR mechanism is the most innovative and cooperative mechanism in the Human Rights Council.

The UPR, in other words, is an incredible mechanism making it possible to handle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all countries on equal basis, irrespective of differences in ideology and social system, culture and tradition, thereby developing climate of genuine dialogue and cooperation and removing the outdated practice of politicization, selectivity and double standard, under which specific countries were singled out as targets of attack.

Out of our active support to the UPR mechanism and willingness to cooperate, we

participated in the 6<sup>th</sup> Session of the UPR Working Group in December 2009 and had open and frank dialogue with international society, giving answers and explanations in good faith to the raised questions, comments and recommendations, while receiving encouraging words.

We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sincere thanks to many countries for understanding and inspiring the position and efforts of the DPRK Government for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or their constructive recommendations as well.

We also thank the troika members, namely, South Africa, Mexico and Norway and the Secretariat for their constructive, cooperative and excellent work.

Mr. President,

Over the last two months since the 6<sup>th</sup> Session of the UPR Working Group, we distributed the outcome report to the Government agencies and over 20 social and academic institutions who were engaged in the drafting and discussion of the UPR national report.

We established a group comprised of officials and experts from relevant organizations as well and held a series of consultations on the recommendations we had received.

All the participants in the consultations took note of the recommendations seriously and came up with constructive opinions thereon.

From now on, I would like to elaborate our position on the recommendations by dividing them in clusters for the sake of convenience.

First of all, several countries recommended the DPRK Government to put emphasis on taking measures for promoting economic and social rights of people by overcoming economic difficulties, while consolidating and developing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ystem chosen by our people.

As well known, our country is a socialist state centered on the people, and the society

is politically stable on the basis of single-hearted unity whereby all people are united around their leader in the face of ever more increasing threats and challenges posed by foreign forces.

Under these socio-political circumstances, it is now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for us to bring about early solution to the difficulties in the people's livelihood, which were caused by consecutive natural disasters in the past 1990s and which were caused by the ongoing economic blockade and sanctions by the hostile forces against the DPRK.

To this end, the Government of the DPRK defined it as a general orientation of this year to make a radical turn in improving the people's living standard.

The DPRK, after selecting light industry and agriculture as major fronts this year, is actively pushing ahead with the measure to effect a great productive upsurge in all fields of national economy.

The DPRK, is also taking practical steps to give full play to the people oriented policies including the complete and universal medical care and 11 year free and compulsory education.

Once a new turn is achieved in improving the people's living standard and overall economic revitalization is realized in the near future, we are confident that the recommendations pertaining to the economic and social rights will be fully implemented.

As for the recommendations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women and children who belong to vulnerable groups, children in the DPRK who are the future of the country, are called kings of the country. This is the policy consistently maintained by the DPRK since its foundation, out of importance of this issue of children.

Meanwhile, the women who account for half of the population in the country, are giving full play to their role with active participation in the state and social affairs as a powerful force in social life.

In the past, our children and women could not but go through temporary economic difficulties which rendered a negative impact on their material and cultural life to a certain extent.

However, the livelihood of the population belonging to the vulnerable groups including women, children and the elderly is rightly on the tract of considerable improvement as the State is concentrating its efforts on economy, with its revitalization being gradually achieved.

The Government of the DPRK is doubling its efforts to pay special care to children and women. It is expected that the measure will be taken to increase the ration of women in public offices to a considerable extent and have them promoted to important positions of the State and public institutions in coming years and to adopt comprehensive laws aimed at guaranteeing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hildren and women.

There is no charge in the policy of the DPRK Government on placing under special care and protection, the children, women, disabled persons and other people in the vulnerable groups, whereas their rights and welfare will be further promoted as the overall economy is revitalized and raised into a high standard.

In addition, the Government of the DPRK will continue to make in-depth study into the recommendations which can exert significant impact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untry such as strengthening of human rights education, attaining the MDG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public health. At the same time the DPRK will actively strive to take necessary legal, judici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implement them.

Mr. President,

As mentioned earlier in the outcome report adopted at the 6<sup>th</sup> Session of the UPR Working Group in December last year, the DPRK delegation had rejected 50 recommendations made by some countries.



Those recommendations are in full conflict with the DPRK's principled stand against politiciz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eality of our country in both legal and practical terms and, therefore they do not enjoy our support.

Regrettably, the recommendations are focusing on the aims which have nothing to do with genuine human rights issues since they are seeking regime change and defamation of image and with no exception they are purely out of deep seated hatred and hostility towards the DPRK.

I think the DPRK delegation already made full explanations on those recommendations at the UPR Working Group Session in December last year.

The only point I want to emphasize is a question of discrimination raised in the comments and recommendations by certain countries. Discrimination is far from existence in our country.

The DPRK is a socialist state where all people are fully guaranteed of equal rights and freedoms in all fields of state and social life, with socio-economic and political root cause of exploitation and oppression already eliminated far long ago.

No discrimination of any manifestation is stipulated or allowed in the DPRK in whatsoever, be it laws, norms, public institutions, management order, etc.

In our socialist system, we consistently adhere to the principle whereby every person is rewarded and treated for the work done for his own and the public, except for those people who are in need of humanitarian help.

As for the recommendations on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and special procedures, we are consistent and remain invariable in our position towards rejecting politicization and pursuing genuine dialogue and cooperation.

As we voiced on several occasions, we do not recognize and therefore, categorically reject the so called "resolutions" against the DPRK which are enforced in the UN human rights fora and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imposed by such "resolutions."

The so called “resolutions and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are confrontational in nature and not cooperative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because they are based on political motives which have no relevance to genuine human rights.

Confrontation is not compatible with dialogue and cooperation.

In the Human Rights Council the activities of which are oriented towards dialogue and cooperation, it is high time that the practice of anachronistic “resolutions”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DPRK be no longer tolerated.

As for the cooperation with thematic special rapporteurs, we attach importance to the role they are playing in global human rights promotion and protection, and accordingly have been cooperating with them in various ways.

We hope that they will maintain the principle of impartiality and objectivity as a life line in their activities and fully comply with the Code of Conduct for special procedures.

In the future, too, we will continue to pay deep attention to the pursuit of genuine cooperation with thematic special rapporteurs based on the principle of non-politicization, non-selectivity, impartiality and objectivity.

The technical cooperation on human rights serves as an important too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human rights.

We are in need of technical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of human rights and seek its realization to complement sector specific laws in keeping with humanrights perspective, draft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to which the DPRK is a party and prepare human rights education curricula.

Regrettably however, in the case of the DPRK unlike other countries, the technical cooperation on human rights is being imposed as a means of pressure for political reasons.

We need technical cooperation on human rights, but we could not place any of our

expectations on such cooperation, when we are compelled to experience unreasonable pressure and interference.

We will continue to remove the obstacles and realize genuine technical cooperation on human rights.

As for the recommendation on accession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we are consistently maintaining the principle of respecting and faithfully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DPRK has acceded to several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honors its obligations. The DPRK has so far acceded to several human rights instruments including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Even in the case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y and ICERD etc. to which the DPRK is not a party, we are implementing their core elements by incorporating them in the sectoral laws of the country, while sincerely studying the possibility of accession to such conventions in relation to both domestic laws and prevailing reality.

The obstacle facing us in this context is the ceaseless attempts by certain hostile forces to misuse the issue of access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human rights instruments as a means of pressure and defamation of image.

This reality serves to be a strong advice for us to take a more precaution manner in the question of accession to human rights instruments.

Nevertheless, we still attach importance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we will further intensify studies on the possibility of accession while continuing our efforts to remove current obstacles and create climate conducive to joining instruments to which the DPRK is not a party.

As for the reunion of the separated families and relatives of the north and south of

Korea, the root of this question has originated from the continued division of Korea that has been imposed by outside forces and the foreign interference for the last 65 years.

Since the first day of the division, the Government of the DPRK has so far taken initiatives and spared no effort to translate them into reality, with a view to alleviating the sufferings of the separated families in the north and south of Korea at an early date possible.

In this new century alone, the on going initiatives and generous endeavors of the DPRK made it possible to undertake dozens of investigations and identifications on the fates and whereabouts of the separated family members and their relatives.

In particular, this issue is contained in the historic June 15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and October 4 Declaration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rticles.

This year marks the 0<sup>th</sup> anniversary of the June 15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and we will do our best to pave the way for improved intern-Korean relations and to achieve national reconciliation, cooperation and unity under the slogan of, quote "Let the entire nation unite under the banner of north-south joint declarations and achieve national reunification at the earliest date possible!", unquote.

Mr. President,

As indicated in the UPR national report submitted by the DPRK,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of the DPRK for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re faced with manifold difficulties and challenges.

Our people have suffered from unspeakable hardships and miseries due to the 40 year long military occupation by Japan in the past century and the 3-year war as well as the continuing national division imposed by the outside forces for the last 65 years, stepping into the current century on the status quo.

Furthermor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our people's livelihood are seriously hampered by the ongoing sanctions and stifling moves by the hostile

forces spanning decades, thereby inflicting negative impact on the enjoyment by our people of thei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to a great extent.

However, our people have never ever been carried away by fear nor have become pessimistic nor have been exhausted nor have been hesitant in the face of hardship no matter what comes.

Our people have embodied themselves with the philosophy of the Juche idea, thereby placing themselves in the position of master of their own destiny, with a strong sense of insight into the future and fully conscious of the importance of self reliance under the prevailing situation.

With a sense of firm and resolute determination and dignity, we will further consolidate and develop our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in keeping with the country's reality and people's aspirations, while vigorously pushing ahead with building a country of economic power, which is the final phase of our target to build a powerful and prosperous nation.

By so doing, we will make a responsible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efforts for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ank you, Mr. President.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보고서 및  
우리정부, NGO, INGO 관련 자료집

인 쇄 • 2010년 3월

발 행 • 2010년 3월

발행인 • 현 병 철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전화\_ 02-2125-9758 FAX\_ 02-2125-9733

Homepage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인쇄처 • (주)늘품플러스

전화\_ 070-7090-1177 FAX\_ 02-2275-5327

사전 승인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234-01

